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①

총론 / 대통령 발언록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①

총론 / 대통령 발언록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

편찬위원

1권 총론 / 대통령 발언록

성경룡 정책실장(감수)

정동수 정책조정비서관(책임집필)

2권 민주주의

차성수 시민사회수석, 이호철 민정수석, 천호선 홍보수석(감수)

윤건영 정무기획비서관(책임집필)

3권 경제

김대유 경제정책수석(감수)

문일재 경제정책비서관(책임집필)

4권 사회

김용익 사회정책수석(감수)

김동완 사회정책비서관(책임집필)

5권 통일 · 외교 · 안보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감수)

배기찬 동북아비서관(책임집필)

6권 균형발전

이민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감수)

남동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비서관(책임집필)

7권 정부혁신

차의환 혁신관리수석(감수)

권해상 혁신관리비서관(책임집필)

8권 일지 / 자료

김정호 기록관리비서관(책임집필)

편집 총괄

김종민 국정홍보비서관

발간사

참여정부는 북핵과 신용불량자 위기 속에서 출발해 지난 5년 동안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개혁,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동반성장, 동북아 평화 정착, 균형발전, 정부혁신 등 각 분야의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전시켰다.

권위주의, 특권과 유착을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렸다. 대통령의 권력은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해졌고 초과권력을 위해 이용됐던 권력기관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다. 권력에 의해 굴절됐던 과거사의 상처도 치유하고 있다.

정경유착과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시장경제를 정착시켰다.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수출 3천억 달러 달성은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시장경쟁이 만들어 낸 경제성과다. 미래의 성장을 위해 한·미 FTA 협상도 타결시켰다.

참여정부는 지난 시기 성장 제일주의, 승자독식이 만들어낸 양극화 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최초의 정부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재정과 사회투자를 꾸준히 늘렸다.

북핵문제로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지만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버리지 않고 북한과 주변국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한반도, 나아가 동북 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대세를 만들어 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제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까지 내다보게 되었다. 한·미 간 여러 난제들을 풀어내고 수평적 동맹 관계로 성숙시켰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사업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고 국토의 고른 성장을 도모한 것과 정부 혁신을 통해 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 것도 참여정부의 중요한 성과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실패론' '잃어버린 10년'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남발되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참여정부 국정운영 백서』는 참여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가감 없이 기록함으로써 향후 국정운영과 역사적 평가에 필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이 참여정부에 대한 공정하고 성숙한 담론을 이끌어내는 데 쓰이길 기대해본다.

2008년 2월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장 김병준

머리글

참여정부 출범 초 대내외적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탈냉전,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물결이 지구촌을 시시각각 바꿔놓았고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라크전 발발, SK 분식회계, 가계건진성 악화, 강성노조 파업 등 악재가 잇따랐다.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고용 없는 성장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단기적 해결에 급급하지 않았다. 취임 전부터 북핵해결 3원칙을 분명히 하고, 협력적 자주국방을 원칙으로 안보도 굳건히 하였다. 아울러 남북협력을 내실화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제도 인위적 경기부양의 유혹을 떨치고 안정된 거시경제 운용을 통해 금융위기를 돌파하였고, 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 처방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켰다. 과거 성장위주의 경제모델에서 벗어나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혁신주도형 경제모델을 지향하고, 적극적 개방전략을 추진하는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계화, 지식정보화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수반하고, 이에 따른 경쟁 탈락과 미래 불안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연대의식을 약화시킨다. 참여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고, 평생교육 확대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제도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담론을 벗어나 성장과 분배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사회투자전략, 비전 2030 등이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신뢰와 규칙, 연대의식 등 사회공동의 무형자산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경제성장의 동력이다. 이에 참여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정경유착 등 낡은 관행을 청산하였다. 그리고 권위주의, 부패정치, 권언유착을 청산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과거 정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성장은 경제성장 저하와 사회갈등의 원인이었다.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설립과 혁신·기업도시 건설, 지방재원 확충 등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권한은 작고, 서비스는 큰 경쟁력 있는 정부를 위한 정부혁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임기 내내 무등론, 민생파탄론, 경제위기론 등 근거 없는 비방에 시달렸다. 이번 백서를 통해 이러한 비판이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1권의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와 추진성과’ 편에서는 정책목표와 비전, 주요지표를 통해 참여정부의 성과를 요약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발언록’ 편에서는 민주주의, 정치개혁에서부터 경제, 복지, 통일,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이번 백서가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일조하길 기대한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성경룡

차례

제1편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와 추진성과

제1장 참여정부의 출범과 의미	18
제2장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과제.....	23
제1절 국정목표와 국정원리 · 23	
제2절 국정과제 · 27	
제3절 국정관리 기초 · 77	
제3장 참여정부의 정책성과	97
제1절 정치 · 97	
제2절 외교안보 · 104	
제3절 경제 · 114	
제4절 사회 · 134	
제5절 균형발전 · 147	
제6절 정부혁신 · 159	
제4장 종합평가	166

제2편 노무현 대통령 발언록

제1장 민주주의	184
1. 민주주의 총론 · 184	
2. 민주세력 무능론에 대한 반론 · 186	
3. 민주주의 3단계론 · 188	
4. 민주주의 2단계 완성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 · 191	
5. 민주주의 3단계를 위한 제언 · 195	
제2장 정치개혁	201
1. 정치개혁은 시대적 과제 · 201	
2. 초과권력, 권력유착의 청산 · 203	
3. 부패사슬 끊기 · 206	
4.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 · 209	
5. 미래의 과제 · 211	
제3장 동반성장	217
1. 미래사회의 통합은 국가의 가치 · 217	
2. '상생의 경제모델', 뉴딜 프로젝트로 제안 · 219	
3. 중앙과 지방 · 221	

4. 노와 사	• 224
5. 도시와 농촌	• 226
6. 대기업과 중소기업	• 228
7. 복지지출은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	• 232
제4장 균형발전 236
1. 균형발전전략은 국민통합전략	• 236
2.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야	• 239
3. 균형발전은 경쟁력 있는 국가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	• 242
4.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위한 것	• 244
5. 균형발전 방향	• 247
6. 균형발전정책은 계속될 것	• 254
제5장 혁신 259
1. 지금은 혁신경쟁의 시대	• 259
2. 정부 혁신	• 262
3. 시스템, 프로세스 혁신	• 265
4. 행정 서비스 혁신	• 267
5. 참여정부, 행정시스템 전자정부에 맞게 혁신	• 270
6. 지역 혁신	• 272

7. 반복 재생산 가능한 혁신으로	• 274
제6장 과학·기술277
1. 과학기술은 국가 발전의 핵심과제	• 277
2.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은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 281
3.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정부의 몫을 다할 것	• 284
4. 과학기술 혁신	• 287
5. 경쟁력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만들어 갑니다	• 289
제7장 개방과 FTA295
1.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되겠습니다	• 295
2. 개방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 297
3. 전 국민의 걱정 근심을, 정부라고 왜 안 하겠습니까	• 302
4. 한국 경제 자신감 갖고 능동적 개방, 경쟁 충분히 감당할 것	• 306
5. 대한민국, 이제 안심하고 투자하십시오	• 309
제8장 양극화 해소313
1. 양극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 313
2. 양극화 원인	• 315
3. 되풀이되는 경제 위기, 이제는 끊어 냅시다	• 318

4. 양극화 해소 방안	• 321
5. 한국 경제는 양극화 극복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	• 326
제9장 비전 2030 328
1.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 328
2. 사회투자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	• 330
3. 동반성장의 중심에 비전 2030이 있습니다	• 333
4. 미래로 가는 핵심전략 비전 2030	• 336
제10장 일자리 340
1. 일자리 창출은 복지를 위한 전략	• 340
2.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법은 사람의 능력과 기술의 향상	• 343
3.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 346
4.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350
제11장 부동산과 주택 354
1.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 354
2. 부동산 투기는 단호하게 막아야	• 355
3. 합리적인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359
4. 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 362

- 5. 부동산정책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 365
- 6.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368

제12장 교육371

- 1. 차별 받지 않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 371
- 2. 기회균등과 창의력, 경쟁력 개발은 함께 고려되어야 • 373
- 3. 교육평준화 제도는 창의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 • 375
- 4. 공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 379
- 5. 대학은 자발적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 384

제13장 복지387

- 1. 복지정책은 사회투자전략 • 387
- 2. 노인 복지 • 390
- 3. 장애인 복지 • 394
- 4. 여성·아동·육아 복지 • 398

제14장 한반도 통일과 안보정책401

- 1. 대북정책의 핵심 원칙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입니다 • 401
- 2. 대북포용정책 • 407
- 3.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411

-
- 4. 안보를 정략에 이용하는 것은 독재의 나쁜 버릇입니다 • 415

제15장 한·미관계417

- 1. 한미동맹 잘 가고 있습니다 • 417
- 2.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호혜평등의 관계로 • 420
- 3. 경제와 안보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 외교 • 423
- 4. 군사협력 넘어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한·미동맹 • 426

제16장 2007 남북정상회담430

- 1. 남한을 출발하며, 북한에 도착하며 • 430
- 2. 북핵문제 • 433
- 3. 한반도 평화체제 • 435
- 4. 남북 경제협력 • 439
- 5. 화해와 통일 문제 • 443
- 6. 후속조치와 합의이행 • 446

제17장 참여정부와 언론449

- 1. 새로운 시대의 권력과 언론관계 • 449
- 2. 시민권력으로부터 멀어진 언론권력, 민주주의 가로막아 • 452
- 3. 언론의 권력화 막는 데 최선 다할 것 • 454

4절 기사실 개혁은 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 461

제18장 참여정부 평가 - 성공하고 있습니다466

1. 멀리 보면 보이는 것 - 참여정부 제 길 가고 있어 • 466

2. 참여정부 평가 - 정부 • 471

3. 참여정부 평가 - 경제 • 474

4. 참여정부 평가 - 사회 • 476

5. 참여정부 평가 - 외교 · 안보 • 479

6. 참여정부 평가 - 복지 · 교육 • 482



1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와 추진성과

1

참여정부의 출범과 의미

1.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국민 참여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총 6명의 대통령 후보가 등록하고, 총 유권자 3,499만 1,529명 중 70.8%에 해당하는 2,478만 4,963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노무현 후보가 48.91%를 득표해 57만 980표 차이로 2위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제16대 대선은 국민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 정책 중심의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운동, 인터넷·TV 등을 활용한 참신하고 다양한 선거운동 방식, 자발적인 선거자금 모금 전개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선거문화를 꽃피웠다.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국민 참여 경선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거의 2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고, 전국 16개 시·도에 걸쳐 실시된 당내 예비경선은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주말마다 붙든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주말연속극’으로 불렸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통령 선출은 국민을 배제한 채 중앙당 당직자나 대의원, 소수 당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2년의 국민 참여를 통한 후보 선출은 후보의 정통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에도 부응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큰 역할을 했다. 노사모는 주로 후보 홈페이지나, 노사모 홈페이지, 대안언론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선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일부 민주당 정치인의 후보 흔들기와 ‘철새정치인’의 탈당 직후에는 자발적인 선거비용 모금운동이 펼쳐져 약 70억여 원의 국민후원금이 모금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지지자의 참여는 우리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높였고, 특히 노사모의 정치활동은 이전의 ‘수동적 참여’와는 질적으로 다른 ‘능동적 참여’로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선진화하였다.

여러모로 제16대 대선은 민주주의와 참여정치의 정수를 보여 준 헌정사상 가장 모범이 되는 선거였고, 우리 정치 전반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이정표였다. 이를 계기로 총재에서 지구당위원장, 평당원으로 이어지는 정당문화의 수직구조도 공직후보자를 당원과 일반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당헌·당규 및 주요 정책에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지도도가 한 자릿수였던 후보, 조직도 돈도 지역기반도 없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으로 만들어진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 시민주권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 주었다.

경선과 대통령 선거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했기에 참여정부는 국정운영을 공개하고, 비선정치를 청산할 수 있었다. 또한 구 정치세력, 기득권세력과 결탁하지 않았기에 권력형 비리도 없었고,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힘으로 탄생한 ‘참여정부’이다. 참여정부는 국민이 국정의 주인이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기본정신을 나타낸다. 또한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개혁과 통합, 나아가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제1의 국정목표로 내걸었다.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의 권리가 확대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에 정부가 끊임없이 반응하겠다는 약속이다.

참여정부는 무엇보다 참여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민이 단순히 투표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소극적 참여의 민주주의는 질 높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본격적인 참여민주주의는 일반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참여민주주의는 시민들을 책임감 있는 사회적 주체로 만드는 교육적 가치와 공동체에 대한 결속의식을 높이는 사회통합적 효과를 갖는다.

참여정부는 열린 정부를 추구한다. 국민에게 열린 정부가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거리가 좁혀져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할 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고, 아울러 국민의 참여도 이루어질 수 없다. 참여정부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라는 자세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열어 놓고 탈권위와 분권 등을 통해 보다 낮은 위치에서 국정에 임하였다.

아래로부터의 국민참여에 의한 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은 원칙이 승리하고 국민주권이 실질화되는 시대, 경제와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 각종 사회독점과 집중, 갈등과 소외를 극복하는 통합과 균형의 시대,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2. 참여정부 출범 당시 대내외적 도전

지난 20세기 후반기 한국 사회는 국가 건설, 산업화, 민주화, 지식정보화 시대를 거치며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려는 준비를 마쳤다.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근대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분단과 전쟁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민족국가를 형성하였으며, 압축적인 산업화를 통해 단기간에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더구나 2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화를 이루어 냈으며, 사상 초유의 IMF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계승·발전시켜 왔다.

1987년 민주혁명 이후 우리 국민은 군부 독재정권을 문민정권으로 대체하고, 역사상 최초의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그러나 민주적 경쟁의 회복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 주지는 못하였다. 우리 사회에 여전한 낡은 정치 때문이었다. 우리 정치는 구시대적 권위주의와 지역할거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고, 정경유착, 부정부패로 인한 낡은 구조와 특권과 반칙의 문화가 온존하고 있었다.

특히 분열적 지역주의는 ‘국민권력의 시대’를 여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한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지역주의를 이용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지역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독점적 권력기반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독과점적 정치구조하에서 국민 주권은 심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었고, 경제·사회·복지 모든 분야에서 국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는 성숙하지 못하였다.

참여정부의 탄생은 이러한 왜곡에 대해 원칙이 승리하고 국민주권이 실질화되는 시민민주주의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소수세력이 국민을 분열시켜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는 특권의 시대를 마감하고, 집중되었던 권력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시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새로운 희망을 향해 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았다. 참여정부가 출발한 2003년의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는 역사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탈냉전,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혁명적 물결이 지구촌을 바꾸어 놓고 있었으며, 세기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세계 모든 국가들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한편 냉전 해체는 전쟁의 20세기를 끝내고 평화의 21세기를 열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공포의 균형이 사라진 자리에는 테러의 위협이 다시 자리 잡았고, 국지적 불안요소는 날로 증대되고 있었다. 세계는 21세기적 평화의 틀을 만들어 내기 위해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대내외 환경은 더욱 열악했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1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2003년 3월 이라크전 발발, 2003년 3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등 대내외 악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외평채 가산금리는 급등했고,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의 소비 진작책 후유증으로 가계 부문의 건전성이 나빠져 소비심리는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02년 말 263만 명에서 2004년 초 382만 명까지 급증했다.

두산중공업(2003. 3), 화물연대(2003. 5) 등 강성노조의 파업도 잇따랐다. 계층 간 양극화도 심화되었으나, 사회안전망 미비로 사회적 불안과 동요의 수위는 높아져 갔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정책환경 속에서 국내의 해묵은 과제를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일궈 낼 밑그림을 차근차근 준비하였다.

2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과제

제1절 국정목표와 국정원리

1. 3대 국정목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라는 3가지 국정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국정목표는 국정원리와 더불어 참여정부가 5년간 추구한 가치이다.

1)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과거 정치권과 정부는 특권세력화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각종 정치과정이나 정책형성과정에서 배제시켜 왔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는 국민이 국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설정한 목표였다.

참여정부는 국가에 의한 권위적·독점적 국정운영을 대신해 정부·시장·시민사회 간 견제와 균형, 협력에 의한 수평적 국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반한 역동적 정치참여와 책임정치의 강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제

대로 반영하는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제반 사회 부문에서 활발한 참여와 협력으로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기했고, 권한과 책임 간 균형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2)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과거 극한적인 대결과 투쟁 문화의 바탕에는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었다.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는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를 해체하고 전 국민이 하나되어 더불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표였다. 참여정부는 일극중심의 집중·집권사회를 분산·분권사회로 만들고, 불균형성장에 기반했던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이뤄 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제정책 사회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구하였고, 노·사·정 상호 간의 파트너십 고양, 사회 전반의 신뢰와 책임의식 제고,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적 합의 모델을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한편 중앙·지방 간 협력과 시민사회의 자율적·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참여형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해 지역·계층·성·세대 간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21세기의 동북아는 경제적 부상과 협력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불안정이 상존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이다. 이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 우리의 역사에 대한 성찰과 우리나라의 위상변화에 대한 재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평화번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구조 정착,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이라는 3대 정책분야 간의 유기적

선순환관계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4대 국정원리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운영의 기본방침이자 추구해야 할 가치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로 선정하였다.

1) 원칙과 신뢰

‘원칙과 신뢰’는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제1의 원리이다. 원칙이 반칙에 의해 좌절되고 상식이 특권에 의해 훼손되는 비정상적 역사의 반복으로는 신뢰가 생길 수 없고, 불법과 타락이 성행하며 사회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팽배해진 반칙과 불신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된다.

‘원칙과 신뢰’는 선순환적인 관계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가 쌓일 수 없다. 또한 신뢰가 없다면 원칙을 만들어 갈 수 없다. 그래서 원칙과 신뢰는 그 어느 하나 부족해서도 안 되는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완성되는 가치이다.

참여정부의 원칙고수와 부패청산의 노력을 통해 특권층이 반칙을 저질러도 용납되던 사회, 반칙해서 얻은 승리가 용인되던 시대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원칙이 승리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열기 위해 노력하였다.

2) 공정과 투명

‘공정과 투명’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국정원리이다. 신뢰를 통해 아무리 좋은 원칙을 만들어도 이를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사회의 불만과 갈등만이 증폭된다.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특권과 정실주의로 이것이 지배하는 사회는 잣대가 아무리 올바르다 해도 그 잣대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정성은 비밀주의, 온정주의하에서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의 투명성은 정보의 공개성에 의해 결정된다. 올바른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개할 때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더욱 높아진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은 참여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가치이다.

3) 대화와 타협

실질적 민주주의 단계로 접어든 지금은 대결과 투쟁의 시대가 아니라 ‘대화과 타협’의 시대이다. 참여정부는 ‘대화과 타협’의 원칙이 국정운영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우리는 조선시대와 일제 그리고 군사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대화과 타협의 문화가 실종되고 대결과 투쟁의 문화가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가 아직 남아 있어 다양성이 아닌 획일성, 전부가 아니면 전무, 관용이 아닌 배제의 문화가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는 나의 가치만큼이나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대화과 타협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로 서로가 마음으로 배려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함께 더 큰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치이다.

4) 분권과 자율

우리 민주주의도 이제 분권과 자율의 단계로 전진해야 한다. 과거 정부의 독재와 국가 주도의 산업화로 권력은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자원의 대부분 역시 수도권과 일부 재벌에 집중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참여정부는 일극 중심이 아닌 다중심 사회를 지향하면서, 자원을 균형 있게 재분배하고 모든 단위가 자율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였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사회와 국민 모두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하며,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정목표와 국정원리

국정목표	국정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분권은 자율을 요구하고 자율은 책임을 요구하므로 분권과 자율과 책임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제2절 국정과제

1. 12대 국정과제

1) 대통령 후보 공약

참여정부의 주요정책 구상은 대통령 후보 시절의 선거공약에서부터 시작된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은 정의, 통합, 참여민주주의 구현,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시장경제,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복지사회의 지향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공약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예산 소요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당선 이후에는 대부분의 공약이 참여정부의 정책목표와 주요 정책과제로 계승되어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이 되었다.

공약은 자문교수단과 각종 단체의 요구, 각계 전문가와 정책분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약작성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종합하여 4대 비전, 20대 정책목표, 150대 핵심과제 등으로 체계화하였다. 정치개혁,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건설, 한·미 FTA 체결, 사법개혁, 정부혁신 등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성과는 이 당시 공약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노무현 후보 4대 비전

바로 선 대한민국	통합과 원칙의 정치는 노무현 후보의 신념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돈 안 드는 선가를 실천할 것입니다. 파벌주의·지역주의·금권정치를 타파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잘 사는 대한민국	노무현 후보의 꿈은 국민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노무현 시대에는 평균 7%의 신성장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중심이 됩니다. 각종 규제가 줄어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재벌개혁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은 지식정보사회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노무현 시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더불어 잘 사는 시대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보육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50만 개 공급,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의 획기적 확충 등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됩니다.
당당한 대한민국	노무현 후보는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시대를 열어 남북통일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되는 등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됩니다. 노무현 후보는 튼튼한 안보와 자주적인 외교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지켜 낼 것입니다. 국민은 유례없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200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선공약을 핵심공약 181개, 중점공약 553개, 일반공약 602개 등 총 1,336개로 재분류하였다. 이를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181개의 핵심공약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서, 중점 및 일반공약 1,170개는 소관부처별로 정책과제화하여 관리하였다.

당초 181개였던 핵심공약 과제를 2003년 7월 청와대 주관회의를 통해 177개의 핵심공약으로 재조정하였다. 공약명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거나, 공약추진 내용이 유사한 것을 통합관리하거나, 기존 공약을 세분화 또는 추가하였다. 한편 정치개혁 공약의 관리주체를 대통령비서실로 조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3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갔다.

참여정부의 177개 핵심공약은 완료되거나 정상추진된 과제가 각각 78건과 83건으로 91%의 공약이 대부분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다만 입법 지연(10건), 이해관계자 간 이견(3건), 추진실적 미흡(2건), 대외여건 미성숙(1건) 등 16건은 부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무현 후보 20대 정책목표

통합과 원칙의 바른 정치	'갈등과 저효율의 정치'를 극복하고 '통합과 원칙의 바른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특권과 차별의 시정	특권층의 부정을 근절하고 대표적 5대 차별을 시정하여 특권과 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좋은 정부의 구현	정부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분권과 자율의 지방화 시대	충청지역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	남북평화와 번영을 기반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7% 신성장 달성	신성장전략으로 평균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재벌개혁 등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신산업정책으로 산업강국 실현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21세기 국가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정보화와 과학기술 대국 실현	IT 인프라의 고도화와 이용 활성화를 통해 정보화 선도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R&D의 효율적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빈부격차 해소와 70% 중산층 시대	빈부격차를 줄여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수준 높은 삶의 질	최상의 복지·쾌적한 환경·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율과 다양성의 교육	교육의 자율과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양성 평등한 사회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수립하고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어업·잘 사는 농어촌	농어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	정예강군 육성과 다자 간 안보협력의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강한 군대·튼튼한 안보	대북 5대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의 추진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남북통일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시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핵심공약 과제의 재조정

공약명을 현실 여건에 맞게 수정 변경 (22개)

- 교육재정 GDP 6% 확보 → 교육재정 지속 확충
- R&D예산 4.7%에서 7% 달성 → R&D예산 지속 확대
 - 특정 분야 지원규모를 GDP나 재정의 일정비율에 사전 연계하는 방식의 자원배분을 지양하기 위해 공약명 수정

공약 추진내용이 유사한 것은 통합하여 관리 (2개 축소)

- '정부조직 개편' 과 '정부기능 효율화' 를 '정부조직 개편 및 정부기능 효율화' 로 통합 등

기존 공약을 세분화 또는 추가하여 관리의 실효성 제고 (13개 추가)

- '학교자치와 민주화, 자율 운영체제 확립' 을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와 '단위학교의 자율권 강화' 로 분리하여 구체화 등

부진·보완필요 과제 현황

입법 지연 (10건)

- 부진(5건) : ①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②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 ③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 ④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 보완(5건) : ① 학운위 기능 확대·강화 ② 문화재 보존기금 설치 ③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 ④ 혐의이혼 시 자녀부양의무 명시 ⑤ 대통령 사면권의 엄격한 행사

이해관계자 간 이견 (3건)

- 보완(3건) : ㉠ 품 안 전 거점신고체계 도입 ㉡ 인 운 하 사업 재검토
 - ㉢ 료 수 가 약가의 공정한 설정 등으로 의료비용 절감

추진실적 미흡 (2건)

- 부진(1건) : 일자리 250만 개 창출
- 보완(1건) :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운영

대외여건 미성숙(부진 1건)

-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문제 해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인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와 의료분쟁법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등 10여 건의 공약은 부진했다. 또한 경인운하 사업 재검토와 같이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이 첨예하거나 대량 살상무기 문제 해결과 같이 대외적 여건이 성숙하지 못해 이행하지 못한 공약도 5건이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대통령 후보 당시의 공약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 결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약 실현도가 높았다.

분야별 정책목표별 공약 추진 결과						
분야	국정과제	계	추진상황			
			완료	정상	보완	부진
경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17	8	9	0	0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13	3	10	0	0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4	4	0	0	0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14	7	7	0	0
	소계	48	22	26	0	0
사회 문화 여성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16	8	4	3	1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14	10	3	1	0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5	4	1	0	0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31	13	13	3	2
	소계	66	35	21	7	3
정치 행정	부패 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25	10	10	2	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21	11	10	0	0
	소계	46	21	20	2	3
외교 통일 국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7	0	16	0	1
	소계	17	0	16	0	1
총계		177	78	83	9	7

※ 2003~2007년까지 공약 추진경과 포함

핵심공약 추진현황별 목록 - 완료과제 (78건)

연번	대선공약명	완료시점
1	기초과학 연구투자 확대	2007. 하
2	R&D예산 지속 확대	2007. 하
3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지원	2006. 하
4	과학기술 전문연구요원 확대	2003. 하
5	과학기술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2003. 하
6	대통령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신설	2003. 상
7	이공계 대학교육 및 연구지원법 제정	2003. 하
8	특허심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2007. 하
9	교원승진체계 재정립	2006. 하
10	기획 및 정책기능 중심의 교육부 조직 개편	2004. 하
11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기구 설치	2003. 상
12	지방교육행정조직을 포함한 교육행정개혁	2006. 하
13	사립학교법 개정	2005. 하
14	단위학교의 자율권 강화	2005. 상
15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2003. 7
16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	2007. 하
17	자영업자 소득파악 개선 등 보험료 공평 부과	2003. 하
18	여성채용목표제 확대 실시	2006. 하
19	차별시정 국가실행 계획 수립	2005. 상
20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2005. 상
21	학력과 관련된 차별제도 철폐	2005. 하
2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2003. 상
23	인재 지역활당제 도입	2007. 상
24	호주제 폐지	2004. 상
25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종합대책기구 마련	2003. 하
26	성매매방지법 제정	2004. 하
27	항만공사법 제정	2003. 상
28	지역항만공사 설립	2004. 상

29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조성	계속
30	FTA 이행특별법 제정 추진(가칭)	2003. 하
31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2003. 하
32	농어촌복지특별위원회 구성	2004. 상
33	WTO/FTA 협상에 따른 자원대책 강구	2004. 하
34	국회에 감사원 감사요청권 부여	2003. 상
35	소방방재청 신설	2003. 하
36	돈세탁방지법의 강화	2007. 하
37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 확대	2005. 하
38	재정건전화법 제정	2006. 하
39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외부인사 참여 확대	2003. 하
40	다면평가제 등 객관적 인사평정기준 마련	2004. 하
41	우수 인재 풀의 극대화	2004. 상
42	인사행정 기능의 정비	2007. 하
43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2004. 하
44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2006. 하
45	노사정위원회의 발전적 개편	2006. 하
46	주5일제 조기 정착으로 생산성 향상	2003. 상
47	주5일근무제 시행 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도입 지원 확대	2003. 하
48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2003. 하
49	통합도산법 제정	2003. 하
50	재벌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2004. 하
51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2007. 하
52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2003. 하
53	과다한 접대비 지출 관행 개선	2003. 하
54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 적극 도입	2003. 하
55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전담추진기구 설치	2003. 상
56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제정	2004. 상
57	지역별 대학의 연계체제 강화	2003. 하
58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2004. 하

59	지방양여금 확대 및 개선	2004. 하
60	지방재정발전위원회 설치	2004. 하
61	주민투표제 도입	2005. 하
62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2003. 하
63	수도권지역 토지이용 및 거래에 대한 제도 정비	2004. 상
6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2003. 하
6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2003. 하
66	5대 암 정기검진 서비스 전 국민 제공	2004. 상
67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료율의 단계적 현실화	2006. 하
68	건강보험재정통합 유지·보완	2003. 하
69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	2004. 하
70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2004. 상
71	국가전염병 관리 시스템 도입	2004. 상
72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2005. 하
73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2006. 하
74	대통령직속 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설치	2003. 하
75	방과후 교육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확충	2005. 하
76	참여복지 5개년계획 실천	2003. 하
77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실시기반 구축	2006. 하
78	지속가능발전위 위상 강화	2003. 하

핵심공약 추진현황별 목록 - 정상추진 과제 (83건)

연번	대선공약명	시한
1	200대 핵심전략기술 개발	2007. 하
2	IT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계속
3	세계 최고의 디지털강국 실현	2007. 하
4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도약	계속
5	주력 기간산업의 세계 최강화	계속
6	차세대 부품·소재산업 육성	계속
7	BT, NT 등 새로운 기술 분야 집중 육성	계속
8	현장맞춤형 기술 재교육을 통한 기술핵심인력 양성 및 인력자원의 고도화 추진	2007. 하
9	R&D 특구 지정·육성	2007. 하
10	교육재정 지속 확충	2008. 하
11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추진	2007. 하
12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	2007. 하
13	정보격차 해소	계속
14	사회적 차별금지 및 시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계속
15	여성 일자리 50만 개 창출	2007. 하
16	직장보육 및 공동육아제도 활성화	2007. 하
17	남북경제공동구역 설치	2007. 하
18	DDA 협상에 적극 대비(농업, 서비스, 통신 등)	계속
19	동북아 경제협업체 구성	2007. 하
20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창설	2007. 하
21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개발	계속
22	경부고속철도 조기 건설	계속
23	수도권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2007. 하
24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 확충	계속
25	수도권을 첨단 IT산업 중심지로 육성	2007. 하
26	동북아 철도공사 설립	계속
27	소득파악 강화를 통한 조세 및 사회보험의 형평성 제고	2007. 상
28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2007. 하

29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통합연계체제 조기구축 등	2007. 하
30	공직사회 비리척결	계속
31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 추진	계속
32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처벌법규 강화	2007. 하
33	정보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 및 부패방지	2007. 하
34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구현	2007. 하
35	각부 장관에게 인사운영 자율권 부여 및 책임행정 강화	2007. 하
36	정부조직 개편 및 정부기능 효율화	2006. 하
37	산별교섭의 효율적 정착	2007. 하
38	언론산업 선진화	계속
39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계속
40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계속
41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방지	계속
42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근절	계속
43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제도 유지	계속
44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2007. 하
45	호남고속철도 신설	계속
46	신행정수도 건설	계속
47	지방대학 연구역량 강화	2007. 하
48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의 연계 강화	2007. 하
49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마련	2007. 하
50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세수 확충	2007. 하
51	자치경찰제 도입	2007. 하
52	주민소환제 도입	2007. 하
53	기업 지방이전 촉진	계속
54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2007. 하
55	40세 이상의 고위험자에 대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계속
56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 실시	계속
57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2007. 하
58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2007. 하

59	응급센터 인프라 확충	2007. 하
60	저소득 가정의 보육료 절반을 국가 지원, 차등보육료제 시행	2007. 하
61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50만 개 창출	2007. 하
62	만 5세 아동의 무상보육 및 교육의 확대	2007. 하
63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2007. 하
64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시행	2008. 하
65	투기수요 억제대책의 지속적 추진	계속
66	주택자금 지원 강화	계속
67	주택공급 확대	계속
68	금강산관광 활성화 및 남북 관광교류 확대	계속
69	개성공단 건설 실현	계속
70	각급 남북회담 정례화	계속
71	국민지지와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2007. 하
72	한반도 평화선언 실현	2007. 하
73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2007. 하
74	남북경제공동체 계획 수립	2007. 하
75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방송교류	2007. 하
76	남북 간 방송기술 교류 지원	2007. 하
77	남북합의사항 실천을 통한 남북 상호 간 신뢰 증진	계속
78	이산가족문제의 획기적 해결	계속
79	소파(SOFA) 개정 및 운영체계 개선	계속
80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 축소	계속
81	북한 핵문제 해결	계속
82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주도	2007. 하
83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정례화 추진	2007. 하

핵심공약 추진현황별 목록 - 보완필요 과제 (9건)

연번	대선공약명	시한
1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선택적 확대·강화	2006. 상
2	문화재보존기금 설치	계속
3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2007. 하
4	협약이혼 시 배우자의 자녀부양의무 명시	2006. 상
5	대통령 사면권의 엄격한 행사	2006. 하
6	식품안전을 위한 거점신고 감시체계 도입	2006. 하
7	경인운하 사업 재검토	2003. 하
8	의료수가 및 약가의 공정한 설정 등으로 의료비용 절감	2006. 하
9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운영	2007. 하

핵심공약 추진현황별 목록 - 부진 과제 (7건)

연번	대선공약명	시한
1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2006. 상
2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2006. 하
3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	2006. 하
4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2006. 하
5	250만 개 일자리 창출	2007. 하
6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2006. 하
7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문제 해결	계속

2) 12대 정책과제

대통령 당선 이후 일주일여 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제16대 대통령 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특징짓는 것은 활동의 중심적인 목표가 정책인수에 있었다는 점이다. 과거 인수위가 주로 전 정권의 비리와 실정을 파헤치고, 과거 정권을 심판하는 정치적인 활동이 주류를 이뤘던 반면, 제16대 인수위는 노무현 당선자의 지시로 처음부터 정부의 정책진단과 평가, 정부의 국정비전과 철학, 그리고 정책과제를 제시하

분야별 12대 정책목표

분야	12대 정책목표
외교·통일·국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사회·문화·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는 것을 활동의 기본목표로 삼았다.

인수위원 선정에서도 주로 교수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특히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은 인수위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였고, 총 15개 분야 700여 명의 정책자문단은 적극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참여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었다.

인수위는 정책과제 선정에서도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다. 특정한 주제를 두고 여러 관련 부처 장관들과 인수위원이 함께 모여 국정토론회를 열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0대 정책과제를 먼저 선정하였다. 이후 노동과 농·어촌 분야를 추가해 12대 정책과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선정된 12대 정책과제는 과제별 T/F를 통해 구체적 정책과제로 정리되었다. 정책과제는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정당 등과 수차례의 토론회와 업무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과제로 완성되었다.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적 요구에 부응하고, 평화정착을 통한 번영의 기반을 마련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목표이다.

참여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과 남북 간 신뢰에 입각해 국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과제

주요과제	세부과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대화의 정례화 • 남북 교류협력 심화·발전 •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적 방위역량의 조기 확충 • 韓·美 동맹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사회의 협력을 확보하고, 6자회담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수차례의 북핵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평화변영정책을 추구해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 이제는 50년의 정전협정체제를 마무리하고,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평화증진의 교두보로써 한·미관계도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구하였다. 국방개혁을 통해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21세기형 첨단 정보·기술군을 육성해 평화체제를 군사적으로 보장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 부패 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투명하고 봉사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성과평가에 기초한 생산적 유인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정보 공개를 강화하였다. 특히 정부의 자산, 부채 등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디지털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국가의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동시에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예산편성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권력형 비리를 일소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의 상시적 감시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하였고, 실질적인 결실을 맺었다.

여성·기술직·장애인·지방출신 등을 차별하지 않는 균형된 인사배치를 위해 노력하였고, 연공서열에서 벗어난 전문성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체도를 도입하여 공무원 사회를 계급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였다.

부정부패 방지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과제

주요과제	세부과제
부정부패 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내 권력형비리·고위공직자비리 상시적 감시 및 예방 전담반 운영 • 국민적 의혹사건 및 권력형비리와 고위공직자비리를 처리할 한시적 상설 특검제 실시 •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과감한 검찰개혁 • 법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 • 시민 옴부즈맨 도입 등 부패추방을 위한 시민참여확대 • 내부신고자의 신분보장, 신고자면책 및 보상금 지급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에게 채용, 승진, 보직, 훈련 등 주요 인사정책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자율을 부여 • 분산되어 있는 인사기능의 통합문제를 검토 • 공기업, 정부산하단체에 관한 바람직한 인사시스템 구축 • 인사편중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 여성·기술직·장애인·지방 등 균형적 인력활용 제도 구축 • 계급제하에서의 승진위주 인사관리, 연공서열에서 탈피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 공직에 대한 충원방법 다양화와 개방형 임용제도의 개선
국민과 성과 중심의 행정개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와 예산에 관한 자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청 단위 기관 혹은 부처 수준으로 상향 적용 • 감사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검토 • 성과평가에 기초한 적절하고 생산적인 유인체계의 구축 • 책임운영기관제도, 성과관리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급, 목표관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체계를 구축 • 행정정보 공개의 강화 • 효율성과 민주성이 조화되는 정부조직 개편 추구
투명한 성과 중심의 예산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자산, 부채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재무관리시스템의 구축 • 성과관리를 토대로 각 부처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구축 • 국가의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예산 편성 • 지방자치단체와 각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균형적·상향적 재정운영제도의 구축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체적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 • 재난관리 조직의 위상과 기능 강화 • 재난유발 위험시설 등에 대한 관리 실명제 실시 • 자연재해보험제도의 도입 검토 • 범죄의 지능화, 첨단화, 과학화 등의 추세에 따른 치안행정의 과학화와 전문화 추구

(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참여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였다. 그리고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건설과 기업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 지역이 명실상부한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지역 발전의 구심점은 지방대학이다.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지역특화산업 등과 연계하는 등 지역발전의 핵심역량으로 집중 육성하였다. 또한 테크노파크, 소규모 기술혁신센터 등 지역기술혁신 사업을 확충하고, 지방대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건설이다.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로 축소되었으나 신행정수도 건설은 서울 일극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과제

주요과제	세부과제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추진 •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혁신시스템(RIS) 구축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특성별로 산업거점도시를 특화하고 낙후지역의 성장 인프라 확대 • 전략산업 중심으로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중소유통업의 발전 지원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대학특성화 사업 추진 • 지방대학 육성 기반 조성 • 지방문화 육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정치개혁을 위한 정부과제

주요과제	세부과제
국민참여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정치 • 국민참여형 정당정치 • 신진정치인의 진입장벽 제거
국민통합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통합 • 지역통합
투명한 청정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비용 정치’, ‘부패정치’ 그리고 ‘책임 부재의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명한 청정정치 실현 • 정치자금 및 관련 선거제도 개혁
수평적 협력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적 국정운영에서 국회,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 등이 대통령과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국정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협력정치’(협치 : 協治) 관계 정립
디지털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정치를 통한 국민 참여 및 정치 투명성 확보

(4)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참여정부의 정치개혁은 참여와 자율, 그리고 분권을 매개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국민통합과 민주적 책임성 강화,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참여정부의 정치개혁은 국민참여의 정치, 국민통합의 정치, 투명한 청정정치, 수평적 협력정치, 디지털 정치를 목표로 이뤄졌다.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노력하였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당정을 분리하고, 책임정치 구현을 통한 수평적 당정관계를 형성하였다.

(5)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환경·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된 과거정부의 정책은 규제완화, 구조조정, 지원제도 정비로 범주화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의 정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특히 금융권은 부실금융회사의 처리가 완결되지 않아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되었고, 국제경쟁력이 미흡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도 높지 않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왜곡 시정, 증권시장의 규율 제고, 구조조정 완결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과제

주요과제	세부과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전반에 대해 규제일몰제 적용여부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활동 강화하여 규제에 대한 심사와 개선 • 토지공급을 확대하되 '先計劃-後開發 體系' 확립 • 수도권정책을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단계적 전환에 대한 신중 검토 • 환경친화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부담금 감면, 각종 보고·검사의무의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서비스산업의 경쟁촉진과 차별지원 개선 •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육성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추진 •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추진 •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제도 유지 •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공개 • 경쟁제한 규제의 일괄개선, 2차 카르텔 일괄 정리법 제정 추진 •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활성화 • 소액다수 서민층 소비자를 위해 공익소송제 도입 검토 • 공정위 일부직원의 사법경찰관 지정 방안 검토 •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 보완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제도 강화 •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확대 •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 강화, 부실 상장기업에 대해 강화된 퇴출기준 엄격 적용 • 상장·등록기업의 회계제도 및 공시제도 개선 • 공적자금 투입은행 민영화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 가계대출 연합록 유도, 개인 워크아웃 제도 활성화 • 증권시장과 선물시장 간 연계운영을 강화하고 중복·분산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추진 • 한국은행 독립성 제고, 물가관리 목표를 연간목표에서 중기목표로 전환 • 다원화되어 있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재정·세제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부처의 자율과 책임 확대 • 예·결산 과목구조를 개편하여 단위사업별로 관리 강화 • 위법한 재정 집행에 대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 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 • 중기재정계획 수립 의무화 • 기금·특별회계 정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지역개발사업 간 연계 강화 •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공적연금체계 개선,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 비과세·감면 개선, 관세경감제도 정비 • 상속·증여세법에 완전포괄주의 규정 신설 •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칭)' 시행 •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및 상시구조조정 체제 정착, 중산·서민층 및 중소기업 금융이용자 지원 강화, 금융감독규율의 확립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척결하기 위해 재정구조 및 운영시스템 혁신, 재정건전화 노력의 지속적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제·세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6)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동북아시아에서 번영과 통합의 질서를 구축하고, EU와 같은 지역통합과 지역공존의 질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확고한 경제중심 역할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이 선결과제였다.

참여정부는 남북관계에서만 머물러 있던 시각을 확대해 동북아에서의 다양한 역내 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정부 과제	
주요과제	세부과제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역은 물류와 IT 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 관광단지로 조성 → 남쪽으로는 기흥·남양만, 북쪽으로는 개성공단과 연결 ⇒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 부산지역은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조성 → 북쪽은 울산, 서쪽은 사천과 연결 ⇒ 동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 광양지역은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조성 → 동쪽은 사천, 북서쪽은 광주와 연결 ⇒ 서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개발 • 금융·외환시장을 21세기 동북아 국제금융의 중추로 육성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공항과 항만으로 개발 • 인천항을 인천공항과 함께 수도권 핵심물류거점으로 개발 • 경의선·동해선 연결 및 대륙철도(TSR, TCR) 교통망 구축 • 2015년까지 공항·항만 등을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IT 등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IT 중심국가 건설 • 동북아 첨단산업기지에서 내부역량 강화 •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거점화 •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 • 관광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아시아의 관광중심국으로 육성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거점 개발 및 남북 간 산업·물류·정보통신축 형성 • 4개 경험합의서 발효 등 남북 간 제도적 인프라 확충 •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 한상 네트워크 등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추진

위와 역할을 고민하였다. 동북아 역내 역할을 감안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을 병행하기 위해 IT 등의 허브화 전략, 경제자유구역 조성, 남북경협 내실화 등을 추진하였다.

(7)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급속히 기술력이 좁혀지는 중국과 기술격차를 벌려 가는 일본 사이에서 ‘목표지향적 기술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참여정부는 ‘핵심기술 및 신산업 창출’로 국가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기초·원천기술과 산업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배분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제는 이후 혁신주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정부과제	
주요과제	세부과제
국가과학기술 시스템의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조정기반 강화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회·출연(연) 체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확산 시스템 혁신 지식재산보호·기술이전·사업화 지원 강화 글로벌 연구개발체제 구축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과학 육성을 통한 혁신기반 강화 이공계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 중장기 거대과학기술 개발 추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지역 혁신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주체로 육성 연구개발/산업특구(R&DB) 및 지방특화산업 육성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남북 과학기술협력 강화
세계 일류 IT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S/W와 디지털콘텐츠 등 IT서비스산업 활성화 이동통신 등 주력 IT산업의 경쟁력 강화 디지털TV 관련 단말기, 시스템 및 응용S/W를 차세대 주력 상품화
지식정보 기반으로 산업 고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원천·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 기지화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역동적 산업구조 구축 맞춤형 산업지원정책 추진 공공·복지기술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원칙과 신뢰’의 사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창달 과학기술 사기진작으로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 국민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추진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 창업 및 지식기반산업 성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신진·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형 성장전략으로 더욱 완결된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8)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참여정부는 국가경영전략 차원에서 시장지향적인 산업정책과 이를 보완하는 소득 안정 및 농·어촌사회정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농촌문제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농·어촌 산업정책은 고객 만족, 규모화·조직화, 수출 농·어업을 지향하였다.

소득정책으로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 직불제) 확충, 농·어민의 유통가공 참여, 고품질 농업을 추구하고, 사회정책으로 교육·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향토산업 육성 등에 주력하였다. 또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농어업 발달을 위한 정부과제	
주요과제	세부과제
공익적 기능과 시장을 지향하는 농·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충 • 농·어업의 시장지향성을 단계적으로 강화 • DDA협상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 • 농·어업 구조조정의 연착륙 유도 • 소비자 및 수출지향의 품질경쟁력 제고 • 농협 개혁과 산자유통 혁신
개방화 시대의 농·어업인 소득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지불제 확충 • 부채경감 대책 • 자율적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재해보험 확대 • 다양한 농·어업외 소득원 개발 확대
농·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형 사회안전망(safety-net) 확충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복지 인프라 확충 •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
신해양 시대의 어업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충으로 어업구조 개편 •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조성으로 수산자원 회복 • 시장수요와 여장환경을 고려한 양식어업 추진

(9)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종적인 국가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삶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과제

주요과제	세부과제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일자리, 연금제도, 요양체계, 평생교육 활성화 등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 수립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교육, 의료 등 부분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확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
전 국민 평생건강 보장 체계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2003년 10% → 2008년 30%)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건강증진사업 및 주요 질병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의료급여제도 확대, 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시행 등으로 의료의 보장성 확대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료의 평균 50% 국가 지원, 평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방과후 보육을 방과후 아동복지 서비스로 확대 개편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보호·육성체계 구축 시간제 육아휴직제도 도입 등 휴직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모성보호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확대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지속가능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국가정책의 환경친화성 구현 저공해차 보급,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 추진 에너지 부분의 환경세 도입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 물수급 예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요·공급정책을 연계한 물부족 대응 방안 마련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질 높은 삶'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문화적 가치의 사회 전반 확산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참여와 자치의 문화시설 운영을 통해 문화민주주의 구현 체육시설 확충과 재정·조세지원정책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 도모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에 5년간 15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보유세를 강화하여 주택시장 불안요인 해소 국민임대주택 50만 호 건설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
도시 교통난 해소 및 교통 약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의 기능 회복과 경전철 건설 등을 통해 도시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수도권 교통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남·북부지역에 X자형 광역전철망 구축 등 교통문제 해소 대책 마련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대책 시행

질과 관련된 분야(보건·복지·여성·환경·문화 등)에서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이었다.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품격 있는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각 분야에서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더구나 복지·여성·환경·문화·주거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인적자원(human capital)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분야에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게 하여 삶의 질 향상을 계획하고,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비전 2030, 사회투자국가, 동반성장 전략 등 국가 중장기 비전은 참여정부 정책과 비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10)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빈부격차 문제는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의 불균등으로 야기되므로 복합적이고 장기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을 위한 정부과제	
주요과제	세부과제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계층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보유과세의 점진적, 지속적 현실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한 근로자의 자산 형성 촉진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와 EITC 도입으로 근로를 통한 빈곤 탈출 유도 자영업자 소득 파악 강화와 조세형평성 제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징수업무 일원화 기타 빈곤층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대책 발굴, 빈곤층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
5대 차별해소를 통한 평등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 : AA) 도입 추진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 조치 강구 차별금지법 제정과 (가칭)차별시정위원회 설치
양성평등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 예방, 단속 및 처벌, 피해자 보호 등 성매매방지대책 마련 및 「성매매방지법」 입법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정치관계법」에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공 부문의 여성 채용을 확대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적극 확산하고 폐지 이후의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 성인지적 가족지표 개발 및 「가족정책기본법」 제정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 현장 상담센터 확충, 자활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사회복귀 지원 종합서비스체계 구축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참여정부는 성, 학벌,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정부의 할당제와 같은 소극적 조치를 넘어서는 실효성 있는 장치와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11)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정신적이고 인간적인 삶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참여정부는 가치의 중심을 경제적 생산력에서 문화적 가치와 인간적 삶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식과 문화를 국가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고 교육, 문화, 과학 분야에서 혁신과 자율성을 높였다. 학교교육 혁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 하고, 예술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와 문화산업 육성으로 창조적인 문화 역량을 키웠다. 그리고 IT산업 육성, 전자정부 고도화, 과학교육 강화와 인재 육성을 통해 과학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정부과제	
주요과제	세부과제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혁신기구 설치 •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 •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내실화 •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 •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승진제도 개선 • 유아 및 특수아 학습권 보장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과학교육 강화 •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창조적 문화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창작의 사회 핵심 지원화 • 인권·교육·문화를 연동한 청소년 계발 • 문화의 주체성과 다양성 조화 • 체험하면서 배우는 관광 활성화
문화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확대 • 문화산업 유통 합리화 및 시장구조 개선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인 디지털 정부 구현 • 안전한 지식정보사회를 위해 정보보호대책 강력 추진 • 정보격차 해소를 소외계층의 참여복지 및 삶의 질 향상 •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지속적 고도화

기술에 바탕을 둔 혁신 주도형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2)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참여정부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노사 간의 실질적인 힘의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공정한 규칙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제도 개선, 노동행정서비스 능력을 높여 선진 노동문화 정착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과 원활한 이동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정보 제공에 역점을 두었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과제	
주요과제	세부과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 그간의 국내외적 요구를 감안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	•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의 기초하에 중층적 협의·교섭구조를 확산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 노사자치주의를 원칙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
근로생활의 질 향상	• 노동시장 내의 상대적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잠재적 성장력을 견인하고 삶의 질을 높임
노동행정서비스의 역량 확충	• 전통적 노동문제의 증가와 함께 비정규직·외국인 근로자 보호 등 새로운 노동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노동행정 역량의 확충이 시급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산업의 성장과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생산성·고임금의 신규 일자리 창출 •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환경·교육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매년 5~10만 개 창출 • 실업 없는 직장이동을 위한 효율적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알선, 고용보험, 직업훈련, 자활사업 등 원스톱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직업상담원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여 고용안정서비스의 질 제고 •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가이드할 수 있도록 국가 자격제도 혁신

2. 100대 로드맵 국정과제

1) 100대 로드맵 국정과제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과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추진되어 오던 253개의 대 중소 분류 수준의 로드맵 과제를 중분류 수준의 100대 로드맵 국정과제로 통합하여 중장기적인 국가발전과제를 정리하였다.

3대 국정목표와 4대 국정원리가 참여정부의 철학과 정신의 요체라면, 12대 국정과제는 성과측정이 가능한 정책 지침으로서 참여정부 임기 동안 역점을 두어 실현할 것을 선언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100대 로드맵 국정과제는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서 다소 추상적인 국정원리·국정목표와 세부 정책과제 사이의 중범위의 정책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00대 로드맵 국정과제는 국정과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국정과제위원회에서는 참여정부 정책방향의 합목적성, 미래를 지향하는 장기주의(long-termism) 및 추진 현실성,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과제 범위와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최종적으로 로드맵 과제를 설정하였다. 로드맵 과제 수는 초기의 210개 세부과제보다 증가하여 총 253개 과제가 되었으나, 과제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2004년 3월에 재정리하여 100대 로드맵 과제로 압축·조정하였다.

2004년 3월 당시 위원회별 로드맵 과제 수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13개 △정부혁신지방분권위 30개 △국가균형발전위 16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5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 8개 △지속가능발전위 6개 △빈부격차차별시정위 12개 △교육혁신위 5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 5개 등이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과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위’가 최종 결정을 못 내린 상태였고, ‘사람입국신경쟁력위’는 설치 필요성만 제기된 단계였다. 따라서 과제의 연계성으로 인해 위원회가 신설될 때마다 과제의 이관 및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다만 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과제 수는 100대 로드맵 과제로 유지되었다.

이 국정과제는 참여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제들로 12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2007년 상반기 100대 로드맵 국정과제 추진상황

은 96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부처 간 이견이나 국회 입법 지연 등으로 4개 과제는 부진한 상황이다. (중앙·지방의 사무구분체계 개선, 자치경찰제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조정, 지방정부 책임성 확보)

대부분의 국정과제들은 국정과제위원회의 책임하에 정책화 단계를 넘어 실효성 있게 진행되었다. 2007년 상반기 각 위원회별 100대 로드맵 국정과제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드맵 국정과제 추진 현황							
위원회	정책추진단계			점검결과			
	정책화	제도개선	실행	진행상황		효과	
				정상	부진	기대수준	미흡
합계	8	4	88	96	4	88	-
동북아시아위원회	-	-	8	8	-	8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5	-	18	19	4	18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1	15	16	-	15	-
행정부합중심도시조성위원회	-	1	4	5	-	4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1	5	6	-	5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	5	6	-	5	-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1	1	13	15	-	13	-
교육혁신위원회	-	-	4	4	-	4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	5	5	-	5	-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단	-	-	3	3	-	3	-
국민경제자문회의	-	-	7	7	-	7	-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1	-	1	2	-	1	-

100대 로드맵 국정과제별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연번	과제명	주요실적
1	동북아구상 실현을 위한 중장기 외교안보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구상 비전과 전략 제시 • 동북아 시대 실현을 위한 중장기 대외전략 마련 •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안) 마련(2007. 5)
2	동북아구상 실현을 위한 대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4국과의 전략대화 개최 지원 • 동북아구상 심화 및 확산계획 마련(2005. 12) • 국내 주요 정책연구소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열린 동북아포럼 등 수시 개최
3	동북아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전략 기획 •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전략' 보고서 발간(2006. 8)
4	남북통합을 위한 국내 인프라 강화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적 통일수용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적 통일역량 강화 방안' 연구(2005. 12) • '한반도 경제구상 : 개방적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 책자 발간(2006. 12) • '대북정책의 국민합의기반 확충 및 각급단체 협력방안' 학술회의 개최(2007. 7)
5	제주도의 동북아 평화 거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평화거점화 방안 마련 보고(2005. 1) •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2005. 1) • 제주평화포럼 개최(2007. 6)
6	동북아 에너지-환경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에너지협력 추진 방안' 마련(2004. 9) <p>※이후 동북아 경제협력에 포함하여 추진</p>
7	동북아 경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구상을 뒷받침할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의 정립과 중장기 중점과제' 국정과제회의의 보고(2006. 4) • ASEAN+3 재무장관회의(2007. 5)에서 치앙마이구상(CMI) 다자화에 관한 기본방향 등 합의 • 한-러 철도공사 사장 간 나진-하산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협력양해각서 체결(2007. 6)
8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사회문화협력방안 보고(2006. 6, 국정과제회의) • 동북아역사재단 출범(2006. 9) •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 지정(2007) • 동북아 사회문화협력 프로그램 발굴 지원(심포지엄 개최 등)
9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및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부(2004. 10) 개편,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설치(2005. 6) 등 6개 분야 부처 간 기능조정-개편 실시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시행(2006. 3) • 총액인건비제도의 전면 시행(2007. 1)
10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및 민원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서비스헌장제' 실시 • '행정서비스 민간위탁제' 시행(2005. 5)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국 서비스 실시(2007. 5)

11	행정의 개방성 및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품질관리제도' 시행(2005. 7) •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시행(2007. 1~) • 전자민원 G4C 확대 3단계 시스템 구축(2006. 10~2007. 5)
12	시민사회와 협치기제 강화 및 공익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법」 제정(2005. 7)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및 고충민원 해결기능 강화 •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 시민단체 재정적 지원 : 2006년 129개 단체(148개 사업), 2007년 140개 단체(155개 사업)에 각각 49억 원
13	공직부패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공직윤리의식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 중장기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2005. 3) 및 「부패방지법」 제정(2005. 6) • 631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실시(2006. 4~) • 등록재산 확대,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공포(2006. 12)
14	자율적 혁신체계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교육과정 개설(중앙공무원교육원, 자치개발원) 및 50개 기관에서 자율혁신토론회 수시 개최 • 17개 분야 공통혁신과제 매뉴얼 마련(2005. 10) • 유엔 거버넌스센터 설치, 혁신관련 국제행사 참석 및 혁신 MOU 체결 등
15	차별 없는 균형적 인재등용 및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용제도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2003~2007) •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임용확대 5개년계획 실시(2004~2008) • '지역인재추천제' 도입(2005),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2007) • 개방형직위제 과장급 확대(2006. 7) •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확대
16	투명·공정한 선발시스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2004. 3) • 고위공무원단체 도입(2006. 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7. 1) • 상시학습제도 전 부처 시행, 인사운영에 반영, 역량 향상·경력전환 프로그램 실시(2007. 1~)
17	보수 합리화와 공무원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급 연봉제' 실시 및 적용대상 확대 • 공무원 성과급제 적용대상 확대 계획 수립(2007. 3)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2006~)
18	국가인사기능 통합과 자율 분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사기능을 중앙인사위로 일원화(2004. 6) • 각 부처 인사자율성 확대(2004. 6~2005. 12) • 인사역량 강화 전문교육 상시 개설
19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 부처 확산(2007) • '통합형사사법정보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 행정정보공동이용 범위 확대(40종→74종, 민간기관) 및 범정부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20	대국민서비스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국세서비스', '국가복지종합서비스' 등 각종 대국민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2005~계속) • 인터넷 민원서비스 단일창구(G4C) 확대 및 고도화 추진(2006. 10~2007. 5) • 인터넷 행정심판 시스템 확대 구축 완료(2005. 10~2006. 8)

21	대기업서비스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원단일창구(G4B)서비스', '국가물류종합서비스' '전자무역종합서비스' 등 · 각종 대기업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2005~계속)
22	정보자원 통합관리 및 전자정부 관련 법적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적 민원처리 관련 법령(486개) 개정 완료(2005. 5) · 제1통합전산센터 구축 완료 및 개소(2005. 11) · 제2센터 운영기반 인프라 구축 및 이전 추진(2006. 7~2007. 12)
23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양 관련 개별 입법 완료(2005. 6) : 49개 법률 227개 사무 · 단체위임 및 기관위임 사무정비를 위한 '사무구분체계' 세부과제의 경우 사무구분에 대한 전문위원들 내 의견 불일치로 과제 종결(2007. 1. 26)
24	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경찰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자치법」(2006. 12) 시행령(2007. 7) 공포 · 국회 행자위 자치경찰법안소위 법안심사(2007. 4) ※의원 간 이견으로 입법 지연
25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와 관련 중앙부처 간 이견으로 추진상 애로 · 참여정부 지방분권 로드맵 추진성과 보고 시 · 과제 종결 계획을 보고(2007. 6) · 과제 종결(2007. 7)
26	지방자치권 강화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소송제 도입(2006. 1) ·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행(2007. 1) · 분권형 도시계획 구축(2007. 1 종결) · 주민소환제 도입 : 「주민소환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2006. 5)
27	지방의정활동 기반정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원 경비지급 자율화' 시행(2005. 8 「지방자치법」 개정) · 그외 지방의원 자율성·책임성·전문성 강화방안 등 · 5개 세부과제 추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완료(2006. 4)
28	중앙-지방, 지방정부 간 협력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4대협의 연합체 설립근거 마련 등 중앙-지방 협력체제 강화(2006. 1) · 시·도 지역협력관제 운영(6개 시·도)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2006. 11)
29	조세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개혁전담 추진기구 설치(2005. 3) ·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005. 5~2006. 12)
30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교부세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부세제도 개선 및 증액 교부금 폐지(2003. 12) ·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2004. 12) · 지방정부 예산편성지침 폐지, 지방채 발행 개별승인제 폐지, 교부세제도 개선(2004. 12)
3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총액배분 자율편성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방안 확정(2004. 2) 및 시행 중(2005~)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확정(매년)
32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지원, 지역혁신 리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구축 · 의장단회의 및 총회 개최, Inno-Cafe 지원, 한국지역혁신교육원 설립, 지역혁신박람회 개최 · 지속적인 혁신 컨퍼런스, 워크숍 개최 등으로 혁신 분위기 창출

33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의 연계 강화, 지방대학의 특성화 발전 유도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을 시행(2004~2008)
34	산학협력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420개 가족회사와의 협약체결(13개 대학, 2004~2006)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2007. 4,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2007. 7)
35	대덕 연구개발특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시행(2005. 7) 특구기획단(2005. 8) 및 지원본부(2005. 9) 설치·운영 특구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2005. 11)
36	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단공 조직개편 및 7개 추진단 구성·운영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방안 마련(2004. 6) 5대 핵심과제를 선정, 혁신클러스터화 사업 진행(2005. 4~)
37	지역전략산업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으로 광역 시·도별 4개 전략산업 지정(2004. 8) 지역산업 로드맵(RIRM) 수립 추진(2006. 8~)
38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자립형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관광자원 개발 활용방안」 보고(2005. 12) 지역문화관광자원 활용방안 실행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문광부) 지역문화관광자원의 마케팅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인지도 향상
39	낙후지역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활력지역 발전구상」 발표(2004. 9) 및 연도별 추진 시·군에 대한 자문·건설링,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추진 지원 중
40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5개년계획 수립 완료(2004. 8) 이후 매년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4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 및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2005. 1) 사업별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한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2005년 시범 도입) 2007년 균특회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42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체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체제의 법적 근거 마련 등 평가체제 구축(2004. 4) 법적 근거에 따라 평가작업 추진(2005년부터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
43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구법」 제정 및 지역특구위원회 발족 (2004) 특구박람회 개최(2006. 9, 대구) 「지역특구법」 개정(2006. 9)
44	신국토구상 수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국토 5대 전략 및 7대 과제 제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반영 정책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과제 종료(2004. 12)
45	수도권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 확정, 발표(2005. 6) 외투기업(2005. 6) 및 국내 대기업(2005. 12) 규제 개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추진(2007. 4~2008. 4)

46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2005. 6) • 혁신도시 입지 선정 완료(2006. 12) •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2006. 12) • 중앙119구조대 등 11개 기관에 대해 개별이전 지역 확정(2007. 4) • 10개 혁신도시 건설 본격 추진을 위한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이전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수립(2007. 3~9) • 혁신도시 사업 착공을 위한 보상 추진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가이드 마련, 각 지자체 시달(2007. 6)
47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입지 및 투자보조금 등 지원 • '2단계 균형발전정책' 관련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 조성 등 협의(2007. 3~) • 수도권 소재 기업체 대상 지방이전 계획 수요조사 실시(2007. 4)
48	행정도시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위 및 자문위 구성(2005. 4) • 건설청 개청준비단 발족(2005. 9), • 직제 제정·공포(2005. 11), 건설청 개청(2006. 1) 등 추진체계 정비 완료
49	행정기관 이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고시(2005. 10) • 중심행정타운 조성 국제공모(2006. 6~2007. 1) 및 마스터플랜안(지구단위계획) 마련(2007. 6)
50	예정지역 지정 관리 및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추진협의회 구성·운영(2005. 4) • 보상물건조사(2005. 6~8), 보상계획 공고(2005. 9), 감정평가 실시(2005. 10~11) • 토지매입 착수(2005. 12) • 1단계 사업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2007. 7)
51	개발계획 등 수립 및 건설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모 시행 공고(2005. 5) 및 당선작 선정(2005. 11)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수립(2006. 7)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2007. 7)
52	행정도시 건설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참여 이벤트 지속 개최 : 마라톤대회, 공공미술 전시회, 기공식 당일 지역주민 마을잔치 등 • 홍보간행물, 전광판 홍보, KTX 내 영상매체 및 서울·수도권 지하철 PDP 광고, 언론 홍보 등 실시
53	고령화 사회 대비 기본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 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2005. 9)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및 2006년 시행계획(19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확정 발표(2006. 7)
54	출산력 제고와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종합대책 발표(둘둘플랜) •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역점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수립(2006. 8) • 여성부에서 가족업무 이관 후 범정부적 '건전가정 기본계획' 수립(2006. 11) 및 2007년 건강가정 시행계획 수립(2007. 7)
55	인구자질 향상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수립(2005. 4) • '동반성장을 위한 평생직업능력 개발체계 혁신방안' 국정과제보고회의 개최(2006. 5) • 고령실업자 현장훈련 프로그램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시행(2007)

56	고용제도 및 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연구원에 '임금직무혁신센터' 운영(2005. 2~) •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2005. 12~2006. 9) • 청년연장 유도 및 연령차별 관행 개선기반 구축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07~2011) 수립(2006. 9) • 연령차별금지 관련 법제화 관련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안 마련(2007. 3) • '청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장려금' 신설(2008년 도입)
57	고용기회 확대 및 이민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수립(2005. 4) • '동반성장을 위한 평생직업능력 개발체계 혁신방안' 국정과제 보고회의 개최(2006. 5) • 외국인력 도입 창구 일원화(2007. 1)
58	전 국민 건강보장체계 구축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계획' 수립(2005. 12)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2010)의 반영(2006. 8)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 수립 • 생애전환기(16세, 40세, 66세) 건강진단 실시(2007. 4) • 「건강보험법」 국고지원 규모와 방식을 개선, 직장가입자까지 취약계층 지원대상 확대(2007. 1~)
59	교육·여가·문화 향상, 주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2010)에 반영(2006. 8)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6. 1)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2006. 2~) •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2006. 4) 및 실버마크 대한노인회 전달
60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2007. 7)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제출(2006. 7~2007. 1) •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2007. 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2007. 4)
61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국정과제회의 보고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을 위한 지역 선정 완료(2007. 7, 성남, 대구) • 고령친화용품·기기 대여 시범사업 추진(2006. 11~)
62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입법 애로에 따라 기존의 법률안을 재검토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정(2007. 2) •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포럼' 주기적 개최
63	대안적 갈등관리 프로세스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관리법」 제정 무산(2006. 12)으로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대신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운영 추진(국조실) • 한탄강범 갈등관리를 위한 운영소위 운영(2004. 11~2005. 4), 국무조정실 이관(2005. 5) ※ 국무조정실에서 임진강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임진강 유역 홍수 대책방안 확정(2006. 8)
64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산업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에너지 주요 정책과제와 논의구조' (2003. 12),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보고(2004. 6) • 주요 에너지정책(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등) 점검과 추진 계획 수립(2007) • 지속가능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T/F 운영 및 정책보고서 작성

65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수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 추진 7대 정책과제 등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마련 보고(2005. 10) ※「물관리기본법」 국회 제출·심의 중(환경부·건교부 공동) 국가물관리위원회 신설 등 •상수도 관리업무 개선방안 수립(2006. 4) •지속가능한 하천하구관리 보고(2007. 5)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 하부조직체계 기반 구축
66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 을 마련하여 보고(2006. 7) •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지속가능 연안 및 해양관리정책 관련 국정과제회의 후속 조치 주기적 점검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2007. 7)
67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2005. 6) • 지방의제21 활성화 방안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정책 마련·보고(2005. 6) •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2006. 10) • 지속가능 발전지표(77개) 개발 및 평가시스템 구축(2006~2007)
68	주거복지정책 추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임대주택 150만 호(국민임대 100만 호·민간장기임대 50만 호) 건설계획 수립(2003. 9) •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확정(2005. 4) •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 연구보고서 발간(2007)
69	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국정과제회의 보고(2003. 5)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기본법」 등 개정(2006. 12) •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강화(2007. 7)
70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탈루혐의통보제 도입(「건강보험법 시행」(2005. 7) • 사회보험료 부과기준, 국세청의 근로자 과세소득 일원화(2005. 11, 국무회의) •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방안 마련(2006. 9) 및 「사회보험료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국회 제출, 2006. 11)
7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보고(2006. 4)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2006. 12) • 양극화 완화, 민생문제 해소를 위하여 양극화민생대책본부 설립(2007. 6)
72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에 자활지원정책 내실화 방안 마련(2004. 11, 국정과제회의)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타당성 및 도입방안」 마련(2005. 8), EITC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06. 12) • 「휴면예금 관리재단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2007. 7)
73	우리스주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스주제도 개선 노·사·정 합의 발표(2004. 5) • 스톡옵션형 우리스주제도 및 차입형 우리스주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2005. 3) • 모범적 운영기업에 대해 '우리스주대상' 시상

74	5대 차별시정 로드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2004. 8) •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대책 마련(2006. 4, 국정과제회의) • 여성고용관행 개선방안 마련(2006. 12)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 4) •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마련(2007. 4, 국정과제회의) •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제정(2007. 5) • 「비정규직 보호입법」 시행(2007. 7)
75	적극적 고용평등프로그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평등프로그램 도입계획 국정과제회의 보고(2회, 2003. 11/ 2004. 2)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05. 12)으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 : AA) 도입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용대상 사업장 실태조사(2007. 1~2)
76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전략(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 수립(2004. 7)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 빈곤아동관련분과위원회 설치 •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운영비 인상 (2006년 902개소 → 2007년 1,800개소 개소당 월 2백만 원)
77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등 취약계층 보호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대책 마련(2005. 2, 국무회의)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직계혈족 → 1촌 이내 직계혈족, 2005. 7)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시행 및 확대(2004~)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2006. 3) •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안 마련(2006. 4), 행정자치부에 '주민지원서비스 혁신 추진단' 설치(→ 2007. 7. 1부터 3단계 전국 개편)
78	학교교육체제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교육과정 현대화' 정책 제안(2005. 6) • 농·산·어촌 우수교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2007. 4) • 학생건강진종합계획 수립(2007. 6~7)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확대(2007. 3) • 교원정책 개선방안 실행계획 보고(2006. 11) • 방과후학교 전면 시행(2006. 3, 280개 시범학교 운영)
79	대학입학 제도개혁 및 대학교육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발표(2004. 10) •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2005. 3) • 학생부 반영 비중 강화 추진(2007. 6) • 대학 시간강사 및 비정규직 교원대책 제안(2005. 7) • 교육부, 시간강사 대책 보고(2006. 7)
80	직업교육체제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제도개혁특위 발족(2004. 3), 개혁방안 최종 발표(2004. 10) • 특성화고 공모지정(30개교, 2006. 7~8, 총 104개)
81	지역교육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추진(2005. 4)
82	농업인력 정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농 육성 지원사업을 도입 지원 • 농업·농촌 젊은 인력 유입 촉진 시범사업 실시 • 창업보육센터 설치 확대
83	농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제도 관련 법령 개정(2006. 1) • 농지은행제도 법적 근거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2005. 12)

84	쌀산업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2005. 11) • 영농기반이 없는 신규 창업농에 대해 농지임대차사업 지원(2007) • 쌀전업농 육성 및 영농규모화사업 개편방안 마련· 보고(2007. 6)
85	직접지불제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종합대책, FTA 대책과 연계하여 직불제 확충방안 마련(2007. 2~) • 공익기능 제고형 직불사업 시범사업 추진 및 규모 확대
86	농촌사회 안전망 및 기초복지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2007) : 259천 명, 761억 원 •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률 확대 : (2005) 40% → (2006~) 50% •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신규 도입
87	기술혁신 확산 및 신기술 산업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가치 평가 활성화 방안,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 마련(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Connect Korea사업 추진 •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R&BD)을 통해 사업초기 우수 기술 보유자 등 지원(2005~2010)
88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 및 지식기술기반 공공서비스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임용확대 5개년계획 추진(2004~2008) • 4급 이상 행정·기술직 직급 통합 완성 • 중기인력운영계획에 과학기술인력 반영(2005. 10)
89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확정(2003. 8)하여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에서 기술개발 착수(2004. 9) • 범부처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추진현황 점검·조정, 의견 수렴 창구 마련·활용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종합실천계획 수립(2004. 9, 2006. 4, 2007. 4)
90	직장 내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여가 및 문화생활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등을 위한 사람입국 전략 마련·시행(2005. 2) •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07~2011) 확정·발표(2007. 3)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확대 - 2006년 57개, 14만 명 → 2007년 150개 소
91	근로자 과로 해소를 위한 근무시스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패러다임 확산을 통한 일자리 및 신경쟁력 창출 국정과제 보고회의 개최(2004. 5) • 교대제 개편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실시(2004~2006) • 공공 부문 근무시스템 개편 추진(2006~) • 탄력근무제도, 과로사 방지대책 등
92	금융 관련 제도 개혁 및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신사 구조조정을 완료(2005. 5)하고, 퇴직연금제도 시행(2005. 12), 통합거래소 설립(2005. 1), 민금융규제개혁(2005. 11, 2006. 7) • 민·관합동의 금융허브 추진체계 구축(2005. 10)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2007. 6)
93	금융 분야에서의 동북아 역내 리더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12, 「동북아 금융 허브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KIC 설립 등 3개 분야 15개 과제 확정 및 추진
94	공형만 확충 및 배후단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2단계 사업 추진(2008년 완공 예정) - 배후물류단지(30만 평) 개발완료(2006. 3), 화물터미널(33만 평)은 부지 조성 등 • 부산신항 및 광양항 - 부산신항만 22만 평, 광양항 12만 평 항만 배후부지 개발(2006. 12)

95	국내 물류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시설 투자배분 조정(철도, 항만투자 확대) • 물류전문기업 인증제 시행(2006. 1) • 물류전문대학원 개설(2006. 9)
96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본격화를 위한 기반 마련,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성과가 가시화 - 선도사업인 송도지구는 개발방향을 확정하고 주요 프로젝트 착공 • 청라·영종지구는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외국인 우선협상 대상자와 개발 관련 계약체결 진행 •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은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배후에는 물류·첨단산업 외투기업 유치 중
97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및 과세 강화(2003. 10, 2005. 8) • 행정자치부에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설치·운영
98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양도세 등 세제개편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 시장투명성 제고, 신도시 건설 등 안정적 주택공급 방안 추진(2005. 8) • 재건축제도 보완, 주택담보대출 방식 개선(2006. 3) •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 주택공급제도 개선(2007. 1) •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 강화방안 마련(2007. 1)
99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6. 9), 하위법령 시행(2007. 3)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종합계획 수립
1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건축설계 현상공모전 실시(2005. 5~12) • 토지 등 손실보상(2005. 5~/2,259억 원) 및 지장물 철거공사(2005. 10) • 기본설계(2006. 5) 및 실시설계용역계약 체결(2006. 12~2007. 9/139억 원)

2) 국정과제위원회 설치·운영

(1) 설치 배경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집단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각 부처나 조직은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정책과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국정운영 시스템도 수평적 네트워크 체제로 전환하여 정책수립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빠르게 증대되었다. 한편 새만금방조제나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문제 등과 같이 정부 내 혹은 정부와 국민 간의 의견 상충으로 인한 국책사업의 지연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시키고 있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된 국정과제위원회는 정책결정과 운영에 있어서 참여와 분권화를 추구하기 위한 국정운영 시스템이다. 민주화에 따른 국민의식 성장과 참여욕

역대 정부별 주요 자문기구

정부	기구명
제3·4공화국	경제과학심의회, 행정개혁조사위원회
제5공화국	국가원로자문회의, 교육개혁심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6공화국	행정개혁위원회, 대통령교육정책자문회의, 대통령자문21세기위원회
문민정부	행정쇄신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의정부	정책기획위원회, 교육인적자원자문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국정과제위원회

구의 분출 및 시민사회의 급속한 성장은 전통적인 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시민사회-시장-정부' 라는 3자의 협력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져 왔다. 이는 전통적 행정체제가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정부 실패와 정부 불신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공공의 문제해결에 있어 민·관이 협력하게 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국정과제위원회는 기존 대의민주주의의 비효율성과 불신을 극복하고 정부-시민사회-시장 간의 계서적인 관계를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수평적 상호협력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참여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공공정책결정의 구조이다.

참여정부 이전에도 자문위원회 형태의 위원회가 있었으며, 이들도 정부정책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의 의지와 인식에 의해 정부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던 방식에서 민간인이 교육정책·행정개혁 등의 부문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정책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참여정부 이전의 위원회는 형식적 참여제도라는 한계가 있었다. 관료주도형 성격이 강하여 관료제의 문제점 극복과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시책을 민의로 포장시켜 주거나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강했다. 그나마도 체계적인 이념과 비전하에 수립된 국정 전반에 걸친 대과제가 아닌 부처수준의 과제나 행정절차적인 과제 중심이었고, 시민의 참여가 제한적·산발적이었으며,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부족하여 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는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민간전문가를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시켜 국정운영의 효율을 도모하였다. 특히 정책결정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던 여성, 시민단체, 지역인사에게도 그 참여가 확대되었다. 한 부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국정과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직접 기획하고 제도화한다는 취지는 참여정부 이전의 위원회나 현재의 정부위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점이다.

(2) 국정과제위원회의 역할

국정과제위원회의 설치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은 ‘대통령-국정과제위원회-부처’의 삼각 구도를 이룰 수 있었다. 대통령이 국정방향을 제시하면, 국정과제위원회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각 관련 부처가 단기과제와 정책현안을 검토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체적으로 분권형 국정운영 틀 속에서 대통령은 장기 국가발전계획에 초점을 두고, 실무부처는 현안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유기적 분업구조를 이룬 가운데, 국정과제위원회가 국가의 분야별 장기발전을 위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부처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전략을 기획하고 관리한 것이다.

국정과제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민주성이 강조되면 효율성이 저하되고, 과거 정부와 같이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민주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였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를 큰 정부의 근거로 비판하였으나, 위원회의 공무원 비중은 전체 위원의 22.3%에 불과하고,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이 기획·심의하는 민·관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은 대개 정부 측 당연위원들로 위원회의 실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12개 국정과제위원회는 참여정부 말까지 총 83회의 국정과제회의와 17회에 걸친 국정과제조정회의를 통해 국가발전 및 개혁 방안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였다.

국정과제위원회의 출발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부터 시작한다. 노무

현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지방균형발전, 인사·행정 등 국가운영 시스템 확산 등의 국정개혁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국정과제추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후속조치로 2003년 4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추진위원회 규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규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규정 등의 3개 위원회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4. 7), 국가균형발전위원회(4. 9),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4. 16)가 각각 설치되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2004년 6월에 이르러 동북아시아위원회로 변경되었다.

또한 최대 공약사항 중 하나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하여 4월 14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발족하였다. 이후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로 개편(2005. 4. 7)되었고, 위원회 사무처리 및 집행업무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청(2006. 1. 1)되었다.

사회양극화 문제, 고령화 문제 등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2003년 9월 19일 고령화사회 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을 청와대 정책실에 설치하였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당시 설치되었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2003년 7월 31일 설치되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새로 임명된 3기 위원들에게 국정과제의 설정·추진 역할을 부여하여 국정과제위원회로 편입되었다.(2003. 12. 15)

과학기술 중심사회 과제를 위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에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을 설치(2004. 1)하여 활성화하였다. 이로써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9개의 국정과제 추진기구 체제가 갖추어졌다.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인구, 고령화, 에너지, 환경 등 미래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비전략이 단지 태스크포스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일부 업무는 중복된다는 주장에 따라, 2004년 2월 청와대 정책실의 사회통합기획단 산하 농·어업대책 T/F와 결합시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국정과제위원회로 편입되었다.

또한 3월에는 인구·고령사회 대책팀을 확대 개편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설치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청와대 정책실

국정과제위원회 구성표



에 설치되었던 사회통합기획단은 해체되었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이외에도 별도의 국정과제위원회가 설치되는데, 21세기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04년 2월에 문화중심도시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5월에는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가 설립되어 국가경쟁력 강화업무가 추가되었다. 이후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는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로 개편(2005. 10. 12)되었다.

기존의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설치되어 있던 빈부격차·차별시정 TF를 개편하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2004년 6월에 발족하였다. 이로써 국정과제위원회 체제는 국정과제 전체를 총괄·조정하는 정책기획위원회와 13개의 국정과제위원회로 정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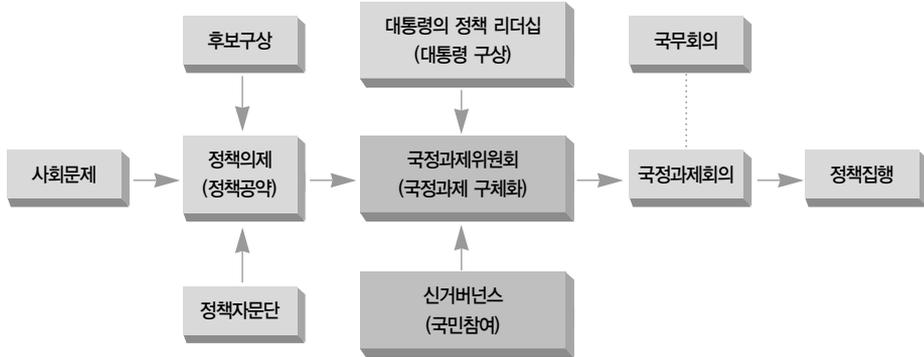
이후 13개 국정과제위원회는 2007년 6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일자리사람입국위원회가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로 통합되었다.

(3) 국정과제위원회 운영 및 관리 체계

국민참여 기관인 국정과제위원회는 참여정부 집권 초기부터 이슈화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와 연계하여 정책방침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프로세스에서는 상정된 정책의제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국정과제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의 구상을 반영하는 청와대 비서관(간사), 각 부처의 장관, 그리고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실무 T/F팀→전문위원회→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정책화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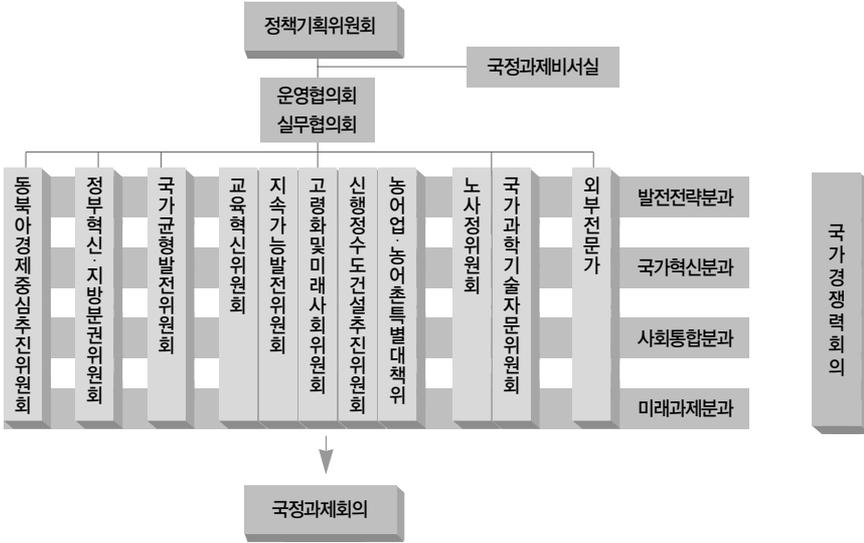
본위원회'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다부처 관련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처 간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고, 위원회를 통해 전문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정책 품질을 제고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정과제의 궁극적인 관리방법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신설한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각 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각 과제에 대해 기획화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그동안 청와대 정책실에서 담당하던 국정과제 종합관리 및 조정 기능을 넘겨 받아 국가경쟁력 강화업무 기능을 추가해 자문기구의 성격 외에 10여 개의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고 조정하였다.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위원회를 세로축으로 하면서 가로축으로 △발전전략 △국가혁신 △사회통합 △미래과제 등 4개 분과를 설치하고 국정과제회의와 별개로 '국가경쟁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국정과제위원회와 국가경쟁력을 위한 4개 분과가 '매트릭스' 조직으로 짜여져 100여 명의 위원들이 양쪽을 겸임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 국정과제위원회를 횡적으로 연결하고 각 위원회 위원장을 운영협의회로 묶도록 조직을 정비했다.

국정과제위원회 조직도



(4) 추진 성과

국정과제위원회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과제 중심의 위원회 운영으로 대통령이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대통령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심의·조정 기구적 특징을 가진 국정과제위원회는 제기된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각 부처의 입장과 의견을 조정하였다.

둘째, 국정과제위원회는 수평적 정책조정체계를 특징으로 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었다. 또한 수직적·위계적 조정양식을 벗어난 수평적 조정과 쌍방향적 의사소통은 민주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국정과제위원회는 정책 어젠다를 사회 이슈화하는 등 대통령이 국정운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여 국정과제 추진단계별로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개별과제의 기획과 정책화작업을 추진한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당분봉리의 기반이 되었다. 과거 정부에서는 정당에서 수행하던 정책 제안 및 공론화 기능을 참여정부에서는 국정과제위원회가 수행하였으며, 대통령은 초당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3. 보론 : 비전 2030

1) 비전 2030의 개요

국정목표와 국정과제가 참여정부가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와 과제를 선정한 것이라면, 비전 2030은 미래한국의 청사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와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지만, 이처럼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마련한 것은 비전 2030이 최초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미래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했다. 역동과 기회의 한국에서부터 동반성장의 비전과 전략, 복지한국의 비전과 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전략을 연구해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재정 및 타 정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었다. 2005년 6월부터는 6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작업단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문화 등을 포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세워 종합적으로 마련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비전 2030이다.

비전 2030(부제 : 함께 가는 희망한국)은 국민 누구나 희망을 갖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 미래전략이다.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가 중장기 종합전략이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재정 규모도 낮고, 복지지출 비중은 선진국에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 결과 국민 삶의 질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가 장기적인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저출산·고령화 현상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렵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람을 키우는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 이를 달성할 비전 제시와 함께 실천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 바로 비전 2030이다.

2) 동반성장 : 비전 2030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발전전략은 요소투입형 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선성장, 후복지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다. 성장을 국가 발전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양적 투입과 정부주도, 수출주도형 불균형발전을 추진해 왔고, 복지는 가족공동체에 의존하였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정비된 각종 사회안전망은 외환위기 대응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경제 분야 재정 지출 비중이 복지 분야 비중을 상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패러다임은 1990년 중반 이후 경제구조가 성숙되고, 세계화·양극화·노령화 등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한계를 보여 주었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지식 기반경제로의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성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분배 개선 효과가 약화되었다.

참여정부는 비전 2030을 통해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을 추진했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성장과 복지를 상호보완적으로 선순화 시키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은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수준의 향상을 촉진하며, 복지는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통해 생산요소의 질과 양을 높여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육서비스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비정규직 대책 등은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며,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인적자본 고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 등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적자본 고도화는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이 목표로, 성장과 복지 선순환구조를 연결하는 핵심요소이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의 신뢰와 협력증진, 제도·규범의 합리성, 원만한 갈등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안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회통합을 달성해 궁극적으로 복지수준 향상을 촉진한다. 또 능동적 세계화는 세계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단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 확대 등의 부작용은 적극적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비전2030은 이러한 5대 전략 기조하에 50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상세계획을 마련하였다.

3) 세계 일류국가 달성 : 비전 2030의 목표

비전 실현을 통해 본 미래한국의 목표는 세계 일류국가 달성이다. 2010년까지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주요 사회·경제 제도 혁신을 마무리하고, 2010년에는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하고, 2030년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선진국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1인당 GDP는 2030년에는 4만 9,000불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에 도달하고, 삶의 질은 10위로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복지지출은 연평균 9.8%씩 증가해 2019년에 15%로 미국을, 2024년에 17%로 일본 수준에 도달하고 30년에 21%로 2001년 OECD 평균에 도달할 예정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2000년 10.2%) 수준으로 개선되고, 육아비용의 부모부담률도 육아지원의 확대를 통해 30%로 완화된다. 청렴도 제고 및 의식개혁을 통해 세계 5위권으로 진입하고, 국가경쟁력도 IMD 기준 10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률(15~64세)은 63.7%에 불과하지만 2010년에는 67%, 2020년 70%, 2030년에는 72%가 된다.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재취업훈련 기회도 확대돼 실직하더라도 쉽게 재취업이 가능해진다. 실업자훈련 참여자 취업률은 2005년 49.8%에서 2030년에는 65%까지 올라가며, 평생학습 참여율도 2004년 22%에서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해외유학을 가지 않아도,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아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030

비전 2030에 따른 한국 사회의 변화 예측

삶의 질	(2005) 41% -----▶ (2030) 10위
건강보험 보장률	(2005) 65% -----▶ (2030) 85%
공공임대주택 비율	(2005) 5.1% -----▶ (2030) 16%
고용률(15~64세)	(2005) 63.7% -----▶ (2030) 7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2005) 63% -----▶ (2030) 85%
혁신형 중소기업	(2005) 1만 개 -----▶ (2030) 9만 개
파업 근로손실일수	(2005) 56일 -----▶ (2030) 15일
산업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	(2005) 0.77% -----▶ (2030) 0.24%

비전 2030에 따른 복지수준 변화 예측

연금수급률	(2005) 17% -----▶ (2030) 66%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율	(2005) 11% -----▶ (2030) 10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05) 23% -----▶ (203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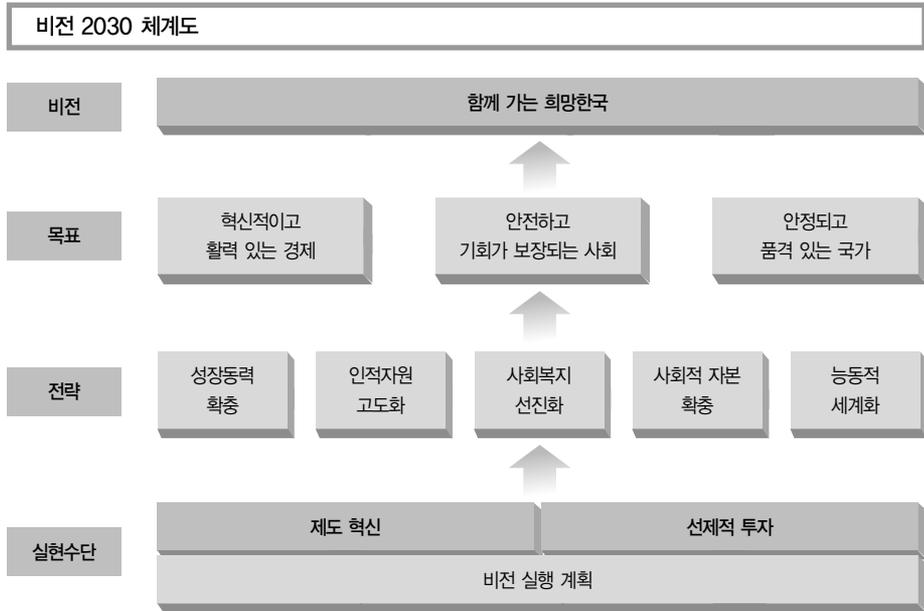
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3명으로 2005년 32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방과후 활동 수혜율은 32%에서 75%로 높아진다.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과외비 부담 없이 방과 후에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공영형 혁신학교,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도 활성화돼 학생의 다양한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며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대학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어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는 2005년 52위에서 2030년에는 10위로 뛰어오른다. 또 대학별 특성화, 대학평가제도 혁신 등 교육시스템 효율화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도약해 세계 100위권 내 대학수는 1개에서 2030년 6개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내고 못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접어도 된다.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연금제도가 개혁돼 연금재정이 안정화되고 2030년에는 국민들 대부분이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5년 17.0%에 불과한 노인연금 수급률이 66.0%로 올라가 노인의 3분의 2가 연금 혜택을 받게 되며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율도 현행 11.0%에서 100.0%로 올라가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은 누구나 가족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 비전 2030의 추진전략 : 3대 목표와 5대 추진 전략

비전 2030의 핵심전략은 동반성장이다. 이를 위해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 등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비전 2030은 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선진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연결하는 핵심 요소인 인적자원의 고도화 △물적·인적자원을 효율화하고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사회적 자본 확충 △전



략적·적극적 세계화로 국가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이는 능동적 세계화 등 5가지 전략의 중점적 추진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또한 5가지 전략 부문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200가지 실천과제를 일일이 제시하고 있다. 민간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정책 부서의 협의를 거쳐 그 가운데에서도 중요하고 시급한 50개 핵심과제가 우선 추진된다.

이 액션플랜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 액션플랜에 담긴 50가지 정책은 크게 일자리(지속가능한 성장)와 교육(인적자원 투자), 혁신(사회적 시스템 개혁), 미래 불안 해소(사회안전망 확충) 등 그동안의 참여정부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모든 계층의 시장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잠재적 생산 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동반성장의 해법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같은 비전 2030의 액션플랜은 앞으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와 각 부문별 추진성과 등을 감안해 실천과제와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된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직업훈련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인적자원의 확충,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5대 전략별 50대 핵심과제		
구분	제도혁신(26개)	선제적 투자(24개)
능동적 세계화(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 체결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외국인력정책 마련 •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규모 확대 • 통일 인프라 구축
사회적 자본 확충(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사법제도 개혁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 지방행정체제 개편 • 지역공동체 등 자발적 복지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개혁 • 전자정부 구현 • 정부인력의 서비스 위주 재배치
사회복지 선진화(1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지역연금 개혁 • 건강보험 개혁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의료급여제도 개편 • 비정규직 대책 •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 부동산 가격 안정화 • 영세자영업자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활동 확대 • 보육서비스 확대 • 식품안전보장 강화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 주거복지 확충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 쾌적한 생활환경과 환경보건 강화 • 농어촌 활력 증진
인적자원 고도화(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평가제도 혁신 • 국립대 통폐합·특수법인화 • 청년 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 학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고용전략(Job strategy) 추진 • 대학별 특성화 및 산·학·연 연계 강화 •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 지자체의 교육·복지 투자 확대 • 해외 고급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성장동력 확충(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 한류 등 문화산업 진흥기반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 대책 시행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투자 확대 • 부품소재산업 전략적 육성

사회안전망과 경제 성장의 상호 상승관계 등 핵심 가치들은 더 강화되어 구체적인 정책에 하나하나 반영되어야 한다.

5) 비전 2030의 의의 및 향후 방향

비전 2030은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 전략적 사고와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만든 대한민국의 희망지도다. 단순히 미래상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5년, 10년 후

의 모습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내다보는 국가 경영지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장이나 복지냐’ ‘증세냐 감세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따위의 논쟁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비전 2030을 놓고 이 같은 협소한 문제로 논점을 이끌어 간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려는 또 다른 사회적 무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철 지난 이데올로기나 복지와 성장의 이분법적 사고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우리는 이분법과 협소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논의구도를 극복해 나가야 하며, 이런 과정이 곧 우리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선진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비전 2030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 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비전 2030을 놓고 일부 언론과 야당은 대선용 장밋빛 전략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였다.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전 2030은 비전 실현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계산하고 재원 조달의 필요성까지 구조적으로 제시한 구체적 비전이다. 비전 2030 추진 시 추가 재정 소요는 2030년까지 향후 25년간 경상가격 기준으로 약 1,100조 원 수준이다. 총 GDP 대비 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현재 가치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00조 원 수준이다. 그러나 당장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0년까지는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추가 소요 규모가 미미해 별도 증세 조치 없이 세출 구조 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세정 합리화, 과세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소요재원 충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부족한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국채로 조달할 것인지, 보험료로 부담할 것인지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사회투자는 버려진 의제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성숙하면서 어느 정도의 복지 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 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 일을 회피하고는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제3절 국정관리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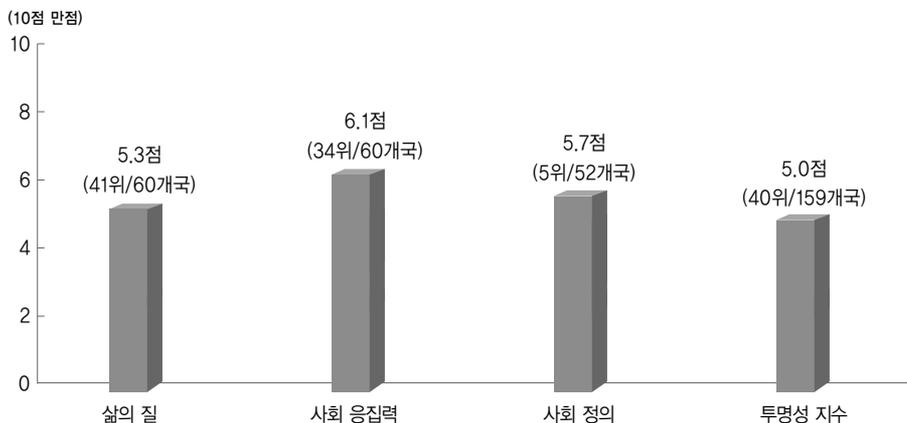
1.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노동, 자본, 기술로 설명되지 않는 각국 간 성장률의 차이는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 원칙, 규범, 투명성, 공정성, 사회통합성 등으로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가 된다.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합의, 원칙에 입각한 경쟁은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인 활력과 경쟁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사회적 자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증진이 절실하다. 이러한 신뢰와 연대의식하에서 사회구성원 간 합의된 합리적 제도와 규범으로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조율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과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신뢰와 원칙에 기반한 가치 확립을 위한 기본철학이자 상호 간의 약속이다. 비밀주의하에서는 힘에 의한 의사결정과 사회구성원 간의 불신이 조장되고, 불공정한 반칙과 특권은 사회구성원의 소속감을 저해하고, 사회 전반의 가진 자들의 유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수준(2005)



착관계를 낳게 된다. 과거 우리의 모습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전반적으로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KDI는 우리나라의 법·제도 의식이 선진국 수준이었다면, 1991~2000년간 매년 약 1% 정도 성장률이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각종 유착관계와 특권구조를 청산하고, 각종 제도개혁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가치가 사회 전 분야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 정치개혁

우선 정치 분야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1인 통치체제와 권위주의의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 정부의 경우 지도자 1인의 초과권력과 수직적 리더십이 국정운영 및 정치 전반을 관통하는 지배적 결정력이었다. 초과된 권력은 특권과 반칙을 낳았고,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 소수에 의한 소수만을 위한 결정구조에서 국민 대다수는 결정과정에서도, 그 혜택에서도 소외되기 일쑤였다.

참여정부는 의회의 대통령 견제, 당정분리, 당 사무총장의 주례보고 폐지 등을 통해 탈권위 및 일인지배 정치문화를 종식하였다. 또한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자신의 대선자금을 먼저 공개하고 선거자금 수사를 수용했다. 이러한 조치들의 시행 결과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요인을 원천적으로 벗어나게 해 주었다. 과거 정권안보를 위해 봉사했던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구도 극복, 대화와 타협, 국민통합은 완성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어 차기 정부 이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경제개혁

경제 부문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참여정부는 2003년 12월 이래 ‘시장 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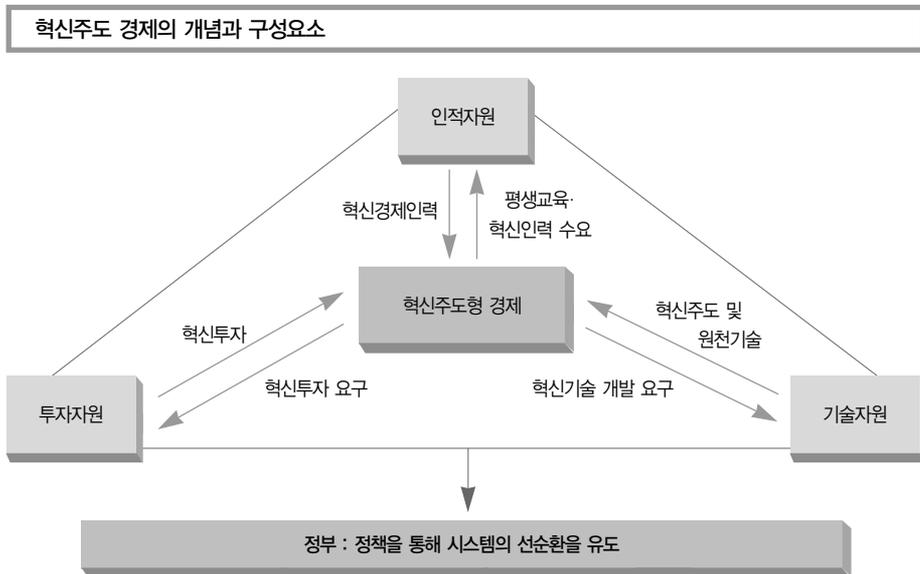
추진하였으며,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 주권의 적극적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소비자가 시장의 심판자로 소비자 주권이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2. 혁신주도형 경제

한국 경제의 현실은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을 따라잡지 못한 상황에서 후발 개도국인 브릭스(BRICS)의 견제를 받는 상황이다. 특히 잠재적 경제대국인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섬유, 신발, 완구 등 범용기술제품 분야에서 수출시장을 잠식했고, IT, 자동차 등 첨단산업에서도 경합관계를 심화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투자수익률의 저하와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제약되고, 고용 없는 성장과 함께 고학력 실업,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었다. 아울러 과거 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전략은 한계에 봉착하고,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노동,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보다 지



식, 정보, 기술과 브랜드 등 무형자산이 더욱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확산, 활용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가 곧 성장동력이 된다. 우리 경제상황도 인적자원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없이는 브릭스로 대표되는 개발도상국의 추격을 허용할 우려가 있다.

1)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추진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이란 경제 성장의 동력을 물적자본이 아닌 인적자본이 구현되는 기술 또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이다. 다시 말해 생산요소 투입이라는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변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경제로 적극적으로 이행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성, 기술혁신, 지식기반, 교육혁신, 인적자본, 제도 및 시스템 경쟁력 등이 주된 경쟁력의 요소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뒤 우리 경제는 급속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사회의 질적 변화를 체험했다. 그러나 산업경쟁력은 정체되고 성장 원천은 감소되기 시작했으며 요소투입 위주 성장 전략은 한계를 드러냈다.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해 대응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이었다.

참여정부 초기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총체적 국가경쟁력을 높여 ‘소득 1만 달러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가였다. 먼저 과거 요소투입 위주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절실했다. 그래야 정보통신·바이오·나노 등 각종 기술 혁명과 기술·산업 간 융·복합화로 기술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기술혁신, 교육혁신, 인적자본 확충,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술과 사람 중심의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경제정책도 과거의 경제 성장, 물가 안정, 국제 수지 등 거시경제지표 관리를 넘어 신기술 개발, 창의적 인재 양성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역할까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혁신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였다.

2)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의 선진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현재 주력산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한편 신기술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 창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은 주력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고도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2003년 3월부터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에 착수해 2003년 8월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바이오 신약/장기 등 10대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선정했다. 2004년 초 분야별 총 153개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기술 개발, 인력 양성에 들어갔다.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과 이공계 지원을 통해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도 시급히 혁신해 나갔다. 또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 등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시켜 2002년 6조 원이었던 R&D투자는 2007년 10조 원 규모로 늘렸다.

3. 능동적 개방

개방을 한 나라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개방을 하지 않고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그런 의미에서 능동적 개방은 현대 국가의 적극적인 생존전략이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자본·교역 시장의 정치적 장벽이 붕괴되고, 국제사회에서 국익 확보를 위한 각개약진 현상 등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는 시장경제와 개방, 그리고 세계 경제의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88%에 달해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지 않고는 안정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 브릭스의 추격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시장은 잠식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상품 개발 및 새로운 시장과 수요 창출은 필수적이다. 능동적 개

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스템의 선진화를 추구하여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능동적 개방은 외국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개방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 적극적인 대외 진출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착시키고, 글로벌 생산요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발전전략이다.

1) 동시 다발적이고 수준 높은 FTA 추진

참여정부는 능동적 세계화 전략하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던 FTA를 적극 활용하여 동시 다발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는 한편, 평화번영을 위한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3년 7월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이 논의된 후 2003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하였다. 이후 한·칠레 FTA 체결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2004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FTA 이행지원특별법」,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제정하여 FTA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여정부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를 관철한 후 로드맵에 따라 싱가포르, EFTA, ASEAN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과도 협상을 개시하였다. 또한 2006년 7월부터 미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07년 4월 협상을 타결하였다.

2) 동북아 허브 전략

한편 참여정부는 세계로 뻗는 디딤돌로 동북아 허브 전략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인접한 지정학적 여건, 세계 제일의 정보 인프라 등 그 잠재력이 매우 크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비행거리 3시간 이내에 인구 1백만 명 이상의 도시가 43개 존재하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1,300km 내에 세계 인구의 25%, GDP의 20%, 물동량의 30%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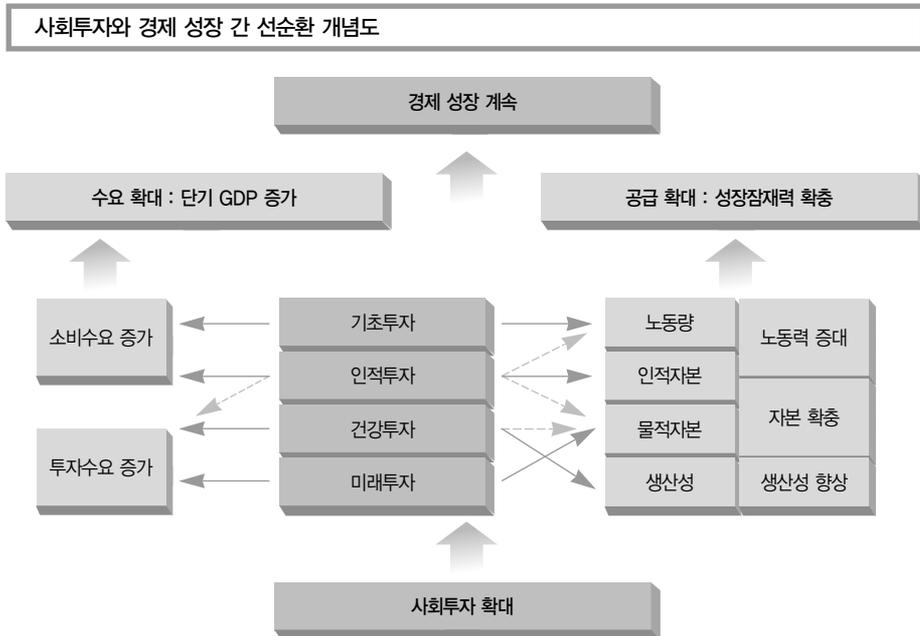
참여정부의 동북아 허브 전략은 이러한 주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북아 허브 전략에 따라 금융, 물류, 비즈니스, 기술표준 등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외국인투자제도 개선,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시행하였다.

4. 사회투자국가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되면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구조적 도전요인에 직면하고 있어, 사후대응적 지원으로는 빈곤의 고착화를 해결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마저 잠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사회투자국가의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 전통적 복지국가의 문제점과 신자유주의 후유증인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혁신 과정에서 발전되어 왔다. 사회·복지 지출을 소비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갖게 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다. 사회투자 전략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과 적응성(adaptability)을 제고하는 사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가능성과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참여정부는 복지정책이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토대이며 사회정책과 경제는 함께 발전한다는 사회투자 원리를 정립하고 실천한 최초의 정부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통해 과거와 같은 시혜적 복지 개념에서 탈피해 먼 장래를 보고 사람에게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사회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1) 사회안전망 확충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투자 전략의 핵심과제는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양극화는 빠른 변화와 극심한 경쟁,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탈락해 스스로 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재기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 성장의 토대가 되는 사회통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여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긴급급여·의료급여 확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EITC 제도 도입, 자활사업 등을 통해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2) 보편적 복지

과거 정부의 복지정책은 경제 성장의 그늘 밑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한계계층에 대한 차별 시정과 함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으로만 여겨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그 수혜 계층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중산층에게까지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예산 제약의 현실을 감안할 때 비효율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극화를 개선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한국 경제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국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산

업의 재편 요인이 많은 사회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보편주의적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보육·노인수발 등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거나 국민에 대한 건강 투자 등이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3) 인적자원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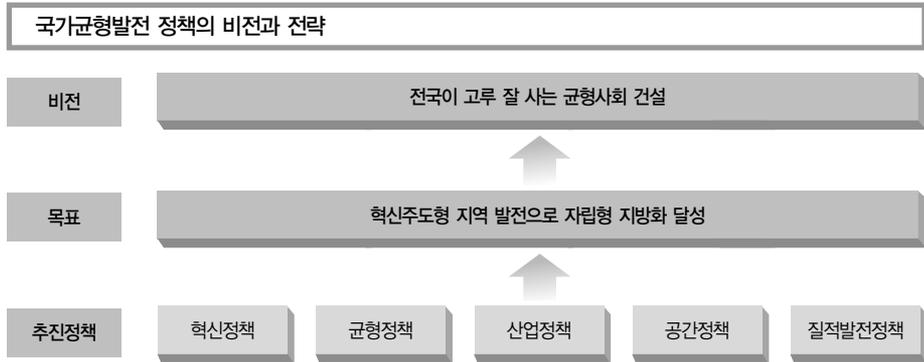
급격한 구조조정과 함께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로 기업은 신규채용을 축소하고 조기퇴직을 유도하며 하청·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등 노동 절약적 경영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특히 신규 졸업자보다는 경력자 채용을 우선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구조조정의 당사자들은 종전 직장보다 근로 조건이 낮은 일자리의 하향 이동을 감수해야 하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근로자들도 언제 회사에서 밀려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졌다. 한 직장에서 입사 후 정년퇴직하는 근로자가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21세기 경제 및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지식 근로자만이 일자리가 보장된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꾸준히 자신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기술 및 생산물 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지녀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기업 및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자 고용보험 직업 능력 개발사업을 확대하여 왔다. 특히 노동시장 인적자원 개발투자의 핵심주체인 기업이 훈련 투자를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학습 조직화를 지원하고,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공교육 정상화,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인적자원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5. 국가균형발전

세계화, 개방화,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세계는 국가 중심에서 도시와 지역 중심으로 경쟁력의 중심을 재편하고 있다. 자립형 지방화와 지방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쟁



력 강화의 관건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를 증명하듯이 세계적으로도 혁신주도형·창조형 발전, 다핵경제권 조성을 위한 산업클러스터정책, 분산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일본의 도요타시 등 혁신주도형·창조형 발전전략으로서 클러스터화를 추진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은 40여 년 전부터 분산정책의 하나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는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예측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11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하게 되는 등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다핵경제권 국토재편 등을 핵심 국정 어젠다로 설정해 추진해 왔다.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의 이념은 2003년 6월 12일 대통령의 「대구구상」에서 제시한 3대 원칙에 기반한다.

대구구상에서 제시된 3대 구상은 첫째,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지방화를 추진하고, 둘째,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경제를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한편 셋째, 지방 우선 육성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한국 사회의 발전과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 재도약 전략으로 추진된 것으로,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분권과

분산에 입각한 국가발전 모델로 설정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세율 인상, 균특회계 신설 등 자율적 지방재정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균형발전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구축하였다.

1) 혁신정책

참여정부는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지역혁신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며, 정부 R&D 예산의 지방 비중 제고, NURI 사업 등도 이러한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이 외에도 산학협력단, 지역기술이전센터, 산학협력중심대학,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등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2) 균형정책

‘신활력사업’을 통하여 70개 낙후지역에 대해 2005~2007년 3년간 총 8,201억 원을 지원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특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신활력사업을 통해 유기농·생약초·녹차 등 대표적 향토자원의 생산·가공·유통 간 연계를 통한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지역 자원개발 및 특성화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6개 지역특구를 지정하였다.

3) 산업정책

시·도별로 4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하였으며,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003~2006년 중 1.9조 원을 투입하여 혁신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종합지원하였다. 또한 산업단지의 생산기능과 연구단지의 R&D 기능을 접목하기 위해 대덕연구단지외 7개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였다.

4) 공간정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토개조 프로젝트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였

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도시로서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다극분산 구조로 혁신하는 출발점으로 건설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이전기관 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도 추진하였으며, 낙후지역과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을 위해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였다.

5) 질적발전정책

질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였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과제를 도출(2006. 3~6)하는 한편 도시, 농촌, 섬 등 분야별 2007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계획적 관리를 위한 발전대책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서울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국제업무, 국제금융, 첨단산업, 항공물류, 관광·레저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수도권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기한 연장, 국내 대기업의 첨단 업종 신·증설 등 규제를 개선하였다.

6. 평화번영정책

평화번영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추진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최상위 정책이다. 평화번영정책은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대북정책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후 대북, 외교, 국방 등 참여정부 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게 되었다. 특히, 평화번영정책은 동북아 시대라는 비전 속에 남북관계를 위치지움으로써 대북정책의 내포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그 외연을 넓혔다. 이러한 측면은 ‘2007 남북정상선언’의 공식명칭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진수가 녹아 있는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평화에 최우선순위 부여’,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이라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 있어서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은 ①평화를 위한 안보 ②우

리 힘으로 지키는 안보 ③미래를 내다보는 안보 ④조용한 안보 ⑤경제를 생각하는 안보라는 5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아울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평화번영정책은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이라는 3대 분야로 구성되었다.

1) 균형적 실용외교

균형적 실용외교는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외교정책 기조였다. 균형적 실용외교는 ‘가치와 국익’, ‘동맹과 다자협력’, ‘세계화와 국가정체성’, ‘한국과 상대국가’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외교 및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와 국익의 균형’은 평화, 인권, 주권 등 보편적 가치와 함께 국가적 실리를 갖추는 일이다. ‘동맹과 다자협력의 균형’이란 한·미 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되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정책을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국가 정체성의 균형’은 개방적인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가 고유의 특성과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균형’은 대외관계에서 협력적, 수평적 호혜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외교의 뿌리에는 우리가 외교정책과 외교적 사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정세나 주변 여건의 객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 대통령은 “정세를 가지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가 그 정세의 변수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끌려만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수가 되는 것, 주변국이 전략을 결정하는 데도 우리가 변수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밀고 가야”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미래의 주관적 이해관계와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내고, 그 방향으로 모든 당사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적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이치”라며, “작은 국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균형외교의 원칙은 현실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 노 대통령은 원칙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했다. 즉,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기초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구현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적합한 대외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 및 전 세계적 차원에서 균형적 실용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동북아 차원에서는 일본·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격상시키면서, 동시에 ‘한국이 중심을 잡고, 중·일간의 경쟁은 한·미 협력으로 풀어 나가는’ 해법을 제시했다.

2) 협력적 자주국방

참여정부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안보기조로 협력적 자주국방을 제시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한반도 전쟁 억제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부합되게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자주국방력의 강화인데,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육사 제 59기 졸업 및 임관식(2003. 3. 11)에서 “나는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자주적 방위역량이 한층 강화된 ‘선진 정예강군’을 이룩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협력적 자주국방은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다.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안보의 근간으로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미국의 군사전략변화, 우리의 방위역량 향상에 따른 역할 분담의 확대, 우리의 국력신장에 따라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성숙한 한미 동맹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등 한·미동맹을 둘러싼 주객관적 환경은 변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동맹 재조정을 통해 과거 정부들이 추진해 오다가 매듭을 짓지 못한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 등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였다. 특히, 참여정부는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하여 자주국방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 관계를 역동적, 호혜적, 수평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켰다.

둘째, 자주적 정예군사력의 건설이다. 참여정부는 한·미동맹 발전과 병행하여 임기 내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

주국방은 국가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방위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즉 한국이 처한 지 전략적 환경 속에서 안보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국가의지와 자위적 방위역량을 기반으로 한·미동맹 및 대주변국 안보협력을 보완적으로 병용하여 안보목표를 완성하는 것이다.

셋째, 군 구조 개편과 국방개혁이다. 국가의 방위역량은 군사력과 효율적인 운영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적정 국방비로 필요한 전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이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군 구조 개편과 운영체계의 혁신이 요구된다. 역대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고 이것이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안보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을 달성하는 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참여정부는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군사력 건설, 조직 및 운영체계, 획득 및 군수지원체계, 인사 및 교육훈련 체계 등 제반 분야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3)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

신뢰와 포용은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요소였으며, 이후로도 일관된 대북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물론, 북한이 예측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대이며 때로는 일방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상대가 불합리하게 나올 때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남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고 남북관계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감행 때, 우리 정부가 취했던 입장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국내·외 일부 세력은 우리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한 정권이라며 참여정부에 대한 악의적 비난을 퍼붓는 한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심지어 국지전을 감수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이미 북측에 수차례 예고했던 쌀차관과 추가비용의 제공은 중단했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출구를 열어 두었다. 유엔 결의안의 성실한 이행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면

서도 유엔 결의안의 범위를 벗어나는 대북제재 요구에 대해서는 끌려 다니지 않았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한번 중단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남북경협 사업들은 변함없이 진행하였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남북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예정되었던 제19차 남북장관급 회담(9. 11-13) 중단을 요구하는 국내·외 목소리가 있었지만 당당하게 회담에 응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경고하고 지적하는 길을 선택했다. 북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면서 우리 스스로 대화의 문을 닫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원칙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남북관계에서의 ‘상호주의’와 대비된다. 상호주의는 기본적으로 tit-for-tat,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발상이다. 상대방이 하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다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며 6자회담 재개와 2·13합의 이행으로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남북 간에는 적대와 반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상호존중과 신뢰의 강조가 북한이 무슨 행동을 해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대하는 만큼 북측도 일방적 태도를 배격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각종 남북회담에서 정부는 북한의 부당한 언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했으며 남북이 합의한 약속의 이행을 요구했다. 또한 우리가 이미 경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했다. 신뢰에 대한 강조의 이면은 합리성에 대한 요구인 셈이다.

남북관계는 북핵문제로 인해 참여정부 임기 내내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상호존중과 신뢰라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이 유효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7. 책임 있는 정부

최근 세계화와 정부의 역할에 관해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축소론자들은 국가의 영역이 축소된다고 하고, 현상유지론자들은 과거와 다름없다고 한다. 축소론자들은 자본주의와 기술 발달로 전 지구적 시대가 열릴 것이므로

정부의 시대는 종언을 고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상 유지론자들은 국가 간 교류는 정부의 지원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앤서니 기든스, 올리히 백 등 세계 석학들은 두 가지 견해를 모두 부정한다. 현상 유지론자들은 빠른 세계적 변화를 저평가하기 때문에, 정부 축소론자들은 세계화를 지나치게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한다. 이들은 세계화의 진전으로 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전 지구적 상호의존성이 확대될 것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그 비중이 축소될 것이지만 복지나 교육 등의 역할은 증대한다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정부는 주권을 아예 상실하거나 세계화 자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구성되고 재구조화된다. 즉 세계 각국은 새롭게 대두되는 광우병, 온난화 등 전 지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역할을 재구조화하게 될 것이다.

1) 정부혁신을 국가 발전의 최우선 어젠다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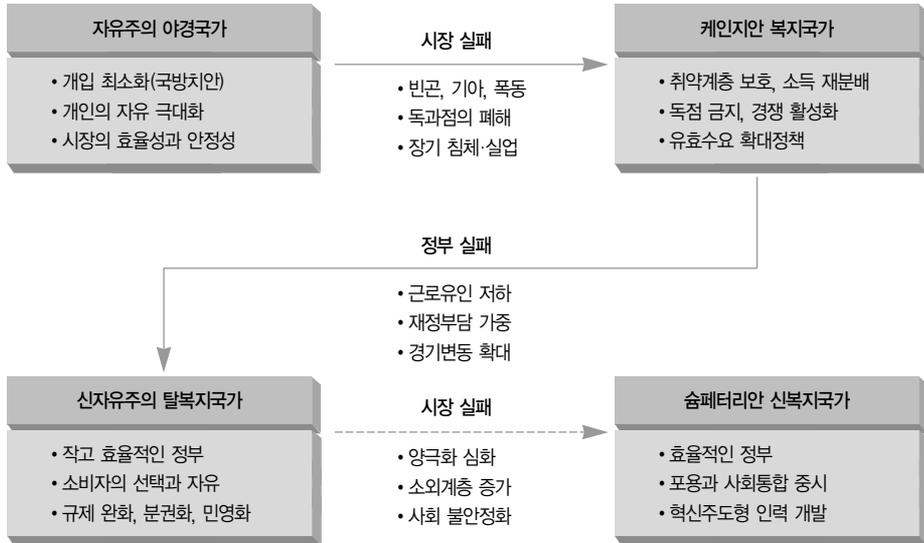
참여정부는 세계화 시대에 맞는 정부 혁신을 국가 발전의 최우선 어젠다로 설정하고 일회성 조직 개편이나 제도 개혁이 아닌, 공직사회 문화와 행태를 바꾸는 질적 변화를 위해 정부혁신을 추진했다. 이런 변화에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공직사회의 일시적 내부 반발 외에도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은 ‘작은 정부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나토(No Action, Talking Only) 정부’ ‘위원회 공화국’ 등의 정치적 수사로 비난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정부혁신 비전으로 ‘일 잘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부’를 설정하고 혁신을 확산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꾸준한 정부혁신과 국민 참여의 확대, 학계·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산업 시대 정부를 벗어나 세계화 시대에 맞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2) 큰 정부가 아닌 책임 있는 정부 지향

작은 정부라는 말이 유행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정부의 역할 변천 과정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할 일을 하는, 책임 있는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한다.

작은 정부는 복지국가를 경험한 선진국에서 나온 말이다. 1980~90년대에 복지 지출 확대가 한계에 이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긴축 및 복지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고개를 들었다. 이들 나라들은 연금지급 축소 및 사회복지 지출 축소, 공기업 민영화 등 복지축소 및 재정긴축을 단행했다. 복지가 성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작은 정부’가 적합한 말일 수 있다. 그러나 복지 수준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다.

복지지출이 선진국과 비교가 안되는 한국이 작은 정부로 갈 경우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복지지출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논리다.

정부 규모를 놓고 따진다면 참여정부는 큰 정부가 아니다. 재정 규모는 OECD 30개국 중 28위로 낮고, 국민 부담률은 29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가 채무는 OECD 통계상 28위이며, OECD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를 포함해 비교해도 27위로 낮다.

재정지표 국제비교						(단위 : %)
구분	한국	스웨덴	핀란드	일본	미국	OECD 평균
재정규모(2005)	29.1(28)	56.3(1)	50.1(4)	37.0(23)	36.6(24)	40.7
국가채무(2005)	30.7(27)	59.5(13)	48.3(18)	173.1(1)	61.8(11)	76.9
국민부담률(2004)	24.6(29)	50.4(1)	44.2(4)	26.4(27)	25.5(28)	35.9

※ GDP 대비 비율, 괄호 안은 OECD 30개국 중 순위

※ OECD Economic Outlook(2006. 11), Revenue Statistic(2006. 10) 기준

※ 국가채무 OECD 한국통계는 24.9%이나 외평채 등 금융성 기금 포함 시 30.7%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는 부족하다.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회복지사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부 일손이 부족해서 급식, 식품안전, 치안 등 여러 분야에서 종종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3) 정부혁신의 목표는 '일 잘하는 정부'

정부는 시장 경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각성하고 자기를 다잡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되어 있다. 정부가 얼마나 정당하게 일하는지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지는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다. 지금 우리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행정의 경쟁력 향상과 지방화에 따른 행정 권한의 분권과 자율화를 요구받고 있다. 또 시민사회가 성장해 감에 따라 국민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 요구는 커 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을 추진하였다. 정부가 혁신을 통해 얻으려는 목표는 '일 잘하는 정부'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다섯 가지가 있다. 효율적인 정부, 봉사하는 정부, 투명한 정부, 분권화된 정부,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참여정부는 불필요한 일과 행정의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줄이고 있다. 줄 서서 사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아이디어 단계부터 모든 과정이 문서로 남도록 지식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정책품질까지 스스로의 성과로 점검하도록 혁신하였다.

4) 혁신방법의 혁신

참여정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혁신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정부혁신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동하였다. 혁신수석비서관실, 행정자치부 등을 중심으로 모든 기관들이 공식적인 지휘 및 보고체계를 갖추었고, 교육과 연구까지 혁신 체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아울러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의 대상을 기존의 조직과 인력보다는 정부의 시스템과 문화, 행태에 두고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주로 부조리 및 비리 방지나 조직·인력의 단순한 축소와 통합이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개혁이나 개별 제도의 도입을 위주로 혁신을 추진하였다. 이에 비해 참여정부는 구체적 결과뿐만 아니라 성과관리 등 종합적인 시스템에 의한 혁신을 통해 구성원의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소프트웨어 혁신을 포괄하면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3

참여정부의 정책성과

제1절 정치

역사 진보의 가장 획기적인 동력은 바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보통사람이 주인이 되는 가치와 이상을 역사 속에서 구현하고 발전시켜 왔다.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 그것이 가치와 이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보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실체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역사의 진보를 달성하는 가장 유용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권을 종식시켰고, 1997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도 이뤄 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던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 문화, 부정부패의 유착구조, 지역 간 분열구조 등 독재체제의 유산들을 청산하고 해체하는 일이었다. 이를 근거로 1987년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는 이도 있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여망과 시대의 명령을 실현하고자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

면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갔다. 참여정부의 약속 중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특권구조 청산 등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완성은 일정 정도 성취되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의 문화정착, 국민통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반독재 민주정부 수립이 1단계 민주개혁이었다면, 반특권 민주사회를 정착시키고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것을 2단계 민주개혁이라 할 수 있다. 1단계와 2단계 민주개혁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정착, 국민통합이라는 3단계 민주주의 개혁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1.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은 당의 총재로서 일상적인 당무와 정치 현안 전반을 결정했다. 당시 여당은 대통령의 대리격인 총재권한대행이 주례보고를 통해 당무를 보고하고, 당무와 관련된 지시를 받아 왔다. 이처럼 대통령은 행정부는 물론 여당을 지배하고 여당을 통해 입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1인체제의 정점이었다. 권위주의적 1인 지배 체제는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엄격한 당정분리를 천명하였다. 당·정분리는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여당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각자의 고유한 영역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국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당·정분리 하에서 주례보고, 형식적인 당·정협회는 사라지고, 정책에 대한 당·정 간 수평적 조율과 협력이 활발해졌다. 한편 당·정 간의 이견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다.

대통령이 과거의 절대권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대통령 자제나 측근 중심으로 정치적 결정권이 주어지고 이에 따라 인맥과 자금이 정렬되는 낡은 권력정치는 사라졌다. 또 과거 총리는 흔히 대독총리, 의전총리, 방탄총리로 폄하되어 왔으나, 참여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내각통할권을 실질화하여 책임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여하였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 총리는 일상적인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면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부처의 자율성도 확대되었고, 청와대는 부처전담 수석제를 폐지하고, 명실상부한 참모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강

화하게 되었다.

2. 권력기관 중립화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권력기관 중립화를 두고, 국정의 어려움을 가져 온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지지자들조차 권력 유지에 필요한 칼과 방패를 놓아 버렸다고 우려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권력기관을 통해 정권의 안보를 확보하는 시대는 이미 조종을 고했다. 권력기관을 동원하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억압해 민주주의 발전에 해악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의 경쟁력도 저하시킨다.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기관을 사유화하던 관행의 고리를 끊고 과감하게 특권을 포기하면서 권력기관을 중립화하자, 권력기관은 스스로 자율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그 결과 국정원은 국내 정보 분야를 대폭 축소하고 해외정보, 산업보안, 사이버 안전, 대테러활동 등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위한 인권의 수호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찰도 스스로의 오류를 조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인권의 보루로 거듭났다. 국세청은 과거 징세기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대국민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과세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과거 권력의 시녀로 국민 위에 군림한다고 비판받던 사법제도는 로스쿨, 배심제도, 공판중심주의, 형사사법절차 개혁, 사법서비스 개선 등 사법개혁을 통해 그 근간이 바뀌고 있다. 사법개혁은 문민정부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거듭 무산되어 왔다. 참여정부는 정부, 이해당사자, 학계와 시민단체 등 범국가적인 참여를 통해 사법개혁안을 마련하고 실행하였다.

3. 부패정치 청산

참여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부터 불법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졌다. 계속되는 정치

권의 논란 중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자금의 모금 경위, 조성 규모, 집행 내역에 대해 여야가 모두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하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9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검찰수사는 대통령의 수사불개입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가운데 진행되어 여야를 가릴 것 없는 성역 없는 수사가 계속되었다. 그 결과 불법 대선자금의 규모는 국민들 앞에 낱알이 밝혀져 정치개혁의 시작이 되었다. 대선자금 수사의 후폭풍은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2004년 3월 제17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합의되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자에게 50배의 과태료 부과, 선거공영제의 확대 등 선거비용이 합리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과거에는 선거 때만 되면 국세청이 기업에서 돈을 걷고, 대통령이 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비자금을 건네는 금권선거가 횡행하였다. 그러나 2002년의 대선은 달랐다. 국민경선, 노사모, 인터넷 등 자발적인 선거문화가 형성되면서 과거와 같은 청중동원, 조직선거가 사라졌다.

2004년 제17대 총선 이후, 선관위의 조사에 의하면 깨끗하며 투명한 선거 풍토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에 힘입어 기부행위 등 불법선거운동 경험률이 16대 총선 9.0%에서 17대 2.9%로 크게 하락했으며,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조사 결과에서도 선거 비용이 크게 줄었다는 응답이 86.9%로 나타났다.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17대 총선이 ‘깨끗했다’는 응답이 85.1%로 나타나는 등 선거문화 전반이 획기적으로 변화했다. 공

역대 총선별 선거법 위반 단속 실적				
선거명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	돈선거 관련 적발건수	사법처리 현황	당선무효 건수
제14대	674	104	-	-
제15대	741	106	28	6
제16대	3,017	594	184	9
제17대	6,402	1,057	419	11

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당내 경선이나 다른 사회 분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농·축·수협 선거의 선관위 선거위탁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각종 공제회와 일부 노동조합 선거의 선관위 위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4. 투명성 강화

참여정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그 기준에 따라 공개하였다. 정보 공개는 이제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공개범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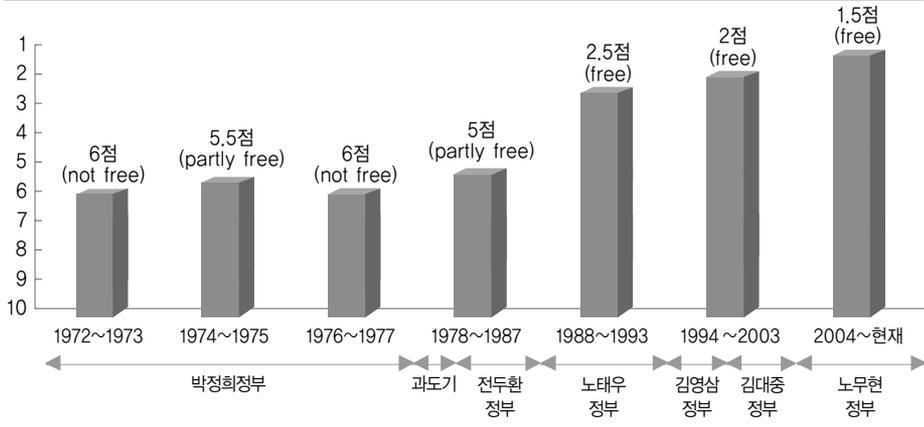
한편 인사문제도 정보 공개와 마찬가지로 투명화되고 있다. 일부 언론 등에서는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코드인사, 회전문인사라고 비판하지만, 참여정부의 인사는 한마디로 책임인사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완수하는 책임정치의 일환으로 국정철학과 책임을 공유하는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참여정부는 밀실에서 특정인을 챙겨 주는 권위주의 시대의 인사방식을 벗어나 시스템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사추천(인사)과 검증(민정)을 분리하였고, 민간 주도의 공공기관장 추천위원회를 통한 공개 모집을 의무화하였다.

참여정부는 공무원 부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 위원회로 개편하고, 대통령령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해 범정부적 반부패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가청렴위가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지수는 2003년 7.71에서 2006년에는 8.77로, 금품향응제공률은 2003년에 3.5%에서 2006년에 0.7%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평가결과를 보더라도 한국의 투명성지수는 2002년 4.3점에서 2004년에는 4.5점, 2005년 5.0점, 2006년 5.1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159개의 평가대상국 중 3번째로 개선도가 높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참여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크게 신장되었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자유화 정도는 1988년 이후 급격히 신장되었으며, 참여정부 들어서 1등급으로 뛰어올랐다.

자유화 정도 등급 변화



자료 : 프리덤하우스 홈페이지 등

주 : 1978~1987년의 경우 5점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자세한 수치는 미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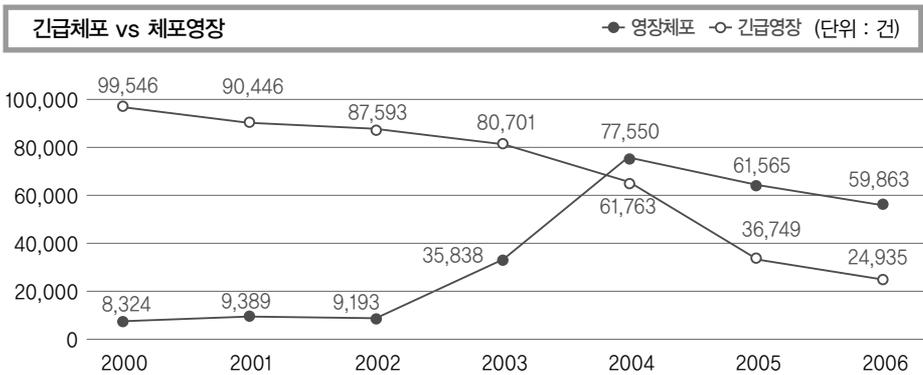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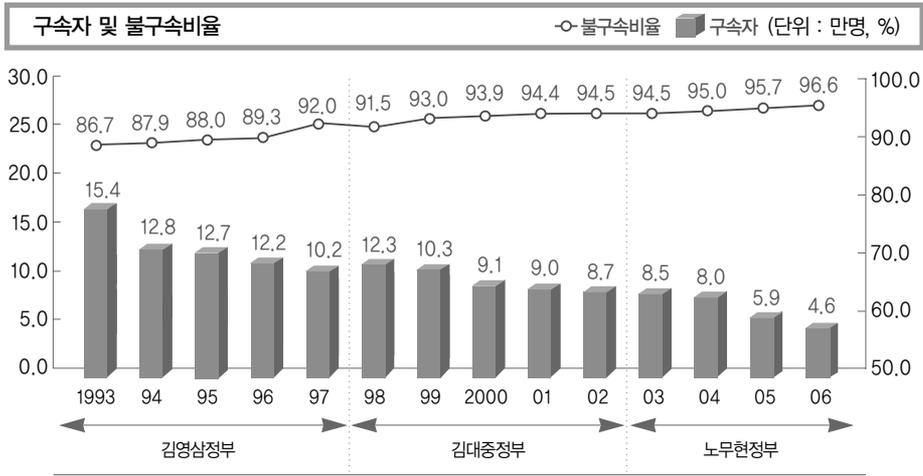
한국의 정치·언론자유 등급

구분	2002	2003	2004	2005
정치자유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언론자유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 역시 한국이 세계 168개국 중 31위로 미국의 53위, 일본의 51위보다 더 높으며,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언론자유를 향유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인권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경찰의 수사절차상에서 인권이 확고하게 보장되도록 했으며 더불어 실적평가 시 구속가산점제 폐지 등으로 불구속 수사원칙을 강화해 평균 95%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착 단계로 진입했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건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긴급체포’도 보충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매년 급감하고 있으며, 대신 영장에 의한 체포가 정착돼 2004년부터는 긴급체포 건수를 웃돌고 있다.



5. 권언유착 청산

과거 군사정권의 당근과 채찍을 이용한 권언유착은 국가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권언유착은 정경유착과 다를 바 없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 견제하고, 정부는 잘못된 정보의 전달이나 왜곡에 대해서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이다. 하지만 언론이 여론 형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매개로 권력과 밀착하게 된다면, 여론은 왜곡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참여정부는 오보나 왜곡보도에 대응하는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였다.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 관행에 대해 정책기사 점검을 통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신

청하는 등 ‘바로 잡고, 바로 알리기’를 위한 노력이었다.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추진해 국정 브리핑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대변인 브리핑을 생중계하여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언론과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언론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가판구독을 중단해 불리한 기사를 빼달라고 부탁하던 관행을 없앴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기자실을 개방하고 브리핑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2007년에는 과거의 잘못된 취재 관행을 개선해 여론 품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제2절 외교안보

참여정부 출범 당시 안보환경은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동북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지각이 크게 변동하는 시기였다. 미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한 테러와의 전쟁이 북한의 핵문제와 결부되고, 중국의 강대화와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동북아의 세력관계 변동이 한국의 외교안보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의 위협요인 속에서도 동북아의 경제적 급성장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남북 간 교류협력의 심화는 새로운 기회요인이 되었다. 또한 북핵문제, 나아가 북한 문제로 인해 우리가 급변하는 동북아의 정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위축되었지만, 세계 12위권의 우리 경제력과 민주화의 진전, 그리고 북한을 능가하는 강력한 군사력은 새로운 외교·안보·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출범 당시 어려운 안보환경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안보 보전락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정부는 국가안보 목표와 전략기조, 전략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최상위 안보정책인 평화번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진전을 포함하여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이라는 3대 외교안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 냈다.

1.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진전

북핵문제는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핵심 현안이 되었고,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구현에 있어 최대의 장애요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① 북핵 불용 ②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③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북핵 해결 3원칙을 천명하였다. 나아가 참여정부는 2004년 후반에 들어와 ‘실사구시와 우리 의사 중심론’에 바탕을 둔 북핵 관련 대통령 구상에 입각해 북핵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안정이라는 근본적 국익을 일관되게 추구하였다.

북핵문제는 참여정부 기간 동안 대략 네 차례의 변곡점을 지나왔다. 첫번째는 2003년 취임식부터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까지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여론은 북폭 설이 나돌 만큼 무력 해결 주장이 비등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관련국들로부터 이끌어 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한·미관계다.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미동맹의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을 일관되게 조율해 왔다.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북한을 놓쳐서도, 미국을 놓쳐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그 이유다.

두번째는 2005년 ‘9·19공동성명’을 전후한 상황이다. 관련국 간 평화적 해결이란 합의 속에서 2003년 8월부터 6자회담이 시작됐지만 2004년 3차 회담 이후 북·미관계의 악화로 평화적 해결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은 2005년 2월 ‘핵보유’를 선언하고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한편으로 북한에 특사를 보내

대북송전 제안과 함께 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다른 편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대북 불공격 약속을 재확인하는 등 6자회담을 재개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재개된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마침내 북핵 폐기와 안전 보장, 관계 정상화, 동북아 안정과 평화 방안을 담은 9·19공동성명이 채택된다.

세번째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을 전후한 상황이다. 안타깝게도 9·19공동성명은 곧이어 터진 BDA 문제로 첫걸음도 떼기 전에 표류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대통령은 2006년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미국과 합의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몇 달 뒤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은 악화되고 한반도의 긴장은 다시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내 여론을 악화시켰다. 6자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함은 물론 보수·강경주의자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즉각 중단을 주장하며 ‘국지전도 감수해야 한다’ ‘핵무기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안보 불감증’ ‘친북좌파정권’ ‘핵무기 개발 지원’ 등의 공격적 표현이 언론의 지면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저버리지 않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네번째는 2007년 ‘2·13합의’ 이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까지다. BDA 문제가 풀리고 2·13합의로 9·19공동성명의 초기 이행 단계가 실천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 개선의 큰 물줄기가 잡히기 시작했고 마침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결과적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이 이뤄져야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취임 이후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과 약속이 실현된 것이다. 2·13합의는 2007년 10월 ‘10·3합의’로 보다 탄력을 받게 되었고, 나아가 북핵 폐기 과정이 보다 가시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북핵문제는 해결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시작이 반’이라면 우리의 노력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균형적 실용외교

참여정부는 균형적 실용외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우선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북핵문제로 매우 불안했던 한반도 안보환경을 개선해 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역할과 관계국의 협력으로 2005년 9·19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를 계기로 북핵문제는 불능화를 넘어 북핵신고와 핵폐기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의 길을 제시했다. 이것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 상태와 동북아의 냉전 상태를 종식시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둘째, 균형적 실용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을 성숙시키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켰다. 한·미동맹 재조정과 한·미 FTA 타결을 통해 한·미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고, 중국과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러시아와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했으며, 일본과는 보편적이고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수립하려고 했다. 아울러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APEC, ASEAN+3, 유엔총회 등 다자외교를 통해 동북아 협력관계 증진 및 미래지향적인 세계질서 구축을 도모해 왔다.

셋째, 글로벌 차원의 협력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가적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외교 차원에서 동시 다발적인 FTA를 추진해 선진통상국가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우리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형 정상외교를 적극 전개하였다.

참여정부는 세계 12위의 경제력과 민주주의 발전 및 높은 문화적 창의력 등을 바탕으로 정력적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활발하게 정상외교를 펼쳤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27회에 걸쳐 55개국을 방문했다. 거리로 치면 51만 5,000km로 지구 13바퀴를 돈 셈이다. 이중 에너지·자원 협력을 주목적으로 방문한 국가만 17개국이다. 그 결과 추가 확보한 석유·가스 매장량이 88억 배럴(추정)로 참여정부 이전 52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로 늘어나 자주개발 확보자원이 비약적으로 증

가했다.

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모든 나라가 공존하며 이익을 누리는 공동번영의 국제질서”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가치와 대의 중심의 국제질서’ 창출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철학과 비전에 따라 노 대통령은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ASEM 정상회의 아시아 조정국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우리의 위상을 드높였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 확대와 개발 경험 전수를 골자로 하는 ‘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기도 했다. 참여정부의 균형적 실용외교와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응당한 기여, 번영된 국제 공동체를 위한 정상 차원의 노력이 유엔의 지원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3. 협력적 자주국방

협력적 자주국방은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에서 핵심적 부분을 차지한다. 협력적 자주국방은 크게 ①자주국방과 선진 국방체계 구축 ②한·미동맹 재조정과 21세기형 동맹관계 구축 ③국제평화유지 활동과 이라크 파병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주국방과 선진 국방체계 구축에서 참여정부가 이룩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정부는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을 정부 임기 동안 적극 추진해야 할 전략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하였다. 국방개혁 법제화로 우리 군은 군의 의식과 제도, 전력구조까지 개혁을 통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을 갖추게 되었다. 국방개혁 법제화로 인해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국방개혁은 단순히 참여정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돼 나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둘째, 선진 국방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국방부 본부 문민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나아가 2007년 3월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바람직한 민·군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 특히 참여정부는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을 신설하여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도모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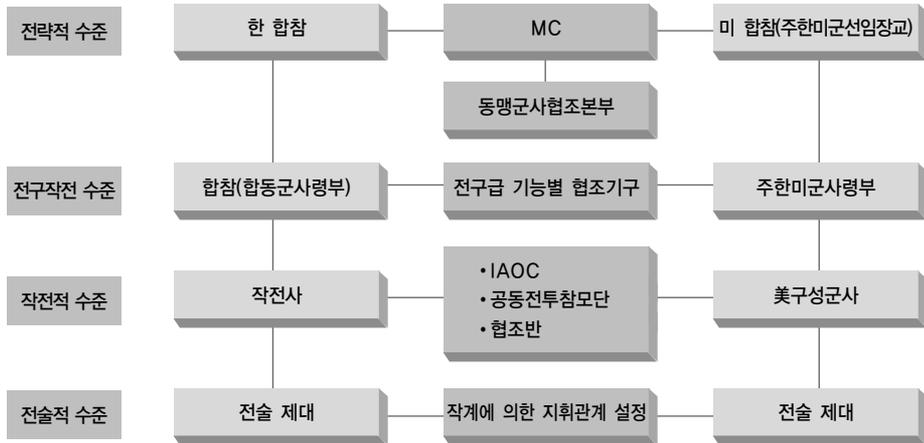
셋째, 군 구조 개편과 미래지향적 첨단전력 강화에 주력해 왔다. 참여정부는 합참과 국방부 직할/합동 부대 등의 상부구조와 각 군별 지휘·부대 구조 및 병력구조 등의 하부구조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전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군을 운용할 수 있는 군 구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군 구조 개편과 더불어 새로운 전략과 전장운용 개념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군 전력을 미래지향적으로 첨단화해 나갔다. 구체적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신규착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으로 T-50/TA-50(2003년 착수), K-10탄약운반장갑차(2005년 착수), 울산급-BATCH 1 차기호위함(2006년 착수), 한국형기동헬기(2006년 착수), KDXIII 이지스함(2006년 착수), E-X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SAM-X 차기유도무기(2006년 착수), 그리고 2007년에 착수한 장보고-III BATCH 1(KSS-III) 3000톤급 잠수함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참여정부 임기 내에 이루어진 주요 전력화사업으로는 지상전술4체계, K1A1 전차, KDX-II, 대형 수송함(LPX)인 독도함, 그리고 F-15K 전투기 등이다.

그 밖에 참여정부는 선진 병영문화 추진을 통해 군이 평화와 번영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보다 확고히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 인간 중심의 ‘신바람 나는 군대’, 그리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병역제도 개선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고 병 복무기간을 단축하였다.

한·미동맹 재조정과 21세기형 동맹관계 구축에서 참여정부가 이룩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6년 10월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일자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하였다.

둘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의 군사구조에 있어서 지휘체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였다. 즉, 참여정부는 전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구조



권 전환 이후 21세기형 동맹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독자성과 상호협력성이 동시에 확보 되는 한국 주도의 ‘공동방위체제’ 를 마련하였다.

셋째, 참여정부는 2003년 4월부터 18개월 동안 진행된 ‘미래 한·미동맹 정책 구상 (FOTA)’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해결하였다. 2004년 10월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 기지를 2개 권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재배치(USFK relocation)와 주한미군의 규모를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3 정도 감축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감축계획에 합의하여 주한미군의 전반적인 재조정(USFK realignment)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주한미군 재배치에는 서울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주한미군이 그간 우리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온 것은 재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지만,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와 훈련장은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을 초래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상당한 제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에 있어 주한미군 기지 재조정은 단순한 기지 재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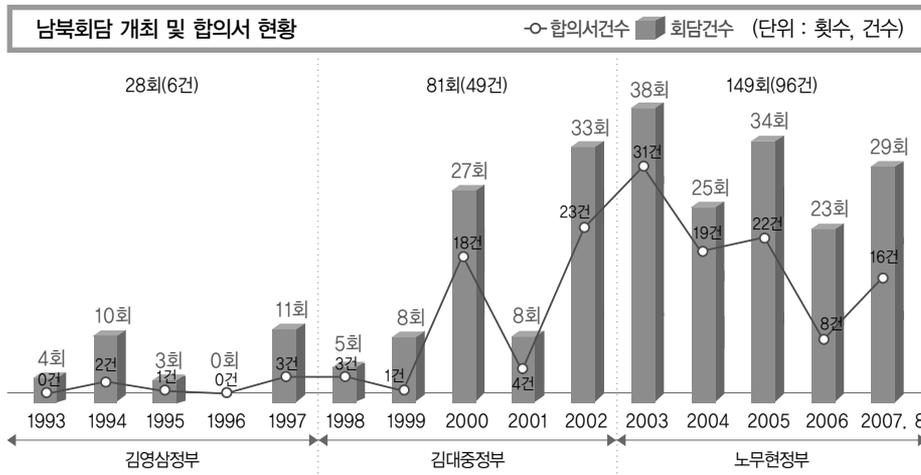
넷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차원에서 참여정부는 1991년 이후 13년간 연 평균 약 16%씩 증가해 온 방위비분담금을 2005~2006년 적용될 분담금 협상 시 최초로 2004년의 7,469억 원 대비 8.9%나 대폭 삭감된 6,804억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

과를 거두었다. 또한 분담금 편성 및 집행이 원화임을 감안하여 전액 원화로 집행하기로 합의하였고 2년간 인상률을 동결하여 2006년도 분담금의 실질적인 삭감효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2007~2008년 분담금 협정에서도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수차례의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상을 통해 소폭 인상되었지만 사실상 2004년 분담금보다 214억 원 감소한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밖에 참여정부는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의 평화적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특히 이라크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

참여정부는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두고 남북 간 화해·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의 성과는 ①남북정상회담 ②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③남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2차례의 단독회담을 통해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10월 4일 10개 항으로 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하였다. ‘2007 남북 정상선언’은 2000년 6·15공동선언 때보다도 훨씬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여 남북관계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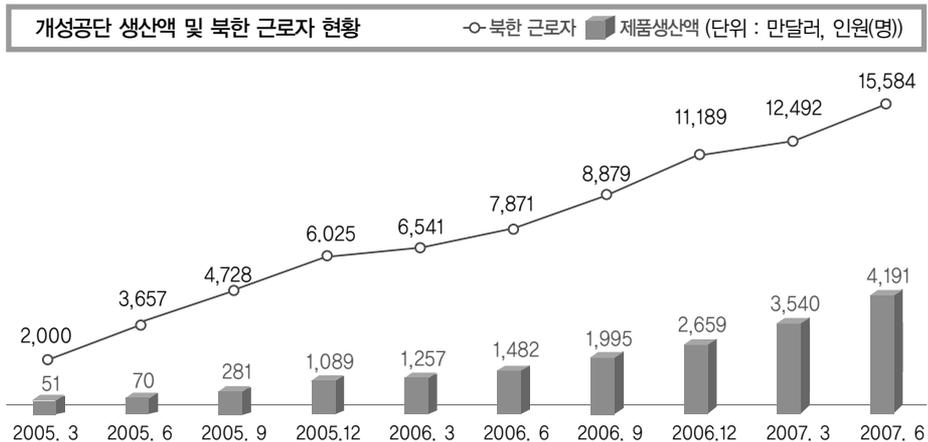


전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7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2007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연이어 열린 제1차 남북총리회담,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제1차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그리고 제1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회의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남북 화해협력 제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정치·군사 분야, 경제 분야, 인도·사회문화 분야에 걸친 남북대화도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에 따른 남북 간 합의서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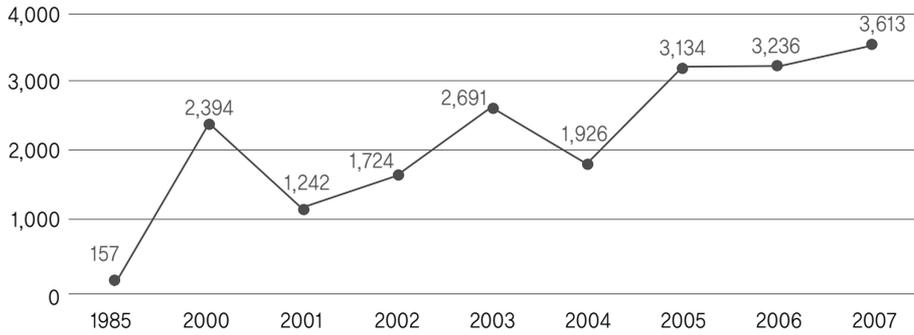
또한 참여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참여정부는 2006년 6월 「남북관계 발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동법 시행령(2006. 6. 30)과 시행규칙(2006. 11. 17)을 제정하여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제4조)과 남북 평화공존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체계를 완비하였다. 또한 2007년 11월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였다. 기본계획은 정부가 「대한민국헌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는 5개년계획이다. 그 밖에 참여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국내법과 제도 등을 정비하였다.

참여정부 재임 기간 동안 남북 교류협력은 이전 정부 때보다 확대·심화되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남북 왕래인원은 남북 도로연결, 개성공단 개발 등으로 비약적으로 증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현황

(단위 : 상봉인원(명))



가하였다. 2003년 남한주민의 북한 방문이 15,280명,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은 1,023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남한주민의 북한 방문이 100,838명으로 연간 왕래인원 1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07년 10월 현재 남한주민의 북한 방문은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 102,191명,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은 833명에 이르고 있다.

참여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2007년 9월 현재 가동기업수는 26개 기업이다. 이 중 시범단지에 15개 기업, 1단계 본단지에 11개 기업이 있으며, 26개 가동기업에서 협동화 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을 모두 합칠 경우에는 44개 가동기업으로 늘어난다. 2004년 12월 첫 제품이 생산된 이래 2007년 9월 현재 입주기업들의 누적 생산액은 2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그중 4천 8백만 달러가 수출액이다. 2007년 9월 기준으로 한해 생산액은 1,710만 달러로 이 중 섬유 생산액이 45%를 차지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땀흘려 일하는 북측 근로자 숫자가 2006년 11월 1만 명을 넘어섰고, 2007년 9월 현재 1만 9,500명을 넘어섰다.

이 밖에도 참여정부는 사회문화협력사업과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참여정부는 당국차원과 민간차원 모두에서 이산가족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제3절 경제

참여정부는 임기 내내 민생파탄, 경제위기라는 비판에 자주 직면했지만, 참여정부 임기 말 우리 경제는 이런 주장과는 완전히 다르다. 지표로 본 한국 경제는 파탄과 위기는 커녕 세계 10위권을 굳건히 지키며 순항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4년간 한국 경제는 수출·주가 등 주요지표에서 모두 2배가 넘는 실적을 달성했다.

경제 성장률은 평균 4.3%를 기록했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10% 내외의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국민소득 1만 5,000달러 이상의 선진국 수준에서는 건실한 5% 안팎의 성장을 유지해 왔다. 국민소득은 지난 1995년 1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외환위기를 겪은 지 7년 만에 이제 당당히 2만 달러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수출은 지난해 3,0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11위를 달성했다. 물가는 2~3%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경제의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종합주가지수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600선에서 꾸준히 상승해 2007년 10월 사상 최고치인 2000을 돌파했다. 5년 만에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300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도 2,0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5위에 올랐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항해 온 것은 아니었다. 외환위기의 후유증으로 내수가 쉽게 살아나지 않은 탓에 경기회복이 생각만큼 빨리 이뤄지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 카드 사태와 부동산시장 불안도 한국 경제와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인기에 영합하거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낡은 정책을 배제하고 원칙에 입각한 정책 운용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했다. 동반성장 전략을 통해 성장동력과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과 함께 슬한 난관을 이겨냄으로써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까지 들어선 것이다.

1. 안정된 거시경제 운용

1) 금융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신용카드 사태와 SK글로벌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신속하

게 안정시킴으로써 정부의 시장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 주었다. 400만 명에 육박하던 신용불량자가 정부의 대책이 시행된 뒤 급격하게 줄어들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었다. 또한 LG카드 등 부실 신용카드사의 정상화 과정에서도 채권금융기관들을 설득하여 자발적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면서 무리 없이 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참여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원리와 자율기능을 존중하면서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것은 금융의 쏠림현상이나 금융기관의 부실경영 등 시장의 실패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위기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LG카드 등 신용카드사의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협의를 중시하면서 자구노력에 의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한 것도 이런 원칙의 결과였다.

신용카드문제 해결에서도 3·17신용카드사 종합대책, 4·3금융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금융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면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였다. 동시에 신용카드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수지개선 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금융 위기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신용불량자 문제도 금융기관별 신용회복지원제도, 배드뱅크 등 정부의 대책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4년 2월 383만 명까지 늘어난 신용불량자는 2004년 상반기부터 정제되기 시작하다 같은 해 6월부터는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고, 2005년 말에는 3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 대비 비율로는 7.7%로 KDI가 추정하는 정상 수준 7%(260~270만 명)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이뤄 낸 채무조정 결과로 금융권의 연체율도 점차 낮아졌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15.1%였던 은행권 신용카드 연체율은 2005년 3.3%로 하락했다.

신용카드, 신용불량자 문제 등 금융위기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지표의 변화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다. 참여정부는 최대한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면서 조정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과거 관치금융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시장 원칙에 의한 자율적 시스템을 강조하였다. 이 결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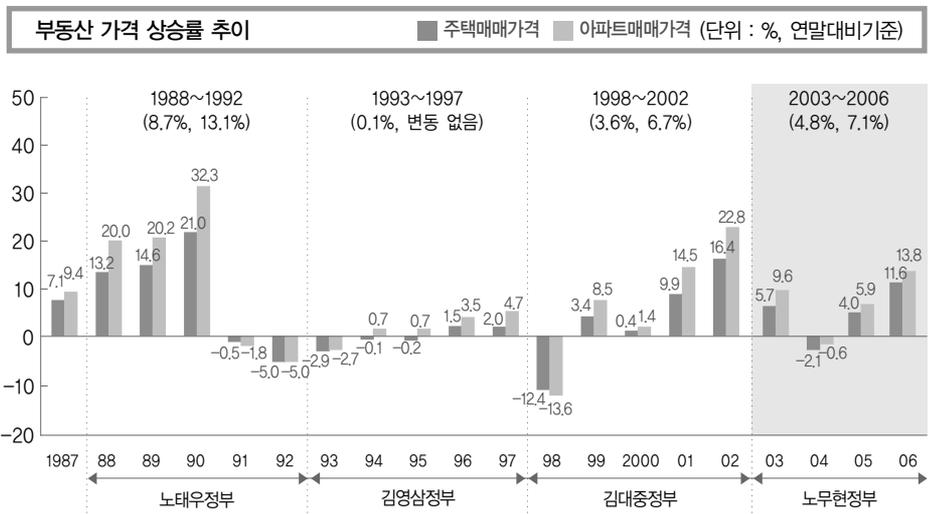
수 있었으며, 건전한 시장시스템이 조성되고 금융업계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전체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은 원금 탕감이나 공적자금 조성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정부의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는 미봉책 또는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간 주도로 대응한 결과 무리 없이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2) 근본적 대응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응해서도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LTV 및 DTI 관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나섬으로써 가계발 금융위기 재연의 우려감을 씻어 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임기 기간 채권금리는 초기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일시적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정부의 시장 안정대책, 거시경제의 안정성, 풍부한 시장유동성에 따라 차츰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시장 과열은 참여정부 출범 이전부터 시작되어 2006년까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서울 강남권·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으로 시작된 부동산 과열은 주변지역과 투기세력이 아닌 서민·중산층에게까지 확산되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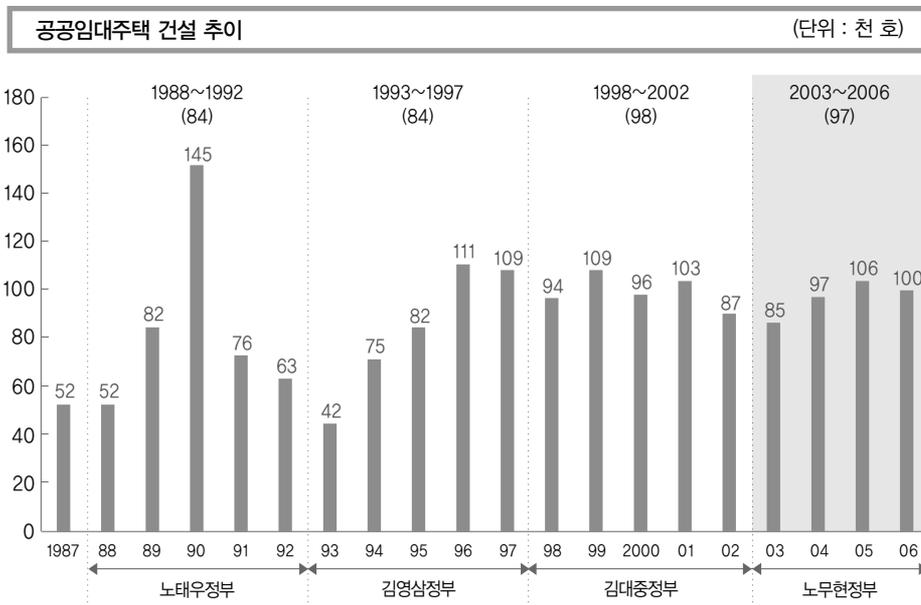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

주 : 괄호 안은 기간별 평균 증가율로 전자는 주택매매가격, 후자는 아파트매매가격의 연평균 수치임.

계부실과 부동산거품 문제를 낳았다. 참여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통한 강력한 세제정비를 비롯, 거래투명화·주택공급 확대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결국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 성공하였다. 2006년 연평균 20% 이상 치솟던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은 2007년 들어 1%대 안팎으로 가라앉았다.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격도 2006년 연평균 11.7% 증가율에서 2007년 하반기에는 0.1~0.2%대로 안정을 이루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초기부터 투기세력과 보수언론·야당의 반발과 거센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일관되고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으로 결국 시장 안정화를 이끌어 냈다. 또한 참여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한 부동산 관련 세제 선진화와 거래투명화 정책 등은 과거 정부가 시도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법·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여정부 시기에 마련되고 추진한 부동산 관련 법·제도가 향후 흔들리지 않고 시행된다면 부동산 투기 억제와 거래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서민·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는 한편, 이들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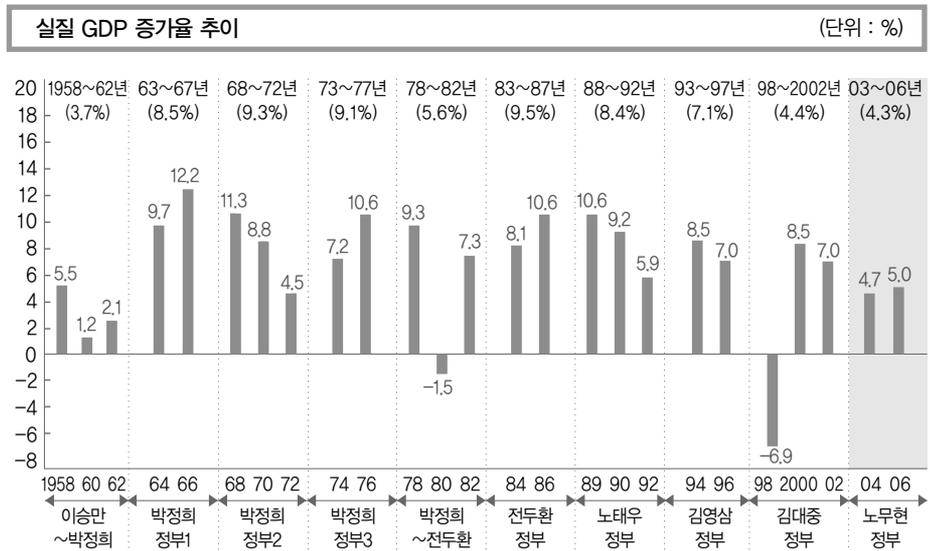
개선하여 나갔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10만 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이후 임대주택건설 비율은 2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인위적 경기부양 배제

참여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추진하지 않았다. 야당과 보수언론은 참여정부 초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양극화 현상이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자 참여정부에 대해 '경제정책에 실패했다', '경제에는 무능한 정부'라는 비판을 가하며 경기부양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원칙을 바꾸거나 흔들지 않았다.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당장의 경기회복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는 그 후유증으로 더 깊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고 원칙에 따른 거시경제 운용의 결과, 경제의 체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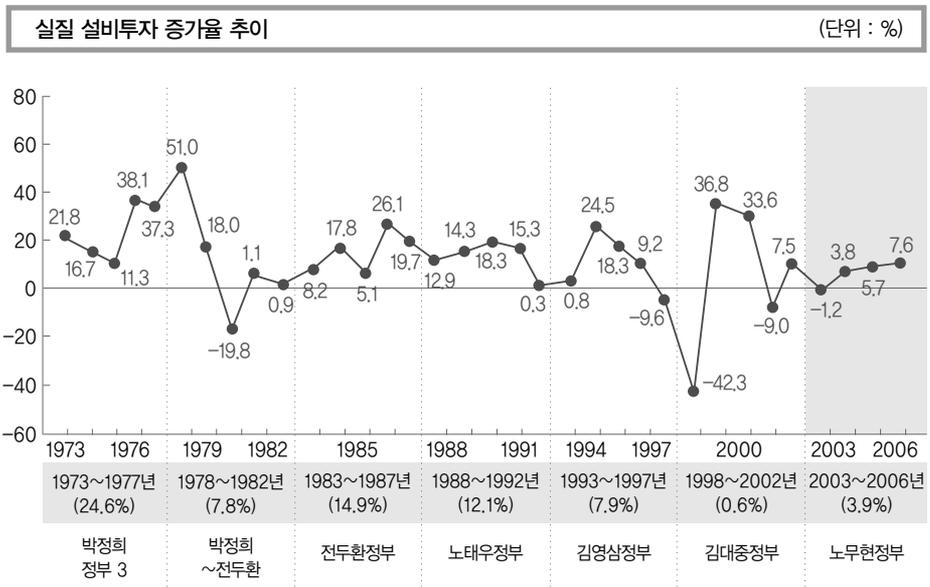


- 1. 괄호 안은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임.
- 2. 해방 이후 5년 단위로 구간을 구분하고, 김대중 정부 기간의 경우 금융위기 충격 전후의 영향을 배제하여 처음 2년(1998~1999년)을 제외한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냄.
- 3. 신용카드 대란 등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2003년을 제외하면 노무현 정부 3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4.6%임.

은 악화되지 않으면서 경기회복이 점차 진행되어 2006년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금융·부동산시장 정책, 미래 성장동력 정책, 개방정책 등에서도 참여정부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일관된 정책 운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또 이런 원칙에 입각한 경제운용으로 국내 금융·부동산시장은 과거와는 다른 예측가능한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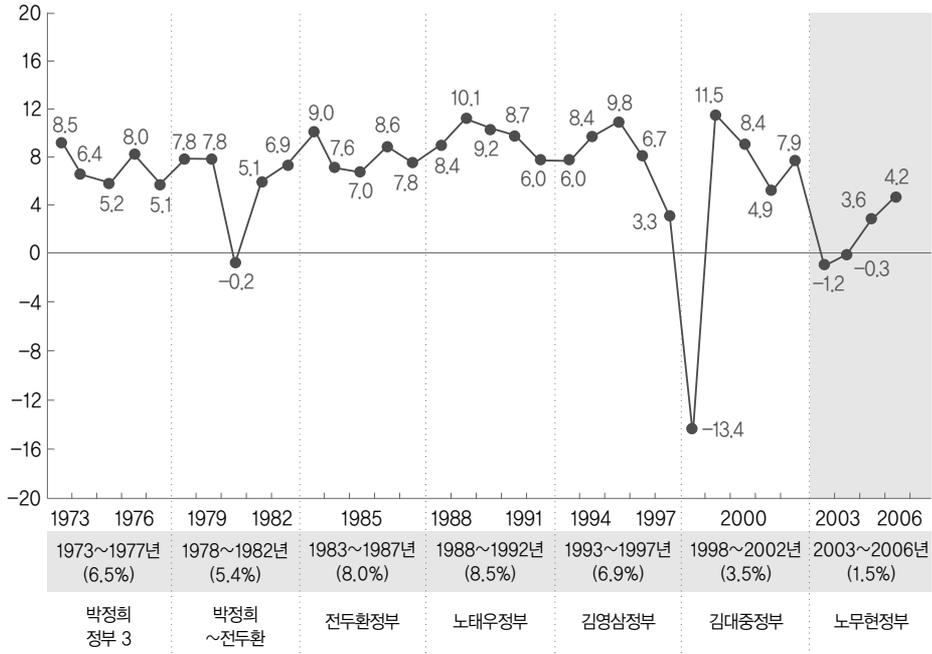
참여정부는 2006년까지 연평균 4.3%의 경제성장률을 거두었다. 이는 과거 개발경제 시대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지만,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시기의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것이었다. 우리 경제는 출범 첫해인 2003년 금융시장의 불안감과 경기부진 탓에 3.1%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후 정부의 안정적 거시경제 관리·운용과 경제 체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2004년 4.7%, 2005년 4.2%, 2006년에는 5.0%의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원칙에 입각한 경제 운용으로 경제의 근본 체질이 강화되면서 출범 초기 극히 저조했던 설비투자자와 민간소비가 꾸준히 회복되었다. 설비투자 추이를 보면, 출범 직후인 2003년 -1.2%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점차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어 2004년 3.8%, 2005년 5.7%, 2006년 7.6%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07년에는 이보다 더 높은 8.2% 증가율



실질 민간소득 증가율 추이

(단위 : %)



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무엇보다 노력을 기울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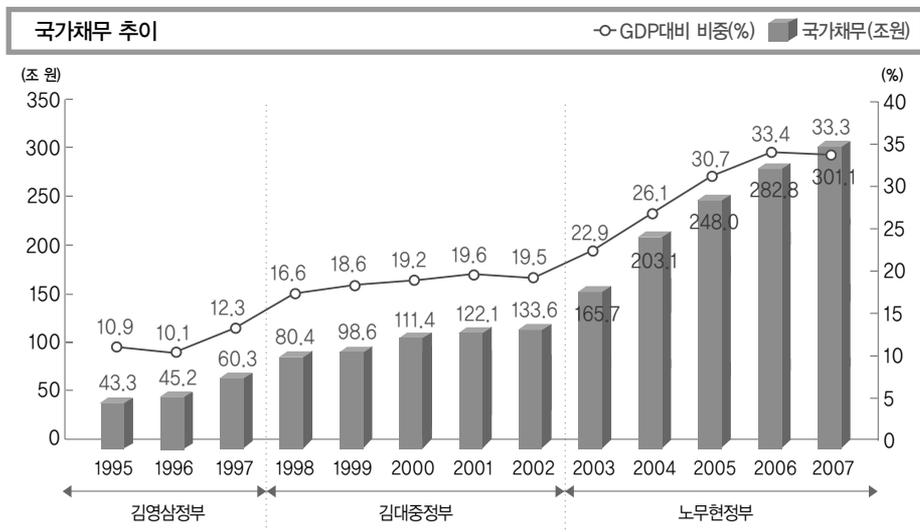
민간소비 역시 비슷한 추이를 나타냈다. 2003~2004년 중 신용카드 사태의 여파로 각각 -1.2%, -0.3%의 연속 2년 감소세를 보이다 신용불량자 및 금융경색 문제가 해소되고 가계부채 조정이 이뤄지면서 2005년 3.6%, 2006년 4.2%로 회복되었다. 2007년 역시 4.2%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활용하지 않은 최초의 정부이다. 그럼에도 이제 설비투자도 회복되고, 민간소비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원칙에 입각한 경제운용으로 한국사회의 경제적 토대가 튼튼해진 것임을 입증해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3년 이후 연평균 3% 수준으로서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정세가 유지되었다. 특히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낸 점을 감안할 때 3%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매우 안정적인 지표로 평가된다.

재정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하였다. 복지지출의 확대 등 재정소요가 증가하였음에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운용하였다. 국가채무가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고, 그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예산을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133.6조 원에서 2007년 현재 301.1조 원으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노무현 정부가 '빛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기 국가채무는 주로 공적자금 상환과 외평채 발행 때문에 늘어났다. 각각 53조 원과 69조 원이다. 둘을 합한 금액은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의 73.0%를 차지한다.

공적자금 상환은 일반 재정운용과는 관계 없는 불가피한 조치다. 김영삼 정부 시기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파탄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김대중 정부 시절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 자금이 상환시기를 맞으면서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외평채 발행도 통상적인 재정운용과는 관계가 없다. 환율 안정을 위해 외국환이라는 대응자산을 가지는 것으로 사실상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환율 안정을 통해 수출의 가격경쟁력 유지와 무역수지 흑자 유지에 기여하는 긍정적 영향도 있다. 결국 참여정부 기간 동안 국가채무 증가는 방만한 재정운용과는 관계가 없다.



자료 : 재정경제부
주 : 2000~2006년은 실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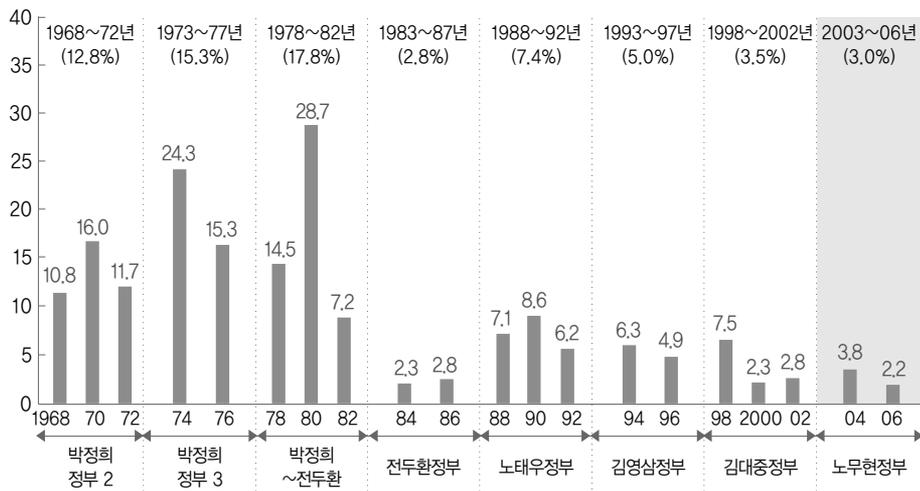
국가채무 기간별 증가 요인

	김대중정부 (1998~2002)		노무현정부(2003~2007)	
	증감액(조원)	기여율(%)	증감액(조원)	기여율(%)
• 국가채무(GDP 대비비중 증감)	73.3(7.2%p)	100.0	167.5(13.7%p)	100.0
- 일반회계	26.4	36.0	30.5	18.2
- 공적자금	0.0	0.0	53.2	31.8
- 외환시장안정용	16.5	22.5	69.0	41.2
- 국민주택기금	17.6	24.0	10.6	6.3
- 기타	12.8	17.5	4.2	2.5

자료 : 재정경제부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



더구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33.3%)은 일본(176.2%), 미국(60.9%)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OECD 평균치(76.9%)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국가채무가 증가했음에도 해외의 어떤 신용평가기관도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의 국가채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4)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달성

이러한 참여정부 경제 운용의 성과가 종합된 것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이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우리나라는 드디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는 1995년 처음 1만 달러 달성 이후 12년 만이며 1998년 외환위기로 국민소득이 7천 달러대로 주저앉았다가 2000년 1만 달러대에 재진입한 지 7년 만의 일이었다. 참여정부 5년 동안의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분은 무려 8,429달러로, 이는 국민의 정부 기간의 371달러, 문민정부 4,025달러, 노태우 정부 3,992달러, 전두환 정부 1,345달러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었다.

2만 달러 소득 달성의 주요 원인이 원화 강세 때문이라며 참여정부의 성과를 폄하하기도 하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일본, 싱가포르 등도 국민소득 상승에 환율의 역할이 있었으며, 오늘날의 환율은 외환위기 전의 시기와 비교하면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달성 과정에서 환율의 영향은 우리나라가 39%로 추정되는데, 이는 과거 일본의 경우 55%, 싱가포르의 경우 32%가 환율요인이었음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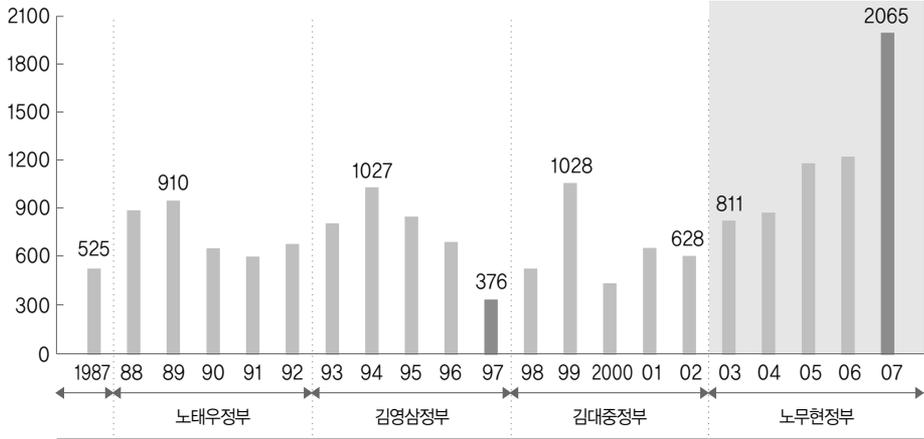
2. 경제의 체질 강화

참여정부는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친화적 중소기업 지원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벤처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진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함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 결과 우리 경제는 수출,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등 여러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1) 종합주가지수 2000 돌파

종합주가지수(KOSPI)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07년 사상 처음 '코스피 2000시대' 를 열었다. 출범 직후인 2003년의 800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상승

종합주가지수



※ 연도 말 기준, 2007년은 10월말 기준 KOSPI지수

한 것이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주식시장이 출범한 이래 1989년 상반기, 1994년 하반기, 1999년 하반기에 1000선을 돌파한 적이 있었지만, 이른바 ‘마의 1000’ 선을 잠시 상회하다 다시 주저앉았다.

참여정부 들어 종합주가지수가 1000을 돌파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마침내 2000시대를 연 것은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로 국내외 자금이 풍부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국내 기업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 안정적인 거시경제의 흐름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대, 참여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 등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노력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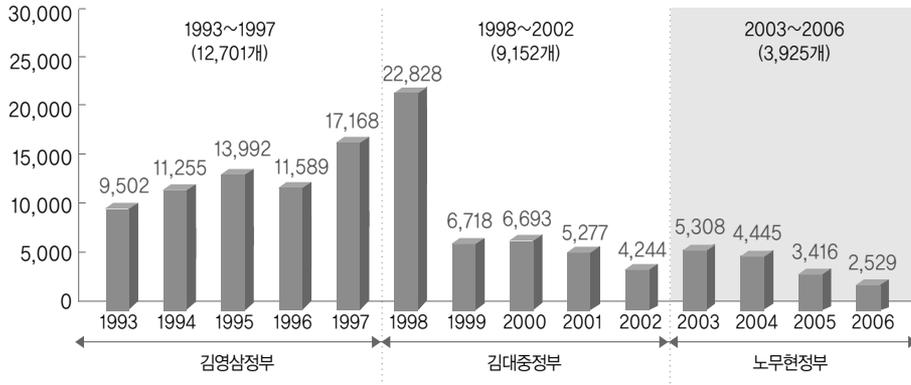
코스피 2000시대의 개막과 함께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코스피+코스닥)의 시가총액도 2007년 7월 사상최고치인 1천조 원을 돌파하였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의 392조 원에 비해 약 3배 정도에 이르는 규모이며, 국내 총생산(명목) 848조 원(2006년 기준)을 웃도는 것이다.

2) 부도업체 감소

한편 부도업체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1998년에 2만 2,000개 수준까지 급증하

부도업체 수 추이

(단위 : 개)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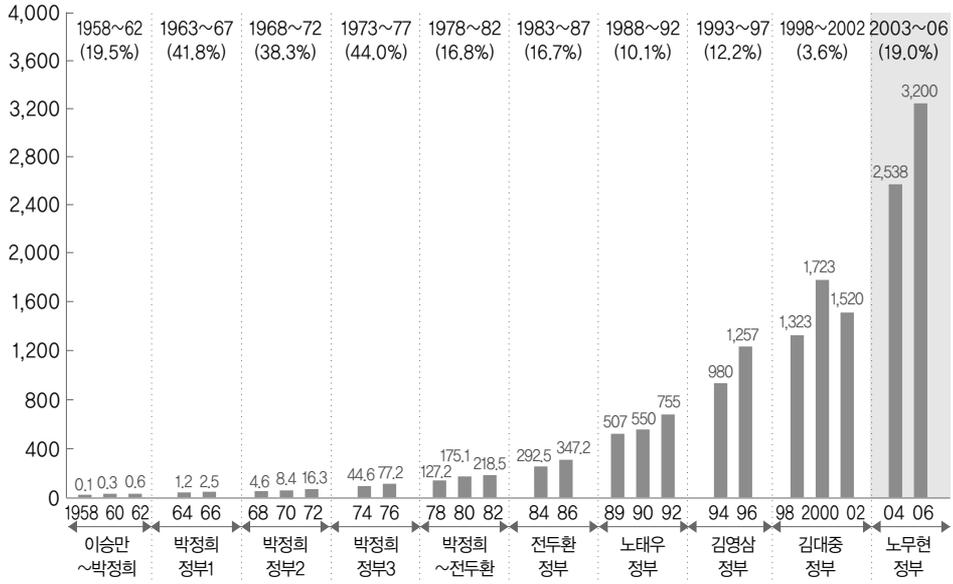
주 : 1. 전국 대상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를 포함함. 2. 괄호 안은 기간별 연간 평균치임

였으나, 이후 참여정부 기간에는 연평균 4,000개 수준까지 감소하여 기업 부문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임을 시사해 준다. 부도업체 수가 김영삼 정부 출범 첫해인 1993년의 9,502개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2,529개까지 감소한 것은 경쟁력이 취약하고 내실 없는 기업들의 시장 퇴출이 상당 정도 진척되었음을 반영한다.

3) 수출 3,000억 달러 시대 개막

참여정부 기간 수출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 이후 연평균 19.0%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한 결과, 2006년에는 사상 처음 연간 수출 3,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런 비약적인 수출 증가세는 2004년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유가 급등, 원화강세 등의 불리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상수지 역시 2006년까지 누적기준으로 약 612억 달러를 실현하고 연도별로도 안정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였다. 대외수출은 2003년 이후 연평균 19.0%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결과 2006년에 연간 3,000억 달러의 고지를 돌파했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의 2배에 가까운 액수이며, 세계 11번째 규모이기도 하다. 중계무역국을 제외하면 수출 규모 면에서 이제 우리 앞에는 G7과 중국만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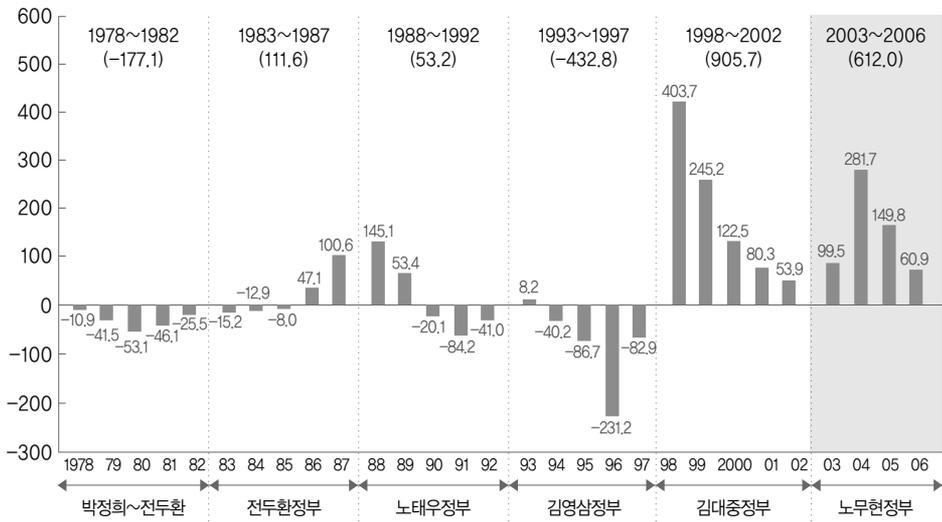
수출 (단위 : 억달러)



자료 : 무역통계(KOTIS), IMF

주 : 해방 이후 5년 단위로 기간을 구분하고, 괄호 안은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임.

경상수지 추이 (단위 : 억달러)



4) 안정적 경상수지 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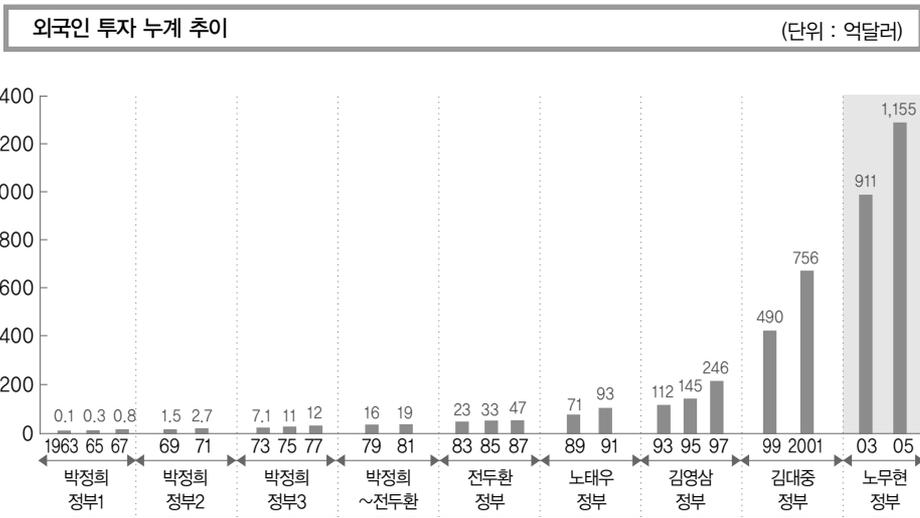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990년대 이후 적자를 기록하여 왔으며, 국민의 정부 기간에만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초기에 흑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후기에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기간에는 꾸준히 흑자를 실현한데다 급격한 증가·감소가 없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환율 하락 등 불리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경상수지가 이렇게 흑자기조를 유지한 것은 우리 주력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5) 외국인 투자 누계 1천억 달러 달성

금융시장의 안정과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 거시경제의 안정 등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도 크게 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액은 1962년의 외자 첫 도입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04년에 1천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06년에는 1,267억 달러에 이르는 등 급증세를 이어 가고 있다. 투자 형태별로 보면 공장 설립 등 그린필드(외국인에 의한 공장 및 사업장 설립)형 투자액이 2003년 이후 연평균 5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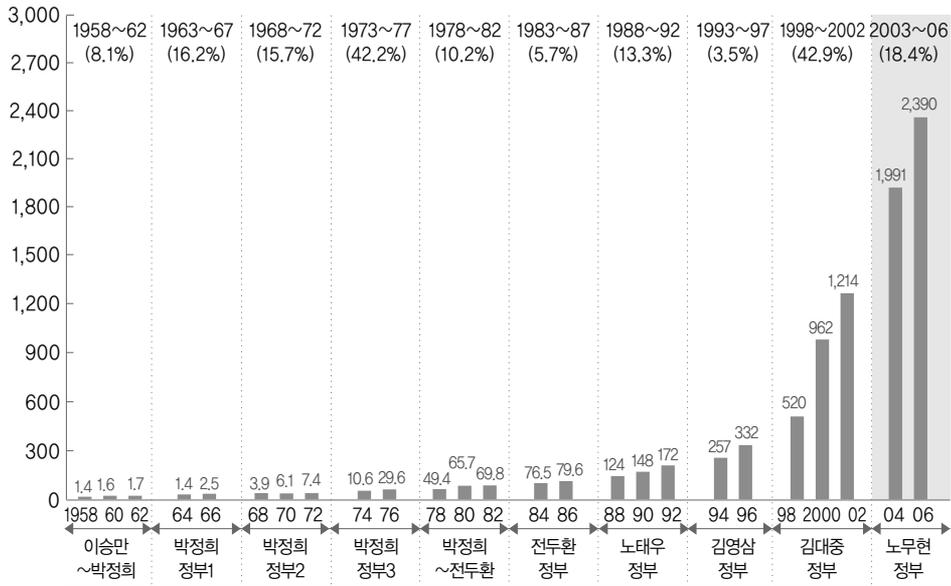
6) 세계 5대 외환보유국

대외신인도 제고와 위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도 참여정부 기간 등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 억달러)



안 크게 늘었다. 국내 외환보유액은 출범 첫해인 2003년 1,554억 달러에서 2006년 말 2,390억 달러로 증가해 중국·일본·러시아·대만에 이어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의 위치에 올랐다. 외환보유액의 증가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우리의 국가신인도 향상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꾸준히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7) 국가신용등급 외환위기 이전 수준 회복

참여정부 5년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상향 조정을 받았다. 2005년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1단계 올렸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피치사가 A에서 A+로 1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사는 2007년 7월 A3에서 A2로 1단계 올렸다.

국가신용등급 평가는 외환보유액, 외채구조 등 대외 부문의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거시경제의 여건·재정 건전성·금융 및 기업 부문의 경쟁력·노동시장의 유연성·안보위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승

은 그동안 참여정부의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과 금융·기업 부문의 개혁 및 지원정책 등 경제정책의 성과가 총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3. 성장잠재력 확충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 추진에 따라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였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지정·육성한 것은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모색했던 참여정부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

1) R&D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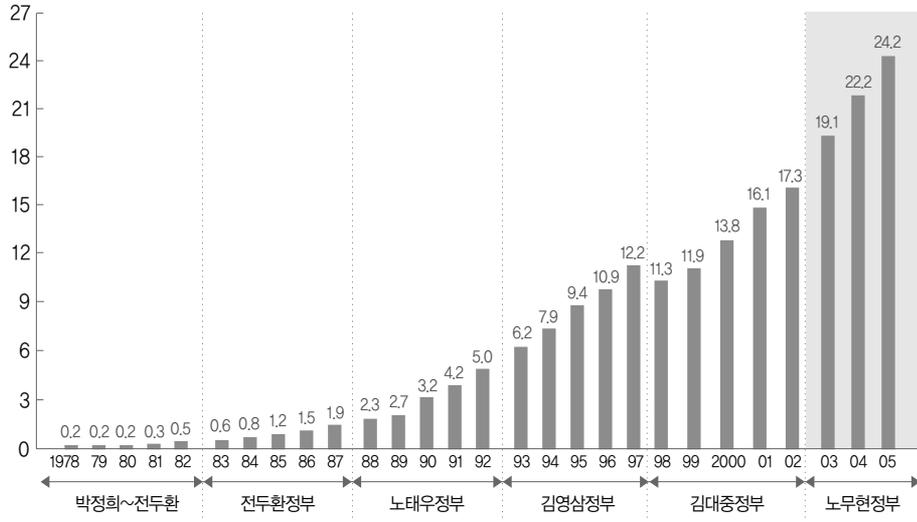
과학기술 지원책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는 연간 10조 원 시대를 맞게 되었으며, 과학기술부총리제 등 정부 조직도 이에 맞춰 개편되는 등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과학기술·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큰 진전이였다. 또 산·학·연이 연결되는 과학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재양성·기술개발·R&D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진전에 따라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들어 혁신주도형 선진국 모델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수준을 2002년 세계 21위에서 12단계나 높은 11위로 상향 조정했다. 참여정부는 또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 집중 육성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뚜렷이 좁혀 나갔다. 이 분야의 인력양성과 법·제도 개선을 본격화함으로써 중장기적 성장동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런 혁신주도형 경제기반이 정착되면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평가한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2003년 16위·27위에서 2006년 12위·6위로 대폭 향상되었다. OECD와 미국 RAND연구소 등은 우리나라를 과학기술의 선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는 물론 유럽 선진국에서도 우리의 국가 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총 연구개발비 추이(공공 부문 + 민간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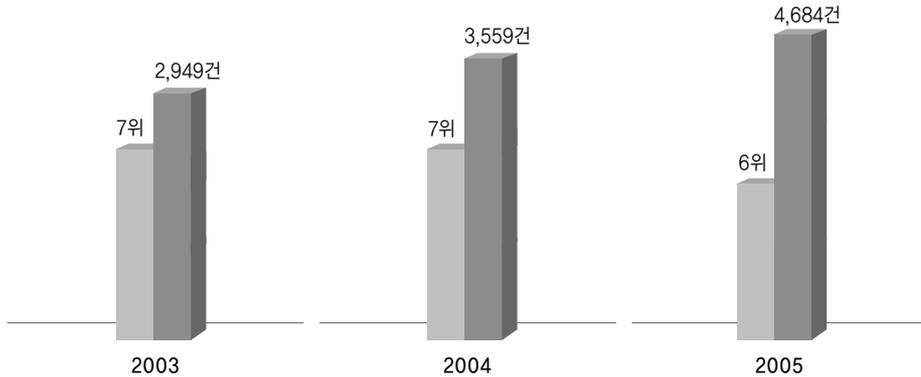
(단위 : 조원)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및 기술 수준

	2003	2006
지능형 로봇	4.0년(65%)	2.2년(82%)
미래형 자동차	5.0년(65%)	4.0년(75%)
차세대 전지	6.0년(50%)	3.0년(70%)
디스플레이	1.5년(90%)	1.0년(95%)
차세대 반도체	4.0년(60%)	1.6년(84.1%)
디지털 TV/방송	1.5년(85%)	0.7년(94.2%)
차세대 이동통신	5.0년(80%)	0.9년(90.4%)
지능형 홈네트워크	2.0년(80%)	1.0년(90.0%)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3.0년(77.5%)	2.2년(80.1%)
바이오 신약/장기	5.0년(60%)	4.0년(70%)

자료 : IT 신성장동력 기술 수준 조사(2006), 자동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는 사업단 추정자료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제특허 출원 건수도 2006년 기준 5,935건으로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한 세계 4위, 전년 대비 증가율은 26.6%로 중국에 이어 2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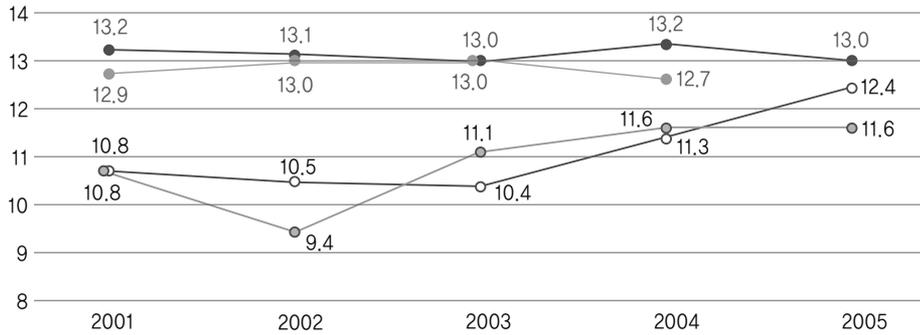
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한편 참여정부 출범 당시인 2003년 국내 서비스산업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낙후된 상태였다. 서비스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 67.6%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56.3%에 불과했다. 고용 비중도 우리나라가 65.5%로 미국(78.4%), 프랑스(72.6%), 일본(67.1%)에 비해 낮았다. 특히 단기일자리 비중이 큰 도 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사업서비스 분야의 고용 비중은 OECD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총 수출액 중 서비스 수출액 비중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함을 반영하고 있었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낙후성 때문에 교육·관광 소비가 해외로 빠져 나갔고 이는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는 고용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달성하기 위한 과감하고 대폭적인 서비스산업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였다.

주요 국가별 BIS 비율 추이

○ 한국 ● 영국 ● 미국 ● 일본 (단위 : 조원)



자료 :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주 :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은행규제자본 기준

2. 일본은 주요은행 기준

참여정부의 서비스산업 지원 대책은 과거 ①서비스산업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개선 ②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③분야별 경쟁력 강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에는 주로 관광호텔에 대한 영세율 추가연장과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골프장·스키장의 부지면적 제한 규정 폐지 등 관광수지 개선대책이 시행되었다. 2004년에는 세제·금융 지원 및 인프라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18개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 대책이 추진되었다. 2005년에는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엔지니어링·컨설팅·통신·방송·광고·교육·의료 등 26개 서비스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대책이 추진되었다. 2006과 2007년에는 주요 경제단체·관련업계·지자체 및 소관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추진하게 되었다.

금융서비스 부문은 제조업 등 여타 부문과의 연관성 등을 감안할 때 특히 중요한 분야였다. 금융서비스가 경쟁력을 상실하면 국부 유출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하면 국부 증가로 경제의 건전성을 지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 중심에 은행이 있다.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BIS 비율은 노무현 정부 들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2005년 12.4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06년 현재 12.31% 수준에 있다.

3) 동북아 금융 허브 추진

참여정부는 '동북아 금융 허브 전략'을 추진하여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의한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선진화와 금융감독·규제체계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부터 시행되면 금융빅뱅 등을 통해 세계적인 규모와 수준의 토종 투자은행(IB)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와 선진화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규제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더 많은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도 성과였다. 또한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여 처음으로 국내 외환보유액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게 한 것도 참여정부 금융정책의 큰 성과이다. 동북아 금융 허브 전략에 따라 그동안 취약하고 불안정했던 국내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4) 한·미 FTA 등 능동적 개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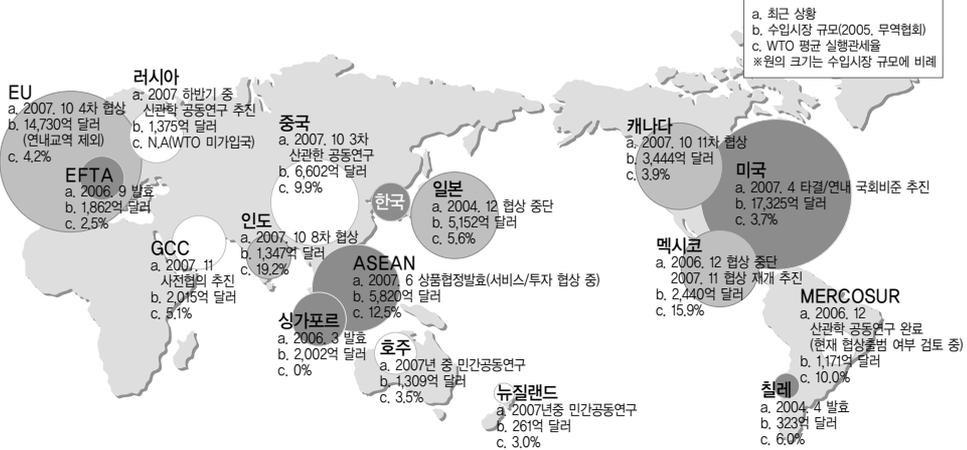
이외에도 참여정부는 능동적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칠레 FTA에 이어 한·싱가포르, 한·EFTA 등을 타결해 이미 발효 중이며 한·미 FTA도 성공적으로 타결하였다. 한·칠레 FTA 등은 협상 초반 국내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었으나 지금은 자동차·휴대폰 등 제조업과 농·어업 등이 윈-윈 효과를 내고 있어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

한·미 FTA 역시 추진과정에서 농민 등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국내 여러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인도·대만 등 경쟁국들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로 한국은 중국·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세계 최대 시장이자 북·중·남미를 통합하는 시장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이는 한국이 동북아와 환태평양 시장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

한국의 Global FTA Network (2007. 10 현재)

● 발효 또는 타결 ○ 협상 진행중 ○ 사전준비단계



- ※ 이미 체결된 FTA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상품), 미국
- ※ 협상 출범 또는 진행 중인 FTA :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일본
- ※ 공동연구 및 여건미련 단계 : MERCOSUR, 중국, GCC,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페루, 러시아

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앞으로 한·EU, 한·중, 한·일 간 FTA 협상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여건과 자신감을 불러올 것이며, 확대되어 가는 국제 통상외교에서도 한국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이 밖에 해외 M&A 활성화 정책을 통해 국내 기업·금융기관이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에 투자하여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과, 인천·부산·광양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육성함으로써 한국을 15억 인구의 거대시장인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중심국가로 키워 갈 중장기적 기반을 조성한 것도 중요한 개방정책의 성과였다.

제4절 사회

우리나라 사회는 과거 경제 중심의 불균형 성장과 1997년 외환위기와 이후 극복과정에서의 구조조정으로 고용, 소득 등이 악화되었으며, 계층 간 불균형, 양극화가 심화·

확대되고 있었다.

외환위기 초기 2년 동안 4만여 개의 기업이 부도났으며, 1998년에는 실업자수가 무려 150만 명까지 늘어났다. 국민의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환위기가 극복되고, 민생경제가 회복될 조짐이 보였으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2002년에는 신용위기가 초래되어 가계 부문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세계화, 지식정보화, 자동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일자리 축소 현상이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한국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 사회도 저성장 구조로 전환, 성장의 고용 유발효과의 약화,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중 증가 등이 상시적인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국내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가속되면서 한국 사회에 부담을 주고 있다. 출산율은 1980년 2.73명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3년에는 1.30명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은 미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연금 등 사회보험의 재정 압박, 가계의 노인부양 부담률 증가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와 같은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확대 성장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복지가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건강한 사회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를 확대·보완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재정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감으로써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참여정부 후반기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투자정책을 정책기조로 삼았다. 사회투자정책은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다. 문제에 대한 사후대응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예방적 투자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참여정부 기간 동안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사회투자를 확대하였으며, 교육인프라 확충, 여성 권한 확대와 육아 지원 등 인적자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되었다. 고용 없는 성장, 일자리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확충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 수준은 아직 선진국과 비교할 때 부족한 편이다. GDP 대비 공사회 지출이 김영삼 정부 3.2%, 김대중 정부 5.6%에서 2005년에는 8.6%로 늘어났지만, 선진국인 미국의 14.8%, 스웨덴 28.9%, OECD평균 21.2%에 비해 매우 낮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는 2006년 말 ‘비전 2030’이라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참여정부는 비전 2030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함께 가는 사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희망한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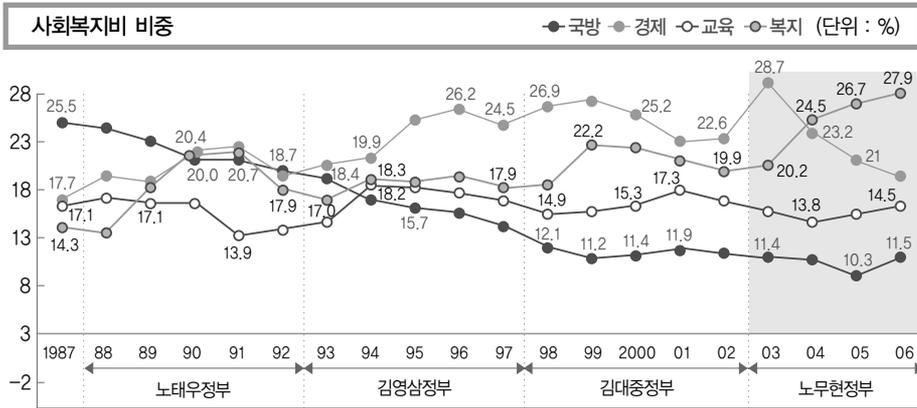
1. 사회안전망 확충과 미래사회 대응

참여정부 들어 복지예산은 대폭 늘어 2002년 19.9%에서 2006년 27.9%까지 증가하였다. 사회복지에서 중점적으로 확충한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 사회서비스, 여성보육서비스 등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성장잠재력 강화에 직결되는 분야이다.

참여정부는 부양의무자 범위 현실화,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판정기준 완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현실화하였다. 긴급복지제도,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행된 자활제도를 강화하고,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제도화하였다.

참여정부의 복지예산 증가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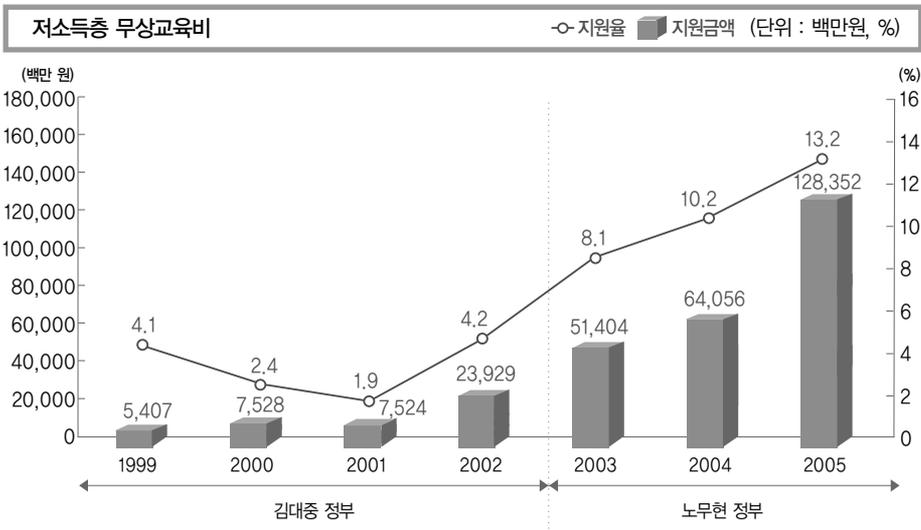
- 주요 증가 내역
 - 기초생활 보장 : 2002년 135만 명 3.4조 원 → 2007년 167만 명 6.2조 원
 - 사회서비스 : 2002년 2,722억 원 → 2007년 1조 2,945억 원
 - 여성보육서비스 : 2002년 2,461억 원 → 2007년 1조 3,366억 원



자료 : 기획예산처

저소득층 아동 교육·보육을 확대하였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2004년 만 3, 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 유치원 이용 아동의 13.2%가 지원을 받고 있다. 육아 지원을 대폭 증가(국민의 정부에 비해 4배)시켰으며,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까지 확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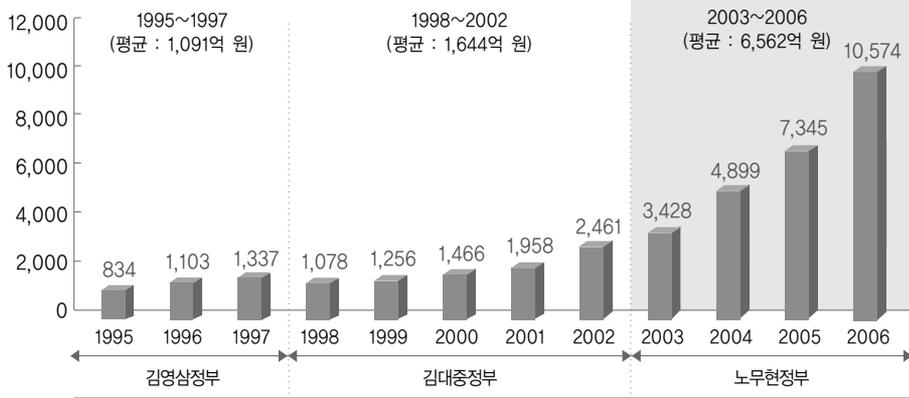
참여정부는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내실화하고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 주요 업무 계획

육아 지원 예산

(단위 : 억원)



자료 : 기획예산처(2006), 내부자료.

장애인 LPG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장애 수당을 현실화하였다. 중증장애인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으로 증액시키고, 중증장애아동 부양 수당으로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장애인 차별금지의 법제화,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신규 도입 등을 통해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동정책도 기존의 '요보호아동 대상의 서비스 체계'에서 '사전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아동안전대책,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사회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희망스타트, 아동발달지원체계(CDA) 정책 등을 신규로 실시하였다.

참여정부는 사회보험의 안정화와 제도 내실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였다. 재정 고갈 논란이 된 국민연금에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보험료는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되 급여 수준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화 세대인 노인들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건강보험은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국고지원방식을 놓여준 지역 보험료 지원에서 전체 보험료 20% 지원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보험약가제도 개선, 급여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치매 등 노인들의 간병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

행한다.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전체 사업체수 대비 고용보험적용사업체수 비중은 2005년 현재 35.8%까지 증가하였다. 실업급여 수혜율은 매년 증가하여 2005년 현재 실업자 3명 중 1명이 실업급여를 수혜받고 있다. 산재보험도 적용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2006. 6)하여 사회 각 부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회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범정부계획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을 수립(2006. 8)하였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이 필요하며, 제도적 여건 개선, 정부 지원책 마련,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2. 교육경쟁력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참여정부는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초·중등학교의 교육력과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양적·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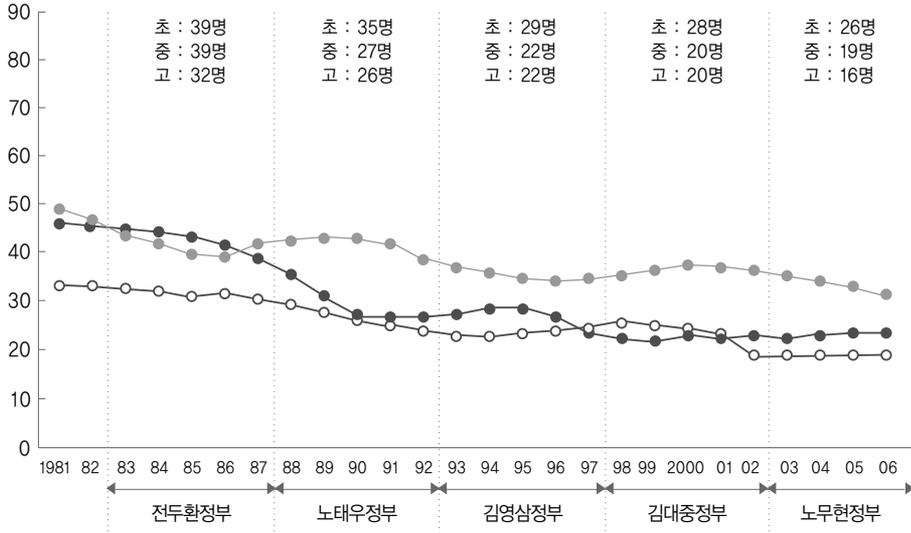
방과후학교, EBS 수능 강의 내실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생애초기 기본 학습능력 개발 및 특수교육의 지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확대, 농·산·어촌 우수교육성 등을 추진했다.

질보다는 양적 확장에 주력해 온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각종 국제학력 비교검사에서 우리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얻고 있으며, 대학순위가 올라가고 논문 편수도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도 참여정부 기간 중에 큰 폭으로 줄었다. 1993년에 38.8명에 달하던 학급당 학생수가 2006년에는 30.9명으로 20.4%가 감소하였고,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도 참여 정부 기간에는 평균 34~35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초·중·고 교사당 학생수

● 초등학교 ● 중학교 ○ 일반고등학교 (단위 : 명)



자료 :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주 : 수치는 각 정부기간의 평균치임

참여정부는 국가와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였다. 인적자원 개발의 기획총괄·조정·평가 기능이 강화되고,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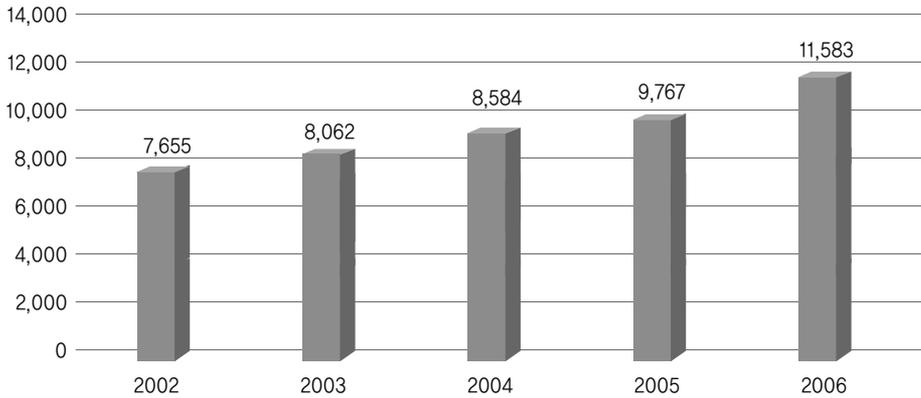
3.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안정

참여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고용 지원 서비스 개선, 비정규직 보호와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노력하였다.

참여정부는 전통적인 경제 성장만으로 충분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확대 등에 따라 사회 서비스 수요는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적극 투자하였다. 2003년 처음 도입한 이력 지원예산과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2003년 0.2만 명, 73억 원 → 2006년 11만 명, 6,782억 원). 아울러

직업능력 개발 예산

(단위 : 억원)



자료 : 노동부

주 : 직업능력개발 지원 예산에는 실직자 및 취약계층 훈련, 사업주 및 재직자 훈련, 인력부족분야 훈련,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훈련 예산 등이 포함됨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2007.1)하여 사회적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일자리 이동이 빈번해지고, 취업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지원 서비스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참여정부는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 확보, 지원센터 실무공무원 증원, 워크넷 고용정보망 확충 등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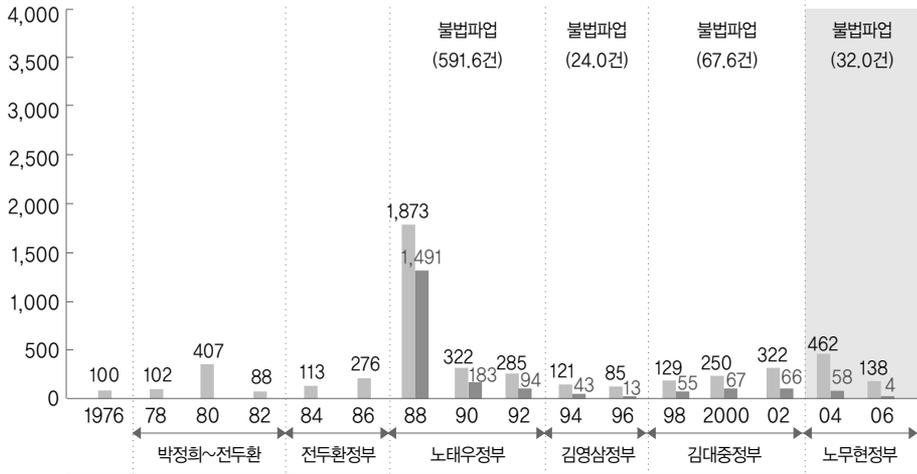
참여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급증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마련하고 새로운 성장을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혁신하였다. 새로운 기술과 업무에 적응하고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지식근로자를 육성하기 위해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 등 자율적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충하였다.

이 외에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 변화들이 이뤄졌다. 주 40시간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퇴직연금이라는 선진화된 사회안전망은 퇴직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데 주춧돌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고용보험법」의 확대 적용 등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노사분규 건수 및 불법파업일수

■ 노사분규건수 ■ 불법파업건수 (단위 : 건수)



해소하였다. 2004년 1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전면 적용되었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직원 및 직업능력 개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참여정부는 노사관계의 새로운 비전으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제시하였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을 세우되, ‘대화와 타협’의 장을 보장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그 근간으로 한다. 노동기본권을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신장하고,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시장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선진화 입법을 마무리하였다.

그 결과 참여정부 출범 후 노사관행의 합리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에 의해 갈등이 해결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노사분규 건수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4. 문화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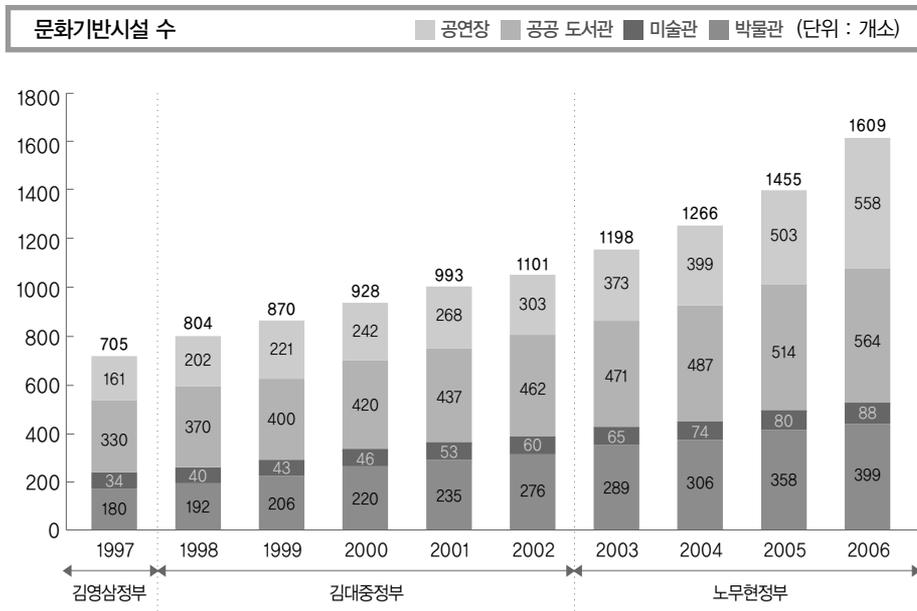
참여정부는 다원적인 문화사회와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참여’와 ‘창의성’을 기치로한 ‘창의한국’이라는 21세기 문화 비전을 설정하였다. 문화를 신

성장동력으로 삼고 문화와 체육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산업을 육성·지원하였다.

참여정부는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공연장 등 문화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2002년 1,101개소에서 2006년에는 1,609개소로 참여정부 4년 동안 46.1%가 증가했다.

디지털융합시대 도래와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국민관광·레저 시대의 본격화로 문화·관광·레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문화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약 30조 원에서 2005년 약 54조 원으로 증가하여 전체 GDP의 6.7%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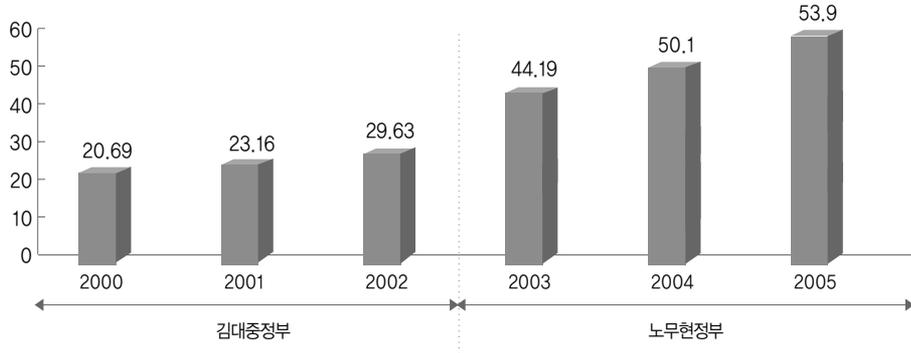
참여정부 기간 동안 한류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등 지역에 맞는 문화도시를 추진하였다. 해외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효과와 더불어 2005년에는 외래 관광객 600만 명의 시대를 개막하였다.



- 주 : 1. 사립·대학박물관 : 등록관만 대상이며 자료는 2006. 12. 31 기준임.
- 2. 미술관 : 각 시·도에서 관할 구역 내에 등록된 미술관을 대상으로 함.
- 3. 공공 도서관 : 자료수는 간행물(중)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말함.
- 4. 공연장 : 등록공연장을 의미하며 1998~2001년까지의 자료는 증가 추세에 의한 추정치임.

문화산업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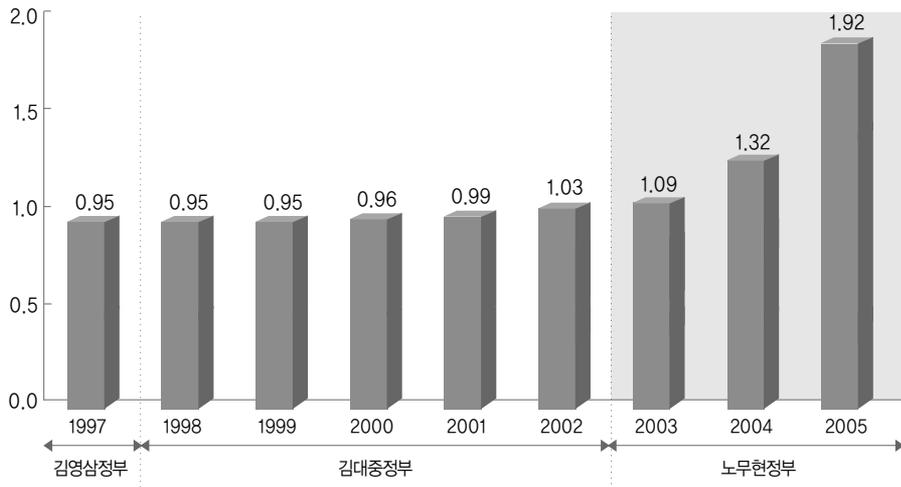
(단위 : 조원)



자료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통계」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단위 : m²)



자료 : 문화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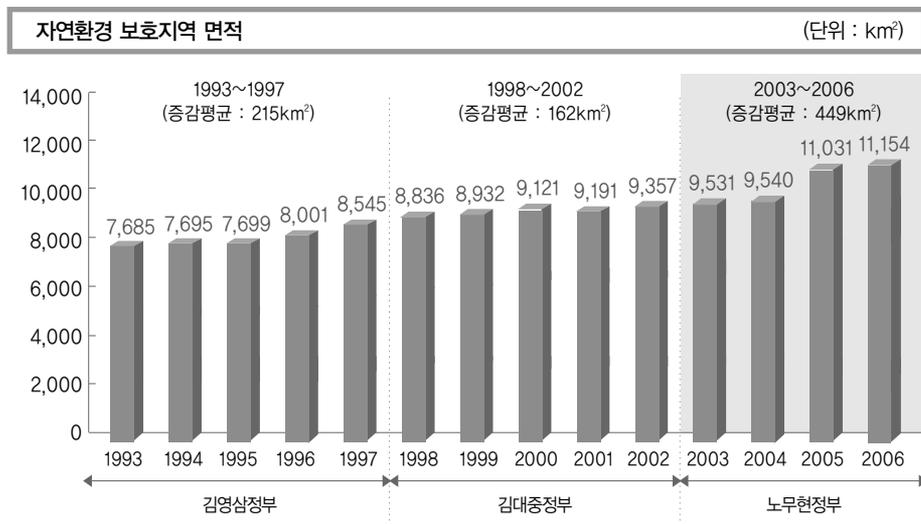
주 : 1998~2001 및 2003~2004년은 증가 추세에 의한 추정치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될 전망이다. 그리고 전국 공공체육 시설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6,721개소에서 2006년 9,949개소로 늘어났다. 1인당 체육시설 면적도 2002년 1.03m²에서 2005년 1.92m²로 참여정부 출범 후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5. 쾌적한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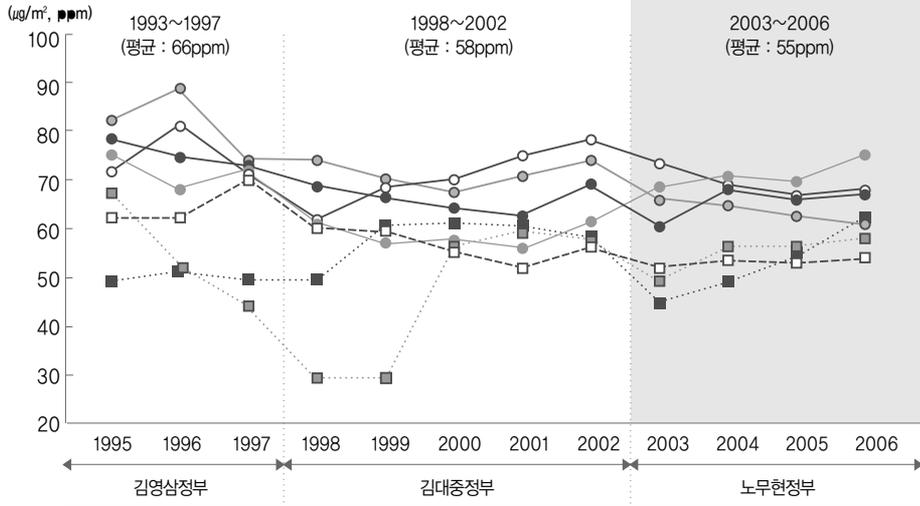
참여정부에서는 기존의 매체 중심 환경정책에서 위해성에 기반한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다. 국민건강을 환경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환경보전 10개년 종합계획(2006~2015)을 수립·추진하였다. 새집증후군 등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각종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 계획(2004~2008)을 수립하였다. 기존의 BOD, 총질소, 총인 등 수질환경기준 및 평가방법을 국민건강 및 수생태계 건강성 중심의 수질환경기준 및 평가방법으로 정비(2006. 12)하였다.

한편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환경보전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성과 각종 대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개발 유도를 위해 자연경관심의제를 시행하였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2003. 12) 및 「야생 동·식물 보호법」(2004. 2) 제정을 통해 백두대간 및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보호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참여정부의 자연환경보호지역의 면적은 2002년 9,357km²에서 2006년 11,154km²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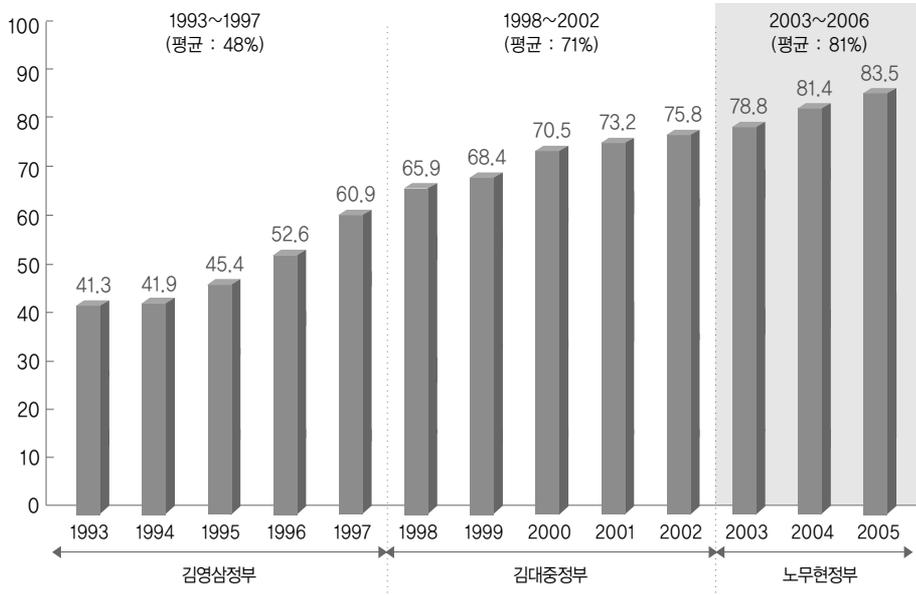
자료 : 환경부

주요 도시별 연간 미세먼지 농도 ● 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단위 : ppm)



자료 : 환경부

연도별 하수도 보급률 (단위 : %)



자료 : 환경부

참여정부 들어 사전예방적 총량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수질 뿐만 아니라 대기 분야에서도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가 2007년 도입되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오염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와 연계하여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되었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였다. 그 결과 서울 등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의 대기환경(미세먼지 : PM10) 수준이 참여정부 들어 크게 개선되었다.

환경서비스 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하수도 보급률을 높였다. 상수도 보급률은 국민의 정부 87%에서 90%, 하수도 보급률은 국민의 정부 71%에서 83.5%로 증가하였다.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해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법」을 제정하여 친환경 상품의 생산·보급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였다.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가축분뇨 이용대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제5절 균형발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집중 시대에서 지방분권·분산 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 과거 역대 정부도 균형발전정책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 것은 참여정부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방의 특성화 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뿐만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단순히 산업의 집적지에 불과했던 전통적 산업단지가 혁신클러스터로 탈바꿈되고,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학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기반이 견실하게 확충되고 있다. 그리고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신활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지방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체 지원규모도 확충하였다. 이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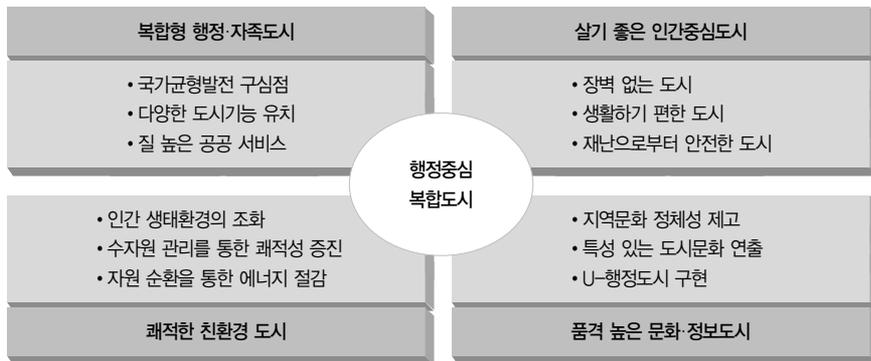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002년 대선 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발전의 최대 저해요소임을 지적하고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청와대와 중앙 부처부터 이전할 것을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시작한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회의 「특별조치법」 통과 이후 더욱 탄력을 받아 ‘2007년 착공, 2012년 이전 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주요 국가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신행정수도 입지를 합목적성(국가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 필요성의 3가지의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연기·공주지역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인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헌법 개정 없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되었다. 참여정부는 즉각 후속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관련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탄력을 받아 2006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개청하고 본격적인 건설작업을 시작하였다. 2006년 중앙행정타운, 첫마을 사업 등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국민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도시 명칭을 ‘세종시’로 확정하였다.

2007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기공식을 열어 문화·교육·국제교류 등의 기능이 조화된 미래형 복합도시를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국토공간 구조 재편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의미와 자족적 성장 중심으로서 지역거점의 형성이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수도권 인구분산과 환경 개선효과, 전체산업의 투자유발과 고용창출 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다. 향후 미래한국의 ‘국가 재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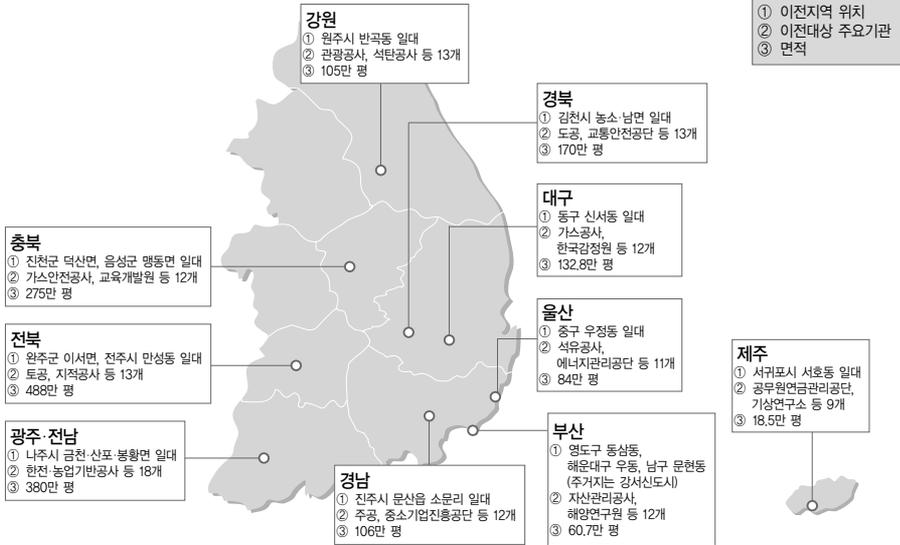
2.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역시 신행정수도 건설과 마찬가지로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지방에 이전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출발하였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 침체로 야기된 국토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공공기관을 집단으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논의를 계기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수도권 발전 기본방향’이 발표되었으며, 수차례 이전정책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아울러 노조 측과도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정부와 상급 노조단체 간에 노정협약을 체결하고 이전정책 추진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정부와 시·도 간 기본협약에 따라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시·도

시·도별 혁신도시 입지선정 현황



자료 : 건설교통부

이전 대상 공공기관 현황

(단위 : 개소)

전국 공공기관	수도권 소재 기관	이전 대상기관				
		계	소속기관	투자·출자기관	출연기관	개별법인
409	345	175	67	26	53	29

에 제시하였으며, 동 지침에 따라 각 시·도는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하고 정부 협의를 거쳐 혁신도시 입지를 발표하였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마무리된 후 ‘혁신도시건설보고회’를 개최하여 혁신도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혁신도시 개발 기본구상 수립 방향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2006. 4. 10).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176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의 건설과 맞물려 있다. 혁신도시란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산업·대학·연구소·지자체가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정주여건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다. 특히

혁신도시 현황(면적, 인구, 이전기관, 개발컨셉)

지역 (사업시행자)	위치	면적 (천m ²)	인구 (만명)	이전기관	도시 콘셉트
부산 (부산도시 개발공사)	영도구 해운대구 남 구	959	0.6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3개	• 21세기 동북아 시대 해양수도 - 남부 경제권의 중추도시 - 세계자유무역 거점도시
대구 (토지공사)	동구	4,216	2.7	신용보증기금,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 Brain City(지식창조) - 학원 중심의 Edu-City - 에너지 절약형 Solar City
광주·전남 (토지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나주시	7,295	5.0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18개	• Agro-Energypia - 신재생 에너지 및 농업, 생물 산업 중심도시
울산 (토지공사)	중구	2,797	2.0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국립방재연구소 등 11개	• 경관 중심의 그린에너지 플리스 - 에너지 절약형 도시 - 환경친화형 도시
강원 (토지공사)	원주시	3,458	2.5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 Vitamin City - 건강도시(well-doing) - 참살이 도시(well-being)
충북 (주택공사)	진천군 음성군	6,914	4.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 교육·문화 이노벨리 - IT, BT 벤처도시 - 연수도시 - 문화·정보·환경도시
전북 (토지공사, 전북개발공사)	전주시 완주군	9,260	2.9	한국토지공사, 농업과학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3개	• Agricon City - 농생명 과학 도시 - 친수공간형 전원도시
경북 (토지공사, 경북개발공사)	김천시	3,803	2.5	한국도로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3개	• 경북 Dream-Valley - IT·BT(농업) 벤처도시 - 교육·문화·환경도시
경남 (주택공사, 진주시)	진주시	4,176	4.0	대한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2개	• 경남 Inno-River City - 기업지원 거점도시 - 녹색친수 도시
제주 (주택공사)	서귀포	1,145	0.5	한국국제교류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9개	• 국제교류·연수 플리스 - 국제교류 거점도시 - 연수휴양·관광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매로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화된 도시 또는 지구를 건설하여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각 지역 특성에 부합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 특성화 발전을 촉진함과 더불어 지역의 혁신클러스터 형성에도 연계시켜 자립적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혁신도시는 2006년까지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07년 중 착공하고, 2012년에 완공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2007년 9월 12일 국제교류 연수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같은 달 20일에는 경북 김천 혁신도시가 두번째 기공식을 가졌으며, 10월 31일에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가, 11월 8일에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각각 기공식을 가졌다.

이러한 혁신도시 건설로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산업클러스터 형성 촉진,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혁신도시 건설은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기업 등과 협력을 유도하고, 지방의 우수인력도 확보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은 민간기업 지방이전 및 지역 내 창업을 촉진시키는 한편 관련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가져와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용 유발효과 13만 3,000명, 생산 유발효과 연간 9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 원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세 수입 증가로 이어져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175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2002~2004) 지방세 납부액은 모두 2,268억 원으로 연평균 756억 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산업 발전 및 특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기업도시 건설

기업도시의 건설은 전경련의 제안을 수용해 정부 내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에 착수하였다. 2004년 6월 「기업도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2004년 12월 9일 국

회를 통과하여 12월 31일 공포하게 되었다.

정부는 2005년 7월 제2차 기업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받은 8개 지역 중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청주와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를 포함 총 4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고, 8월 25일 제3차 기업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남·영암과 태안 2개 지역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추가 선정했다.

기업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지역 및 도시와 협력하며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도시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기업도시는 과거 생산기능 위주로 개발된 산업단지와는 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건설된다. 기업도시는 산업, 연구, 관광·레저, 업무 등 경제활동을 위한 주된 기능은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족적 복합기능을 함께 갖추는 도시 개발 모델이다.

기업도시는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도시의 건설로 인해 지역의 투자여건이 개선

기업도시 시범지역 지정 현황			
지역	유형	사업개요	투자규모
전남 무안	산업교역형	항공물류, 관광휴양,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 (1,220만 평/2005~2011)	27,370억 원
충북 청주	지식기반형	테크놀로지센터, 실버타운, 클리닉센터 등 (210만 평/2005~2012)	3,086억 원
강원 원주	지식기반형	첨단의료, 건강바이오, 문화콘텐츠 단지 등 (100만 평/2006~2015)	1,603억 원
전북 무주	관광레저형	위터파크, 골프장, 콘도, 메디컬 웰빙센터 등 (245만 평/2005~2015)	18,795억 원
충남 태안	관광레저형	테마파크, 생태공원, 골프장, 주거단지 등 (473만 평/2005~2011)	20,357억 원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마리나, F1 경기장, 호텔, 카지노, 주거단지 등 (1,000만 평/2006~2012)	105,241억 원
계	※산업교역형 1개, 지식기반형 2개, 관광레저형 3개		176,452억 원

되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8월 선정된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인해 총 17조 6,452억 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38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 6조 7,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41만 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기업도시는 지역의 생산투자·연구·교육기능이 집적된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지방재원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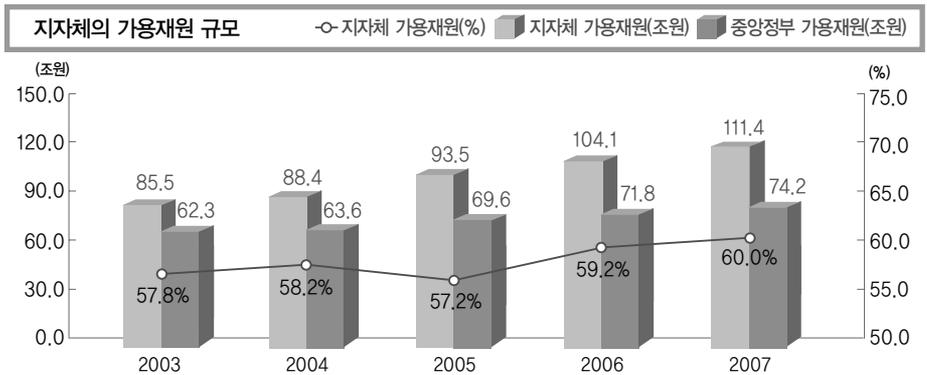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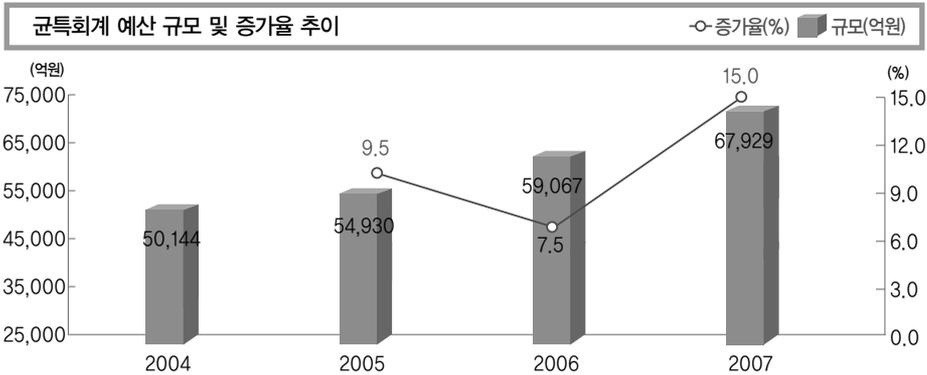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가용재원이 최대한 많이 투입되도록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낙후 지역의 지원사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역연구개발사업 등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는 2005년 9.5%, 2006년에 7.5% 증가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전년대비 15.0%나 크게 증가하여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율 8.0%(일반회계 기준)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의 자율성이 제고되었다. 국가 전체 재원 중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2003년 86조 원에서 2006년 104조 원, 2007년에는 111조 원으로 연평균 6.8% 증가하여 중앙·지방 간 가용재원 비율이 2003년 42:58에서 2006년에는 41:59, 2007년에는 40:60으로 지방의 비중이 2%포인트 이상 상승하였다.

이처럼 가시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투입요소 이외에 비가시적인 투입 성과도 수없이 많다.

예를 들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균형발전정책을 총괄하게 한 것,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여 균형발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한 것, 전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 관련 정부부처에 균형발전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는 것, 대통령 주재 전국 시도지사회의를 개



※ 지방 가용재원 : 지방 이전재원(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및 지방세

최하여 주요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협의하는 것, 지역혁신협의회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 등은 모두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참여정부가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폭넓게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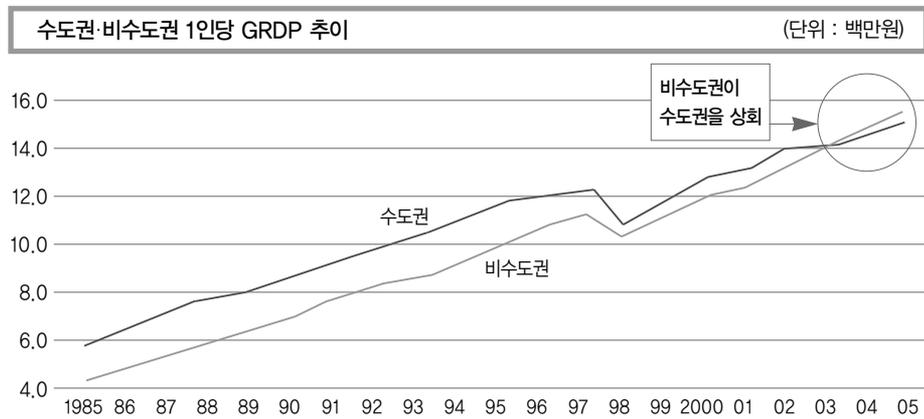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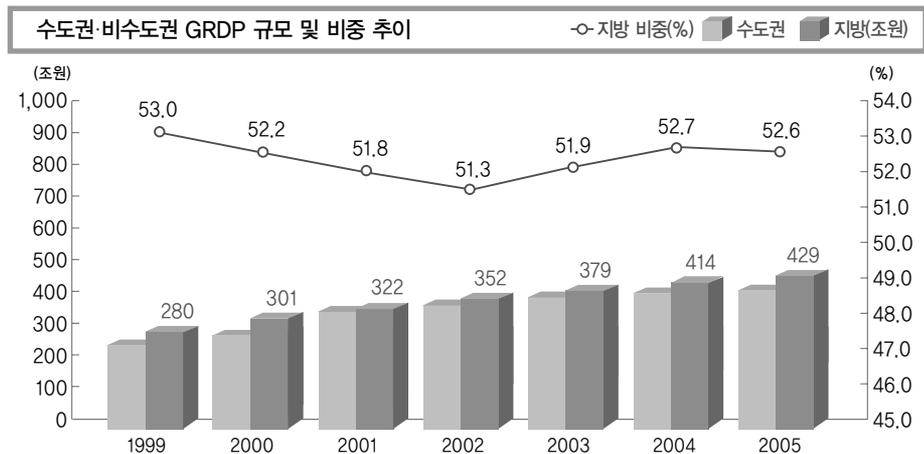
한편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구축이라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성상 실질적인 산출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지만,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지방의 투자, 고용, 소득, 재정자립도 등을 측정하면 산출 부문의 성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지역별로 이러한 자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가용한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부문의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지역 내 총생산(GRDP) 개선

그동안 축소되어 오던 비수도권의 GRDP 비중이 2003년부터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비수도권의 GRDP 비중은 1999년 53.0%에서 2002년에 51.3%로 축소되었으나, 2005년에는 다시 52.6%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GRDP도 2004년부터 지방이 수도권을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수도권의 1인당 GRDP를 100으로 볼 때, 비수도권의 1인당 GRDP는 2004년 101.1, 2005년 101.4를 기록하였다. 소득의 동태적인 흐름으로 볼 때, 비수도권의 GRDP 증가세가 수도권에 비해 빠르다고 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경제여건이 더욱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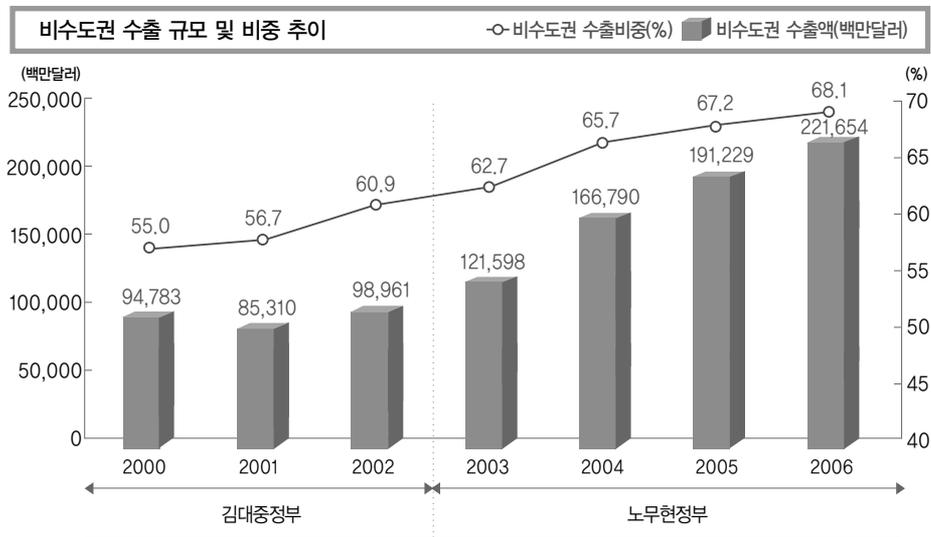
지방의 GRDP 비중이 상승한 것은 참여정부 이후 지방 제조업이 생산성 증가와 더불어



어 호조를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지방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0~2002년 3년간 6.4% 증가하였으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3~2005년 3년간은 10.2%나 크게 증가하여 수도권 지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6.0%를 크게 웃돌았다. 물론 비수도권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자동차, 조선 등 지역 장치산업의 경기호조와 구조조정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지역 제조업의 생산성이 이처럼 큰 폭으로 상승한 데에는 지역의 혁신기반이 확충되고 혁신 분위기가 확산된 데 따른 효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산학협력 활성화 등의 정책을 강화한 것이 이러한 지역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

수도권·비수도권 제조업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단위 : %)		
구분	2000~2002	2003~2005
수도권	7.1	6.0
지방	6.4	10.2

수도권·비수도권 제조업생산 연평균 증가율 (단위 : %)		
구분	1999~2002	2003~2005
수도권	6.5	5.8
지방	5.8	12.0



가된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함께 지방 제조업 생산도 2003~2005년 3년간 연평균 12% 상승하여 1999~2002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5.8%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수도권(5.8%)과 대비하여서도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수출의 경우도 비수도권의 수출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17.5% 증가하여 전국 대비 수출비중이 2001년 56.7%에서 2005년에는 67.2%, 2006년에는 68.1%로 크게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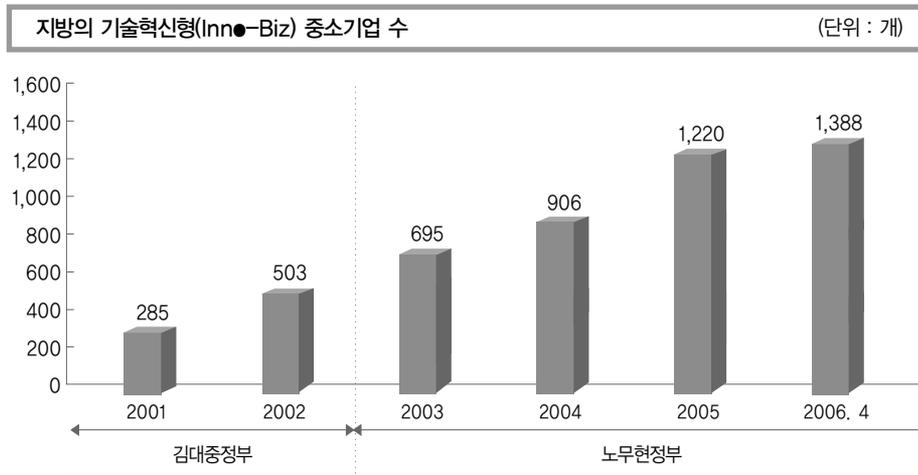
2) 기업이전 증가 및 수도권 인구유입 감소

한편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 강화로 2004년 중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수가 2003년 대비 198%나 늘어났다.

지방기업 수의 변화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2년 503개이던 지방의 관련 기업체 수는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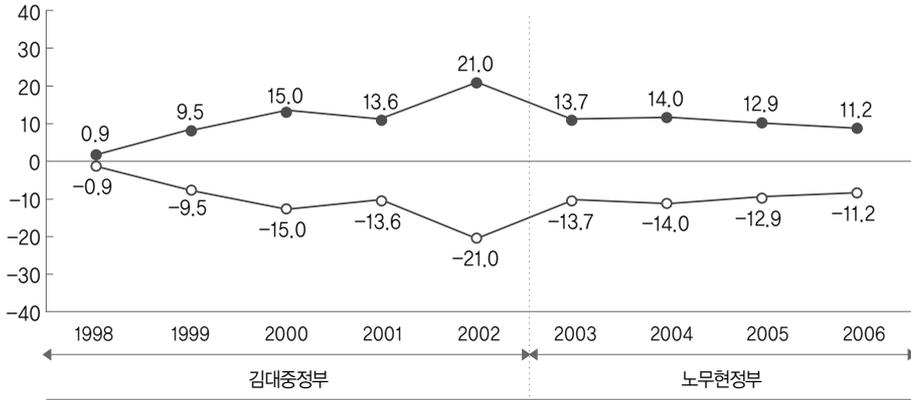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이전기업수	86	149	162	135	267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200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순유입 규모 추이

● 수도권 ○ 비수도권 (단위: 만명)



을 기점으로 완전히 증가하여 2006년 4월 현재 그 수는 1,388개에 이르고 있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주도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의 육성이 중요한 전제라는 점을 유념할 때 지방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증가는 미래의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여건 개선으로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입 규모가 2003년 이후 축소되고 있다. 2002년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21만 명이 이동하였으나, 2006년에는 11만 2,000명 수준으로 순유입 규모가 감소하였다. 물론 현 시점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 추세가 완화되고 있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로만 단정할 수 없으나, 지방의 GRDP 증가, 제조업 부문의 생산 및 고용 증가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절 정부혁신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정부혁신은 한국 경제와 사회, 정치 등 사회 각 분야에 있어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질적 전환을 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과거 정부는 집권 초기 조직개편, 공무원 감축 등 일회성 개혁에 치중했다. 그 결과 단기적 성과는 있었지만, 지속적 정부혁신을 위해 필요한 국정운영시스템, 업무처리 방식, 공

직 문화 및 행태 등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는 미흡했고,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경쟁력은 담보상태에 머물렀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등 모든 주체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모든 주체가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선진혁신국가를 건설할 것을 국가혁신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만족을 주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정부’를 정부혁신의 비전으로 설정해 추진하였다.

1. 전자정부

참여정부는 정부혁신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 투명성 등에서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이 있었고,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혁신의 영역도 중앙부처·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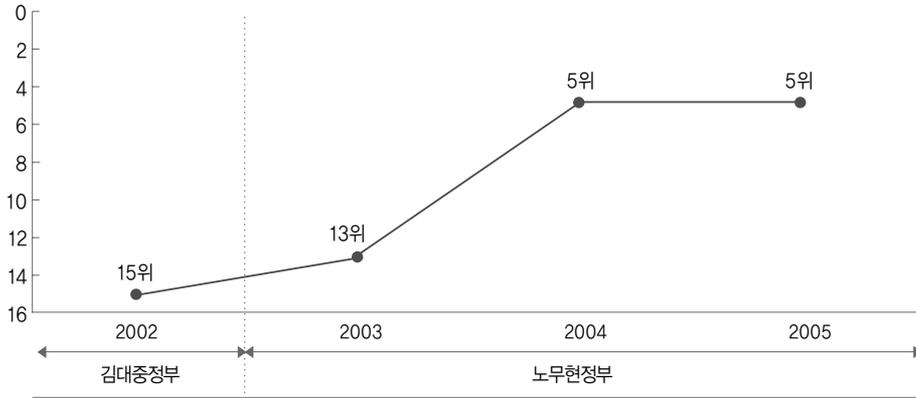
제6차 세계포럼의 성공으로 혁신 분야 선도국가 위상을 확보하였으며, OECD 정부혁신아시아센터, UN 거버넌스센터 등이 국내에 설립되어 국제적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 특허청 특허넷, 행자부 정부혁신지수(GII) 등이 유엔 등에서 수상하기도 하였다. 혁신의 기반이 되는 전자정부 수준은 세계 일류로 평가되었다.

특히 정부혁신의 결과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게 되었다. 팀제, 고위공무원단제 등 성과중심제도를 확산하였으며, 온라인 정부업무관리 시스템 등 전자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나라장터 등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청와대도 과거와 같은 종이보고 시스템을 탈피해 쌍방향 결재 시스템인 이지원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대민서비스 분야에서도 전자정부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이 서비스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봉사하는 정부를 지향하였다. 수출입 통관시간 단축 등 더욱 빠르고 편리해진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입영일자·부대선택제도 등 국민과 고객 입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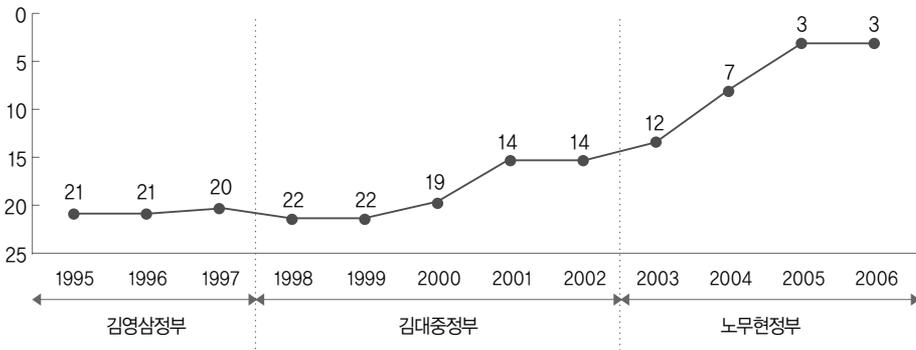
유엔 전자정부 수준 평가

(단위 : 순위)



국가정보화 순위

(단위 :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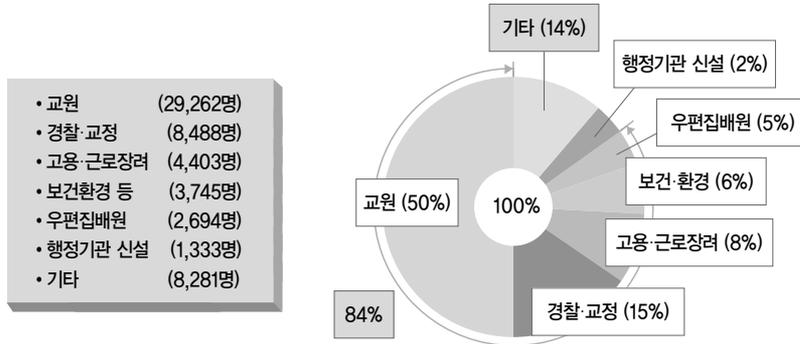


자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정보화 백서』 각 연도
 1998년 이전 순위는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2. 봉사하는 정부

참여정부는 규제는 작고 서비스는 큰 정부를 지향하였다. 일부에서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큰 정부라고 비판하지만,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가는 대민서비스 확충을 위해 불가피하였다. 참여정부 기간 중 증원된 국가공무원 58,206명 중 약 84%는 교육, 치안,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서비스 분야 인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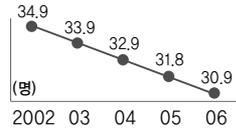
대국민서비스 분야 공무원 비율



- 교원 (29,262명)
- 경찰·교정 (8,488명)
- 고용·근로장려 (4,403명)
- 보건·환경 등 (3,745명)
- 우편집배원 (2,694명)
- 행정기관 신설 (1,333명)
- 기타 (8,28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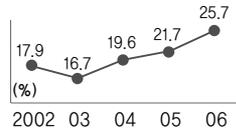
교원

- 초등 학급당 학생수 감소 (34.9명→30.9명), 교육의 질 제고 < 미국 23.1명 / 영국 24.3명 / OECD 평균 21.4명 >



고용지원

- 실업자 취업률 향상 (17.9%→25.7%), 고용기회 확대 ※2,411명 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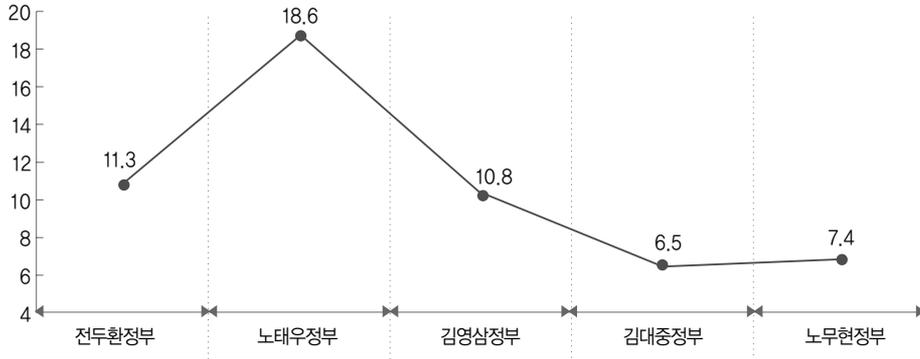


대민서비스 분야 공무원 증원의 결과는 대국민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 교원수의 증가는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감소로, 고용지원인력 증가는 실업자의 취업기회 확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증원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가율은 외환위기 기간 중 인건비가 삭감된 특수한 경우인 국민의 정부보다는 약간 높지만, 어느 정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일하는 방식에서의 혁신도 계속되었다. 소방방재청의 ‘재난복구지원금 원스톱 시스템’도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관행을 바꾼 대표적 사례다. 소방방재청은 7개 부처에 분산된 재난지원금 처리업무를 1개 부처 전담체제로 바꾸고, 피해복구비 산정을 전산화하여 복구지원금 처리기간을 90일 이상에서 20일로 대폭 단축시켰다.

정부별 연평균 인건비 증가율

(단위 : %)



자료 : 기획예산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주 :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증가율은 일반회계상의 자료임.

3.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참여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였다. 부패공직자 기소인원이 감소하는 등 공직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D)을 구축하였다. 또한 업무추진비 공개 등 기록관리·정보공개 확대로 유리알 같은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결과 국가청렴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조사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2002년 6.43점에서 2003년 7.71점, 2004년 8.38점, 2005년 8.68점, 2006년 8.77점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대표적 투명성지수라 할 수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도 2003년 세계 50위(133개국 중), 2004년 47위(146개국 중)에서 2005년에는 40위(159개국 중)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들어 42위(163개국 중)로 일시적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커다란 진전을 보인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분권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 권한 이양에 맞춘 지방재정이 내실화되고 있다. 팀제·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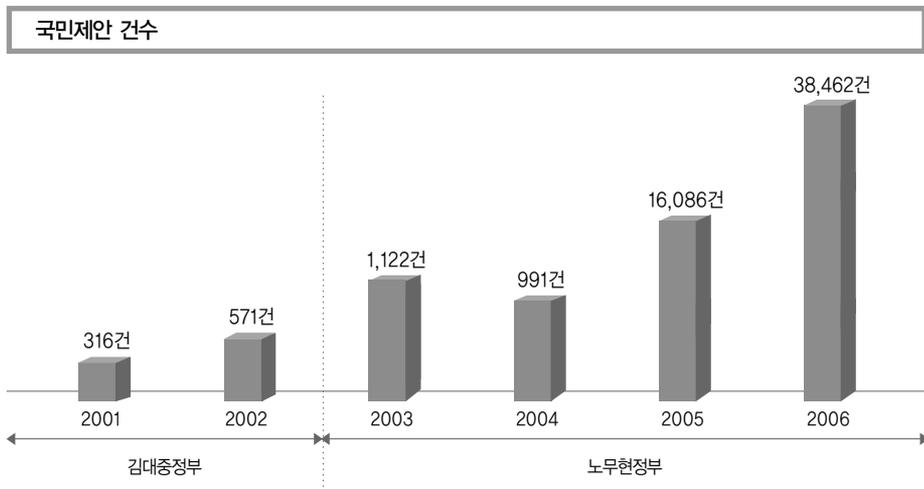
인건비제 도입, 조직과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 Top-down 예산편성 등 자율과 책임의 재정운영방식 정착 등을 통해 유연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키는 분권화된 정부운영방식이 정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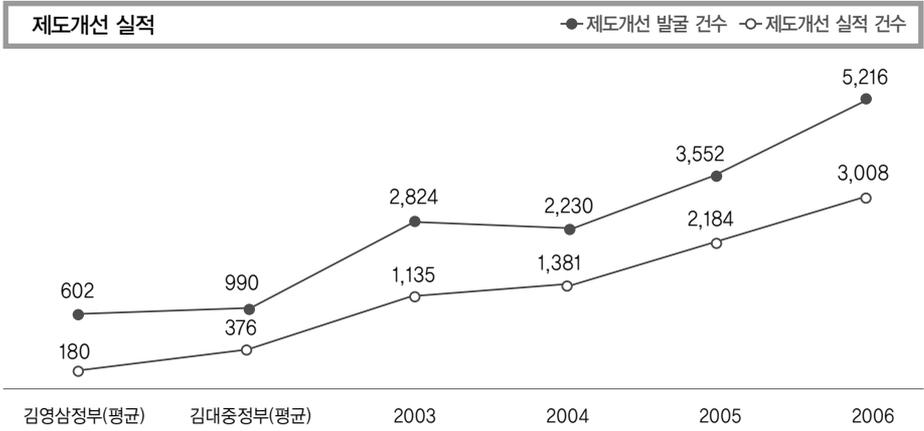
4. 함께하는 정부

‘참여마당 신문고’ 구축(2005. 3), 편리하고 다양한 참여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제안이 대폭 증가하는 등 국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정부를 달성하고 있다. 주민투표제(2004. 7), 주민소송제(2005. 1) 도입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고객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국정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마당 신문고’ 개통을 통해 국민제안, 고충민원, 국민참여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는 범정부적 온라인 통합 포털로서 2005년 4월 시범 개통되어 2006년 8월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되었다. 참여마당 신문고의 개통으로 국민제안건수가 2004년 991건에서 2005년 1만 6,086건 그리고 2006년 3만 8,462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국민제안을 국정에 적극 반영해 기준에 절차와 관행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던 것을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실천했다. 그 결과 2004년 1,381건, 2005





년 2,184건, 2006년 3,008건 등 제도 개선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노력 결과 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종합평가

1. 지표로 보는 참여정부

참여정부는 구정치 청산, 외환위기의 후유증 극복, 2만 달러 시대 개막 등 실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과거 정부들은 경제 성장이라는 단일 목표를 추구하면서 인권, 민주주의, 사회복지, 불균형의 해소 등과 같은 가치는 외면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탈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경제 성장 지속, 인권과 민주주의, 국민복지 증진, 계층 간·지역 간 불균형의 시정 등과 같은 복합적인 목표를 동시에 매우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권력기관의 자율화, 당정분리, 돈 안 드는 선거, 공직부패 일소, 특권 구조 혁파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크게 발전시켰다.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세계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등의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이루었다. 한편 과거의 요소투입형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주도형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투자 확대, 산학협력 활성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기술·산업 혁신정책과 인적자본 투자확대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참여정부 들어서 혁신주도형 성장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단기적이고 정치적인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전망하에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과거 정부와 달리 저출산·고령화 대책,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 발전, 2차 남북정상회담 등 다수의 중장기 국정과제를 추진해 왔다. 비전 2030은 그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한국 사회의 미래 발전에 큰 토대를 닦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전체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집권기는 선진국 도약을 위한 5년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10년 전 외환 위기로 인해 무너진 경제를 정상궤도로 올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측면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시켰다.

국제기구에서는 명시적인 선진국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다음의 4대 조건을 충족하면 선진국으로 인식한다. 우선 IMF 선진경제권(Advanced Economies)의 기준에 따라 선진국과 기타 신흥시장 및 개도국의 두 가지 범주로 국가를 분류하는데, 선진국의 범주에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5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두번째 기준은 OECD 회원국 기준이다. OECD는 일반적으로 '선진국 클럽'으로 불려 왔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2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세번째 기준은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여부로,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임기 말인 2007년 이를 달성하였다. 네번째 기준은 UNDP의 기준으로 고(高) Human Development Index의 지수가 0.8 이상인 국가를 고HDI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은 총 115개국 중 26위인 0.912를 기록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참여정부 5년의 성적표는 결코 나쁘지 않다. 근거 없는 경제위기설까지 제기됐으나 실제 수출, 외환보유고, 주가지수 등 경제지표는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뒤지지 않았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상대적으로 어려

경제성장률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3~2006 평균	2007(전망)
세계 경제성장률(IMF)	4.0	5.3	4.8	5.4	4.9	5.2
선진경제권(IMF)	1.9	3.2	2.5	2.9	2.6	2.5
기타 신흥시장 및 개도국(IMF)	6.7	7.7	7.5	8.1	7.5	8.1
한국 성장률	3.1	4.7	4.2	5.0	4.3	4%대 후반

※ 우리나라는 IMF 편제상 선진경제권(Advanced Economies)에 속해 있음

움을 겪었으나 차츰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 복지 관련 투자가 대폭 늘어났다. 특히 보육예산은 참여정부 들어 5배가 늘어났다. 투명성지수, 정치자유도, 언론자유도 등 각종 국제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참여정부 임기를 각종 지표와 통계를 통해 돌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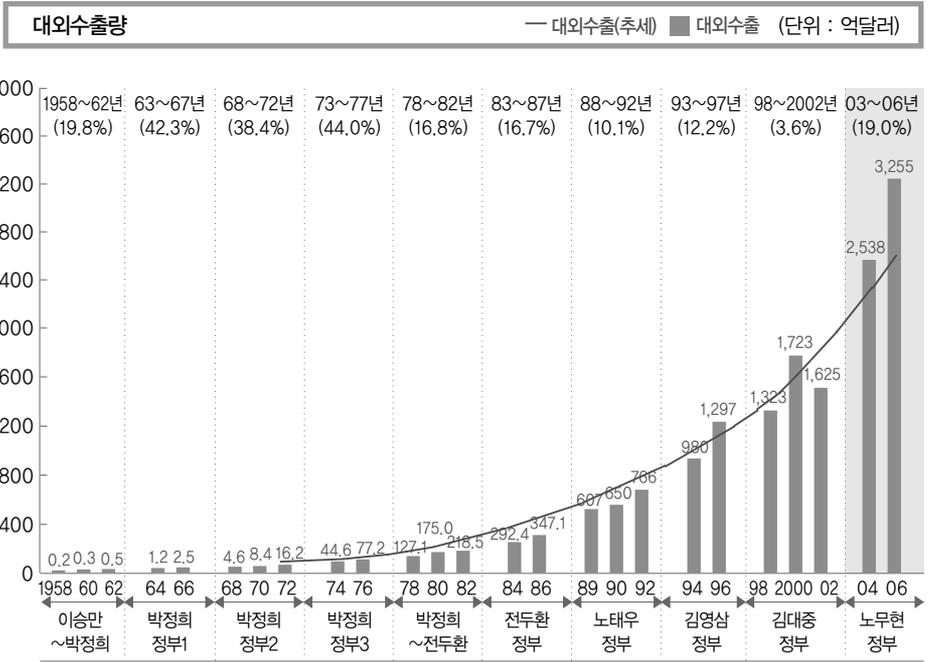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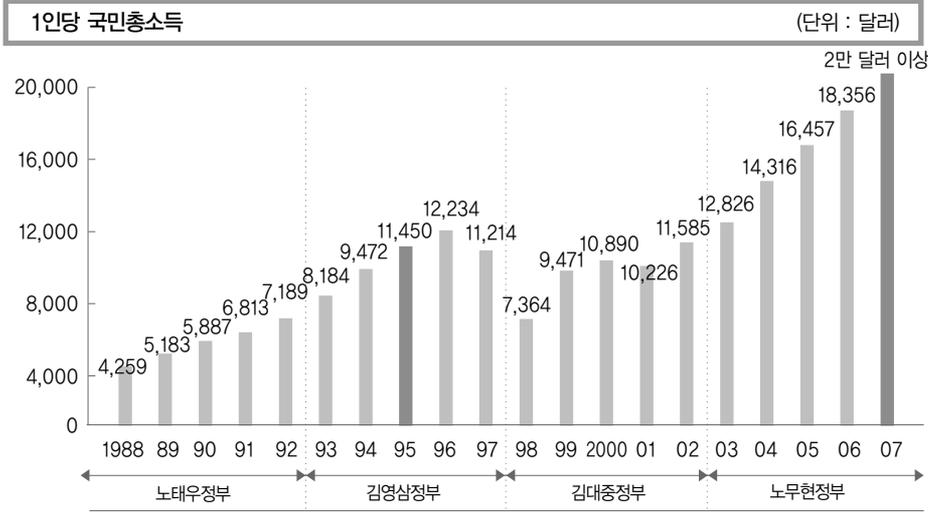
1) 경제 분야

(1) 경제성장률 4년간 평균 4.3% … OECD 최상위권

참여정부는 출범 첫해 카드사태 등 여파로 3.1%의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일관성 있고 안정된 경제 운용으로 2004년 4.7%, 2005년 4.0%, 2006년 5%를 기록하며 잠재성장률 수준(4.5~5%)을 회복했다. 4년간 평균 경제성장률(2003~2006)은 4.3%이다. 일부에선 과거 8~9%대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며 경제위기를 운운하지만 G7 국가들이 우리와 비슷한 소득 1만 5,000달러였을 때 기록한 성장률은 3.2% 정도였다. 또한 선진국(IMF 기준)의 2.6% 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30개 OECD 회원국 중 9위를 기록하였다.

(2) 1인당 국민소득 2007년 2만 달러 달성 전망

국민생활수준 지표인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2003년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해 2006년 1만 8,000달러대에 이르렀으며 2007년에는 2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11.6%로 문민정부 9.3%,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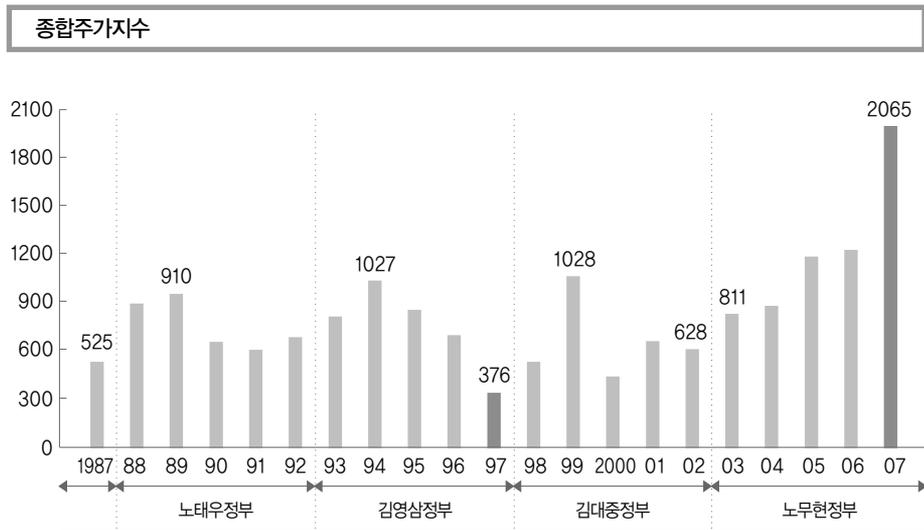
민의 정부 0.7%에 비해 높아졌다. 환율 때문이라는 인식한 평가도 있으나 원화가치의 상승 역시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증가 등 우리의 경제 체질 강화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환율보다는 경제 성장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3) 대외수출량 연간 3,000억 달러 돌파 ... 연평균 증가율 19.0%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원화절상의 부담 등 불리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수출량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해 2006년에는 사상 최초로 연간 3,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것은 연평균 19.0% 증가한 것으로 문민정부의 12.2%, 국민의 정부의 3.6%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또한 조선, 반도체,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4) 종합주가지수 2000 시대

종합주가지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 말 1379를 기록하여,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2007년에 들어서는 주가지수 2000시대를 열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비해 3배,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10배가량 높아진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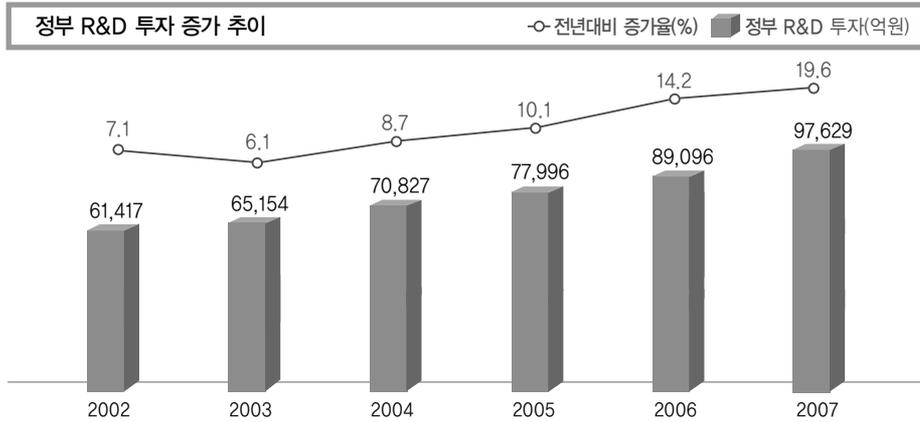


※ 연도 말 기준, 2007년은 10월말 기준 KOSPI지수

(5) 국가 R&D 투자 2배 가까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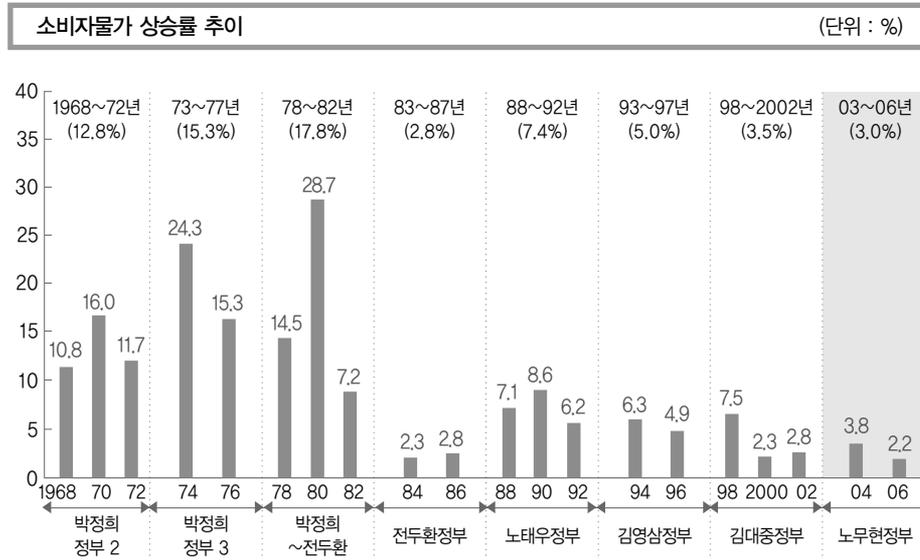
2002년 6조 원이었던 정부 R&D 투자규모가 10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는 연평균 10.6%씩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연평균 8.3%)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그 결

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한 과학·기술 경쟁력이 2003년 16위, 27위에서 2006년 12위, 6위로 대폭 향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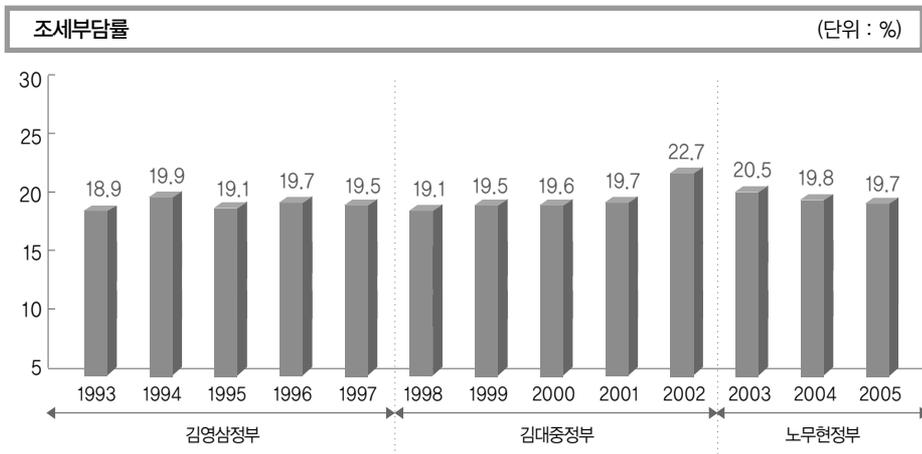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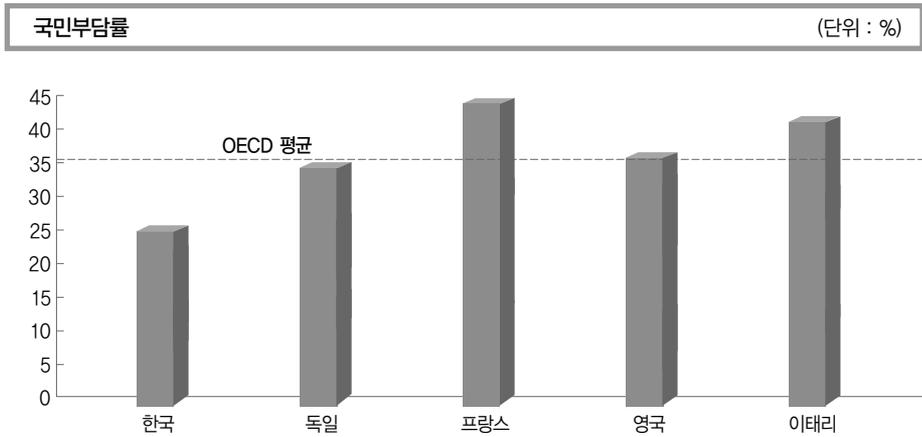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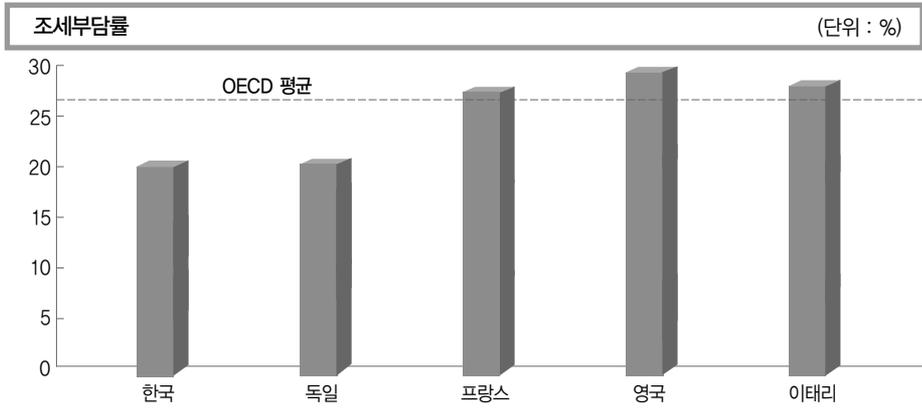


(6) 소비자물가 연평균 3% 이내 안정세 유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3% 이내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 : 통계청
주 : 괄호 안은 기간별 연평균 상승률임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주 : 조세부담률은 조세총액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출

(7) 조세부담률도 안정적으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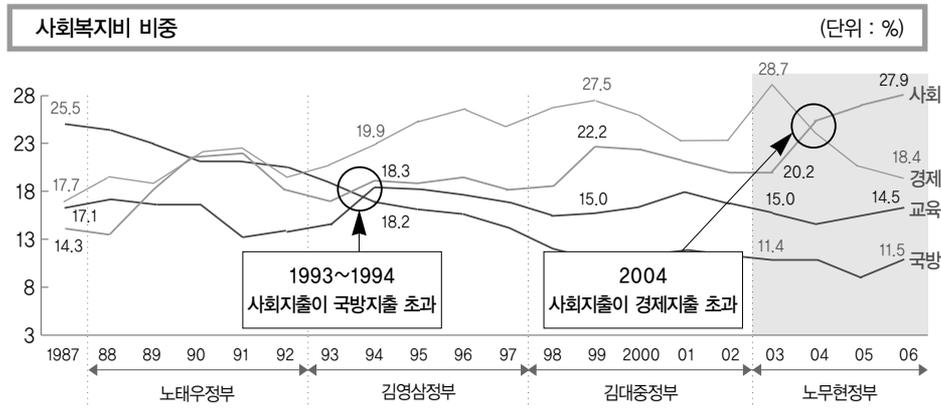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도 참여정부의 조세부담률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OECD 30개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26.9%) 및 국민부담률(36.2%)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조세부담률 26위, 국민부담률 29위)이다. 조세부담률 증가속도도 2000년(19.6%)부터 2006년(21.2%)까지 총 1.5%p 증가하여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2) 사회·복지 분야

(1) 참여정부는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사회지출을 대폭 확대

양극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나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각 부문의 양극화가 상호작용하면서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국정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사회지출을 대폭 확대하였다. 사회지출이 매년 20% 증가(일반예산 증가율 11%의 2배)하였으며, 사회지출이 전체예산의 28%로 정부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은 1998년 5.5%에서 2005년 7.3%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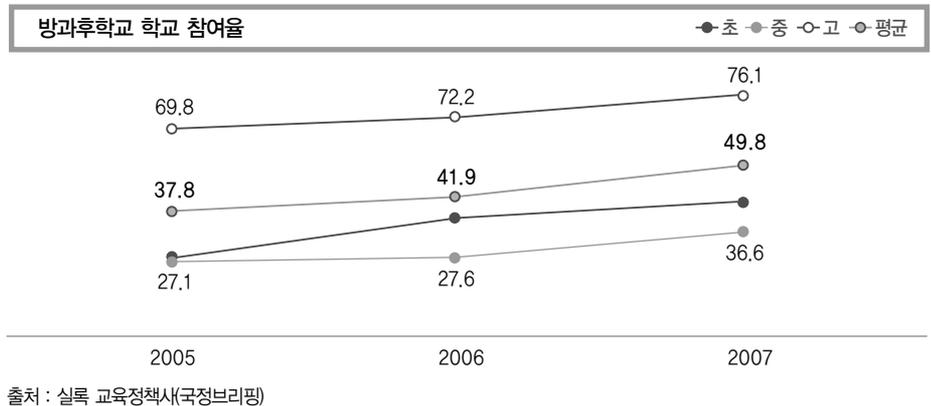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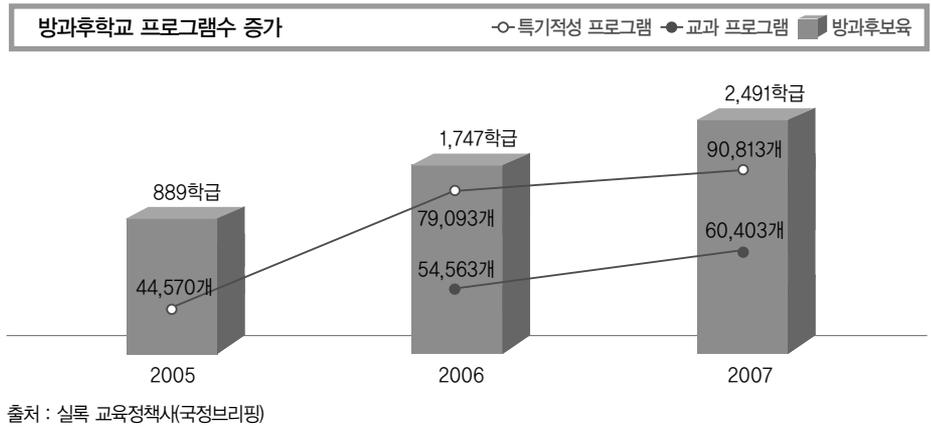
아울러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도입, 국민연금 개혁 등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보장 소득을 강화했음에도 2007년 9월 말 기금자산은 216조 원으로 참여정부 출범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2) 보육예산을 5배 증가시키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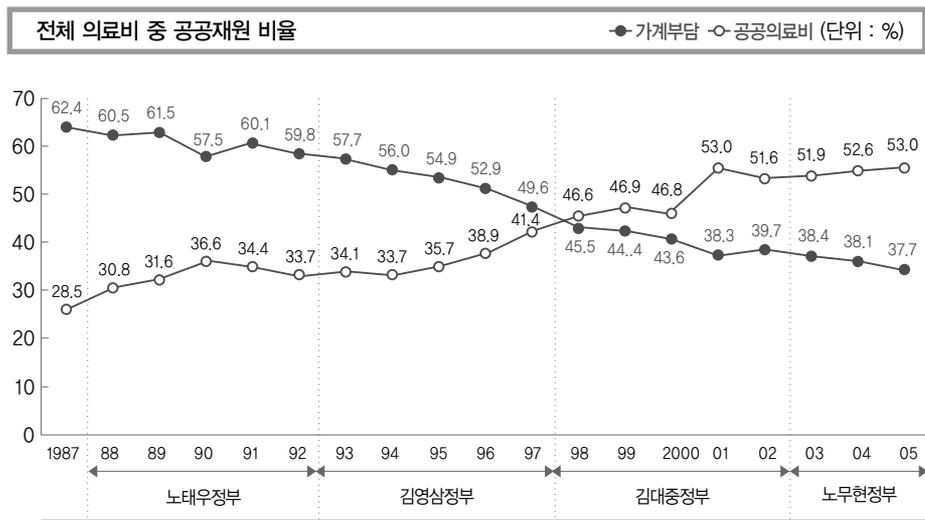
보육예산은 2002년 4,000억 원에서 올해 2조 원을 넘겨 참여정부 들어 5배가 증가했다. 보육료 혜택을 받는 아동도 19만 명에서 77만 명으로 4배가 되었다. 2007년 출산율이 상승세로 반전된 것은 이 같은 참여정부의 보육정책과 무관치 않다.

한편 교원평가 등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틀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사교육비 경감대책(2004. 2)과 사교육 의존도 완화방안(2007. 3) 등을 수립·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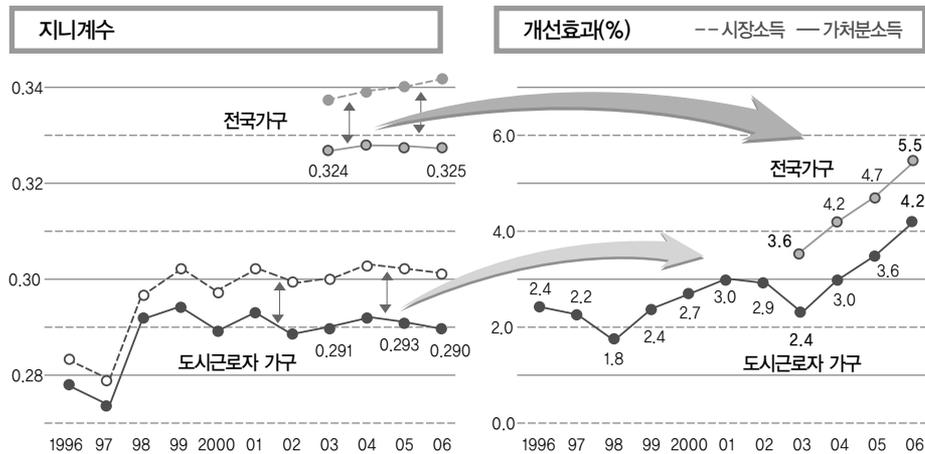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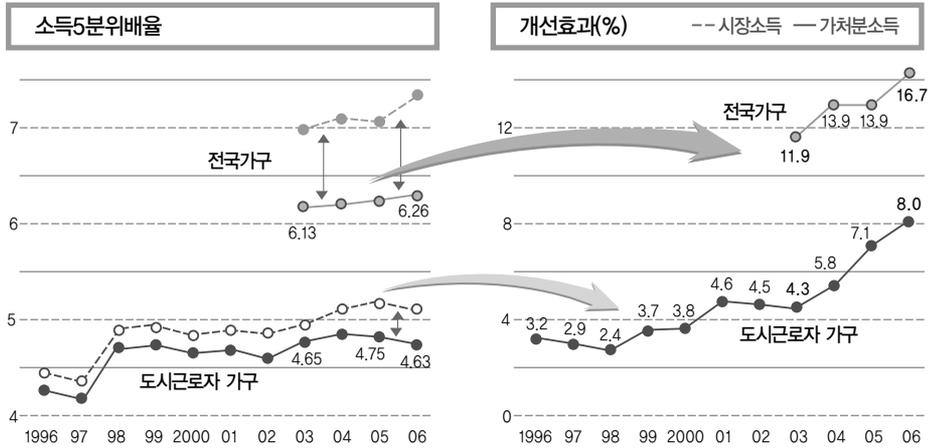
(3) 건강투자 확대 ... 공공의료비 비중 문민정부의 2배

보건의료 관련 국가재정, 의료급여 등을 포함하는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문민정부와 비교해 볼 때 2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2004년 49%에서 2006년 71%까지 늘었고, 백혈병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1/3로 줄었다. 한편 건강보험의 질병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을 1987년 28.5%에서 2006년 46.3%까지 늘렸다.



(4) 지니계수 소폭 감소 ... 소득분배개선률 4.0% →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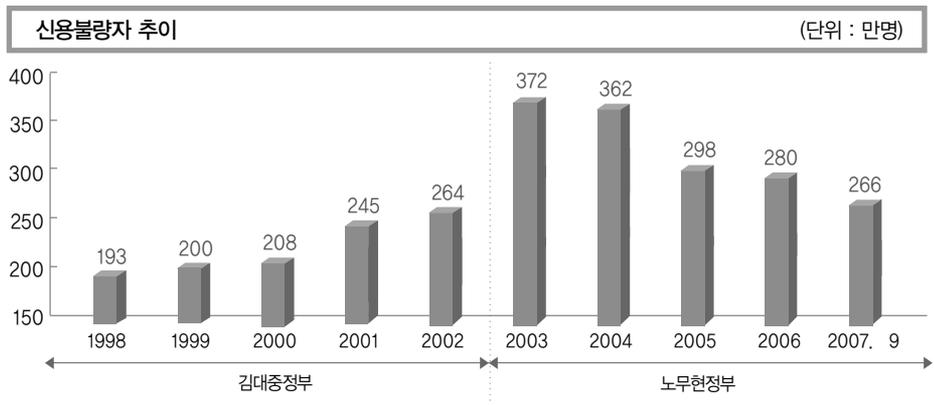


특히 참여정부 들어 전국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의 실제 소비지출과 관련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배율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니계수 개선 효과가 2003년 3.6% → 2006년 5.5%로 증가하였다.

한편, 소득5분위배율 개선효과도 2003년 11.8% → 2006년 16.7%로 크게 증가하였다.

(5) 신용불량자 372만 명에서 283만 명으로 90만 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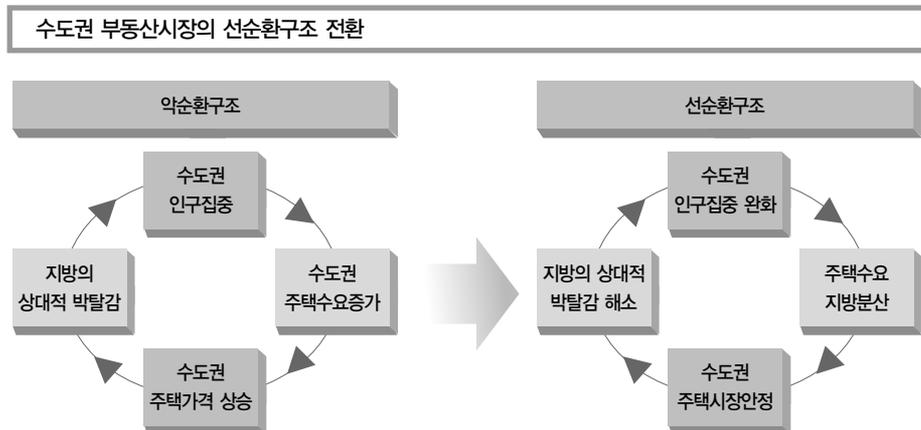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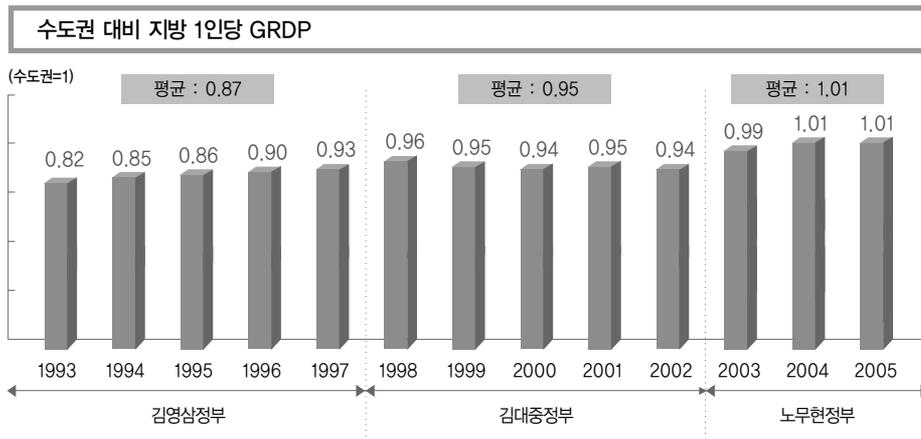
2002년 신용카드 남발로 개인 신용불량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372만 명을 기록했다. 이에 참여정부는 개인워크아웃제도 등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도입한 결과, 2007년 9월 현재 110여 만 명이 줄어든 266명으로 감소해 안정적인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6)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지방이 수도권 앞질러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 비율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4년부터 수도권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전체 수출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60.9%에서 2005년 67.2%로 증가하는 등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향후 균형발전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그 효과가 가시화되면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것이다. 더욱이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 확고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3) 정치·행정 분야

(1) 국가투명성 상위 25%, 국가정보화지수 3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투명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02년 상위 39%에서 2005년 상위 25%로 높아졌다. 국가청렴위원회가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지수도 2002년 6.43에서 2006년 8.77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반면에 금품향응 제공률은 2003년 3.5%에서 2006년 0.7%로 낮아졌다.

국가의 정보화 수준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정보화지수는 참여정부 들어 꾸준히 상승하여 세계 5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유엔이 매년 191개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부 준비지수도 2003년 13위에서 2004년, 2005년 연속 5위를 차지했다.

(2) 교원, 경찰, 집배원 등 대국민서비스 분야 공무원 증가

2006년 12월 말 현재 국가공무원은 총 59만 169명으로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1만 3,946명 증가했다. 교원, 경찰, 집배원, 검역특허심사 등 기타 서비스 분야 공무원이 4만 3,702명 증가한 반면, 철도청 공사화로 총 2만 9,756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가 2002년 35.2명에서 2006년 32.9명으로 감소했고, 경찰은 2교대에서 3교대 근무를 하게 됐다. 특허심사 대기시간도 2002년 22.6개월에서 2006년 9.8개월로 줄어드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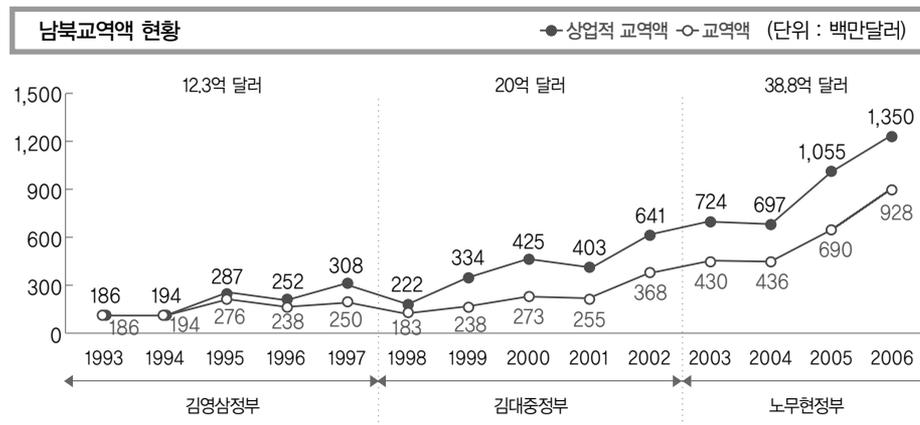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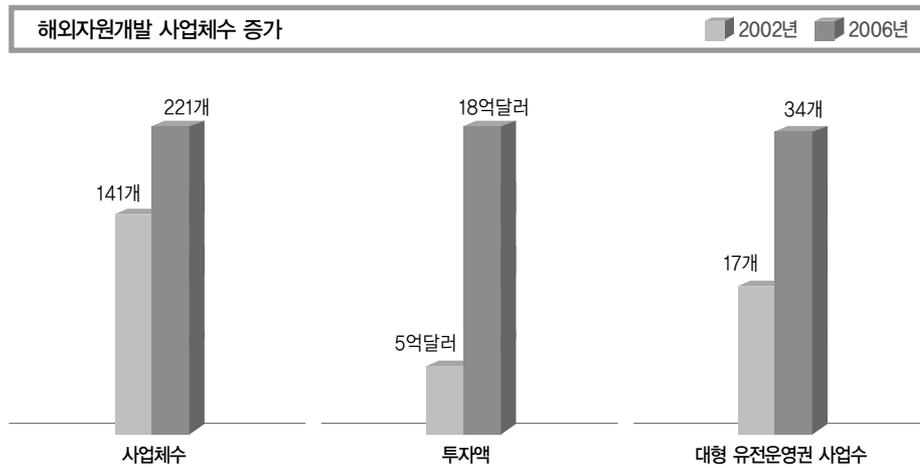
(3) 대통령 공식일정 3,328회, 회의 주재만 753회 … 국정전반 꼼꼼히 챙겨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말까지 총 3,328회의 공식일정을 수행했다(2006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4회의 공식일정을 소화했다. 2003년에 1,269회로 공식 일정이 가장 많았으며 2004년 793회, 2005년 658회, 2006년 608회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공식일정 횟수는 다소 줄어들었다. 특히 역대 정부에 비해 접견 등의 행사보다 국정과제회의 등 각종 회의 주재의 비중이 753회로 가장 높았다.

4) 외교 · 안보 분야

(1) 4년간 40개국 방문, 자원외교에 집중...88억 배럴 추가 확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23회에 걸쳐 40개국을 방문했다. 거리로 치면 43만km로 지구 10바퀴 반을 돈 셈이다. 이 중 에너지 · 자원 협력을 주목적으로 방문한 국가만 17개국이다. 그 결과 추가 확보한 석유 · 가스 매장량이 88억 배럴(추정)로 참여정부 이전 52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로 늘어나 자주개발 확보자원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 해외자원개발 투자액 1조 원 돌파 ... 사업체수도 급증

2002년 5억 달러에 머물던 해외 자원개발 투자액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에너지·자원 외교의 성과로 2005년에 최초로 1조 원(11억 1,000달러)을 돌파했고, 2006년엔 18억 달러에 이르렀다. 사업체수도 크게 증가하여 2002년 141개이던 사업체수가 2006년 221개로 늘어났으며, 대형 유전개발 운영권 획득 보유사업수도 2002년 17개에서 2006년 34개로 두 배로 늘었다.

(3) 남북교역 연간 10억 불 넘어 ... 인적왕래도 한해 10만 명 시대

참여정부 4년간 남북한 교역액은 총 38억 3,000달러로 국민의 정부 5년보다 2배 가량 증가하였다. 2005년부터는 남북 인적 왕래도 급증하여 4년간 총 23만 2,886명이 오갔다. 2006년 한 해 왕래한 숫자만 10만 명 이상이다.

2. 미래 과제

참여정부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환경의 변화와 도전과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첫째, 세계 경제의 통합과 국제적 공조화 증대 현상을 들 수 있다. 세계화 과정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이 증가해 금융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고, 세계적 자본의 국경을 초월한 경쟁으로 공공 인프라, 조세감면과 서비스 개선 등 재정 지출 증가와 공공 부문의 효율성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둘째, 유럽, 일본, 미국의 약화와 브릭스(BRICs) 및 아시아 경제권의 부상을 들 수 있다. 이웃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등 새로운 신흥 강국이 부상함에 따라 세계 경제권이 동양 경제권으로 이동하면서 유동적인 다극화 시대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브릭스의 성장은 확대되는 신흥시장에 대한 적극적 접근방안과 기간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의 도전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셋째,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소위 NBIC융합기술이라고 불리는 나노기술(NT), 생명과학기술(BT), 정보기술(IT), 인지과학기술(CT) 등

은 상호 융합을 통해 향후 새로운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간과 공공 부문을 아우르는 국가적인 산업기술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대내적으로 잠재성장률의 경향적 하락 현상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8.6%, 1990년대 6.3%, 최근 4%대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투자증가율 둔화 등으로 2020년대 2~3%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섯째, 양극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긴장이 증대하고 있다. 경제 주체의 적응능력 격차로 인한 산업·고용·소득 등 전 부문에 걸친 양극화 현상은 단순히 과거와 같은 성장위주의 거시경제 관리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양극화는 세계화와 중국 부상 등 글로벌 추세에 기인한 바도 있으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정책 대응상의 문제점이 노정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등 중간자본재 산업을 육성하고, 과다한 자영업자 비중을 줄여 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소득격차와 인적자원 투자격차의 확대에 의한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노령인구가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와 저축률 하락, 복지재원 수요 확대에 성장 동력을 잠식하게 된다.

일곱째, 남북관계 등 불안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은 빠른 속도로 세계 경제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중국이 민주적인 체제 전환에 성공할 경우 동북아는 미국의 영향력이 감퇴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등 세력균형이 다극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테러나 질병, 환경과 재난 등에 대한 역내 국가 간의 공동 대응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혁신주도형 경제, 사회투자 국가 등 동반성장 전략을 통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도록 하여 양극화와 저성장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평화번영 기조와 능동적 개방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금융·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참여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이 추진되어야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리라 전망한다.



2

노무현 대통령 발언록

1

민주주의

1. 민주주의 총론

• 민주주의 그 위대함에 대하여

저는 사상의 완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모든 사상은 소중하지만, 모든 사상은 완결성을 인정할 때 절대주의가 되고 사람에게 대한 지배와 속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상은 인정하지만, 절대적인 사상은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사상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존중할 만한 사상이 있다면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자기 이론의 근거, 자기 가치의 근거에 대해서 스스로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저 관념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로서 업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오찬에서 2006. 12. 28)

• 성숙한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참여정부의 실적은 인정하면서도 참여정부가 경제에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경제와는 별개라는 생각은 전제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야 사회적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 자본이 충실하게 됩니다. 지식과 문화가 경제의 핵심요소가 되는 시대에는 자유와 창의가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자유와 창의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곳에서 꽃이 핍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또한 민주주의의 속성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민주주의는 인간의 행복·존엄을 중심에 놓고 있는 사상

왜 민주주의인가?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따지고 보면 다 알지를 못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읽어 보면 소설보다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볼수록 더욱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이치도 알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씹을수록 더 맛이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인가? 자유, 평등, 인간의 행복, 인간의 존엄, 이것을 중심 가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상이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이후 1919년에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신분과 계급에 의한 지배구조에 근거한 특권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자본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뭐냐? 신뢰, 원칙, 연대, 개방, 이런 개념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2000년에 브라질에서 세계경영경제학회가 모여서 경영·경제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사회적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회적 자본이 충분한 나라, 높은 나라가 경제와 경영에 성공한다, 이런 이론을 내놨습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신뢰와 원칙, 규범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 사회의 역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대는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공존과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사상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모두 포섭하고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입니다. 다원적인 가치와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집단을 이루어 분파를 만들고 투쟁과 타협으로 분열을 극복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사상입니다. 관용이 없는 사회는 사생결단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제의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주의 또는 극단적 사상으로는 상대방을 억압하고 배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동체 속의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가장 훌륭한 통합의 기술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참가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야말로 상생의 정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정통성을 통한 권력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정당한 권력은 정통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정통성이 없는 권력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바로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 제도에 의해서, 국민 주권 사상에 의해서, 그리고 대의제도에 의해서 자기 지배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서 권력은 항상 사유화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민주주의는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 났습니다.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 권력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법치주의, 권력의 분립과 견제, 사법권의 독립, 적법 절차, 이런 제도를 준비해 놓고 있지요.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원광대 특강에서 2007. 6. 8)

2. 민주세력 무능론에 대한 반론

• 이 나라 민주세력이 누구보다 무능하다는 말인지 묻고 싶어

요 근래 와서 ‘민주세력이 무능하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가, 이른바 수구진영, 수구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민주세력이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진보적 관점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진보적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해 놓은 것이 없다, 국민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충족시키질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실용적 관점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무능했다, 이렇게 고백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이론입니다.

(참여정부 4주년기념 국정과제위원회 합동심포지엄 특강에서 2007. 1. 31)

요즘 다시 민주주의의 역사를 냉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주세력이 무능하다거나 실패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세력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 민주세력이 누구보다 무능하다는 말입니까? 언제와 비교해서 실패했다는 얘기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군사독재가 유능하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5·18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에서 2007. 5. 18)

• 민주정부 아니고는 거둘 수 없는 성과, 민주세력이 이룬 성취

평화주의를 확실한 대세로 굳혀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오랜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화해와 협력의 길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군사요충지였던 개성공단이 한반도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끊어졌던 남북한의 철길도 어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격스럽게 열렸습니다. 이렇게 가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더욱 굳어지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관계가 일방적인 의존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협력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주국방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여전히 견실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이렇

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정부가 아니고는 결코 거둘 수 없는 성과입니다. 민주세력이 이룬 성취입니다. 민주세력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깎아 내리지 맙시다. 역사의 가치를 함부로 폄훼하지 맙시다. 지금 이 시간에 민주, 반민주 편을 갈라서 서로 혈뜬고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평가 받아야 될 역사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 받아야 될 역사적 세력이 그렇게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께 그리고 희생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5 · 18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에서 2007. 5. 18)

3. 민주주의 3단계론

• 민주주의 1단계 과제 - 반독재투쟁

150년 전, 우리는 근대화의 흐름을 놓쳐 버렸습니다. 그 결과 참혹한 식민지 시대를 겪었습니다. 해방 이후 시대,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는 민족의 통합과 자주독립국가의 건설, 그리고 민주주의와 경제건설입니다. 경제의 건설은 일찍 시작되었으나 민주주의는 여러 차례 좌절하고 독재에 짓밟혔습니다. 독재시대의 과제는 반독재 투쟁이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민주주의 2단계 과제 - 투명 · 공정사회 구축과 지역구도 통합

19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6월 항쟁 이후 시대의 과제는 독재체제에서 구축된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의 유착구조를 해체하고,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지역 간의 분열구도를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의 2단계 과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민주주의 3단계 과제 -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정착

그 다음 시대의 과제는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과 타협이 일상화되고, 연정, 연합정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6월 항쟁으로 보는 민주주의 3단계론

1단계 - 6·10민주항쟁은 국민이 승리한 역사입니다

6·10항쟁은 국민이 승리한 역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에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할 만한 많은 투쟁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는 이들을 엄숙하게 기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주저 없이 승리한 투쟁으로 말할 만한 역사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6·10항쟁은 승리했습니다. 항쟁 이후 20년간, 우리는 군사독재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 내고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킴으로써 6·10항쟁을 승리한 역사로 주저 없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역사는 소중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고, 그 위에 새로운 역사를 지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10의 승리는 축적된 역사의 결실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많은 항쟁의 역사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전제왕권의 학정에 맞섰던 민생·민권 투쟁,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던 수많은 민족독립 투쟁, 그리고 군사독재에 맞선 꾸준한 민주주의 투쟁들이 그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수많은 좌절을 통하여 가슴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을 키우고, 역량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의미 있는 좌절은 단지 좌절이 아니라 더 큰 진보를 위한 소중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 항쟁의 승리를 보고 일시적인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 당장의 성공에 급급하여 대의를 버리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서 2007. 6. 10)

2단계 - 6월 항쟁은 국가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6월 항쟁은 그 역사적 의미로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우리 경제는 개발 연대의 요소투입형 경제를 넘어 지식기반 경제,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세계와 경쟁하여堂堂하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총생산은 1987년 세계 19위에서 2005년 12위로 상승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63위에서 48위로 상승하였습니다. OECD 국가 중에는 24위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경제 지표는 우리 경제가 1987년 이후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관치경제, 관치금융을 청산하여 완전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그 위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유와 창의로 경쟁할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6·10항쟁의 승리와 정권교체, 그리고 지난 20년간 꾸준히 이어진 청산과 개혁이 없었더라면 이룰 수 없는 성과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IMF로 인한 1997년 이후의 우리 경제의 지체를 빌미로 민주세력의 무능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의 염치없는 중상모략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에 관하여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서 우리 한국이 단지 경제에만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성공한 나라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통성을 가진 지도자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나라의 위상도 높인다는 사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서 2007. 6. 10)

3단계 - 주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자명합니다. 나머지 절반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수구세력에게 이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지역주의를 부활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주의를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후진적인 정치제도도 고쳐서 선진 민주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선진국다운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언론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남은 개혁의 과제입니다.

주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지도자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시민, 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해 낼 것이 없는 우리 국민입니다. 20년 전 6월의 거리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지역주의와 기회주의를 청산하고 명실상부한 민주국가, 명실상부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 갑시다.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서 2007. 6. 10)

4. 민주주의 2단계 완성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

• 정경유착 뿌리 끊은 대선자금 수사

대선자금의 수사로 부정한 정치자금의 고리를 철저히 파헤쳐 돈 선거의 뿌리를 끊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차떼기 같은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부끄럽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참고 해 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총선은 사상 유례가 없는 투명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선거 관련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최고 수준의 평점을 받을 만큼 선거문화가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국민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난 권력기관

권력기관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권에 봉사하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정보원은 본연의 국가안보와 산업기술의 보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 뒷조사, 도청은 없을 것입니다. 국세청이 나서서 정치자금을 거두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군, 경찰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량한 국민들이 권력기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권력도 줄었습니다. 당의 인사나 공천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도, 국회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대권은 없습니다.

이제 정경유착은 해체된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언론특권과 횡포를 막기 위한 노력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국민의 정부에서 이미 해소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곤하니 그만두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군사독재가 무너진 이후에는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여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보도에 책임을 지는 언론이 될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 정치를 지배하려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민의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의 언론이 아니라 시민의 언론이 될 때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권력형 비리 없는 투명한 사회 건설

밀실, 측근, 가신, 이런 말도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무슨 사건이 나고 비자금이나 있을 때마다 정·관계 로비라는 말이 나오고 청와대 누구, 대통령 측근 누구라는 말이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설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생각하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도 투명하게 제도화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나 한두 사람의 측근이 인사를 농단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른바 밀실인사, 비선인사도 없습니다. 아직도 정무직 인사에 대한 정치적 시비는 많지만 지난날 잡음이 많았던 장군인사 등 고위공직자의 인사에 뒷말이 없습니다.

권력사회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투명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02년 상위 39퍼센트 수준에서 2005년 상위 25퍼센트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2단계 민주주의는 1987년 체제의 역사적인 과제였습니다. 이 과제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꾸준히 진전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그 성과를 물려받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민주세력은 1987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역사 쓰고 있어

민주세력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모든 면에서 1987년 이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을 퇴장시키고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약 10년간 정권의 성격을 말하기 어려웠던 과도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1997년 마침내 완벽한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독재체제에서 구축된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사 정리로 역사의 대의를 바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창의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큰 일을 민주세력보다 누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우리 경제는 체질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IMF 외 환위기는 개발독재의 획일주의와 유착경제의 잔재를 신속하게 청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1987년보다 나라의 경제적 역량이 훨씬 더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진국 속에서의 순위도 훨씬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규모, 과학기술, 산업경쟁력, 환경, 문화, 이 모든 분야에서 그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유와 창의가 꽃피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라야 의욕 넘치는 시장, 혁신하는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정부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복지투자를 사회투자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사회를 만들자는 전략입니다.

(5·18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에서 2007. 5. 18)

• 힘겨운 ‘투쟁의 시대’ 거쳐 ‘개혁의 시대’ 성공적으로 이끌어

아직 우리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에 완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진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랜 세월, 반대를 용납하지 않고, 고문과 투옥, 살인마저 마다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잔인한 독재정권에 맞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투쟁을 이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투쟁의 시대’를 걸어 왔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지금까지는 권력의 남용과 권위주의, 특권과 반칙,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와 같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많은 저항과 갈등이 있었으나 민주주의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진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른바 ‘개혁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4·19혁명 47주년 기념식에서 2007. 4. 19)

5. 민주주의 3단계를 위한 제언

• 엘리트 민주주의를 넘어 대중 민주주의 시대로

노무현이 뭐했냐고 한다면, 감히 부조리의 핵심에 들어와 유착과 부조리의 핵심적 구조를 해체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자면 저비용 정치를 구현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유착구조의 해체만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엘리트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민주적 권리를 누리고 참여하는 문화가 대중적 토대 위에 섰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입니까?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투명한 정치, 투명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한 사람보다 열 사람의 아이디어가 좋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창의를 목표로 한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이라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원 연수특강에서 2004. 1. 10)

• 규범 위에 있는 모든 권력을 규범 아래로

지금 저는 야당이라는 정치세력, 우리 한국사회 일부 언론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기성의 정치 사회 문화 속에서 문화적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심한 마찰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찰은 200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던 대중적 흐름과 기존 우리 사회의 질서 사이에 있어서의 마찰과 갈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초를 1987년 6월에 등장했던 우리 대중적 동력과 2002년 선거 때 나타났던 국민참여의 바람을 시대적 의미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대통령

이 된 역사적 의미이고 지켜 나가야 될 저의 역사적인 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권력을 규범의 틀 속에 돌이켜 넣는다는 것입니다. 규범 위에 있던 권력을 규범 아래로 자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권력의 결탁과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법질서에 의해서 견제되는 사회가 일차적으로 민주주의의 조건을 갖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국민들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것은 또한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합리화되고 투명화되었다는 수준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2006. 2. 26)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인가. 우리 경제가 옛날에 관치경제, 관치금융의 시대를 벗어나 민간주도 경제로 가면서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관치금융이었습니다. 관치금융 시대에 외환위기를 맞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 경제가 확실한 시장경제, 민주주의 두 축을 기반으로 발전해 간다는 전략을 다시 세우고 기업·금융·노동·공공, 네 개 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1998년의 일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개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경제가 백 동원하고 정경유착하고, 뒷거래하고 특혜 받는 방식의 경제가 아니라 실력대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사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위에 머리를 잘 쓰는 사람, 세계 경제 흐름을 빨리 내다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경제 질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도 그 밖의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모든 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뤄졌을 때, 그때 비로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라는 것이 더 잘 작동하게 돼 있고, 그래야 우리 한국 경제도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제가 됩니다.

(시드니 동포 간담회에서 2006. 12. 7)

• 대화와 타협, 상생의 민주주의 실현할 때

상생협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과거 1970~80년대에는 부당한 독재와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과제였습니다. 1987년 이후에는 권력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의 민주주의로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와 지도층들이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각자의 목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히 교섭력이 취약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계가 먼저 한 발 양보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 줘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노·사·정 대화로,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새롭게 사고해야 합니다.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LA 동포 간담회에서 2004. 11. 15)

한국 민주주의는 투쟁의 시대를 걸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청산과 개혁을 통하여 적어도 형식적인, 제도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내실 있는 민주주의를 할 때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통합의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내실이 있는 민주주의는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의 민주주의입니다. 지역주의 극복, 협상 민주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입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 규칙에 따라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여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 약속과 책임을 존중하여 신뢰성이 높은 사회, 서로를 인정하고 규칙을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로 통합력이 높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 권력을 물리친 데 이어, 정경유착, 반칙, 특혜와 같은 특권 구조를 청산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에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신뢰, 통합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관용의 문화를 뿌리내려야 합니다. 상대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는 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설득하고 설득이 되어 의견을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익을 서로 교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선진 민주국가입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2007. 4. 30)

• 소비자 민주주의가 참 민주주의

시장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 결국 시장에서 소비자 주권이 성립될 때 그 경제가 민주주의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소비자 민주주의가 성립될 때 그 정치가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구매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정치의 소비자를 유권자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향유하는 사람이 서비스에 대한 최종적 평가를 유권자로서 선거와 투표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유권자 주권이 정치의 소비자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던 시절엔 자유·평등을 내걸면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통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내거는 국가주권사상에 기반한 정치이념이 1차적으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있어야 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보의 평등상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1차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주권이 시장에서 집단이나 조직으로서 하나의 대세를 형성하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갖추어지면

민주주의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인가, 아니면 가치와 관계없이 오로지 분산된 이익만을 추구하는 소비자인가에 따라 그 사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소비자 주권의 사회정치가 경제의 영역, 즉 시장에서 공정한 정보접근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능동적이고 집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전략적으로 행동할 것 등의 다양한 가치가 지향된다면 그것이 참 민주주의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포털사이트 대표 및 인터넷서비스 책임자 오찬에서 2006. 6. 12)

• 민주주의의 성공의 조건은 참여 민주주의

경제문제에서 소비자주권의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참 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각성된 행동, 단결된 행동은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와 같이 대처하듯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역시 시민 민주주의, 시민 주권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시민의 참여, 시민의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가 답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 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실천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민주주의의 완전한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8회 노사모 총회 축하 메시지에서 2007. 6. 16)

• 진보적 시민 민주주의를 제안하며

사인할 때 저의 표어는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시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주권 국가에서 여러분은 주권자입니다. 어떤 정부를 가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어떤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보적 시민 민주주의를 한번 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시민 민주주의는 역사적 개념이어서 이 시민에는 옛날에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 계급만 포함되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포함 안 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기 민주주의가 잘못되어서 시민이라는 말이 잘못 사용된 것이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갔을 때, 보편적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됐을 때는 시민 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기업인으로 성공하시길 바라고, 시장의 주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진보된 시민사회의 주류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 항상 희망이 보이고 활력이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제가 뭘 구체적으로 해 보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 봅시다, 어디서 따로 만나서 깊이 있는 생각도 해 봅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 벤처기업인 특별강연에서 2007. 10. 19)

2

정치개혁

1. 정치개혁은 시대적 과제

• 정치개혁의 세 가지 핵심 과제

당원과 국민에게 의사결정권을 돌려준다, 소위 당권을 돌려준다는 것이 지금 정치개혁의 핵심입니다. 그 위의 지도부를 어떻게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어떻게 지역 구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혁할 것이냐, 세번째는 정치인들이 절제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정치행위를 하되, 다만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 7차 회의 “정치개혁의 실현”에서 2003. 1. 23)

• 현재의 정당제도는 물이 새는 배와 같아

지금 당내에서 정당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정당제도 바깥의 개혁과제는 뒤로 좀 밀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 정당개혁을 먼저 하고, 정당의 구심점이 만들어지고 정당 내부질서가 정당개혁을 통해서 재편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선거제도라든지 국가제도에 관해서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마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개혁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정당은 안전한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험난한 바다 위에, 국민 민심이라고 하는 바다를 향해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물이 새는 배는 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제도는 물이 새는 배입니다. 살자면 부득이 물이 새는 배를 버리고 다시 해엄을 얼마간 치더라도 새로운 배로 옮겨 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코 우리 정치인들이 안주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스스로 개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개혁을 제대로 못해 내는 정당은 아마 다음 총선에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정치전망입니다.

(KBS 특별 생방송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에서 2003. 1. 18)

• 정치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정치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일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2만 달러 시대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정치자금 논란이 오히려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투명한 정치, 깨끗한 정치로 나아가는 전기로 만듭시다.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다시 한번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낡은 정치의 악순환을 끊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충정에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선자금 관련 기자회견에서 2003. 7. 21)

• 이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

우선 대선자금 수사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지금 모두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대통령 주변 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유불리, 호불호를 떠나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정신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정치권 모두가 해야 할 일을 속이고 회피하고 모면하려고 할 일도 아니고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반성하는 자세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고해성사를 이야기하는데, 동서고금에 진실한 고해성사는 없었습니다. 수사에 의해 진실이 규명될 수밖에 없고, 이것에 적극 협력하고 마무리지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의 개혁과 정당문화의 개혁, 그리고 정치혁신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불법자금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10분의 1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모두 다 합심해서 그러한 성과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선량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4당 대표 초청 회동에서 2003. 12. 14)

2. 초과권력, 권력유착의 청산

• 권력의 유착을 해체하는 것이 정치적 개혁과제

지난 1년간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간다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몫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는 시대로 갈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이 있습니다. 권·언관계도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권력과 언론이 월권을 하거나 특권을 주고받았던 권·언유착이 해소됐습니다. 힘들고 꺾끄러운 일이 남아 있지만 꾸준히 가면 달라질 것입니다.

권·권분리도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권력기관 인사는 국민충성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힘 있는 재계와 권력의 유착관계는 이미 청산된 것 같습니다. 정(政)·권(權)·언(言)·재(財)가 유착해 강자의 지배구조를 형성해 이루어지는 부정부패의 구조를 해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착의 구조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정치적 목표이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과제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원 연수 특강에서 2004. 1. 10)

• 우리나라, 중립해야 할 국가기관 완전히 중립하고 있어

국회가 좀 시끄럽죠. 시끄럽지만 한국의 선거문화, 선거수준,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수준 모두 합쳐서 현재 우리가 하는 정치수준은 어디에 내놔도 별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많이 싸우죠. 지난번 국회 13일간 헛바퀴만 돌렸지만, 옛날 습관이 남아서 좀 그런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기관의 중립입니다. 지금 중립해야 할 국가기관이 완전히 중립하고 있습니다. 군, 경찰, 정보기관, 검찰 다 중립하고 있습니다. 독립해야 할 기관은 확실히 독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위원회, 한국은행, 감사원 등이 독립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치주의 수준을 얘기할 때 한국 법치주의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브라질 동포 간담회에서 2004. 11. 18)

•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그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 돼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대통령이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은 해체된 것 같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것이 과거 시대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암적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이미 해소가 됐습니다.

참여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고 여기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곤하니까 그만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비단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 독재가 무너진 이후에 일부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여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인 과제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저는 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훗날 저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 언론에 굴복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언론에 당당하게 잘못된 보도나 의견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만든 것, 이것을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아마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국정과제 심포지엄 특강에서 2007. 1. 31)

• 참여정부는 특권·유착의 반칙 청산하는 완결단계에 와 있는 중

민주주의, 저는 민주주의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이든 선진 민주국가가 민주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권력, 직접의 권력과 바로 투쟁이 시작됩니다. 직접의 권력이, 독재 또는 전제의 권력이 무너지고 나면 과거의 체제 속에서 남아 있던 특권과 유착의 구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투쟁이 또 벌어집니다.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상대를 인정하고, 소위 관용이라는 이름이지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단계 중에서 참여정부는 아마 소위 특권과 유착의 반칙의 구조 또는 부패의 구조를 정리, 청산하는 과정을 거의 완결해 가는 단계에 서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권위주의도 그 속에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다시 그와 같은 경향은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천 청사 공무원 격려 오찬에서 2007. 1. 4)

• 아직 남아 있는 개혁 대상, 정부 밖에서는 언론, 안에서는 검찰

민주주의 개혁의 과정에서는 거의 다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 상생의 정치라든지 하는 소위 3단계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비뿔어진 것을 바로잡은 개혁은 거의 이제 마감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정부 밖으로는 언론, 정부 안으로는 검찰이 조금 더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 아동, 청소년)에서 2007. 3. 13)

• 특권과 유착 구조의 해체, 참여정부가 이룬 민주주의의 진일보

특권과 반칙, 특권과 유착의 구조가 가장 확실하게 해체된 것이 언제입니까? 마무리를 언제 지었습니까? 참여정부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마무리된 것입니다. 적어도 4대 권력기관 정도는 특권과 유착구조가 해체됐습니다. 트럭으로 돈 싣고 가고 싣고 오고 하는 수준의 일은 이제 다시는 반복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정경유착 확실하게 끝난 것이죠?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향상돼 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특권과 유착의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했고, 민주주의의 일대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위 오찬에서 2006. 12. 28)

3. 부패사슬 끊기

•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고통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에서 부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국 정치가 보다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통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이터통신 회견에서 2003. 10. 17)

• 부패방지, 대통령이 앞장설 것

기업의 장부가 압수될 때마다 비자금이나 오기, 비자금이 나오면 당연히 정치권으로 연결되는 이 낡은 사슬은 반드시 끊어 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정치인이 '나만 받았는가, 누구누구는 받지 않았는가' 하며 서로의 잘못에 의지하고, 또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이라는 핑계로 적당하게 피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다시 비자금이 또 터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져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먼저 몸을 던져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2003. 10. 13)

부패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부터 부정부패가 없어야 합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는 부패 추방의 첫걸음입니다.

(반부패 세계포럼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2003. 5. 31)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패추방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매우 강력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정치부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이제 제도개혁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와 있으므로 사회 각 분야의 부패추방과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범정부적 부패방지 역량을 통합하는 기구로 중심을 잡고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구조적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부패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사례와 자료를 종합한 뒤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해 뿌리를 뽑을 수 있게 대안과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공직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부패에 대해서도 부패방지위원회의 정책대상으로 삼고 반부패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서 부패의 원인 분석과 추방 대안을 마련해 올해 국가적 차원의 부패청산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제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월 1회 직접 주재함으로써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장애는 대통령이 앞장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04. 5. 24)

• 부패 문제는 시스템으로 풀어야

부패 문제는 단순히 적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부패는 투명하지 않고 책임이 불분명한 데서 싹틔웁니다. 법과 제도, 행정 관행 전반에 부패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전면적인 분석과 접근이 중요합니다.

(제1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2004. 2. 18)

부패 문제도 권력형 비리 등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부패 문제에 접근할 때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과학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총론에 머물지 말고 각론까지 접근해 주십시오. 또 부패 실태조사의 경우는 매우 체계적으로 법률의 구조적 문제까지 분석해 주십시오.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03. 11. 3)

2003년 한 해 우리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소위 윗물 부패에 관한 한 커다란 홍역을 치렀고, 그 이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정치영역에서의 부패가 다시 살아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외부로 크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부패청산, 부패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이런 노력에 좀 집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여러 보고도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도가 개혁되지 않고 사람들 의식만 개혁하라고 해서 실제 의식이 개혁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또 제도개선을 거부하면서 의식개혁으로 문제를 풀겠다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올바른 문제해결에 대해 저항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개선 없이 의식개혁이 따라간다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에서 2005. 2. 3)

• 부패청산과 투명화,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야

약속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협약실천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한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국가적인 부패방지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투명사회는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한국이 산업화의 벤치마킹 모델이 됐듯이 부패청산과 투명화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본보기가 되도록 합시다.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온 나라에 청렴정책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참여정부 5년차인 만큼 ‘시스템과 제도개선 중심의 범정부적 반부패 시책 추진의 성과를 확고히 유지시키고, 다른 한편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민간분야로 성과를 확산시킨다’는 청렴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올바르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청렴 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논의한 기업투명성 제고대책도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의 반부패정책 성과가 뒷걸음질하거나 선거를 틈타서 역류(逆流)의 독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기관에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회가 되는 대로 기업이나 정치권, 국민들에게 정부의 이와 같은 강력한 의지를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2007. 4. 13)

4.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

• 한국정치의 가장 나쁜 병폐, 지역주의

나는 한국 전체 정치구도의 변화를 원합니다. 또 다른 지역구도가 아니냐고 하지만 기존의 정치질서가 점차 와해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정치에 나쁜 병폐 첫번째가 지역구도입니다. 그런 기존의 정치질서가 와해되면서 새로운 질서로 변화해 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민주당만 분열하고 한나라당은 더 강하게 있으면 호남만 고립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더 이상 영남 주민들도 증오와 분노만 부추기는 방식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큰 틀의 역사의 흐름은 낡은 질서가 붕괴되고 새 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입니다. 일차

적으로 지역주의 정치를 해소하고 투명한 정치, 상향식 정치로 갑니다. 내가 신당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은 질서 중 가장 강고한 것이 지역주의입니다. 상당히 오래 버틸 것입니다.

(광주·전남지역 언론인과의 만남에서 2003. 9. 17)

• 국민통합, 지역주의 청산은 여전한 과제

대통령이 선거구도에 많은 신경을 쓰는 이유는 우리 역사와 우리 정치를 매우 구조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면 당연히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망국의 요인 또는 역사발전의 걸림돌들을 찾아보면 결국 내부적 요인으로서는 항상 독재적 체제와 사상, 부정부패 그리고 분열입니다.

지배층의 분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재와 열심히 싸워왔고 또 부정부패와 열심히 싸우고 있고, 이제 참여정부를 고비로 해서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는 청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분열의 구조, 이것을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지역구도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한 정치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한 등급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연정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005. 7. 29)

• 지역주의 극복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 불가능

그러나 아직도 남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입에 올리기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정치의 지역주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가는 정치,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 그런 아름답고 수준 높은 정치를 우리는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욕설과 몸싸움, 태업과 공전을 일삼고 공천헌금과 정치부패가 반복되는 그런 정치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대통령의 중책을 맡긴 것은 제가 일관되게 지역주의에 맞서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끝까지 책

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에서 2007. 5. 18)

• 대결주의, 지역주의 극복하고 정책으로 경쟁해야

참여정부의 출범은 지역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의 정말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영남사람 노무현과 그 일당에게 호남에서 몰표를 주셔서 저는 지역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지켜 내지 못해서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16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영남지역에서 13% 득표를 했습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32%를 득표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영남에서 32%를 득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주의를 깨고 정책대결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정책이 드러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해야지 지역으로 대결하는 정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한국 정치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미국·일본의 절반, 유럽의 3분의 1, 즉 복지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 언론 후진국, 복지 후진국, 세 가지 측면에서의 후진국, 이것만 벗어나면 우리나라 바로 선진국 갑니다.

(원광대 특강에서 2007. 6. 8)

5. 미래의 과제

•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관용과 상생의 정치로 가야

지난 2년 반을 통해 느낀 점은 대화를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가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잘 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타도하기 위한 경쟁, 창조적 상상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상 처내기 위한 술수 찾기에 몰두하고 온갖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공세로 인간성이 황폐해

지는 정치였습니다.

그런 사례로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행정수도법 등이 다시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번복된 것,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상대를 부정하는 일,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대통령 탄핵을 시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해임건의안 남발이라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의한 발목잡기가 그런 것들이었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 등도 있었습니다.

정치문화와 정치구조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투쟁의 정치에서 대타협의 새로운 정치로 가야 합니다. 지난 총선 전후에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것이 상생의 정치였습니다.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경쟁하면서 서로를 고무하고 격려하는 관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지만 성숙한 민주주의는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초청 만찬에서 2005. 8. 31)

• 규칙에 따라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여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 약속과 책임을 존중하여 신뢰성이 높은 사회, 서로를 인정하고 규칙을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로 통합력이 높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 권력을 물리친 데 이어, 정경유착, 반칙, 특혜와 같은 특권 구조를 청산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에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신뢰, 통합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독선과 독재의 시대가 남긴 불신과 대결, 불관용과 타도의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관용의 문화를 뿌리내려야 합니다. 상대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는 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설득하고, 설득이 되어 의견을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익을 서로 교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2007. 4. 30)

• 정치권이 개헌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국민들이 힘 모아야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11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18대 국회에서 개헌할 것을 합의하고 저에게 개헌 발의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각 당이 당론 확인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약속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헌 발의를 유보하였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끝까지 개헌의 대의를 고수하는 것도 가치와 명분이 사는 정치행위이고, 다음 정부에 개헌의 부담을 지우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저의 개헌 제안의 목적이 정치적 명분을 살리고 생색을 내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개헌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으므로,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번 약속이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켜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속을 것이 두려워 정치인들이 엄숙히 한 약속을 믿는 데 주저할 일은 아닙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믿어야 할 일은 믿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헌발의 유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2007. 4. 29)

• 헌법도 새로운 시대정신에 대한 규범을 담을 때

올해는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6월 항쟁의 결실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이자 시대정신과 가치가 제도화된 틀입니다. 현행 헌법 아래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와 특권구조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사회의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

다.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내각제 개헌’이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당의 후보 모두가 ‘임기 안에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그 개정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헌을 주장하다 보면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를 이루기도, 실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개헌 주장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심하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으로, 그리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개헌과 관련한 특별담화에서 2007. 1. 9)

• 헌법적 정치제도의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도 과연 선진 민주정치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 면책특권은 제왕적 권력에 맞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이 사라지고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면책특권은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면책특권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특권을 이용한 반칙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을 축소 또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은 이를 국민통합을 위한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이 계속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차제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은 특권 해소라는 시대적 가치와 정신에도 부합될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제한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기에, 국민적 합의를 모아 내기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헌정질서에 대한 성찰과 함께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헌법적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 정치관계법은 헌정질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법률이며, 헌법상의 통치기구와 직접 관련 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적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의 정치관계법 규정은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와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 시절에 관권·금권·조직 선거를 하면서 야당의 바람 선거를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와 의식 때문입니다. 독재정권은 활발한 선거참여를 과열로 낙인찍었고, 이러한 인식의 잔재는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와 선거활동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 정치관계법이 여러 번 개정되었지만, 그때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치우쳐 금지 규정이 과도하다고 할 만큼 강화되어 왔습니다.

규제 중심의 정치관계법은 과거 금권선거, 관권선거의 유산입니다. 실효성도 없이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로서 더 많이 참여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선거활동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2007. 7. 17)

좋은 규범이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보다 민주적인

규범이 필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규범이 필요합니다.

헌법은 모든 규범의 근본입니다.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또한 헌법적 정치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낡은 제도와 관행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번거롭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가치가 있는 문제제기라면 해야 합니다. 역사는 논쟁이 치열했던 시기에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끊임없는 문제제기, 토론과 대안의 경쟁을 통해 민주주의도 성장합니다.

우리 국민은 더 좋은 헌법과 제도를 갖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제헌절이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2007. 7. 17)

3

동반성장

1. 미래사회의 통합은 국가의 가치

• 중요한 것은 당장의 경쟁력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한 우리 사회의 통합

제가 루즈벨트 시대를 말씀드렸던 것은 그때가 정의와 가치의 충돌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다른 점에 있어서 가치의 충돌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당한 부분과 관련 이미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은 꼭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점 하나와, 두번째로 저도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로 노동자 편이어서 기업에 어떤 지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려하는 신문의 보도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몰아붙여 버리면 결국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사회적 통합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이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경쟁력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통합입니다.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우리 스스로 파괴해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계적으로 56%의 비정규직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비정규직 56%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급여가 똑같은 자리에 있는 정규직과 형편없이 다르고,

중간에서 용역업자들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그 용역업자들은 골프장 다니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 4차 회의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에서 2003. 1. 22)

• 현재 노동문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내놓아야

우리가 10가지 국정과제를 내놓고 토론을 하면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 2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2개를 마저 챙겼습니다. 하나는 노사관계고 하나는 농민대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사문제를 토론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적으로 노사문제, 농민문제, 교육문제 이 세 가지만 잘 풀리면 큰 걱정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화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많이 얘기하는데, 노동관계 법령의 개별 근로관계라든지 집단적 근로관계 부분에 있어서 현실 적용결과가 아니고, 제도의 세계화 수준에 관해서 글로벌 스탠더드 이런 점을 분석하거나 측정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앞으로 노동정책에 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 자체가 갖는 세계적인 기준 대비 수준, 그것도 알아 놓고 그 규정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본 결과로서의 수준이 비교된 자료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든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공유하면서 그것이 추진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추진전략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 8차 회의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에서 2003. 1. 24)

• 노동운동은 국민적 관심으로 시야를 넓혀서 해결해야

대기업 노조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노동운동이 특정 기업에 종사하는 조합 노동자들만의 권익이 아니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권익까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아울러야 합니다. 또한 산업의 발전과 국민전체의 복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노동운동이 그 수준을 갖추었을 때 정치세력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

다마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지금 노동운동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고한 대기업 노조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로 느껴지는 주장들이 더러 있어서 전체적인 노동운동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점차 노사문화를 전체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노동운동이 전체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나아가서는 전체 국가적 관점을, 국민적 관점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도와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대전·충남지역에서 2003. 2. 5)

2. ‘상생의 경제모델’, 뉴딜 프로젝트로 제안

• 양극화 문제는 지난 10년 간 확대돼

우리 고민은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10년간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으나 핵심적인 것은 기술격차입니다. 제가 기술혁신을 내세웠는데 이를 줄이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영원히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기술격차, 그 차이를 줄이려 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을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노동자도 대기업 노동자는 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가 있고, 작은 기업 노동자는 임금이 아주 낮습니다. 소득 그 래프로 그리면 가운데 중간치가 낮고 양쪽은 높습니다. 장구 반쪽을 자른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가 부족한 것은 신용불량자 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소득 양극화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극복해야 합니다. 분배로 극복하면 자유 시장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교육, 연수, 훈련, 노동기회 제공 등을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려 합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LA 동포 간담회에서 2004. 11. 15)

• 발전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어

앞으로 10년 뒤에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이 뭘 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로서는 첫 번째 대답하고 싶은 것이 국가의 균형발전입니다.

국가는 전체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 함께 더불어서 발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고 이를 걱정하고 있지만 저는 발전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첨단에서 있는 일부 대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상당수의 기업들은 이미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노동자로 얘기하더라도 일류 대기업의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부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토론회에서 2004. 9. 6)

• 양극화 문제의 단기적 처방이 아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해야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당에서 고민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양극화 문제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처방보다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당 차원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 오찬에서 2004. 8. 30)

• ‘상생의 경제모델’, 뉴딜 프로젝트로 제안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해 가는 모델, 노와 사가 함께 협력해 가는 경제모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서로 주고받는 경제모델, 이것을 함께 얘기한다면 ‘상생의 경제모델’, 뉴딜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 안에 보면 정부가 서비스업까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전략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생의 전략을

21세기 새로운 경제도약의 전략으로 채택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규제문제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로부터 생기는 생산력은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기업의 애로 요인이 되고 있는 규제를 풀고, 또 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보고회에서 2004. 6. 18)

3. 중앙과 지방

•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환경이 다 좋아질 것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수도권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정책은 지방만 잘 되고 수도권은 손해 보라는 정책 아닙니다. 수도권도 지금과 같은 생활환경, 문화환경, 도시환경을 갖추고는 최고의 기업들이, 최고의 두뇌들이 운영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에 새로운 전략 세워야 하는데, 좀더 분산하고 공간을 넓게 해 과밀 줄이고 보다 더 수준 있고 쾌적한 도시로 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충청도도 그런 관점에서 끊임없이 수도권과 경쟁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복도시라는 말을 실감 나하지 않는데, 저는 행복도시가 막상 만들어지고 나면 그 도시의 이름을 행복도시로 붙이는 데 조금도 서먹하지 않는, 어색하지 않는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정책 성과보고회에서 2006. 7. 12)

• 참여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배분 비율 역전

탄력세 말고 특별세도 어렵고, 결국 이는 중앙정부의 몫입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맡기는 게 불안하겠지만,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 재원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재원 배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자주 재원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점은 중앙

정부에 안 맡기곤 다른 방법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지만 유럽에선 EU 국가 간에도, 국가와 국가 간에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해 나간다는 뜻에서 후발국 재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느 정부 들어서도 중앙정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일입니다.

대신 참여정부 와서 달라진 게 있다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비율이 역전됐습니다. 절반 이상을 중앙정부에서 쓰다가 이제는 지방이 절반 이상입니다.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에서 돈을 무더기로 주고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포괄이전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정 이전이라는 것은 용도를 정해 주고 매칭 펀드 해서 주지만 그 밖에는 못 주겠다는 것인데, 용도를 정해서 주는 돈을 많이 줄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좋은 계획을 내면 거기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쟁적 요소가 많습니다. 지방 균형발전제도도 늘었습니다.

달라진 것 없다고 하면 매우 섭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한 뒤에 지방 재정 규모 전체도 커졌고, 자주 재정, 포괄 이전 부분 등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율이 매우 커졌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혁신 국정보고회에서 2007. 7. 12)

• 수도권과 지방 격차 그대로 두고 통합된 국가 갈 수 없어

지금 유럽에서는 국가가 서로 달라도 수백 억 썬의 돈을, 수천 억을 걷어서, 유럽 중에서 저개발 국가에 지원을 합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우리 한국보다 국민 소득도 높고 더 발전해 있는 국가인데, 스페인이 연간 300억 달러 썬의 지원을 작년까지 받아 왔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처럼 용단을 내리고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국가 안에서 이것을 방치해 놓고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가까이 보면 손해인 것 같아도 멀리 보면 이익이 되고, 가까이 보면 이익인 것 같아도 멀리 보면 손해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 모든 나라가 분산과 균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산업혁명, 수

백 년간의 경제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같은 기간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지금도 균형발전정책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균형발전 주요인사 오찬간담회에서 2007. 7. 20)

• 행정수도, 충청권의 발전 넘어 국민통합의 결정적 계기 돼야

혼자서 잘살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가난해서 올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을 때, 그 사람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한국 사회에 얼마만큼 더 큰 비용을 요구하게 될 것인가, 얼마만큼 낮은 생산성 때문에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지체할 것인가, 그들이 조성하는 불안 때문에 부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딱 30년만 내다보면 모든 답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행정수도 건설을 30년간 지체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도 수십 년간의 실천 과정에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있고, 민주주의가 비로소 자유와 평등, 그리고 국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와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마음껏 지체시켜 놓고, 인사를 통해서 국민을 지역적으로 완전히 갈라 놓고, 중앙과 수도를 또 갈라 놓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수도권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수도가 단지 충청권의 발전, 그리고 다른 지역의 지리적 근접성을 부여해서 약간 우리 경제가 좀더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상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이고도 철학적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의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합니다.

(균형발전 주요인사 오찬간담회에서 2007. 7. 20)

4. 노와 사

• 노·사·정 간 대화를 위한 신뢰가 필요

한국은 노사분규 건수가 많습니다. TV 화면에 비치는 모습은 강경대결 상태이고 색깔이 화려해 심리적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를 하려면 정부도 그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노동유연성을 얘기하기 전에 고용유연성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 서민대책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효과가 느립니다. 그런 것이 어려움입니다.

반면 요구하면서 시간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즉시 해결을 요구합니다. 대화하고 싶은데 정부나 노사는 신뢰가 취약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음은 안 되고 현금을 요구합니다. 노동단체는 즉시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행동하고 앞서 나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오피니언 리더 오찬에서 2003. 11. 3)

• 노사 간 대화와 합의의 생산성이 강조되어야

국가권력이 약해지고 다양한 주체의 역량이 늘고 있는 변화된 사회 속에서 공동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화와 타협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없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일부에서 걱정하지만 성의를 갖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게 중요하며, 합의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고 성실한 이행에 대한 다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충실히 이행해 나가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하나씩 채워질 것입니다.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노사관계 안정에도 많은 기여가 되게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합의를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 인식하고 보완·발전시켜 더 큰 협약을 이루어 줄 것으로 노사정위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협약 체결을 계기로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국민 모두의 하나된 목표 아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노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관행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조인식에서 2004. 2. 10)

• 노동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노동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이 되어야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올해 과제는 노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관건은 우리 사회의 노사문화가 상호존중과 대화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간의 합의로 제3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대화와 합의의 생산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과 역할들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의 준거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장의 활력을 살리면서 노동자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거나 차별당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려운 과제지만,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 장기적으로 안정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2005. 3. 24)

• 경제인들이 좀더 전향적으로 노사관계에 임해 주길

우리가 ‘연구·개발’ 하면 전부 연구소 안에서의 연구·개발, 첨단기술만 생각하는 데, 실제로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거기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경쟁력의 하나는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혁신이거든요. 박사들이 발명하는 기술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동 현장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정말 승부를 한번 걸어 보겠다,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최고가 한번 되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혁신을 해 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가전 산업이 지금까지 버티어 나가고 있는 것은 그런 현장에서 나오는 기발한 혁신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노사관계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정말 기업도, 정부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노동자들의 대투쟁, 그리고 지금까지

도 계속되고 있는 타협하지 않는 투쟁, 이런 투쟁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경제인들도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화했으면 합니다. 말하자면 노동자를 우리편으로 끌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동자들 열심히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통과...제도 정비 마무리

그동안에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노사관계 제도 개선을 하질 못하다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2003년도에 우리가 만들어 냈던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이번에 통과시켰죠. 그래서 제도는 다 정비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관계에서의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임기 초반부터 노사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화하고 결정한 것은 우리 정치가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약속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점은 아직까지 별 진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뭔가 아직도 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5. 도시와 농촌

• 도시와 농촌이 함께 가는 새로운 국토를 설계해야

도·농상생형 국토공간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혁신도시, 거점도시, 또는 농촌생활을 뒷받침하는 중심도시, 이런 개념들을 함께 만들어서 전 국토를 우리 국민들이 좀더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를 다시 조성하는 계획들을 이 기회에 추진해야 합니다. 농촌과 도시가 함께 가는 새로운 국토를 설계하

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지방의 발전계획과 또 무관하지 않은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은 새로운 공동체로, 바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중에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공동체로 복원될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처럼, 아이들이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뛰어놀 수 있는 자연의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국토로 재편성할 것입니다.

(북약산 개방 시범답사에서 2006. 9. 13)

• 농촌은 도·농 상생과 생태계 복원을 통해 살려 나가야

지금 농업과 농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 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그 어떤 도전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농업인들이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맛 좋은 우리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방에 맞서 경쟁할 수 있는 분야는 더욱 키워 나가고 지켜야 할 분야는 꼭 지키겠습니다. 영세·고령 농가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것은 물론, 개방에 대비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해 가겠습니다.

농촌을 되살리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와 생태계를 복원하고 교육과 의료, 문화 등 생활여건을 개선해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달 ‘전원마을 페스티벌’에서도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도전합시다.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제11회 농업인의 날 축하 메시지에서 2006. 11. 10)

• 도시와 농촌 교류하며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삶의 질 가능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국에 펼쳐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 환경, 교통,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의 첨단 기술을 담아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미래 도시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높이고 기존의 도시들이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도시들을 거점으로 농촌 생태계와 공동체를 복원해 갈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미 2005년부터 5년간 20조 원을 투자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5도2촌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전원마을 조성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민이 찾고 은퇴자가 돌아와 살 수 있는 농촌마을이 조성되면 도시에서 농촌까지 전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토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2007. 9. 12)

6. 대기업과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이 필요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서 중소기업정책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대책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특위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위의 간사를 산업자원부 장관이 맡고 위원도 재선정해서 중소기업정책 분야의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

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갈등 요소가 없지는 않으나 서로 신뢰를 갖고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협력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만, 양자 간에 공동협력의 틀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면도 있으므로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도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투자과 소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처럼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투자와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재계나 정부가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민생점검회의의 발언에서 2004. 7. 7)

•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간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30년 동안 총론적으로 한다고 노래만 부르는 결과 없는 정책은 안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만은 마감합니다. 중소기업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게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떤 정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정부의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만으로 한계가 있고 문화가 형성돼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이제 중소기업과 함께 살아가는 전략으로 바꿉시다. 이미 대기업이 상당부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함께 해 나가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전국중소기업인 대회에서 2005. 5. 17)

중소기업정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분야별로 나누어 전면적으로 재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정책의 혁신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동반성장 경제정책을 표방하였으며, 동반성장 경제의 성공의 핵심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며, 한국의 시장경제를 협력적·상생적 시장질서로 만드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상생협력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정책실효를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합니다.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상생협력을 평가할 때 상생협력이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어 있는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검증된 상생협력 성공사례를 사회문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성공전략으로 상생협력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상생협력으로 자기가 잘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채택하게 됩니다. 당장이 아니라 5년 후를 내다보고 역동성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나쁜 아니라 협력업체와 함께 가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위 내에서 상생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의 성공 모델은 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상생협력 모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책 점검회의에서 2005. 7. 5)

• 중소기업과 함께 가는 대책도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경쟁과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공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정책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여한 것이 있겠지만 지금 정책 현실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시장에서 기업 간에 서로 여러 가지 협력이 잘 이뤄져야 비로소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나가 보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세계 수준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참 자랑스럽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대기업이 있어 국민들은 미래에 대해 믿음을 갖고 대통령은 큰소리도 하고, 돌아오면 생색을 내고 좋습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편 욕심에는 대기업 제조업만 세계 일류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세계적인 경쟁의

한마당에서 당당히 앞서 가면 좋겠고, 그래서 경제가 튼튼하면 좋겠습니다. 대기업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함께 가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역시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뤄져야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책회의에서 2005. 5. 16)

언론이나 입소문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분석해 보면 항상 중소기업 쪽에 불리한 것들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 어렵다는 얘기는 항상 중소기업에 모여 있고, 어떤 것이 잘못됐으니까 고치자 하는 영양가 있는 정책에 관한 이야기는 대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속 없이 동정이나 편들어 주기 같은 것은 잔뜩 써 놓고도 실속 있는 정책으로 가면 별로 전달되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대강의 구조를 보고 중소기업정책을 해 봤더니 중소기업들을 전혀 모르고 상관없는 정책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과연 실제로 그런지 논리적으로 검증해 보니 이상한 것이 있고 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2003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을 조사 분석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만 개 기업을 전수조사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알 수도 다 정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의껏 노력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 기업환경이 바뀐 만큼 중소기업정책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큰 틀은 짜여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틀의 방향도 힘없는 사람에게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잘 뛰는 기업에게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그 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오히려 기회를 빼앗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시장원리를 존중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을 향한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에서 2006. 5. 19)

• 정책의 효과, 시간 걸리더라도 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는데 한 10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를 항상 열어 놓고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들겠습니다. 먼저 전해 들었던 말이라도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또 듣고 한 번 더 살펴보고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도록 제가 꼭 당부하겠습니다. 듣고 또 듣고, 살펴보고 더 살펴보면서 계속 고쳐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큰 틀로서는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잘 하겠습니다.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1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환경을 중소기업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고, 직접 도와 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 드리고 앞장서서 끌어 드릴 것은 끌어 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뀌기 위해서는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열심히 하면서도 10년을 내다보고 뛰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환경이 정말 제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반성장을 향한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에서 2006. 5. 19)

7. 복지지출은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

• 복지지출은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

과거에는 복지지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이후 세계적 경향은 '복지 지출은 지출이 아니고 투자다', 그리고 '성장과 복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야말로 성장을 위한 인적 자본의 확충이다'는 통합적 논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동반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경제정책의 지침서가 나와 있고, 또한 사회

투자전략, 사회문화 비전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책을 보면 두 개 다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동시에, 동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경제전략을 설명하면서 사회정책을 항상 함께 설명하고 있고, 사회정책을 설명하면서 경제정책의 원리가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과제 심포지엄 특강에서 2007. 1. 31)

• 다른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 미래대비 예산을 확보해야

지금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정부지출의 규모가 원체 작은 규모입니다. 복지 제도가 있다고 하기에 창피할 만큼 복지지출 수준이 낮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령화 내지 고령 사회 진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미래 시대 대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만 많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돈이 많이 없습니다. 함부로 걷을 수 없고, 있는 예산 최대한 아껴 써 보자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경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합시다. 그 다음에 지출 항목 간, 지출 분야 간에 구조조정을 최대한 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 미래대비 예산을 확보해 봅시다.

(국무위원 재원 배분회의에서 2006. 4. 22)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정부 예산의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와 노동 등 사회, 사회정책 부분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전체의 20% 수준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금년도 예산의 2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7~28% 수준, 우리 예산을 8% 구조 조정할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28% 정도의 예산은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지출 예산의 52%가 이 분야의 비용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지출 예산의 52%가 바로 이와 같은 사회 정책 비용이지요. 우리는 이제 28%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구직자/비정규근로자 정책)에서 2007. 3. 8)

•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어

복지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먼저 재원 배분을 개혁하고 정책의 방법과 수단을 정비하고 전달 체계를 확충하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하는 종합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원배분에 대해선 가장 많은 투입을 했다, 가장 많은 성장률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여정부 들어 국가 재정에서 경제투자와 사회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교부금 가운데 복지·환경 쪽의 비중을 매우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차원에서도 재원 배분의 큰 전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책에 있어선 돈을 지급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개발해서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에서부터 학생, 여성, 노인 그리고 장애인 각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발굴 사업은 바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앞으로 군복무 제도를 재편하게 됐을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투자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지출은 단순한 소비적 지출이라고 해서 계속 반대가 너무 많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론이 있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지지출을 잘 하면, 방법을 바꾸면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사회투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 복지정책의 내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사회투자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회투자전략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내용을 보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시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그리고 예방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잘 교육시키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사회적 부담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자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 장기계획 갖고 '함께 가는 사회'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어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투자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소위 사회투자, 전 국민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경쟁의 과정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투자, 이 투자에 관한 한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부 출범 직전에 우리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복지지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약 20%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약 28%입니다. 20%와 28%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부 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깎아 20%짜리 예산을 28%로 올린다는 일은 과격한 대통령이 아니면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십니다. 그 점에 관한 한 과격하다 할 만큼 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민생에 관한 것들이지요.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만에 나가서 견계 안 해 준다고 의사 먹살을 잡아 버리면 어떤 의사도 못 살지요. 감기는 14일 걸리고, 또 다른 병도 얼마 걸리고 얼마 걸리고 다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 병을 고치는 데에는 적어도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 2. 27)

4

균형발전

1. 균형발전전략은 국민통합전략

• 균형발전전략은 국민통합전략

앞으로 제가 하는 5년 동안에는 지방의 경제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지방경제는 위축되고 주로 수도권으로 돈과 권력, 인재들이 전부 집중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과밀현상이 생기고 그로 인한 비용지불이 많아져서 이대로 가면 수도권도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땅값이 비싸고 자연히 모든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지요. 지방이 너무 소외되기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 사이에 앞으로 적대감까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갈등이 되고 또 다른 분열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발전전략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멀리 내다보면 국민통합, 국가통합의 꼭 피할 수 없는 전략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발전전략 또는 국가 균형발전전략이라는 것을 앞으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핵심적인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 지방화를 위한 3대 전략

제가 선거 때부터 앞으로 우리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전략으로서 동북아 시대라는 기치를 내걸고 아울러서 지방화 시대라고 함께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이 수도권과 함께 활력 있는 삶의 터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주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전략으로서 행정권한에 있어서, 행정조직의 운용에 있어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자치분권의 행사에 있어서 확실한 분권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이고, 두번째는 지방대학 육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산업과 지방문화를 아울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중앙정부가 중앙과 지방을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수도의 지방이전까지 함께 내걸었습니다.

이 3개의 전략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확정지어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듣고 가서 그대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

지방을 어떻게 활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방이 잘 살게 할 것인가 고심고심했는데, 대개 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획기적으로 분권을 하려고 합니다. 재정에 관한 분권도, 재정의 지방이양도 획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꼭 용도를 정해서 내려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이 알아서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인 데 쓸 수 있도록 포괄이전 비율을 높여겠습니다. 그래서 권한과 재정에 관해서는 지방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회하고도 타협을 해야 합니다마는 획기적으로 하겠습니다.

• 행정수도 공약은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전략

행정수도 공약은 선거용 공약이 아닙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청사까지 지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안 된 것은 결국 민심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이 이대로 더 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더 버틸 수가 없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이 이대로 더 가면 또 다른 지역주의의 대결이 생깁니다. 엄청난 문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행정수도를 옮기지 않고는 수도권도 더 이상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옮길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꾸준히 설득하면, 반드시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설득하고 옮길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걸리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리고 같은 10년이라도 도로 내는 데 걸리는 10년짜리가 아니라, 국가의 역사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수도의 일부, 기능의 일부가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강력한 뒷받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적 합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옮겨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하겠습니다.

(KBS 특별 생방송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에서 2003. 1. 18)

• 지방발전의 핵심은 산학연 연계

대체로 분권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권한이나 일부 입법권, 재정권을 지방에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는 수도권 집중이 멈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금융까지도 권력이 결정했기 때문에 권력에 의해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이미 수도권의 막강한 시장흡인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시켜도 지방 분산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대책으로서 지방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는 오늘 여러분들께 기본개념을 제안 드리고 앞으로 검증을 한번 받는다든지 또는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가시면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제안해 주시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산업 육성, 지방문화 창달 등의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길게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방대학의 집중적 육성을 통한 지방산업과 지방문화의 육성,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정부 예산에서 투자하고 있는 R&D 투자가 전체로 연간 5조 원이 훨씬 넘어섭니다. 대학교에는 약 1조 1,000억 원 정도가 가고 있고, 나머지는 연구소와 기업들로 가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다시 들여다보고 분석해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시켜 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방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자원을 한번 재배분하는 방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광주·전남지역에서 2003. 1. 28)

2.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야

• 수도권 과밀, 지방 소외는 반드시 해결해야

이제 모든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시대로 가야 합니다. 수도권은 너무 과밀하고 집중돼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방은 소외돼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없이는 국민통합이나 2만 불 시대가 불가능합니다. 참여정부는 지방을 발전시켜서 해결할 것입니다. 지방이 독자적 경쟁력 갖추고 국가발전의 역동적 주체가 되게 하겠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2003. 12. 5)

지금 가장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찾는다면, 지금 당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도 모든 조건이 수도권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국가발전 전망을 가지고 본다면, 수도권 집중으로는 안 된다

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방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지방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위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균형발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울도 계속 과밀이 축적되면 경쟁력도 떨어지고 사람 살기도 불편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서울을 위해서도 지방을 발전시켜 산업도 일으키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가 흠어져 살아야 합니다. 균형발전정책을 참여정부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주로 물량 위주의 투자 확대만을 계속해 왔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질적 발전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경제발전전략도 혁신주도형 경제로 질적 전환을 해야 하고, 국토의 공간적 관점에서 볼 때도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을 반드시 해야 하고, 아울러 경제 기업뿐 아니라 정부 행정, 공공부문 모두를 혁신해야 합니다.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오찬간담회에서 2006. 11. 29)

•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줄여야 수도권도 발전할 수 있어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꼭 느끼지만 말을 하면서도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 원체 큰 틀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정말 해 봅시다. 끝장을 냅시다. 분권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여러 행정조직 감안하면 그게 되겠나 싶기도 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미 수도권에 산업의 흡인력이 집중돼 있어 엄두를 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교육의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을 비교하며 무슨 경쟁력이 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떼어 놓고 보면 이루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면 수도권도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부가가치산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이미 큰 압력이 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목 잡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행정, 교육, 산업적 측면에서 지방분산을 추진하고 지방을 키워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접근하며 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이번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각 분야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습니다. 여기서 출발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

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과제 TF 워크숍에서 2003. 4. 16)

• 지방의 위축은 전략의 부재가 문제

지금은 나라가 잘사는 일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이 함께 잘사는 방법을 찾고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놓고 이익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주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 잘살 수 있게 국가의 힘을 모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지방을 잘살게 하겠다는 목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공약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지방이 위축되고 서울만 계속 팽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방 얘기를 해 왔습니다. 지방이 잘사는 정책을 쓰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마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도 약속을 안 해야죠. 안 되는 일을 30년 동안 약속하고 공수표를 계속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실천되느냐, 저는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전략이 잘못된 것입니다.

(경북북부 현장방문 오찬 간담회에서 2004. 12. 15)

• 43년간 망가진 국토 복원해 경쟁력 키워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 차이는 지난 40년간 진행돼 온 것입니다. 맨 처음 대도시 집중억제정책이 1964년에 나왔습니다. 1964년에 이미 억제정책이 나왔고 1972년 국토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성장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이 나와서 억제했는데도 대도시화가 오늘까지 진행됐습니다.

1964년부터 43년 동안 망가뜨린 것을 복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 것입

니다. 1964년 상태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적어도 전 국토가 사람이 살 만하고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하고,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국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 오찬에서 2007. 2. 7)

3. 균형발전은 경쟁력 있는 국가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

• 균형발전도 사회투자

사회투자에 대해 복지병이라 얘기하면서 복지비용 줄이라는 사람들을 주로 흔히 말할 길 신자유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보수적 노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보적 노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복지비용이라 하지 않고 사회투자라 이름 붙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회투자 부분은 정치 노선에 따라 입장을 약간씩 달리 하는 것이고 균형발전 부분이 사회투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약한 사람, 낙오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호하거나 역량을 확충해 주는 작업을 통해 낙오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사회투자의 개념이라 하면, 균형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오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킵니다. 소위 균형이란 아무래도 진보적 개념입니다. 제가 분배주의니 좌파니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2007. 3. 22)

• 균형발전은 경쟁력 있는 국가 만들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

우리나라 학자가 연구결과를 내놓아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가위가 입 벌리고 있는 모습인데, 위로 올라간 것이 비용이고 아래로 내려간 것이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은 결국 우리도 살기 좋은 국가,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꼭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30년, 40년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고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 오찬에서 2007. 2. 7)

• 질 높은 삶의 조건을 고루 갖춘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

균형발전정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말은 무성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도시 몇 개를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의 도시를 변화시키고 우리 국토를 재편성하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팽창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과 의료, 문화, 질 높은 삶의 조건을 고루고루 갖춘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전국 곳곳에 배치하고, 그리고 이 도시들을 거점으로 농촌마을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도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농민들과 함께 농촌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복원해서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국토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도 숨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난과 교통난, 환경오염과 같은 과밀의 폐해에서 벗어나 보다 질적인 개발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좀더 여유 있고 넉넉하고 쾌적한 수도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쾌적한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2006. 1. 12)

• 균형발전정책은 한국 미래의 성공에 핵심 요소

균형발전에 관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중이 좋은가, 분산이 좋은가, 많은 논란이 있지만 분산이 좋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삶의 질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선진외국들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명령입니다.

균형발전정책은 한국 미래의 성공에 핵심 요소입니다.

경제와 문화의 균형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 것이 균형인사입니다. 이를 기존의 구조대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심한 정책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균형인사에 관해 정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 선포식에서 2007. 7. 25)

• 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핵심 철학과 가치, 체계적으로 정책 추진

참여정부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균형발전을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균형발전을 핵심적인 철학과 가치로 삼아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통합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같은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로드맵’을 통해 중앙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지방에 내려 보낸 권한과 사무가 이전 모든 정부에서 이전한 것의 세 배가 넘는 880건에 이릅니다. 지방교부세율을 15%에서 19.24%로 높이는 등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4년 동안에 30조 원 가까이 늘렸습니다. 각종 조세와 규제에 있어서도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과 특례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어서, 제주와 경북 혁신도시, 태안 기업도시가 착공했고, 오늘 경남에서 진주 혁신도시가 첫 삽을 뜹니다. 전국 곳곳에 지역발전의 거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저절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2007. 10. 31)

4.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위한 것

• 균형발전은 조금만 멀리 보면 모두를 위한 것

균형발전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미래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국가가 균형발전을 하는 데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균형발전을 놓

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다소의 대립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놓고 보면 다소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멀리 보면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정책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 OECD 국가들을 선진국이라고 하고, 좀더 좁히면 G7 국가 또는 G10 국가를 말합니다. G10 하면 한국도 턱걸이를 하는데, 대개 그런 국가들을 보면 균형발전에 있어서 잘 분산되어 있고 균형 있게 발전해 있습니다. 수도권도 비교적 넓은 공간에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엔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은 수도권 일부 집중 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도권 자체 경쟁력에도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국정현안 시도지사 초청 토론회에서 2006. 8. 8)

• 지방과 수도권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상생하는 관계로 가야

행정수도 이전하면 통일 이후에는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에 정부가 통합되는 독일식 통일은 잘 되지 않을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생각 있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이런 경우 각자 구심점을 갖고 개성쯤에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방은 스스로 발전전략을 내지 못한 채 수도권 억제 얘기만 하고, 수도권은 지방의 발전은 도외시한 채 억제에 대한 불평만 얘기하며 곳곳에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 나름대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상생하는 관계로 가야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다음 총선에서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버리면 정부의 정치적 독점권이 해소돼 버립니다. 제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정과제회의에서 2003. 11. 6)

•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

앞으로는 제품이 많이 나오는 도시가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전문가들,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라야 경쟁력 있는 도시죠. 서울 사람들도 조금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바로 균형발전입니다.

짧게 보면 아무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멀리 보아야 진정으로 가치가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보면 이익은 이익이고 가치는 가치입니다. 멀리 보면 바로 가치 있는 일이 이익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토론회에서 2007. 5. 30)

• 우리 국민은 갈등을 극복할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공공기관을 강제로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것인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계획을 발표할 때도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계획을 발표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동의를 만들어 내고 하는 일들을 참모들이 용기를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저 혼자서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공공기관을 어떤 지방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만 해도 갈등요소가 적지 않은데,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정치력을 발휘해 그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광역단체 안에서 어디에다 혁신도시를 만들 것이냐를 두고 수없는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다 극복했습니다.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빨리 이런 문제가 마무리되고 갈등이 극복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일을 다 해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는 걸 보면서 정말 특별한 국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의 과정에서 이런 난관을 극복한 역량을 보면 남은 문제도 다 극복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고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 기관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길게 내다보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건설 실행전략보고회에서 2006. 10. 17)

5. 균형발전 방향

• 행정수도 이전은 전 국민을 위한 것

행정수도는 충청도민만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해서도 추진해야 합니다. 1977년도에 대전에 판사로 발령 받아 근무할 때, 그때도 대전으로 수도가 온다고 해서 한번 후끈 달아 올랐습니다. 이후에 안 되어서 계약해제 소송이 넘쳐나고, 내가 그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행정수도 이전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하고 숨이 막히는데, 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충청도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충청도를 위해서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 때 충청도로 신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충북 인사 오찬간담회에서 2003. 10. 27)

행정수도 계획이 무너지게 되면 수도권 재정비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각기 발목 잡기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도권도 금융 비즈니스 그리고 첨단산업의 동북아 중심도시가 된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방화전략도 역시 저항에 부딪쳐서 무산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행정수도계획, 지방분권,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재정비 등의 계획들은 참여정부 핵심과제이고 국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정책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이고 참여정부의 아주 중대한 정책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명운과 여러분의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 주시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각오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적 합의를 다시 되살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에서 2004. 6. 15)

한국에서 공론으로 제기된 것은 20~30년이 넘었습니다. 뜻있는 사람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국가적 과제입니다. 단지 수도권이 계속 확대되고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감히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 등 규제조치로 발전의 한계가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제정책이 한계에 부딪혀 무력화되고 난개발로 수도권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도권도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2년 지자체 선거 때 어느 당도 수도권 문제에 대해 대책을 못 내놓을 때, 그때 전체 균형발전 속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정치를 구상한 게 행정수도를 구체화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결코 충청권에 선물 주는 게 아니고 수도권도 동북아 경제 허브, 금융 허브가 되자면 지금의 법체계로는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잡아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win-win)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 충청권의원 만찬에서 2004. 11. 5)

국가 균형발전의 새 역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공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영상물을 보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잡니다. 개방적이고 시민친화적인 정부청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금강변과 전월산, 그리고 그곳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국민 여러분이 지어 주신 ‘세종’이라는 이름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대선공약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2004년 1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제정,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그리고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이르기까지 힘든 산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틀림없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 오신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국내외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완벽한 도시계획을 세우고, 정부와 주민이 대화하고 협력해서 1년여 만에 토지 보상도 마무리했습니다. 정책 집행의 모범사례라고 할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곳 주민 여러분께서는 생활터전을 옮기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행복도시의 첫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이주지원, 생활대책 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에서 2007. 7. 20)

• 기술혁신, 지역혁신으로 가야

우리 정부는 국가발전전략으로도 과학기술혁신, 인재육성 그것을 첫번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지역발전의 전략으로서도 혁신과 인재를 중심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수단 의 하나로서는 산·학·연 협력관계를 비롯해서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또 지역혁신 체계,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함께 권고하고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과학기술혁신, 시장개혁, 사회개혁 이런 것도 발전전략이지만, 크게 보아서 균형과 혁신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토론회에서 2004. 9. 6)

지방대학을 가지고 혁신클러스터를 만들어 보자는 여러 가지 시도는 있지만, 그 지방 대학을 뒷받침해 줄 지식기반이나 산업기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로라도 만들어 보자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목표입니다. 공공기관만 개별적으로 달랑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그 지역의 지식 중심인 대학교, 그리고 지금 있는 기업과 앞으로 유인해야 할 기업들이 지방의 활력을 함께 살려 나가는 혁신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의 혁신도시 구상까지 왔습니다.

(혁신도시건설 실행전략보고회에서 2006. 10. 17)

저는 지방의 경제단체들이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보의 교류입니다. 한 자리에서 만나 기업인들이 상호 끊임없는 정보를 교류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어떤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가 일일이 공기업을 만들어 뒷받침해 주면 좋겠지만 실제 정부가 그만큼 역량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자체가 뒷받침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중앙정부의 몇 마디 지시가 아니라 지역의 기업, 학교, CEO들이 좀 나서서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술인력 혁신보고회에서 2006. 11. 6)

전국에 펼쳐질 10개의 혁신도시는 지방의 혁신 역량을 축적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내려오면 관련 기업이 따라오게 되고, 이들이 지방대학 등과 협력해 새로운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내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기업이 모여들어서 혁신을 이루고, 이러한 혁신이 주변으로 파급되는 혁신의 진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는 우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과 교통, 교육, 의료, 문화가 잘 갖춰져 있어 경제적 활력과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도시들을 기반으로 농촌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을 특성 있게 가꾸어 나가면, 전 국토가 활력 있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그렇게 재편성될 것입니다. 현재 64개 시범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그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2007. 10. 31)

• 생활의 수준을 바꿀 것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지만, 지금은 균형발전정책이 중앙과 지방으로만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지방에 있어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조그만 소도시 같은 개념들을 다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전체를 포괄해서 균형이 잡힐 때라야 진정한 의미의 균형 있는 국가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사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서 가는 부분들과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관심을 모아 나가서 정책의 우선순위도 높여 나간다면 상당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노력의

중간 결실의 하나로 준비된 이 전시회를 관심을 가지고 깊이 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환경 전체를 바꾸고 국민들의 생활공간 전체를 바꾸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보다 행복한 삶의 조건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소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원마을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2006. 10. 12)

참여정부의 핵심 전략이 균형발전전략인데요, 논리적으로 반드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만, 세계 거의 모든 나라, 특히 선진국은 주거 공간, 생활 공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한 일이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수도권 중심으로 2,300만 정도가 모여 있는데 도시국가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일지, 경쟁에 있어서 효율적일지, 국민의 행복에 있어서 더 좋은 방향일지, 이 점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이 우리의 삶의 질을 가시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는 점에서도 저는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경제점검회의에서 2007. 1. 4)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한국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첨단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만 행정수도가 반쪽이 되어 버린 것이 유감이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공치사하는 모습이 씁쓸합니다.

10개의 혁신도시, 6개의 기업도시, 각 지방의 혁신클러스터는 우리 국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새로운 생활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생활공간의 수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지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우리 농촌에 자연마을이 있으면 결국 아이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우리 손주세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요? 물론 도시를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고 문화가 품위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줘야 하겠지만, 저는 우리 농촌을 환경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복원해서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지만, 나가는 게 시큰둥해지면 또 국내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한국은 훨씬 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소득수준에 비해 한국이 더 개발돼야 하는 곳이 어딘가, 더 다듬어야 되는 데가 어디냐, 도시든 집이든 길이든 어떤 구조물이든 보다 더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농촌도 완전히 새롭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다 복원시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농·어업인)에서 2007. 3. 20)

어떻든 10개의 혁신도시를 우리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건축, 교통시설, 교육, 의료, 문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첨단 기술을 다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경제적 활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잘 조화를 이루는 아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꾸며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 도시의 활력을 동력으로 주변에 있는 농촌지역까지 함께 연계가 돼서 농촌과 지방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전 국토가 함께 활력 있고 함께 살기 좋은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 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이 점차 발전해서 작년에 정리를 한 것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경제적으로 활력이 있는 도시를 꾸미는 사업만이 아니라 지금 점점 쇠퇴해가는 농촌지역까지 다시 재개발을 해서, 그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을 짜서 지금 함께 국가적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2007. 9. 20)

• 지방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30년 동안 진행된 중앙,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 사회통합이 어려워지고 결국 사회적 부담이 됩니다.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그래

서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국정과제의 목표로 삼고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방이 잘 살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과 자원이 총동원돼야겠지만, 그중의 핵심은 지방의 발전역량과 스스로의 역량입니다. 그 역량의 핵심은 지방대학입니다. 시민사회와 경제, 지방대학 3박자가 결합해야 합니다. 그 매개체는 언론입니다.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대구·경북 언론인과의 만남에서 2003. 8. 19)

결국 지역은 스스로의 발전전략을 스스로 만들어서 추진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그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자원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스스로의 발전전략, 의지를 갖춘 지방인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를 쳐다보고 의존해선 성공 못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도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전략을 지원하되 가장 혁신의 지가 강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자원을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의 정책입니다. 지방에는 지방적 사고를 가진 지방의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서 2004. 7. 8)

이러한 지방화와 혁신의 분위기를 더욱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민선 제4기를 이끌어 갈 단체장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자체의 행정역량이 민간기업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혁신의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양적으로만 팽창하는 도시가 아니라 질 높은 삶의 조건을 고루 갖춘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중앙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선 제4기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을 축하하는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2006. 7. 1)

지역은 지역에 맞는 발전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는 낙후 정도와 가능성에 따라 지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공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으며, 되는 사업도 있고 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성공 여부는 지역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기업 유치에 가장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지역기업인입니다. 여러분 스

스로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국책사업은 입안으로부터 통상 10년, 때로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문화중심도시도 2003년부터 시작됐는데, 도시의 삶을 바꾸려면 10년 20년 이상 걸립니다. 긴 호흡을 갖고 멀리 봐야 하며, 우리의 의식을 통째로 바꾸어야 합니다. 50년 뒤 광주·전남의 경쟁력은 지역 주민들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광주·전남 경제인 오찬간담회에서 2007. 5. 18)

얼마나 성공하느냐는 그 지방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중앙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지역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서로 협력해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낼 때 혁신역량도 커지고 더 큰 발전의 기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정책을 지켜 내는 일입니다. 균형발전정책은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있고, 2단계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짓수도 대단히 많고 복잡합니다. 막연하게 잘 되겠지 생각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하나둘씩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권자인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개별 정책과 균형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도권 집중의 흡입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균형발전정책이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로 뿌리내려 어떤 정부도 이를 흔들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기회를 잘 살려 나갑시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2007. 9. 12)

6. 균형발전정책은 계속될 것

•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1단계의 뼈대에 살 붙이는 것

일부 지표가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5년 만에 확연히 좋아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균형발전 실패’, 벌써 이런 제목을 뽑아 버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이 약 40년 내지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전 임시행정수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1975년이었습니다. 1975년, 1976년 그때 나왔으니까요, 그것만 해도 32년이 됩니다. 그렇게 해 온 것을 복구하는 것만 해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균형발전 결과를 가지고 성공 또는 실패를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수도권 흡입력의 큰 흐름으로 볼 때, 지금까지 정책으로는 너무 느리거나 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균형발전 2단계 정책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최대한 연내에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역언론 편집 ·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2007. 1. 30)

이제 중앙으로 집중되는 속도는 좀 줄여 놓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 순유입인구가 2002년에 21만 명에서 2006년 11만2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내총생산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넘게 심화되어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단시간에 고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강한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참여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인세 경감 등 지방투자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 교육, 복지, 의료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지방에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여들도록 만드는 정책입니다.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에서 2007. 7. 20)

• 2단계까지 최선을 다해야

2단계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오래 전부터 말씀하신 내용이고, 저 역시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1단계도 쉽지 않았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압력도 대단히 강합니다. 5년 내내 수도권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압력에 참여정부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서울, 수도권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규제를 마구 풀어 버리면 수도권이 혼란해집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여러분들이 볼 때 새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롭지 않아도 이번에 정리되고 발표된 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남은 정권이 이만큼 했으니까 다음 정부에 던져 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정리해서 굳이 제출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균형발전정책 갖고는 상황을 역전시키기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이 정책을 완전히 굳혀 놓지 않으면 한발 더 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 오찬에서 2007. 2. 7)

아직도 균형발전정책이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열심히 해 왔지만, 4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중앙 집중이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사람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에서 보듯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강력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입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기업과 사람의 행렬을 지방으로 확실히 돌려 보자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서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서 제공하고 지방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정책이 국회를 통과해야 균형발전이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에서조차 서로 의견이 나뉘어서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2등급 지역은 1등급 지역이 아니라서 불만이고, 3등급 지역은 2등급 지역이 아니어서 불만인 것입니다. 크게 보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데도 당장의 이해관계에 얽매어서, 아니면 내 밥그릇이 이웃집 밥그릇보다 좀 작다는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또는 무관심해서 이 정책은 국회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 정책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지역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균형발전정책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2007. 10. 31)

• 균형발전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

앞으로 2012년까지 기반시설에만 약 56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유발되는 투자까지 합하면 101조원을 넘습니다. 건설경기와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인건비나 자재 파동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량뿐만이 아닙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들은 건축, 환경, 문화, 정보통신, 교통 등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이 모여져 도시 건설의 모범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고, 우리 건설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명물이 될 것입니다.

(건설 60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2007. 6.20)

저는 토목 대통령은 아닙니다. 결국 균형발전이라는 계획 속에 저는 제2물결 대통령이 아니고 제3의 물결 대통령이거든요. 제3의 물결의 세대인데, 그래도 이 과정에서 결국 토목공사는 다음 정부에 가서 꽤 풍성하게 벌여 놓았으니까, 다음 정부 때 지방에 공사나 되고 하거든 참여정부 덕분이라고 그렇게 한번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사 부탁 안 했는데 오늘 하나 부탁드립니다.(웃음) '아 이거 참여정부 때 만들어 놓은 거' 라고 그렇게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미리 '다음 정부에 가면 지방에 공사 꼭 나온다' 이렇게 좀 써 주십시오.

지방 SOC 예산을 빨리 줄이려는 것을 국토 재편성을 위해 SOC 예산을 줄이지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열심히 해서 지방경제가 살아나도록 마지막 날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언론 편집 ·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2007. 1. 30)

• 혁신도시, 힘겹지만 빠른 속도로 달려와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보니까 정책 하나가 가시화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 전 분석을 해 보니, 어떤 정책에 관한 구상이 나와서 그 구상을 채택한 다음부터, 그것을 실제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논리적 검증까지 거쳐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정책을 다듬어 내는 데까지 보통 7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후 부처간의 협의와 국무회의 통과, 다시 국회를 거치기까지의 시간은 약 2년 여가 걸립니다.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기까지는 또 얼마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하나가 2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비교해 보면 균형발전, 특히 혁신도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해서 힘겹게 온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다 통과됐습니다만 마지막 될 때까지 역시 저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 놓고 나서 사업진행에 관해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는 사회적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어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감개무량하다고 할 만큼 특별하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잘 온 것 같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제주 주요인사 오찬간담회에서 2007. 9. 12)

5

혁신

1. 지금은 혁신경쟁의 시대

• 지금은 혁신경쟁의 시대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앞서 갈 수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도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혁신입니다. 핵심적인 동력도 바로 혁신에서 나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업과 정부, 정당, 사회조직 모두가 혁신해야 합니다. 개인도 혁신해야 합니다. 조직이든 개인이든 혁신하지 않으면 낙오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혼자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짐이 되어 우리 모두를 함께 낙오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얕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서 크게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앞서서 파악하고, 원인과 의미를 알아내고, 대안을 찾아내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실천이 축적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사회적으로 확대될 때 그것은 이제 문화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혁신 2006’에서 2006. 2. 15)

지금은 혁신경쟁의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 없이 혁신을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혁신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진전으로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넓어지고 있고,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쟁상대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선진국을 뒤따라가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혁신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한발 앞서 나가야 합니다. 할 일은 제때 하고, 미래의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 래야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넘어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혁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제도 개혁은 물론 일하는 방식과 문화까지 질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 관리기법의 도입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혁신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혁신포럼 2007 축하 메시지에서 2007. 2. 7)

• 혁신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는 것

혁신은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것보다는 일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진보를 이루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05. 1. 3)

일 바쁜데 왜 자꾸 혁신하라고 하냐는 불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로 중앙정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많았는데,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혁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과 혁신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 공장 설비를 가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설비를 만들고 개량하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만들지 왜 설비에 매달리느냐고 핀잔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처럼 망치로 두들겨 만든 방식으로는 지금의 잘 정비된 설비를 가지고 생산하는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도 않습니다.

혁신을 하는 것은 일하는 설비를 바꾸고 동작을 어떻게 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며, 일의 순서를 어떻게 배치, 표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느냐의 문제입니다.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것이며, 일을 투명하게 하고 분권, 자율, 참여의 목표를 이뤄 나가는 과정입니다.

일 바쁜데 혁신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좋은 설비, 좋은 과정의 설계에서 좋은 제품과 빠른 성과가 나오는 것이니 혁신과 일을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방행정혁신토론회 발언에서 2006. 10. 27)

• 학습 없이 혁신에 성공한 일 없어

혁신한다면서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건 자발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요구 받는 것이고 학습이란 것이 꼭 창의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이면서도 저도 여러분도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장·차관이면 부처 최고 지도자이고 국민들이 봐도 나라 지도자들인데 토요일에 모여라, 공부해라, 이렇게 생각되면 모이자고 말하는 저도 아주 미안하고 모이는 여러분도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없이 혁신에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습 없이 혁신 성공하는 일 없으니 성공하자면 부득이 학습해야 합니다. 크게 봐서 혁신의 과정에서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학습이라면 창조적이고 적극적, 능동적인 일에 포함되는 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정부혁신추진 토론회에서 2004. 7. 3)

• 아이디어와 열정이 필요

혁신에 성공한 모든 경험에는 반드시 리더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리더가 관심이 없는 혁신이 성공한 사례도 없습니다. 학습 없이 성공한 일도 없지만 리더가 무관심한 혁신은 성공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패의 관건이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전으로 비전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전략 없이 목표달성은 없습니다. 전략은 거저 나오지 않고 풍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리더 스스로 대단히 창조적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고, 조직 전체에서 활발히 새로운 제안이 나오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결국 혁신이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단초는 아이디어입니다. 목표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디어가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열정입니다. 열정 없이는 아이

디어도 안 나오고 추진도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시간적 개념은 의미 없습니다. 기계적, 반복적, 수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 40시간, 주 5일도 중요하지만 창조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시간적 단위는 필요 없습니다.

(정부혁신추진 토론회에서 2004. 7. 3)

2. 정부 혁신

•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써 왔습니다. 과학 또는 산업적 용어로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 전반의 정책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면 아주 효율을 추구하는 말로서는 적당한 것 같은데, 소외되어 가고 있는 산업의 영역이나 분배에 있어서 소외된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는 ‘아,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의 경제 1분야이든 2분야이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꼭 쓸 것인가, 쓴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소외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와 행정부처의 책임 있는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5년 뒤에는 그야말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들을 갖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 2차회의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전략”에서 2003. 1. 21)

• 정부개혁은 공무원이 주도해야

정부개혁, 말은 정부개혁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전부 제도개혁에 관해서 기구개혁 제도개편 얘기를 합니다. 이번 정부개혁은 그야말로 소프트웨어적, 즉 운영에 관한 개혁부터 먼저 시작해서 그것이 필요해서 기구로 가고 조직으로 개편이 가는 순서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 컨설팅 얘기도 나오는데 적절히 활용되어야 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떠넘겨 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 되지는 않도록 민간 컨설팅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정부개혁을 공무원들 스스로 주도해서 해 보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어서 자율적 개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이년 뒤 국민들한테 아니라고 평가되면 그때에는 공무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개혁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된 공무원들은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고 외부적 수술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원리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해야 될 새로운 서비스를 발견해 내고, 그렇게 해서 낡은 서비스나 필요 없는 조직들을 스스로 털어내고 하는 창의적인 개혁의 바람이 공무원 조직의 중추에서부터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 6차회의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에서 2003. 1. 23)

• 혁신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여러분들이 혁신의 최고 기술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토론을 한 번 해서 뭐가 나오면 덮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토론을 통해 끝까지 가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조직은 일부 사람들이 선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청와대 공무원은 전원이 선도팀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해 봅시다. 업무에서 비능률과 비효율을 찾아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집요하게 매달려 끝내 해결하는 변화의 지도자들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를 위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발견하고 나쁜 것은 뿌리를 뽑고 잘된 것은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와 나를 혁신해야 정부가 혁신됩니다. 그래야 일 잘하는 정부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지 않으면 새로운 도약은 이를 수 없습니다. 옛날처럼 일사불란하게 따라오라고 할 수도 없고, 따라오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 스스로 참여하여 길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발굴해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적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대화하는 정부가 되어야 갈

등의 예방과 조정도 가능합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원연수 특강에서 2004. 1. 10)

• 민간기업 수준을 앞서 보자는 것이 혁신 추진의 목표

혁신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는 끝이 없습니다. 더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것이지만 목표와 수준을 정한다면, 민간기업 수준을 앞서 보자는 것이 혁신추진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기가 부담스러우면 같은 수준까지만이라도 갔으면 합니다. 살펴보면 정부가 앞서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민간기업을 조금 앞서 나가자는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민간과 경쟁해서도 조금도 뒤지지 않고 앞설 수 있는 혁신을 해 나갑시다.

(정부혁신 및 정책책임성 토론회에서 2006. 5. 27)

• 공기업도 혁신해야

공공재 다루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으로 이양하라는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끊임 없이 나옵니다. 실제로 민영화했을 때 공익이 희생될 수 있고 공공 서비스가 열악해질 수 있어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해결책은 딱 하나뿐입니다. 공기업이 민영기업보다 효율적으로 경영되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걸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오늘 그거 하자고 모였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못했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을 통해 효율성 높이고 보다 투명해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평가기준 세우고 평가하고 받고 해서 민영기업과 당당히 경쟁해 봅시다. 공무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공기업 가면 낙하산이라고 하고 개방형 자리 몇 개 만들어 놓고 외부 인사 채용하면 개혁 잘했다고 하는데, 실제 공무원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공무원들이 증명하십시오. 공무원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직은 개방하고 민영기업 가지 마라 하고 공기업 가면 낙하산이라고 하고, 이런 사면초가 속에서 공직자들이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엘리트가 아닙니다.

엘리트의 첫 조건이 자기 일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엘리트가 지적만 받고 있는데 뛰어넘자는 것입니다. 민영기업보다 더 효율적이고 신뢰 받는

기업으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후배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꼭 성공시켜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좋은 사례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유익한 학습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에서 2005. 5. 3)

혁신은 오늘날 모든 국가, 모든 조직의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혁신 경쟁의 시대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혁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공공기관 지도자 여러분들은 대개 정부투자기관도 있고 출연기관, 산하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조직이나 그동안 민영화 문제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항상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몸살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혁신이 제대로 되면 다 극복 가능한 일인데 내부적으로 혁신이 안 되니까 자연히 강제적으로 민영화하는 방법, 시장 속에 내팽개쳐져 시장 속에서 경쟁하라는 발상이 나왔습니다. 내부에서 효율성 발휘 못하니까 외부에서 진단 들어가고 강제적으로 구조조정 들어가는 거지요.

그 조직이 효율성이 높으면 민영화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효율성도 살리고 공익성도 살리는 조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대체로 공기업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일반적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물론 반론도 있습니다만- 한국전력이나 포항제철 같은 기업들이 세계 속에서 경쟁 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공익성을 살리고 효율을 올리기 위해 혁신으로 대안을 찾아보자,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에서 2006. 7. 7)

3. 시스템, 프로세스 혁신

• 꾸준히 혁신의 틀을 만들어 나갈 것

정부가 토론과 회의, 잘 발달된 인터넷 등을 활용해 한국사회를 한번 변화시켜 보고 업그레이드시켜 보자는 게 혁신주체에 관한 저의 구상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틀을 만들

어 드리겠습니다.

혁신적인 주체를 만들자는 것인데 무슨 문화혁명이 있고 평가르기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문화혁명이 가능한 나라입니까.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건의서, 제안서를 내는 등 열심히 일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혁신주체들이 한 관서뿐 아니라 관서 간, 청(廳) 간 네트워크를 이뤄 다른 부처에서 하는 일도 바꾸는 등 정부 내 횡적 연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정부가 바뀌면 혁신 팀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과거엔 교수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했지만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공무원 자르는 것을 첫번째로 삼지도 않고 작은 정부도 하지 않겠습니다.

(전국 경찰 지휘관 초청 특강에서 2003. 6. 16)

• 프로세스, 시스템, 문화의 정착이 혁신의 핵심

구체적으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장 적절한 프로세스를 이루기 위해 시스템은 얼마나 정비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으로 정착되지 않으면 지난해 성과가 좀 있더라도 올해에 사람이 바뀐다면 그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정착돼야 하고 문화도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결과로서의 작업성과도 검증해야 하지만 프로세스, 시스템, 문화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결과로서 성과는 조직, 부서가 다 다르고 목표가 달라 부처 보고 때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전 부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관해 추진해 가는 공통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 분권 자율을 도입하자, 토론 문화를 확산하자 등은 전 부처에 공통된 부분입니다.

지도만 있고 여행은 없었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보지만 실제 업무 과정과 제도, 문화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작년 이맘때 정부 혁신의 비전 전략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드맵에 거의 수용돼 있습니다.

말은 있고 실천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서도 혁신의 성공 확률이 13% 정도라고 통계 낸 것처럼 변화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물며 정부 조직은 사기업보다 훨씬 더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공직 사회는 사적 기업과 다르고 CEO 권한과 임기제 권력의 한

계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량 분석을 하기 어려운 업무 분석의 차이도 있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의식은 가져야 합니다. 성과를 바랍니다. 모자라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모든 훌륭한 사람도 학습을 통해 더 훌륭히 성취하게 됩니다.

(제3차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2004. 1. 3)

• 경험을 객관화하여 축적해야

국가 평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평가제도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평가제도를 만들었다고 당장 뜻대로 작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평가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 가는 과정입니다. 평가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한지 조직의 수용성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지난 날의 자료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과정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합니다.

정책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운영자의 의지와 역량이 중요하고, 경험을 객관화하고 자료화해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사례 분석은 특히 중요합니다. 통계 등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존중하고 분석했는가를 비롯한 정책 프로세스도 평가해야 합니다. 정책 소요시간이 적정했는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개선과 개량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합니다. 이것은 주로 사용자 요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 동아리에서 사용자들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토론해 가면서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각 기관장이 혁신문화에 있어서 핵심동력인 동아리를 우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장·차관 정부혁신토론회에서 2007. 10. 26)

4. 행정 서비스 혁신

• 서비스에서는 최고가 되어야

‘지금 우리 정부가 과연 최고인가, 일류인가, 다른 나라 정부와 비교해서 과연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는 기업과 비교해서 우리 정부의 일하는 수준이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정부, 공무

원, 각 부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장·차관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쟁제일주의, 승자독식주의적 관점에서의 최고가 아니라, 서비스하는 사람으로서 서비스에서는 최고가 돼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정부혁신 장·차관 워크샵에서 2004. 10. 30)

•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이 수 없이 많아

공직자들이 사는 길이 혁신입니다.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떠한 공직 사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보고 철밥통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안 좋고 부담되고 그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혁신입니다. 혁신으로 계속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은 철밥통이면 어떻게 금밥통이면 어떻습니까. 다만 성과 있게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면 평생을 해도 시비가 없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신뢰 받는 봉사는 역시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혁신을 통해서 일이 줄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뭐하는가? 정부가 일을 만들어야지요.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봉사를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공무원 재교육 과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하면 됩니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에서 2006. 4. 12)

• 중앙정부는 지자체에서 제도 시행 차질 없도록 지원해 줘야

중앙정부는 신규 서비스 발굴과 부처 간 업무의 합리적 조정,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요. 지역의 복지 수요 강화 부분도 복지부 요구 사항, 재정부분 핵심 사항을 파악해서 지자체 일선에서 재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만 주고 돈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제도 시행이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차원에서는 평가체계 확립해 주시고, 시·도에 전담 부서 설치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전담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는 이미 설치된 모양입니다. 광역 시도에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고, 특히 이는 사람의 열정이 중요합니다. 시도 공무원 교육 과정에서 복지 분야의 배치전환과

정 교육을 강화해 주는 문제, 서비스 지원의 지역별 합리적 배분도 중앙정부의 역할처럼 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혁신 국정보고회에서 2007. 7. 12)

• 인력 전환배치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계 만들어야

후보 당선자 시절에 복지 전담 공무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전달체계 때문에 도저히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 전담 공무원을 늘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늘려 주자고 하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은 “예” 하고는 돌아서면 안 늘려요. 지금 장관 말고 옛날 장관. 우리 사회가 공직 사회, 공무원은 월급만 받아먹고 가끔 보도에 보면 연장 근로 안 하고 도장만 찍고, 일도 안 하고 수당 받아가고 이런 인식들이 있고 일부 사실이니까, 공무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저항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안 늘리면 서비스를 어떻게 확충합니까. 치안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많이 늘렸습니다. 1일 2교대에 시달리는데 품질 좋은 서비스 나오지 않거든요. 집배원 정규직화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하는 데 스트레스를 줄여 줘야 합니다. 복지전달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든 업무가 많이 전산화 간소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늘기 때문에 공무원이 남을 리는 없습니다. 전환이 돼야 합니다. 국민 세금인데 계속 늘릴 수는 없으니 인력 전환배치를 통해서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해서 통합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혁신 국정보고회에서 2007. 7. 12)

• 정부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공직사회는 정책을 생산·집행하는 책임 있는 조직으로서,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고, 평가도 합리적 논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소통의 위기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매체가 언론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 전체 또

는 정치에 대한 신뢰의 붕괴나 가치 판단의 혼동을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국정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를 비교·대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존 매체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수준도 매우 높게 발전되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도 업무의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공직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공직자의 의무 중 하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관 정부혁신토론회에서 2007. 10. 26)

5. 참여정부, 행정 시스템 전자정부에 맞게 혁신

• 전자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부처가 알아서 하도록 맡기려 합니다. 정부혁신은 여러 부분에서 강도 높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엔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진이 어려웠으나 이제 안정된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싸움은 국회서 하고 정부는 강력히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 걸리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의합시다. 핵심부분인 전자결재는 단순히 종이를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지식공유와 지식경영 시스템을 정부에 전면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맘을 흘리며 만들고 있습니다.

(U-Korea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2004. 6. 9)

• 참여정부, 행정 시스템과 행정 마인드 전자정부에 맞게 혁신

보통 경제는 일류, 행정은 3류 또는 4류, 이런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심지어 앨빈 토플러 같은 사람의 책에도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전자정부 수준에 있어서는 그래도 행정도 이제 2류가 아니지요, 일류수준이지요.

참여정부는 행정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전자정부 통합계획을 세웠고, 행정 시스템과 행정의 마인드를 전체적으로 전자정부에 맞게 뜯어고쳤습니다.

전자정부, 그 IT 기술 수준이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거 되냐, 이런 기능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IT 기술이 어떤 것은 외국산 툴을 쓰고 해서 좀 비싸긴 한데,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냐? IT 기술만으로 전자정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처들에 있어서는 독립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이제 상당 수준 이미 시작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 정부의 통합적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러자면 행정 시스템을 전자정부에 맞추어야 되고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전자정부에 맞추어야 됩니다. 가속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의지를 가지고 조직을 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정부를 위해서 장·차관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들과 여러 차례 토론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자정부 성과 보고회에서 2007. 9. 19)

• 전자정부 5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정보통합 수준 들어서

전자정부 5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인 정보통합 수준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소개했던, 소위 민원서류 한 장만 내면 나머지 모든 정보는 정부의 정보공유 시스템에 의해서 정부가 알아서 처리한다, 이런 것이 초보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과제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정보 통합 시스템,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정보통합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각 부처에서 공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에 관한 기초 데이터가 법원 다르고 행정자치부 다르고 국세청 다르고 건설교통부 다르고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이것을 전자적으로 일치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데 지난 5년간을 꼬박 소비하고도 아직 완성을 못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처가 게을리한 것 같지는 않은데도 그렇습니다.

농업부문 정보에 있어서도 기초통계가 충분치 못해서 우리가 농업소득 직불 등의 행정에 있어서 자꾸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문에 가끔 마치 공무원들이 바보노릇한

것처럼 하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런 데이터의 기본을 다시 정비하고 이것을 부처 간 통합해 가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행정 일반에서 문제가 있듯이, 부처 간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처의 정보를 타 부처와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정보, 조세정보 등은 아주 민감한 사생활 정보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계, 가공 통계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관한 정보, 수사에 관한 정보, 말하자면 형사사법에 관한 정보 등 공유·공개가 어려운 개인정보는 의미 있는 통계로 전부 가공하라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공해서 공유하는 기반으로 가야 합니다.

(전자정부 성과 보고회에서 2007. 9. 19)

6. 지역 혁신

• 지자체는 관리 대상이 아닌 국가경영의 동반자이며 고객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대하는 중앙정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경영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고객이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부혁신의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혁신주체 여러분이 마음껏 창의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혁신도시의 유치와 관련해서 타협하고 양보하는 결단을 통해서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하는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특히 이곳 광주와 전남은 두 개의 혁신도시를 하나로 합쳐서 공동으로 건설하는 특별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협력하는 자세로 손잡고 일해 나간다면 지역혁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에서 2006. 11. 7)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혁신 역량

앞으로 지방은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화시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

다.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은 지역을 혁신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 집단의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발전 계획 세우고 동력을 만들어 나가면서 중앙정부의 지원 이끌어 내는 지방 주도형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부산항만공사 창립행사에서 2004. 1. 16)

일선 집행기관이 먼저 혁신되지 않으면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고, 공기업 같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국민과 직접 접촉면을 갖고 행정을 집행하는 조직은 지방정부인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가 성공해야 전체적으로 정부혁신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가 정보를 공유하고 더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 협력하고 더 좋은 기회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방행정 혁신토론회에서 2005. 6. 18)

• 지역의 유기적 연계를 갖춘 산·학·연 체계로 만들어 나가야

지역의 유기적 연계를 갖춘 산·학·연 체계로 만들어 나갑니다. 지역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개발된 기술을 기업화해 나가는 지원방안이 갖춰져야 지역혁신클러스터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지역혁신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지원체계를 정비합니다. 연구개발(R&D) 지원은 직접지원과 인센티브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올해는 있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무역진흥대책회의에서 2004. 2. 6)

• 참여정부의 지역혁신 지원 방식은 달라

저는 올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역혁신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이야말로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치고 지역발전정책, 그리고 균형발전정책 하지 않은 정부는 없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이전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과감하고 적극적인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전략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돈과 자원을 내려 보내는 그런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과 예산 모두 지방, 지방대학, 지방 중소기업을 먼저 고려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제시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왔습니다.

먼저 지역혁신의 토대가 되는 지식기반 구축과 혁신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방의 연구개발 예산만 보더라도 연평균 26.5%씩 늘려왔습니다. 금액으로는 지난 4년 동안 1조 5,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11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누리사업과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등을 통해서 지방대학의 핵심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제4회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에서 2007. 9. 17)

7. 반복 재생산 가능한 혁신으로

•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근본적인 혁신이 되어야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근본적인 혁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혁신의 목표입니다.

지난 3년간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수요와 환경을 보다 깊이 분석해서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그래서 오류를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품질관리, 성과관리, 투박한 예산편성 등 많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고, 결과를 평가해서 이를 조직과 개인의 상벌과 인사로 연결시키는 평가체계까지 하나하나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혁신 2006’에서 2006. 2. 15)

• 혁신은 한번 성공해서 제도화되면 잘 바뀌지 않아

대통령으로 임기 5년 지내는 동안,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국회 과반수 기간이 딱 1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라져 있는 주제 외에는 놀랄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대통령의 정치적 교섭력에 의지한 것보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여건이 좋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혁신입니다.

혁신은 국회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더라도 우리들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점만은 성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서 가장 많이 남는 분야입니다.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면 많이 동요하게 되지만, 혁신은 한번 성공해서 제도화되면 잘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 및 정책책임성 토론회에서 2006. 5. 27)

• 혁신에 대한 비판을 대안으로 극복해 나가야

혁신에 대해 내부에 불만이 있고 외부에서의 비판도 있습니다. 심하면 보기에 따라 비난으로 들리는 비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혁신은 꼭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고, 효율이 낮으면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혁신이기 때문에 혁신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비판하고 있는 분도 대안 있는 비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빛과 그늘이 있듯이 혁신에서도 항상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 가는 것이 혁신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일면에서만 비추고 대안도 없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좀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데 지혜를 주신다면 어떤 비판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도 없이 비판한다면 참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 일정 수준 올라간 혁신은 조직문화로 바뀝니다

정부가 곧 바뀌게 됩니다. 누구라도 혁신을 안 하려고야 하겠습니까만 강도도 다르고 방법도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일정 수준에 올라간 혁신은 조직의 문화로서 계속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혁신 수준이 높은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CEO들이 여러 번 바뀌어도 기업문화는 그대로 살아서 계속 생산성을 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도 그 수준까지 가면 혁신이 계속되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는지, 적어도 자체 동력이 굴러갈 만한 수준까지 왔는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아직 뿌리가 덜 내린 제도도 있을 것입니다. 뿌리를 확실히 내릴 수 있으면 내리는 것도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손발을 맞춰 좀더 열심히 하면 혁신을 정부의 조직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혁신을 문화로 만들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학습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

과학 · 기술

1.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의 핵심과제

- 과학기술 혁신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제

저는 과학기술 혁신이 국가발전전략에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직접 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많이 내세워서 얘기하지 않았습
니다. 주로 동북아 얘기를 하고 또 서민복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기술 혁신
이야말로 동북아 시장을 넓히는 것에 못지않게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국가 경쟁
력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은 있지만 한번 성공했던 과학입국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되살려 간다는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제2차라는 이름을 붙일까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채택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해 주시
고 열의를 가지고 지혜를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 2차회의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전략”에서 2003. 1. 21)

• 산업지도와 과학기술지도의 유기적 통합성을 가져야

기반에 있어서 통일적 내용을 가지고 있고 각 부처가 합의했고 부처뿐만이 아니라 연구소가 다 합의한 우리나라 산업지도가 있다면, 산업지도와 과학기술지도가 지금 일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각 부처라든지 사회적 기관이나 상호 간에 분담할 업무에 관해서도 잘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처로 따진다면 어느 부처는 무엇까지 하고 어느 부처는 어디까지 하고 등의 구분이 되어 있겠지요? 같은 영역에서도 역할이 다르게 분할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분담되면-전부 계획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대학과 연구소, 정부와 산업체 사이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도 설계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교육인적자원부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미래의 산업지도에 맞추어서 인력양성이 가야 되는데, 일꾼만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일꾼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적자원이라고 이름 붙여 놓은 것도 일꾼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해서 각 학교의 학과 설치나 정원 조정 등의 결정이 있을 때 적어도 이 지도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위 이 산업지도와 과학기술지도가 얼마나 정확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되고 있는 것인가요?

(대통령직인수위 2차회의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전략”에서 2003. 1. 21)

• 과학기술은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

오전에 과학기술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라기보다는 토론이 많았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잘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거 때에는 과학기술인을 만났을 때만 과학기술 이야기를 했는데 당선된 후에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해 왔습니다.

성장발전의 시각에서 볼 때 성장발전의 전략으로 저는 첫째로, 과학기술 혁신을 꼽습니다. 두번째는 경제 시스템이고, 세번째는 사회문화 혁신, 네번째는 동북아 허브, 다섯

번째는 지방화를 꼽습니다.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첫번째 과제이자 핵심적 과제입니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여러분이 제게 시킬 일은 많을 것입니다. 제게 행동의 설계도를 만들어 주시면 열심히 하겠고, 그러면 여러분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부입장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부 출연 연구기관 오찬 방문에서 2003. 3. 20)

• 국가 경쟁력 강화는 기술혁신이 필수 요인

나는 과학기술에 대해 동경심과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을 이공계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느님이 심판하기 보다는 인간이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랬기에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이 재판하는 이공계에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타고나기를 이공계가 아니었는지 고생만 거듭했습니다. 그래도 한 아이는 지금은 컴퓨터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어 달라는 뜻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과학입국을 내세워 기술력을 우대하고 투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난 당시 상업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그 대열에 끼기 기회가 없었습니다. 부럽고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뒤에 활동할 때는 주 관심사가 경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리엔지니어링이니 다운사이징이니 하는 경영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아무리 경영합리화해도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기술력 중심의 기업은 결국 경영체계를 다각화해 잘해 온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되었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 5대 원칙에 기술혁신이 들어있습니다. 전 각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구체적인 길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십시오. 의지와 열의를 갖고 따라가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학기술투자, 양적으로 늘리고 질적으로 거품 빼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효율 나오도록 과학기술연구비, 과제비 등 시스템을 합리화 하겠습니다. 학교와 연구소, 산업 간 협력체계를 통해 높은 투자로 높은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6회 과학의 날 기념식 및 연구소에서 2003. 4. 21)

• 기술혁신정책을 통해 미래경쟁력에 대해 승부를 걸어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보자는 전략을 채택한지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일을 했으나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큰 틀은 짚지만 실제로 추진과정에서 많은 세부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거시적 관점에서 틀을 바라봤다면, 이제 구체적인 현장에서 미시적인 정책들이 밀도 있게 추진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활성화 또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이런 과제를 놓고 얘기할 때 거시적인 정책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고 거시적 정책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자는 논의가 많습니다. 정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시적 정책이 효과적으로 채택되고, 그 미시적 정책이 성공해야 결국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고 경쟁력 강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특히 기술혁신정책을 통해 미래경쟁력에 대해 승부를 걸어 보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입니다.

과학기술부에 전체적인 연구개발(R&D) 정책 조정을 비롯해 크게는 산업정책, 인력양성정책의 밑그림까지도 그려 달라고 부탁하고, 정부조직도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산업,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게 하려는 것도 그와 같은 전략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일이 매우 중요하고 승부가 걸린 일입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자문회의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하나의 보람을 찾도록 마음가짐을 가져 주십시오.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2004. 6. 30)

2.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은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은 역시 인재양성

산업의 결정적인 요인은 경쟁력입니다. 생산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기술의 경쟁우위를 가져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전략입니다.

인력양성에 관해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기술혁신에 맥이 닿아 있으면 우선순위를 높이겠습니다. 연구소와 생산현장의 기술혁신이 함께 만나는 기술혁신전략, 인재양성전략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전경련 신춘포럼 강연에서 2004. 2. 4)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은 역시 인재양성입니다. 「이공계지원특별법」, 이공계 전공자 공직채용 목표제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력을 키우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특히 교육에서 취업과 연구, 은퇴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과학기술인을 양성·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2007 전시회 개막식 축사에서 2007. 10. 25)

• 학교와 연구소가 기술혁신을 유인해야

오늘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 보고로 정책방향의 큰 틀을 잘 잡았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오늘 정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하여 기술혁신의 주체가 체계적으로 네트워크되어 모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 세계 최고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기술력을 창출하여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추진일정과 추진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선택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총리가 권한과 역량을 갖고 노력해 주기 바라고, 필요하면 경제관계 장관회의 등 상위회의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벤

처기업, 중소기업 등 각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이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시장의 수요가 반영되어 인력이 양성되도록 기술수준별, 지역별 기업가 단체를 활성화하도록 하여, 학교와 연구소의 기술혁신을 유인하는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하여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투입되는 투자시장이 필요한데, 이 시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성공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제51회 국정과제회의에서 2004. 7. 30)

• 연구개발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올라오는 보고서가 시간이 갈수록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대단히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그리고 이 정도면 아마 충분히 여러 가지의 상황과 조건들을 검토한 실현성이 높은 보고서다, 라는 느낌을 받아 갑니다. 그래서 제가 받고 있는 보고서의 수준만큼 빠르게 발전한다면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투입하는 만큼은 성과를 꼭 챙겨서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가는, 이런 연구개발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정책을 꼭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제정했으면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2005. 1. 6)

얼마 전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하나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기획단계부터 선정, 점검, 성과 측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단계를 정부의 관리체계를 손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속도가 답답한데요. 나보고 하라고 해도 더 빨리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고 지시해도 그보다 빠리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다잡아

서 정부가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계시니까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미래바이오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2006. 6. 29)

• 인재양성을 위한 이공계 대학교육 개혁이 필요

이공계 우대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실제로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자리를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리고, 또 그 밖에 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장관도 좀더 내놓으라고 그러면 장관도 이공계를 좀더 임명하는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사회적 발언권, 사회적 영향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그 점에 관해서 제도 개선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고민은 대한민국의 이공계 학생 숫자가 엄청 많은데 비해 기술한국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창조적 과학기술인력은 부족하다는 보고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대단히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충분합니까 물으면, 기업인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목표로 추진해가는데 대단히 심각한 장애사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대학교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과학기술인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점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정부도 올해에는 대학교육 특히 이공계 대학교육이 소위 선진 과학기술 한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또 과학기술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2005. 1. 6)

•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야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장의 경쟁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면 기술경쟁력과 창조적 역량이 시장에 꽃피게 되고 과학기술도 꽃이 필니다. 투명한 시장경쟁을 합시다. 권력이 남용되던 시대에는 권력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과학기술인력들은 권력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권력에 소외된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은 꼭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행정고시 중심의 공직사회를 제도적으로 일반 행정직에서도 밀리지 않고 대등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이를 위한 개혁을 기술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제36회 과학의 날 기념식 및 연구소에서 2003. 4. 21)

3. 과학기술 역량강화에 정부의 몫을 다할 것

• 기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에는 적극적 지원할 것

중소기업은 2만 달러 시대를 향한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혁신전략의 주체도 중소기업이고 경제발전 전략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을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겠습니다.

최근의 경제 논의가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발전은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혁신전략하의 고급기술 양성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혁신을 통해 창조적 기업이 시장을 형성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문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의 문제이며, 발전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같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고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토론이 경제적 의제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인들도 경제적 의제가 이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의 양극화 현상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력과 기술, 자금, 시장 등의 중소기업에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문제의 경우 근로자 간 임금 격차 문제는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 간에,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의 경제를 위해 협의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다만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시장 친화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할 경우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혁신과 마찬가지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혁신클러스터를 통해서 연구개발을 위한 물적 인프라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의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특히 R&D(연구개발) 지원 중 상당 부분을 인적 자원 양성에 투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나 외부적 충격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 단기대책을 추진하겠지만, 희망도 없이 지원에 의해서 수명을 연장해 경쟁력 있는 다른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재정경제부 중심으로 7천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나 6월 초 조사결과가 나오면 6월 말까지 오늘 논의했던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초대간담회에서 2004. 5. 21)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도 노력

정부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놓고 중소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왔습니다. 저 스스로 열두 차례나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 하나 하나를 토론했습니다. 경쟁력 강화 대책, 금융지원체계 개편, 공공기관 구매 등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틀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효과도 없이 이름만 걸어 놓은 정책은 과감히 털어 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만 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기업 유형별, 성장 단계별로 수요자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지원방식도 시장친화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R&D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서 중소기업과 지방대학의 제휴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육성, 국가 균형발전은 그 자체가 중요한 일이지만, 아울러 지방의 혁신기반을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난과 인력난 해소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보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입니다.

(벤처코리아 2006 발언에서 2006. 10. 19)

• 과학기술 발전 위해 정부도 최선의 노력 다할 것

대한민국 과학축제, ‘미래성장동력 2007’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IT, BT, NT에서 환경, 우주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 과학기술의 우수한 성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은 과학의 꿈을 키우고, 국민들은 우리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개발에 헌신하고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과학기술 수준이 시장의 크기와 시장지배력을 결정합니다. 세계화,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한층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경제의 위치가 달라졌고, 경쟁 상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따라잡는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해야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한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첫번째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예산을 2003년 6조 5,000억 원에서 올해 9조 8,000억 원으로 크게 늘려왔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에는 10조 9,000억 원까지 갑니다. 특히 기초 연구의 비중은 2003년 19.5%에서 내년에 25.6%까지 확대됩니다. 예산을 늘렸을 뿐 아니라, 사전 타당성 조사와 사후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도 높여 가고 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2007’ 전시회 개막식 축사에서 2007. 10. 25)

•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육성해야

2003년 선정한 차세대 성장동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와이브로와 지상파 DMB를 개발했습니다. 하이브리드카와 지능형 로봇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와이브로가 제3세대 이동통신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경사입니다. 그만큼 세계시장 진출의 전망도 밝아졌습니다.

이 모두가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탐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다시 한번 큰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는 반도체와 CDMA 기술이 십수 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듯이, 지금 우리가 뿌린 씨앗은 장차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과학기술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학인재를 키우고 여러분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과학기술 혁신에 더욱 매진하여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동력 2007 전시회 개막식 축사에서 2007. 10. 25)

4. 과학기술 혁신

• 기술혁신은 국가 경쟁력 강화 5대 원칙 중 하나

국가 경쟁력 강화 5대 원칙에 기술혁신이 들어있습니다. 전 각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구체적인 길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십시오. 의지와 열의를 갖고 따라가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학기술투자, 양적으로 늘리고 질적으로 거품 빼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효율 나오도록 과학기술연구비, 과제비 등 시스템을 합리화하겠습니다. 학교와 연구소, 산업 간 협력체계를 통해 높은 투자로 높은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지위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장의 경쟁시스템을 잘 작동시키면 기술경쟁력과 창조적 역량이 시장에 꽃피게 되고 과학기술도 꽃이 필니다. 투명한 시장경쟁을 합시다. 권력이 남용되던 시대에는 권력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자리가 없었습니다. 과학기술인력들은 권력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권력에 소외된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은 꼭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제36회 과학의 날 기념식 및 연구소에서 2003. 4. 21)

• 기술혁신으로 경쟁력 강화해야

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제 전망은 기술혁신을 통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규모에 비춰 볼 때 전체적인 연구개발 투자, 그 중에서 공공부문 투자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투자의 양을 확대하는 것과는 별도로 투자의 효율성을 두 배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지금까지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는 거꾸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운용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문 분야, 기반·핵심기술, 실제 현장에 응용되는 실용기술까지를 포괄해 단계적으로 효율성 있게 배분되고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2003. 9. 18)

산업의 결정적인 요인은 경쟁력입니다. 생산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기술의 경쟁우위를 가져야 합니다. 과학기술혁신,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전략입니다.

인력양성에 관해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기술혁신에 맥이 닿아 있으면 우선순위를 높이겠습니다. 연구소와 생산현장의 기술혁신이 함께 만나는 기술혁신전략, 인재양성전략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전경련 신춘포럼 강연에서 2004. 2. 4)

• 국가 과학기술체계 혁신 성공은 한국의 역량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

국가 과학기술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혁신이 성공하면 한국의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과학기술부가 한국의 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상위부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약의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과학기술 예산이 경쟁력 강화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D 예산의 관리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을 최우선시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인재의 양성에서 핵심 연구인력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산업인력도 중요합니다. 시야와 관심을 연구소에 머물지 않고 산업현장 혁신 분야까지 넓혀 현장 라인에서 나오는 기술혁신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2004. 1. 30)

우리 한국의 국가기술 혁신체계 또는 지방기술 혁신체계, 이 체계 자체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미 최고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논문은 물론이고 특허 출원 건수가 재작년에 6위까지 왔다가 작년에는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민정부 이래로 한국 과학기술은 잘 가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에서는 그 잘 가고 있는 수준을 한 단계 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저는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이 최고입니다. 정말 열심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 2. 27)

5. 경쟁력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만들어 갑니다

• 바이오테크는 정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바이오테크는 정부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한 특별한 관심분야입니다. 바이오산업은 인류에게 고통 주는 각종 질병을 퇴치하고 식량 환경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입니다. 바이오는 건강과 장수라는 우리 모두의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꿈의 학문입니다. 바이오는 한국 경제의 미래 활로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빈약한 대신에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신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은 바로 이 인적자원에서 비롯됩니다. 또 인적자원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하시는 여러분의 어깨 위에 한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에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간다는 자부심을 함께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모두의 꿈과 한국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주십시오.

정부도 2012년까지 세계 7위의 바이오산업으로 육성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가

가치 생산에 있어 10배 정도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연간 고용 8,000명에서 9만 7,000명으로, 부가가치 생산은 1조 4,000억 원에서 16조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 오송단지가 세계적인 바이오단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오송단지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체제가 구축되고 세계 우수의 연구소와 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송바이오단지 기공식과 국제바이오심포지엄 특별연설에서 2003. 10. 27)

• 디자인 산업은 사람과 이어 주는 감성의 연결과 같은 것

먼저 한마디로 느낌을 말하면 아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우 밝은 희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디자인처럼 창의력이 요구되는 분야에 정부가 너무 앞서서 게지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자원부가 하는 것은 뒤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디자인에 대해 관이 나서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해외진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인턴십 학점제라든가, 초·중등 디자인교육, 디자인센터 창설 등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교육과 기업의 결합을 위해 디자인뿐 아니라 전체 산업기술 전 분야에서 확실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정부정책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을 잘 이용한 기업이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잘 지원하는 대학이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한 바 있지만 디자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성장전략, 경쟁력 확보전략으로 기술혁신을 첫번째로 꼽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기술하니까 디자인은 바깥에 빠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술에 디자인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이라고 하면 상품 제조기술 못지않게 디자인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집행하겠습니다.

보고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과학기술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 주는 게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 사람에게 가장 편리하게 딱 들어맞게 결합 시키는데 디자인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면 결국 디자인으로 잘 완성된 작품이 예술처럼 사람에게 영감, 감동을 주고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은 상품의 경쟁력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품격 있고 기쁘고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풍요롭게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고, 그래서 경쟁력에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화룡점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분야 기술경쟁력보다 앞선 것이 기쁘고, 한국의 장래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게 해 줍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해 주신 선구자라 할 여러분, 뒷받침한 정부관계자들과 행사를 준비해 준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빠뜨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보고대회에서 2003. 12. 3)

•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 강국 반열에 올라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한국 국민들은 짧은 기간 역사를 경이롭게 이룩해 무한히 존경스럽고 희망을 가집니다. IT, IT 하지만 10년 남짓 기간 동안 누가 보더라도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 강국 반열에 오르는 엄청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기여가 크고, 대업을 이룬 전체 국민들의 역량에 존경심을 갖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IT를 하려면 한국에 가서 벌여 보고 되거든 크게 벌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벤치마킹 대상, 모델 국가가 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연평균 18.8%란 고도성장을 보인 IT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IT 아니면 뭘 먹고 사냐고 할 만큼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IT 산업이 세계 1위인 것은 물론이고, OECD 국가의 평균 2배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했는데 그 정도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U-Korea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2004. 6. 9)

• **원자력기술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미래성장 동력**
과학의 달, 4월을 맞아 열리는 ‘2006 원자력체험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 국가로 발전시켜 온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원자력발전은 고유가 문제와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특히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세계 일곱번째로 석유를 많이 쓰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1980년대 초부터 원자력발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고, 이제는 전력 생산의 40%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9년간 표류해 오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뿐 아니라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기술은 생명공학,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입니다. 기술자립도 95%를 이룩한 원전기술의 수출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 원자력기술이 더 많은 기여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사는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우리 원자력 기술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원자력체험전’ 개최를 축하드리며, 원자력 관계자와 과학기술인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6 원자력체험전 축하 메시지에서 2006. 4. 20)

• KSTAR의 완공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보여주는 쾌거

오늘 우리는 과학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과시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미래 에너지 자립국을 향한 도전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핵융합 연구 장치, KSTAR를 우리의 기술로 설계하고 제작한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보여 주는 쾌거입니다. 아울러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손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문명을 바꾸어 왔다고 믿습니다. 그 기술의 발전이

정치를 비롯한 모든 사회제도를 바꿔 나가고, 사람의 의식까지 바꿔 나가는 변화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늘 이 KSTAR의 완공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것,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야말로 선진 여러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첨단을 함께 이끌어 간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인류를 위한 앞서가는 사람들의 책임에 우리 한국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우리의 우울하고 불행한 역사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달라지는 현장에 우리가 서 있고,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서의 위치가 달라지는 그 현장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서 있습니다. 참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완공식 축사에서 2007. 9. 14)

• 와이브로 기술 국제표준으로 채택

우리나라 과학 경쟁력이 세계 7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술경쟁력이 세계 6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5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제자리 순위가 아니고 낮은 순위에서 많이 꺾충꺾충 이렇게 뛰어 올라온 결과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 올라왔으니까 앞으로도 좀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우리 와이브로 기술이 제 3세대 이동통신에 국제표준으로 채택됐습니다. 우리나라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6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에서 2007. 10. 31)

•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 디지털 세력은 중요한 정치세력

세계화 시대,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 있어서 디지털 세력은 분명히 그 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정치세력입니다. 단지 디지털 산업뿐만이 아니라, 투명한 사회, 시스템으로 잘 정비된 사회에서의 공정한 경쟁, 창의력, 맘을 통해서 성공하고 또한 안정되고 효율성이 높은 국가로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저는 디지털 세력의 정치적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IT 산업에 대해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디지털 정부에 대해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가신다면, 한국이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뒤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요동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힘으로 이것을 받쳐 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라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풀어서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서 당당하게 할 일 하고 대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자정부 성과 보고회에서 2007. 9. 19)

7

개방과 FTA

1.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되겠습니다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만들어 갈 것

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는 전 세계 생산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거대경제권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반경 1,200km 안에 7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인구는 미국과 EU의 전체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또한 한국은 고급두뇌와 생산기술, 선진 선두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신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 충분한 물류기반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진전되어 남북횡단철도(TKR)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시키면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고 한국은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베리아의 가스를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까지 공급하는 가스관 건설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MCHAM, EUCCK 조찬간담회에서 2003. 1. 17)

• 동북아 시대는 경제를 넘어 역사적 주체성과 지역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어 저희가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북아 경제 중심, 동북아 중심국가, 또는 동북아 시대도 제가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동북아 시대가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동북아로 옮겨 온다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동북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것에서 이제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산업적 대응전략을 생각한 것이 동북아 중심국가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동북아 시대를 얘기할 때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동북아시아 그 이상의 어떤 개념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계기로서만이 아니라 EU와 같이 소위 지역 통합의 질서, 또는 지역 공존의 질서로 발전해 간다면 우리 한국의 정치적 위상도 변방의 역사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그 지역의 질서를 주도해 나가 자주적인 역사를 펼쳐 갈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기대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서울·인천·경기에서 2003. 2. 6)

• 동북아 시대의 주도를 위해 경제와 남북관계 두 축이 필요

우리가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무엇인가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역할이 필수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의 개선입니다. 남북대화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풀어낼 때라야 우리가 동북아 시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고의 지평을 보다 넓혀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가까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외국과의 교류나 투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시 고쳐 나가야 합니다.

1980년대에는 저 스스로도 외국 자본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게 된 상황

에서 필수적인 것은 외국과 외국 자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울러서 일본과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함께 형성해 가야 될 동반자로서의 일본과 중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이것도 함께 가져야 됩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서울·인천·경기에서 2003. 2. 6)

2. 개방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 개방은 저항할 수 없는 대세

그리고 개방을 전제로 한 정책 아니냐, 오늘은 그 토론을 깊이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농민단체와 만났을 때, “개방 안 하고 배길 재간 있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개방에 정면 대결할 것이냐, 아니면 개방을 수용하면서 그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문제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갈 것이냐를 놓고 정책선택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면 개방은 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모두 툭 터놓고 얘기를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전북에서 2003. 2. 11)

• 개방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개방은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높은 교육열과 도전정신, 그리고 개방을 통해 성공해 왔습니다. 과거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FTA는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도전은 항상 불안한 것이지만 도전하지 않고는 더 나은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최고의 시장입니다. 그동안은 일본의 성장 모델을 좇아왔지만 이제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설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미국 시장에서,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미국과 경쟁하여 성공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끊임없이 신화를 창조해 온 국민입니다.

(제61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2006. 8. 15)

• FTA, ‘이념’ ‘옳고 그름’ 문제 아닌 ‘먹고사는 문제’로 접근해야

금년에 비준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여서 국회의 각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든 언론이든, 또 찬성이든 반대든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토론하자, 그리고 사리에 맞게 토론하자, 전혀 근거 없는 사실 가지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끌어들여서 그냥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더욱이 FTA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상적으로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어떤 사상적인, 이념적인 대결의 수단으로 끌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좀 책임 있게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비준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 수동적 개방이 아닌 자의에 의한 능동적 개방이 되어야

FTA 부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FTA가 일반화되면서 체결이 안 된 나라에서 우리 상품이 밀리고 추방 위기감이 드는 시기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 진출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 경제가 요구에 의해, 물건을 팔기 위해 문을 여는 수동적 개방이 아

나라 능동적 개방으로 가야 할 단계로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외경제전략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잘 했으나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과 경쟁력, 시장에서의 활동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연구를 통해 검증해 줘야 할 문제이나, 그런 관점에서 FTA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 대응하면 훌륭히 극복할 수 있지만 잘 대응하지 못하면 애로점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 치밀한 준비를 갖추고 능력 있게 접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서 2004. 12. 16)

• 교역주도권 잡지 못한 나라 강대국된 역사 없어

FTA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도 경제보좌관이 오려고 하다가 경제수석이 왔고, 외교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들과 수시로 점검하는데, 꼭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한국을 볼 때 FTA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 인류 최초 문명이 발생한 것은 농경사회이고, 치산치수와 관계 때문에 국가가 발생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세력을 떨친 나라를 보면 대개 상업으로 크게 성공한 나라입니다. 특히 16세기 지리상의 대발견 이후는 확실히 상업이죠. 포르투갈이 항로 발견하면서 중동 지역이 침체됩니다. 지중해 세계가 대서양으로 옮겨 갑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에 가서야 종착하고, 영국에선 산업혁명에 따라 공업 붐이 일어납니다. 공업 발전과 함께 상공업이 자본주의를 따르면서 영국이 지배하다가 1900년대부터 미국이 서서히 앞지르게 됩니다.

미국이 유럽을 결정적으로 앞지르게 된 것은 1차 대전입니다. 지금까지 초강대국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역에서 주도권 잡지 않은 나라가 강국이 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 조건 있지만 교역이 활발해야 합니다. 독일 통일 때도 관세 문제가 없었다면 제각각 떨어져 살았을 겁니다. 국가의 성립이 관세 철폐부터 일어났고, 그러면서 독일도 강대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통상은 국가 발전의 핵심입니다.

(카타르 동포 간담회에서 2007. 3. 29)

세계의 문명 발달사를 보면, 개방과 교류를 활발히 한 국가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문을 닫은 나라가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도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방을 통해 세계와 함께 호흡함으로써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그때마다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방을 거부하는 폐쇄주의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서양문물을 배척하고 통상에 반대하는 위정척사론이 폐쇄적 시대를 끌어오다 급기야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는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단일 사상체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다른 제도나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취했던 교조주의는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인간사회에 큰 불행 을 안겨 주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외국인 자본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보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의 대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아나가고자 합니다.

(FAZ 출간 「권력자들의 말」 기고문에서 2007. 10. 15)

• FTA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야

물류 중개기술, 금융, 법률, 회계로 기업 지원하는 일, IT 산업, 사업 서비스 등 머리 쓰는 서비스에서부터 경영관리 잘하는 기술 수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FTA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의 기술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세계의 제도와 섞이지 않으면 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법률, 회계, 금융, 물류 등이 다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머리를 많이 써 종사해야 합니다. 광고, 미디어 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FTA 가지고 물건 얼마 더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과 협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도 급속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서비스 분야도 성장해서 우리 한국의 인력이 세계 최고 수준 갓출 때, 한국에도 허브라는 개념이 성립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우수 인력이 들어올 수 있고 살기 편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들어오게 되고, 그 조건을 갓출 때 동북아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교육, 의료, 문화 수준이 높아져야 우수한 사람이 함께 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UAE 동포 간담회에서 2006. 5. 14)

•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도약의 기회

전 세계에서 한국의 개방도가 가장 높을 것입니다. 수출해서 먹고살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능동적으로 개방해 나가지 않으면 경제가 한계에 부딪히고 위축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두려워하면서도 더 이상 개방을 늦출 수 없어 부득이 개방을 했습니다. 부득이 했던 모든 개방은 성공했습니다. 피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개방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체질이 강해지고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 그와 같은 영업 형태를 한국 기업이 가지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방하면 다 성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편하지 않습니다. 경쟁의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연구하고 혁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다 힘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이 강해지는 만큼 낙오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적은 수라 하더라도 새로운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낙오하지 않게 또 다른 대책으로 패자부활전을 가지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FTA를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시장에서, EU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경제역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TA가 한국에게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도약하는 기회입니다.

(워싱턴주 동포 간담회에서 2007. 7. 1)

3. 전 국민의 걱정 근심을, 정부라고 왜 안하겠습니까

• 대통령 전 임기에 걸쳐 준비해

줄속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의사 표시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입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지시를 한 것은 2005년 5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고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만약 줄속이었다면, 1,2월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국회에서도 진작 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7월 하순경 특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바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회가 밤낮 없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매주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따금 한 번씩 열어 가지고 서류 보자고 하고 안 보여 준다고만 논쟁할 뿐이지, 실제로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느긋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바쁜 데는 협상팀입니다. 협상팀은 그야말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팀을 믿고요.

(MBC “백분토론”에서 2006. 9. 28)

• 농업문제는 국가과제의 중요한 정책

농업문제가 해결이 잘 되면 우리 국가과제 중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 스스로 걱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농민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다 함께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우리 농촌문제가 매듭이 되었다고 할 만큼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길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대통령직인수위 9차회의 “개방화시대 농어촌 대책” 발언 중에서 2003. 1. 24)

협상전략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요. 근본적으로 국내 농업정책을 통해서 그동안 준비해 온 것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EU의 프로그램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농업개혁정책 계획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우리도 계획을 가지고 협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난 8년 동안 상황을 예측하고 대상이 될 만한 품목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왔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나는 공무원 집단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아무리 어려웠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측되었던 일 아닙니까? 1986년부터 예측되었던 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1995년에 얻어맞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입니까?

재고문제 이것은 이것대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막연할 뿐이거든요. 제가 후보 때 쌀 문제에 대해서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더라고요. 통 못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해양수산부 공무원들도 와 있지만 제가 말귀를 굉장히 빨리 알아듣는다는 것을 비교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쌀 얘기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대강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누구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책임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주 기묘한 상황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물려받았다고 얘기하겠지요. “내가 과장이 되었을 때에는, 내가 국장이 되었을 때에는……” 그렇겠지요.

(대통령직인수위 9차회의 “개방화시대 농어촌 대책”에서 2003. 1. 24)

• “개방 정책 모두 성공”…외환위기, 개방 아닌 금융감독체제 부실 탓

물론 우리도 그동안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방했습니다. 그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논란이 있지만, 개방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1995년, 1996년에 우리 종합금융사를 개방한 것, 중금사가 외환거래하도록 개방한 것이 IMF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방 때문이 아니라 당시 금융감독체제가 서 있지 않았습시다. 관치금융이어서 시장 원리를 몰라서 일어난 것입니다. 은행도 부도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책임경영을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금융감독도 느슨했고 전부 분산됐고 준비가 없었습니다. 권력의 속성인데, 아마 대충격이 없었다면 아직도 금융만은 관치하겠다고 우기는 권력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충격이 있었

기 때문에 민간 금융으로 일거에 넘어간 것이지 충격이 없다면 권력의 습성이 쥔 것을 놓지 않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해 봐서 아는데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문제인데, 하나라도 쥐는 것은 안 놓으려 하는 겁니다.

(카타르 동포 간담회에서 2007. 3. 29)

• **과장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동의를 확보해야**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숨 돌릴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FTA가 비준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손해를 볼 국민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 볼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단지 손해 보지 않을 수준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결과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두번째는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찬반 주장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국민들은 어느 쪽 손을 들어야 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도 모든 것이 상황을 가정한 예측이어서 100% 정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전과는 달리 조건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비준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 계속해서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내용이 직간접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공개된다고 아끼지 말고 가차 없이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계기에 국민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좋은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FTA 워크숍에서 2007. 4. 3)

• FTA로 손해 볼 10%, 그냥 손해만 보게 하지는 않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봅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10% 이하 일 것입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손해 보는 사람들에게 그냥 손해 보게 하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지지해 주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인데요.

보통 지금까지는 전부 농촌 출신이고 농촌에 고향을 두고 농민들을 부모로 모시고 있어서 농업 하면 우리가 - 소비자가 - 다 양보했습니다. 농업 쪽에는 앞으로 큰 손해 보이지 않고도 잘하면 소비자가 아주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FTA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 편익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대강 계산상으로 20조 후생이 증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적은 것이 아니죠. 우리 농업은 걱정입니다만 하여튼 확고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농민의 60%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놓은 10~15년의 유예기간에 자연스런 구조조정 여유가 생기리라 봅니다. 너무 과장되게 피해를 얘기하고 불안을 조성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 장애물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걸림돌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화에 대한 걸림돌이 바로 FTA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해관계의 문제입니다.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이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손해 보는 사람도 손해 보지 않게, 나아가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지금은 손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더불어서 이익을 보는 결과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국민적 합의로 성립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합심해서, 지금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결과로서의 이해관계로 좀 멀리 크게 보는 자세로서 이 장애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장애는 유연성이 없는 낡은 사고체계입니다. 보기에 따라 교조적 이념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들을 보면서 그것을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시피 지금의 세계는 종속이론 시대가 아닙니다. 20년 또는 30년 전에는 민족경제론이 적절한 이론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미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민족경제론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화하듯이 이론도 변화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불안감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경험해 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는 불안한 것입니다. 가만 있으면 이대로 갈 텐데, 이런 착각을 우리는 가지죠. 큰 배가 가라앉아도 가라앉는 줄 모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설사 가라앉는다 해도 파도가 무서워서 보트를 내리는 용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라앉아 죽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미래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지금 현명한 사람들은 다 확실하다고 믿는데, 다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또 상당히 현명한 사람들도 불확실성을 너무 크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장애요인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발전의 걸림돌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FTA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보, 발전, 모든 영역에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 협상 및 비준관련 격려 오찬에서 2007. 8. 28)

4. 한국 경제 자신감 갖고 능동적 개방, 경쟁 충분히 감당할 것

• 외자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 마련

변화라는 것은 우리 생존과 성공의 핵심 조건입니다. 변화는 한편으론 두렵고 한편으론 힘든 일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외채문제가 심각했는데 외국자본이 우리의 국부를 수탈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지났을 때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외자유치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외자유치는 이제 경쟁력 강화와 성장 잠재력을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눈이 어지러울 만큼 엄청난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의 과정을 잘 겪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이제 경제 활력을 북돋우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란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WTO 체제로 한국이 편입됐을 때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 오히려 시장개방을 실력을 키우는 전기로 만들었습니다. 금융시장의 획기적 개방이 이뤄졌는데, 그 충격이 IMF의 일단의 원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한국 경제의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투자유치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하나 부딪힐 때마다 불안하지만 국민들이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FTA 변화 환경에 부딪히면서 국내적으로 내성을 키우고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저항이 있더라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유치가 아직 원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뭔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담당공무원과의 대화에서 2003. 10. 30)

• 선진국 수준의 제도 마련

이제 시스템이 정비되었습니다. 수출은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가고 있고 국내의 제도들도 전부 다 국제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FTA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얻으려는 이익도 있지만, FTA를 통해서 국내의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수준을 높여 나가자고 하는 전략적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도 중요하지만 FTA를 통해서 국내의 제도를 개혁해 나가자, 이것이 또 하나의 목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고 성공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시장은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요즘 성장률이 5%에 미치지 못하고 소비가 낮습니다. 이 점을 매우 우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적으로 보면 수출기업 등 잘 되는 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지원 서비스라든지 부품소재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도 위축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의 전반적인 소비수준과는 달리 기업의 생산재 수요는 결코 역

동적이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2006. 11. 2)

• EU, 캐나다, 호주 등과 동시다발적 FTA 진행 중

안심이 됩니다. 문제도 잘 파악하고 있고 충분히 대처할 만한 능력과 준비를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FTA든 협상 결과로써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이 협상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 한·EU FTA는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 제도, 그리고 대외 경쟁력을 미국과 EU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진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각 부처와 협상팀이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방 이후 부딪혀 왔던 시련과 도전을 우리 국민들이 잘 극복해 왔습니다. 해외에 나가 봐도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량과 실력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후발 국가들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따라잡히지 않으려면 이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합니다. 어려워도 잘 극복해 나가 주십시오.

(한·EU FTA 협상 현황 및 대책 보고에서 2007. 7. 13)

• 한국 경제 자신감 갖고 능동적 개방, 경쟁 충분히 감당할 것

한·미 FTA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비준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떠밀리는 개방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개방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시장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능히 그 치열해지는 경쟁을 충분히 감당해 나가고 앞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EU와의 FTA도 체결될 것입니다. 목표는 금년 연말까지 반드시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좀 지체되고 있지만,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6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 발언 중에서 2007. 10. 31)

5. 대한민국, 이제 안심하고 투자하십시오

• 문 걸어 닫고 성공한 나라는 없어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지금까지 개방한 나라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문을 닫고 성공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올라선 데에도 개방의 힘이 컸습니다.

한·미 FTA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미국과의 FTA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더 많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반대와 우려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반드시 성공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개방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 등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제도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네 차례의 협상을 통해 상품양허·서비스 유보안에 대한 기본원칙 합의에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미 FTA가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목표시한에 쫓겨 중요한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협상과정 또한 국회 내에 설치된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회가 한·미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 동북아의 중심에 한국이 있어

앞으로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질서 속에서 동북아와 남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

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동북아와 남미 사이의 활발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칠레와 한국은 두 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 투명성,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수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칠레는 미래 국제질서에 대한 이상을 공유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칠레 간 FTA 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됐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국 간의 상호 경제적인 이익을 표방하는 단순한 협력의 수준을 뛰어넘는 관계를 우리는 양국 간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양국은 이와 같은 위상에 걸맞도록 교류와 협력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한·칠레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2004. 11. 20)

• 한국은 고학력 인적자원을 통해 전 세계 금융, 물류 허브될 것

한국은 지리적 접근성에 있어서 반드시 허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접근성에 있어서 중국과도 통하고 일본과도 통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허브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의 진화 방향, 발전 방향에 대한 과거의 족적을 짚어 보면 한국이 허브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소투입형 경제를 통해서 산업화 과정을 겪어 왔고, 지금은 혁신주도형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첨단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것은 고급의 지식 서비스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 물류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만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하나의 약점이자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학력 인력이 너무 많은 것이 약점인데, 이것을 지금 갑자기 낮출 수는 없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집중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세계의 기업들이 이 성공의 큰 관건이 될

것이기에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믿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2006. 11. 2)

• 한국은 투자할 만한 곳

한국의 노동자 또는 직장인들의 숙련과 기술적 수준, 일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에 저는 5년간 사람의 역량,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일부 공공부문의 집단해고를 둘러싼 강경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 민영화문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설치한다거나, 연구개발센터를 둔다거나, 또는 제조업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어느 경우에도 지금 노사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한국의 노사문제가 크게 소문이 난 것은 공동부문이라는 큰 싸움이 더러 있고, 말하자면 외국의 투자와 관계없는 큰 싸움이 가끔 있고, 그것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지 실제 사업에 지장을 줄 만한 갈등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를 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의 노동자들이 아주 훨씬 더 온건하고 요구수준도 낮고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확실합니다.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2003. 2. 19)

• 대한민국, 이제 안심하고 투자하십시오

칠레, 싱가포르와는 이미 체결했고, 일본과 아세안과는 현재 진행 중이며, 미국과 캐나다와도 준비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붙이기 위해 대외경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교섭본부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이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와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교역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한국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으로 우리가 FTA를 하는 것이 한국에 투

자하는 외국기업에도 유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파업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합법파업도 건수는 늘었지만 손실일수 등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일반국민, 노동자들의 인식으로 아주 많이 바뀌었으며, 이 흐름은 지속될 것이고 다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장은 대기업보다 현재 안정돼 있습니다. 안심하고 투자하십시오.

단지 임금이나 시장의 크기만이 성공 조건이 아니며, 안정성과 법적 제도, 시장을 대하는 국민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기술 향상과 생산성 향상,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제반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상당 기간 동안 유연성과 탄력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1998년 이후 한국사회는 제도적으로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정치인, 기업가, 공무원,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방문 - 최고경영자 접견에서 2005. 4. 15)

8

양극화 해소

1. 양극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 곳곳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의 현실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은 대기업 근로자의 60% 정도에 머물러 있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 격차는 1990년대부터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했고, 영세 자영업자의 형편도 그동안 많이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일자리로부터 얻는 우리 국민들의 소득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고소득자의 일자리와 저소득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간소득 계층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소비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서 내수시장이 줄어들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 양극화 현상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진전은 개인과 국가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개방을 통한 경쟁 촉진과 무역자유화의 가속화는 부의 창출과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역통합이 강화되면서 국가 간 상호의존과 협력의 필요성도 더욱더 높아져 환경, 인권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에서도 무역자유화가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국민후생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6년 IMF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는 지난해 7.1%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세계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주체들의 경쟁력 차이로 인해서 그리고 지역 간, 국가 간, 계층 간 격차로 인해서 경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면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의 구조를 양극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 간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빈곤층 증대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제14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2006. 8. 29)

• 양극화 문제 10년 뒤에도 낙관 어려워

양극화 문제는 좀 다릅니다. 많은 대책을 가지고는 있지만 10년 뒤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그 제도를 토대로 한 자원을 가지고는 10년 뒤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확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나 정부에서 보기에 이렇게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또 보는 사람들마다 중점이 많이 다릅니다. 빨리 성장해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

고, 양극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모두 앞으로 10년이 바쁘다고들 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한편으로는 천천히 또 한편으로는 바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순된 얘기죠. 제 가까운 학교 선배 한 분이, 쇠뿔은 단김에 빼라는 말도 있고 무른 감도 쉬어가면서 먹으라는 말도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 및 정당 주요인사 초청 신년인사회 2006. 1. 4)

2. 양극화 원인

• 빠른 발전은 성공했지만 고른 발전은 실패

지난 10년 간 여러 영역에서 많은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자금과 기술과 인력과 시장, 이 모든 면에서 불리한 여건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쨌든 아직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쓰기 위해 지난 1년간 매일 분석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격차를 줄이는 일이 큰일입니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 차이가 너무 커서 이것도 좀 걱정입니다.

서울 또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도 매우 큽니다. 역시 또 혁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조직에 편입돼 있는 사람과 혁신이 안 되는 조직과 집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격차와 정보격차도 빨리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2004. 12. 6)

• 이제 뒤를 돌아봐야 할 때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 고쳐야 할 문제는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 즉 성장률 4, 5%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생산과 소비의 괴리입니다. 한국 경제를

위기라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위기라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력이 큰 대기업 쪽 사람입니다. 역사상 가장 재무구조가 좋고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지금도 호황을 누리고 투자여력도 많은 그분들이 위기를 제일 많이 말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위기요인은 성장의 함정에 있는 게 아니라 양극화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민주노총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가장 안정된 노동자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실제 심각한 노동자의 직업 안정성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만의 노동 운동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과정에서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캐나다 멀로니는 수상 시절에 부가세를 만들어 그 다음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그 결과 크레티앵 자유당 정부가 정권을 잡았는데, 보수당 정권 때 만든 부가가치세 때문에 경제가 호황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욕심으론 임기 중 빠른 경제회복 곡선을 그리려 하지만 본격적인 성과는 다음 정권에 나타나리라는 목표를 갖고 하려 합니다. 메뎀 대통령이 마지막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빠른 성장 가운데 양극화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양극화를 반드시 극복하려 합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도 내부 양극화를 극복 못하면 다음 정권 때 심각한 애로를 겪게 됩니다. 양극화 문제, 성장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다음 정권에 절대 넘기지 않으려 합니다.

(LA 동포 간담회에서 2004. 11. 15)

미국은 일하는 사람 100명 중에 8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6명, 2002년 통계로는 37명, 2003년 통계로는 조금 줄어서 35명 정도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제일 먼저 줄어듭니다. 수입이 10% 줄었다, 가 아니라 아예 수입이 마이너스로 가버립니다. 일본만 해도 100명 중에 15명 정도가 자영업인데, 우리는 엄청 많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2004. 12. 6)

민간기업 하시는 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에 아주 곧게 자란 나무가 울창해야 언제든지 집 짓고 싶을 때 가서 도끼만 들고, 요새는 전기 톱 들고 가서 그냥 나무 베어 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전부 비정규직을 씁니다. 비정규직이 많을수록 점차 직장에서도 자질이라든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자꾸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업에서는 우선 내 쓸 사람 쓰고 별로 안 중요한 사람 정규직으로 쓰고 바깥에 있는 사람 나 몰라라 하면, 결국 국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자원이 점차 소모되고 고갈돼 나갈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부 노동력을 고갈시키는, 능력을 고갈시켜 나가는 이런 고용 정책 가지고 앞으로 한 10년쯤 가면 대한민국에는 직장도 제대로 없고, 이 직장 저 직장 떠돌아다니면서 직업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낮은 품질의 노동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 토양 위에서 기업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크게 보고 함께 협력해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고용안정센터에서 2006. 4. 14)

• 적은 복지지출 한국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이 될 것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이 분배위주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도 있었고, 심지어 좌파정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3%입니다. 미국 36%, 일본 37%, 영국 44%, 스웨덴 57%, 여기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할 것입니다. 복지 예산의 비율은 더 적습니다. 앞의 나라들이 중앙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도 아주 낮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좌파정부 논란은 결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마치 복지 과잉으로 경제 성장에 무슨 큰 지장이나 생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리고 정책이 다르더라도 사실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미국만 해도 재정 중에 56%가 복지지출이거든요. 사회지출, 복지지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면 28%입니다. 재정 규모 자체가 우리가 일본과 미국보다 9%이상 적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큰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번 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보고하면서 성장은 얼마 할 것이다 라는 전망 뒤에,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 지출이 너무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절반,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재래시장 정책 성과 보고회에서 2007. 6. 27)

3. 되풀이되는 경제위기, 이제는 끊어 냅시다

• 양극화, 참여정부 들어 더 악화되지는 않아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도 기초체력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체질을 바꾸고 혁신과 개방을 통해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문제입니다. 참여정부에 와서 격차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표를 보면 2005년~2006년 사이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죄송하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역시 문제이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복지지출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재정으로 많이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계층도 소득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니다. 앞사람이 너무 빨리 가서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뒷사람이 추락해 버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등산 등반 중에 2007. 5. 19)

국민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도 송구스럽고 안타깝지만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무리하면 다시 경제 위기가 오게 됩

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정석대로 해 왔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부의 성장률이 과연 그 정부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정부의 성과와 관련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인 2002년 성장률이 7%였는데 카드 버블 등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여파로 2003년 극심한 경기 부진이 왔습니다. 또 성장률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장률이 높았던 때 우리 경제가 증병에 걸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가가 더 정확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주가라고 봐야 합니다. 양극화도 내가 물려받은 것 아닙니까? 양극화가 2004년까지 악화됐는데, 내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2004년 이후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정서에 따라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정치적 분위기까지 있습니다. 2004년부터 경제 위기설을 가지고 언론이나 야당이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그동안의 보도들을 보면 우리 경제가 망해도 열 번은 더 망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게 신기합니다.

(한겨레 특별 인터뷰에서 2007. 6.15)

• 양극화 해결 위한 정책, 참여정부가 가장 많이 노력

양극화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문제이므로 문제없다 라고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했지만 아마 참여정부만큼 이 문제를 자주 얘기한 정부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참여정부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올려놓고 많은 정책을 내놓은 정부도 아마 없을 것이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정부 와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참여정부에서 2003년, 2004년 2년간에는 더 나빠졌지만, 그 이후 점차 회복되어서 2003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별문제 없다, 여기서 만족하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도 더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참여정부가 그 점에 있어서도 역

시 차질 없이 정책을 잘 수행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 국민적 재앙 가져 올 경기부양책은 안 돼

빨리 국민의 박수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경제를 운용하면 2,3년 안에 심각한 파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환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주사, 각성제 놓는 것은 못 하게 했습니다. 민심에 민감한 것은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각료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원칙대로 합니다. 정석대로 합니다. 바둑에 정석이 있듯 경제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경제는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경제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순응하고 따라가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엔 국민역량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 번 경제정책이 실패했으나 위기를 다 넘겨 왔습니다. 국민역량입니다, 저력입니다. 때로는 정책 실수가 있어도 극복해 준 게 국민역량입니다. 이제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실수 없이 끌고 가겠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의 함정이나 분배의 함정이나 구분해 얘기하는데 동전의 양면 같아서 따로 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흔히 좌파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메넴 대통령이 3000%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극단적인 우파 정책을 썼습니다. 멕시코 포스 대통령은 우파로 알려져 있으나 임명되면서 좌파 정책을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실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좌파냐 우파냐 한쪽으로 재단하는 것은 낡은 생각입니다. 저는 우파 정책도 좌파 정책도 다 쓸 것입니다.

(LA 동포 간담회에서 2004. 11. 15)

• 사회적 낙오자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보호해야

어느 경우에도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점차 사회보장을 확대해 나가고 사회안전망을 치밀하게 증비(增備)해서 낙오하는 사람은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져 나가는 정책을 더욱더 확충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문제에 관해 미국식, 유럽식 모델을 약간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오늘도 프랑스의 사회복지부를 담당하는 장관 한 분과 얘기하고 왔는데, 이제 미국식의 경쟁우

위정책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근본적으로 어떤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경제가 너무 미국식 이론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대해 약간은 걱정하는 쪽입니다. 저는 유럽의 좋은 제도와 사고도 좀 많이 받아들여서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좋은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경쟁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모든 걸 다 차지하는 사회, 저는 그것을 최상의 사회로 여기게, 그렇게 한국사회가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2004. 12. 6)

4. 양극화 해소 방안

•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우리는 중소기업에 정책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중소기업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핵심적인 열쇠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소기업정책을 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다짐해도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실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렵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의 중소기업이 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경제일수록 중소기업이 튼튼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산업들이 함께 균형 있게 동반성장해 가는 것이 좋은 경제입니다. 우리도 그리로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성장하지 않은 것을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외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05년 전국중소기업인 대회에서 2005. 5. 17)

이제는 기술을 보고 소위 위험투자를, 모험투자를 하는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벤처 생태계를 다시 한번 구성해내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돈을 잃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벤처 성공률이라는 것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별히 잘 분석하고 엄선해서 하면 높일 수 있

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들어가자, 아예 한 다리 끼여 들어가자, 공무원들의 판단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업하는 전문 투자자들과 함께 가자, 그렇게 해서라도 소위 벤처기업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이제 중소기업과 함께 살아가는 전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미 상생협력의 전략을 가지고 나선 대기업도 있지만, 아직 따르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또 같은 기업 안에서도 조직 간의 성과논리가 달라서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동반성장, 상생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2005년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2005. 5. 17)

• 일자리아말로 가장 근본적인 양극화 극복 대책

한국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최근까지 4~5%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경제 주체 간 지식·정보격차가 확대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계층 간의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의 심화는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시장 침체와 투자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아말로 가장 근본적인 양극화 극복 대책입니다.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고 일자리의 질 또한 좋아져야 합니다.

한국은 이를 위해 일자리가 많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경제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하며 금융지원체계 개편 등 중소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도 다양화하고 또 고급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물류, 법률, 회계, 컨설팅과 같은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보

건, 복지, 교육, 문화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대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고용지원 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이 결합된 선진적인 고용안정망 구축을 국가 전략과제로 선정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능력개발의 기회를 가지고 각자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14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2006. 8. 29)

서비스 산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고급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고급인력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금융, 물류, 법률, 회계, R&D, 컨설팅과 같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교육과 의료 등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또한 그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질 높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전략적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학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 공공 서비스는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조금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 굶고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그 도시락 만드는 것 등의 자그마한 회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직접 일하고 월급 받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이 기동 못하고 누워 계실 때, 공무원이 가서 다 못 봐 드리니까 노인 돌보미 회사를 만들면 자원봉사 비슷하게 하면서 돈을 적게 받고 일해 주고, 또 그 사람들 이렇게 연결해 주고 하는, 이런 수많은 종류의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반 이상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이고 실비 받는 것인데, 선진사회일수록 그런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이거 참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데,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 일을 해요. 우리도 그런 일자리들을 굉장히 빠르게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정책 성과 보고회에서 2007. 6. 27)

• 공교육 정상화는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

우리 학교를 살려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세계 경쟁에서 이기고 사회도 합리적으로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한국의 미래 키워드가 뭐냐, 교육입니다. 일등이 되자고 해도 교육이고 양극화 해소도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하고 뭐든지 교육 빠지고 되는 것이 없는데 학교가 무너지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생각은 있어도 손발 안 맞아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조금 노력하면, 학교 현장만 같이 가 주면 여건은 뒷받침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 외에 오늘 나온 아이디어만 뒷받침하면 확산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과후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내신이 낮으면 선생님은 수업하는데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는 자고 학원 갈 생각하고 탄생각하지요. 꼭 성공시켜서 선생님도 제자리에 올라서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방과후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교육장과 열린 대화에서 2006. 5. 4)

각종 평가에서 세계 최고 실력인 우리 학생들이 유독 약한 부분이 영어입니다. 지난해 어학연수와 유학비용으로 해외에 지출된 돈이 4조 4,000억 원에 이르고, 영어 사교육비만 10조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과정에서 생기는 교육기회의 불균등이 계층이동을 가로막고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말이

통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갈라질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영어 교육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영어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선제적인 투자라고 하겠습니다.

(EBS 영어교육 채널 개국행사에서 2007. 4. 6)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총 32조 원을 투자하여 이를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 아동 기준 30%로 대폭 확충하고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차별시정, 모성보호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제도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장애수당을 월 최고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활동 도우미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올해 8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11만 개로 대폭 늘리고, 노인복지 예산을 금년보다 54% 증액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일자리 확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체계와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5. 한국 경제는 양극화 극복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

•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경제를 하면서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성장률 낮아도 좋으니까 안정되게 가자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기초체력 절대 상하게 하지 않고 기초기술 절대로 떨어지게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특별하게 금융에 있어서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우리 경제가 위협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가 있었지만, 대농, 뉴코아, 한신공영, 진로, 기아 등 줄줄이 기업들이 쓰러지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그 정도의 외환위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건강하면 괜찮습니다. 경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지금보다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은, 갑자기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래시장 정책 성과 보고회에서 2007. 6. 27)

• 경제사업비보다 복지사업비가 더 높아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하고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한 정책이 이렇게 전부 얽혀 있습니다. 나빠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정 지출들이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연금도 주고, 그 밖에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서 복지 지출 등 여러 가지 직·간접의 지원을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참여정부 와서 그나마 1%든 2%든 시정효과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복지지출은 참여정부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도 많이 쏟았습니다. 하지만 드러내기 부끄러운 것은 그 수치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빈부격차 시정효과가 40%인데 우리 한국은 5.5%입니다. 그래서 시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 쓰는 예산 중에 경제사업비가 복지사업비보다 높았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2004년에 역전돼서 이제는 경제사업비보다는 복지사업비가 높습니다. 계속 나아져야 합니다.

(재래시장 정책 성과 보고회에서 2007. 6. 27)

• 복지 예산 확충 방안

지금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정부지출의 규모가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복지 제도가 있다가에 창피할 만큼 복지지출 수준이 낮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령화 내지 고령사회 진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 다음 수단이 조세감면 규모를 최대한 줄여 봅시다. 그 다음 아직까지 노출되지 않은 세원, 누락되고 있는 세원을 최대한 발굴해 봅시다. 이것이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 재원을 늘리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세원발굴의 문제나 조세감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예산 절약, 경상 경비 절약, 분야별 재정지출의 규모를 구조조정하는 문제는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우리가 주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질에 있어서 필요한 문제이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국무위원 재원 배분회의에서 2006. 4. 22)

• 비전 2030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미래 청사진

이제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의 활력을 위협하고 있고,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 가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비전 2030'은 이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선 각 지역부터 스스로 혁신의 동력을 찾아내고, 교육과 의료, 환경, 문화 등이 잘 갖추어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2006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축하 메시지에서 2006. 11. 14)

9

비전 2030

1.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 양극화는 구조적 문제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당에서 고민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양극화 문제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처방보다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당 차원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 오찬에서 2004. 8. 30)

이제 대한민국도 법과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고 있으며 그 힘을 바탕으로 시장은 매우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꽃피도록 그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진보의 속도는 세계 최고일 겁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양극화 문제는 더 심각해져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비

록 아직은 미흡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2004. 12. 6)

• 복지는 사회통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성별, 세대별, 또는 장애유무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 갈등요인이 있었습니다. 다 묶어서 차별시정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농업과 노동이 또 하나의 큰 사회적 분열과 갈등 요소입니다. 세상이 아주 빨리 변하다 보니 빨리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 간의 격차가 커집니다.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됩니다.

기술적인 것을 비롯해 동북아 시대, 지방화 시대 등 발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합, 국민 간의 일체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발전전략도 중요하나 발전은 정부가 안 나서도 민간에서 비교적 잘 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은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통합전략이 성공해야만 발전이 복지 국민의 삶으로 이바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정과제회의(T/F)에서 2003. 5. 9)

• 책임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

일자리만으로 양극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국가가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그동안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확충해 왔습니다. 1997년에 비해 사회보장 예산은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40% 이상 확대했습니다.

올해에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 명 정도 더 늘리고, 갑자기 위기에 몰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중풍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양시설 확충과 노인수발보험제도, 그리고 장애수당 확대 등을 통해 2009년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2. 사회투자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

• 사회투자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인적자원을 다시 되살려내는 작업이 복지입니다. 옛날에는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국가가 먹여 살린다는 측면에서의 복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배, 선분배 하려고 하느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는 이것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생각하고 복지투자를 사회투자라는 이름으로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투자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이 나옵니다. 작은 정부가 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돈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쓴다는 뜻에서는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하지만,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다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시장이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투자는 20, 30년 뒤에 본전이 나오는 것인데, 어느 기업이 그걸 내다보고, 교육 투자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평생 교육 보장하는 것도 개별기업이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재교육을 하지만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접근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가 할 일입니다.

대개 선진국은 평생교육의 접근율이 50%가 넘는데 우리는 아직 20~21% 수준입니다. 질도 아주 낮습니다. 이걸 다 끌어올려야 비로소 한국도 책임을 다하는 국가가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유럽과 비교해 보면 인적자원을 재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유럽의 10분의 1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특단

의 결단을 내려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드니 동포 간담회에서 2006. 12. 7)

• 사회지출 · 복지지출, 지속가능한 경제 위한 투자

일부 야당과 언론은 성장과 복지를 별개의 가치로 전제하고, 참여정부의 사회정책, 복지정책을 분배정책, 좌파정책이라 이름 붙이고 끊임없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둘로 나누는 사고는 낡은 생각입니다. 멀리 보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는 기업만을 대변하는 주장입니다.

사회지출과 복지지출은 더 이상 소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만 멀리 보면 보입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없고 끼니를 걱정하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넘치는 나라, 안정된 직장이 없고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의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넘치는 나라의 경제가 경쟁력 있는 경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이치입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 · 아동 · 청소년)에서 2007. 3. 13)

• 민주주의 궁극적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 잡힌 사회

그러나 아직 크게 뒤쳐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투자와 균형발전입니다.

복지 예산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복지 예산을 정부 예산의 20%에서 28%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투자는 북유럽의 1/3, 미국 · 일본의 1/2을 넘지 못하고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복지투자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담은 ‘비전 2030’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균형이 잡힌 사회, 이것이 진보의 본뜻입니다.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울러 복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바꾸자는 것입니다. 복지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단순한 소모적 지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

을 높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질병과 노후, 주거에 대한 불안이 없고, 자라나는 아이들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열려 있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라야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2007. 4. 30)

• 사회투자국가 측면에서 본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친화적인 사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소위 요새 말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이라는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책만 읽고 또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만들면 좀 아무래도 우리에게 안 맞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저도 정책을 하면서 보고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정책 당사자들, 정책 수요자들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계속 토론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토론해 가면서 정책을 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좀 알지 않겠습니까?

사회투자국가론이라는 것을 골간으로 또 우리 정세에 맞도록 설명한 것이 지금까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혁신벤처기업인 특별강연에서 2007. 10. 19)

• 동반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구조를 갖는 동반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복지 지출 증가가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제 복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 성숙정도나 국민의 요구수준 등을 볼 때, 교육, 주거, 노후, 일자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혁신과 인재육성의 전략적 접근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기술인력 혁신보고회에서 2006. 11. 6)

3. 동반성장의 중심에 비전 2030이 있습니다

• 비전 2030은 장기 재정계획

국민의 정부 시절에 중기 재정계획 제도가 만들어졌고 참여정부부터 중기 재정계획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중기 재정계획을 시행해 오면서 이제 우리도 장기 계획을 세울 때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비전 2030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2030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가을에 큰 골격이 형성됐습니다. 국민과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내용을 다듬고 토론을 해 왔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발표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준비와 대응에 있어서 보다 관심을 갖고 또 내용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전 2030 보고회의에서 2006. 8. 30)

• 2030년에는 세계 10위권 삶의 질을 누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비전 2030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국가전략입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사회·경제 분야의 제도혁신이 2010년까지 마무리되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토대로 2020년 이전에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세계 10위권의 삶의 질을 누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우리는 지금 선진한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함께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물론이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정부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마련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비전 2030은 미래의 도전요인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가기 위한 것입니다.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삶을 누리는 세계 일류국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큼니다. 이미 이웃사랑과 시민의식 고취에서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한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더욱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2006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 축하 메시지에서 2006. 11. 24)

• 2만 달러시대의 국가발전전략과 비전 2030

2만 달러 시대에서 3만 달러로 가자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복지미달, 낮은 수준의 법질서·사회응집력 등 걸림돌을 해결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비전 2030은 국가발전전략의 종합판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선진한국의 필수과제입니다.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저출산, 국민연금 등 필요한 개혁을 제때 해야 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민생문제의 해결 대안은 비전 2030

민생문제를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민생파탄을 외치면서 자기들이 집권만 하면 금방이라도 민생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국정실패로 몰아붙이는 언론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민생문제라는 것이 한두 개의 정책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정부의 정책이 쌓여서 오늘의 민생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양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이고 미국도 일본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전반, 일자리, 등

반성장,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비정규직, 교육, 부동산, 이런 모든 정책이 성공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참여정부는 이 모든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으로 엮어서 국민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언론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안도 없이 비방만 하고 정책도 없이 큰소리만 하는 풍토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대안을 말하고 이치를 따지고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책임 있는 사회 풍토가 만들어져야 진정한 민생대책이 채택되고 실천될 수 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비전 2030은 사회투자전략

정책이라고 하니 너무 이름이 작은 것 같아서 사회투자전략으로 바꿉니다. 비전 2030의 전략적 목표는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와 능동적 세계화, 사회복지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의 다섯 가지입니다.

모든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능력 있게 교육 받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널려진 기회를 향해서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오늘과 미래의 불안이 적은 나라, 환경이 쾌적하고 문화가 좀더 활짝 꽃피면 더 좋겠지요.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경쟁력 있는 국민이 되는 것이고, 그 경쟁력 있는 국민이라야 궁극적으로 한국이 세계 일류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 이 모든 정책이 이제는 혁신주도형 경제의 시대에 있어서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투자전략입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

•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 멀어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멍니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이 문민정부 3.2%, 국민의 정부 5.6%에서 2005년에는 8.6%로 늘어났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한심한 수준에 있습니다. 미국, 일본의 2분의 1, 북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고용지원 예산은 북구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30년까지 지금의 OECD 평균 수준까지는 가자는 것이 비전 2030의 계획입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

4. 미래로 가는 핵심전략 비전 2030

• 2만 달러 시대에서 3만 달러로 가자면 새로운 전략 필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국가발전전략과 비전 2030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들어갑니다. 1995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선 지 12년만의 일이고, 외환위기를 겪고 다시 1만 달러에 진입한 지 7년만입니다.

좀 깎아서 말하면 원화 가치 덕분입니다. 다만 저는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수출이 늘어나서 외환보유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다 보니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2만 달러 달성은 단지 환율 덕분이 아니라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데 미국은 10년, 독일은 13년 걸렸고, 영국과 네덜란드 는 그 과정에서 경제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형 국가를 제외하고는 2차 대전 이후 해방된 나라 중에서 2만 달러에 들어선 나라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3만 달러 시대로 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3만 달러 사회로 가려면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 한국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전 2030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복지미달, 낮은 수준의 법질서·사회응집력 등 걸림돌 해결해야

변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이전과 다르고 경쟁자가 이전과 다릅니다.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불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소득 2만 달러가 되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에서 선진국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재정이 선진국의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고, 법질서 준수, 사회응집력 등의 사회적 자본의 지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IMD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우리

의 사회응집력은 세계 48위입니다.

강력한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행, 남북의 대결상황,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 등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 세워야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능동적 개방,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 평화의 동북아 등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기본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전략으로 다시 말하는 이유는 말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내부 거래, 불공정 거래를 제한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에 대한 재계의 저항이 있고, 선생님, 노동자, 농민, 일부 중소기업들의 개방과 경쟁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비전 2030은 국가발전전략의 종합판

세계일류국가, 선진한국의 비전과 국가발전전략을 종합하여 전략적 체계로 재구성한 것이 비전 2030입니다.

이름은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입니다.

비전은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2030년에 GDP는 4만 9,000 달러로, 국가경쟁력은 29위에서 10위로,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공공사회 지출 8.6%에서 21%로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전략적 방향의 특징은 사회투자와 사회적 자본입니다. 전략의 핵심적 수단은 제도 혁신과 선제 투자입니다. 그 안에 50개의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와 숫자는 융통성 있게 넣고 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선진한국 필수과제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장기 계획입니다. 과제만 늘어놓은 종이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정계획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는 선진 한국의 필수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야당과 언론은 세금 더 내라는 이야기냐고 시비만 하고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감세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장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필요한 돈은 예산의 절약과 구조조정, 투명성 확대를 통한 세원의 확보, 불합리한 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족한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국채로 조달할 것인지, 보험료로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음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는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20년 또는 30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회피하고는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도자는 경제만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동반성장과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과 같은 새로운 전략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세계일류국가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비전 2030같은 국가 장기 재정계획은 이번이 처음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혁신주도형 경제정책이라든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미래성장동력, FTA, 동반성장, 균형발전, 정부혁신, 이 모두가 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미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부혁신과 균형발전,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미래 과제를 모아서 종합적인 체계로 정리한 것이 다음에 말씀드릴 2만 달러 시대의 국가발전전략, 그리고 비전 2030입니다.

그 전에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이런 건 많이 있었습니다만, 국가 재정계획으로서 장기 계획을 세운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이라고 자랑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해야 할 일을 빠뜨리지 않고 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국정과제 심포지엄 특강에서 2007. 1. 31)

• 2030 사회투자전략은 우리 사회 '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막는 전략'

2030 사회투자전략, 2030년 미래전략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돈 좀 더 거둬서 누구에게 좀 더 나눠 주는 이와 같은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제도가 있다면 빠르게 고치고, 기왕에 할 투자라면 좀 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전략을 통해 해결해 가자는 것입니다.

50개 과제 중 24개가 제도 혁신 과제이고, 26개가 선제적 투자 과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구조조정이라든지, 부당한 조세 감면의 축소라든지, 철저한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또는 조세 투명성 확보를 통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등의 방법으로 일단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메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정부도 약간의 국가 채무를 더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특별히 국민 부담을 더 요구하지 않고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정권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알면 대통령이 욕심이 너무 많다고 할 것 같아서 모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앞으로도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 문제에 매달려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의제로 삼아야 하고 국민적으로 토론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신년인사회에서 2007. 1. 3)

10

일자리

1. 일자리 창출은 복지를 위한 전략

•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일자리

참여정부 들어와서 잘했다 못했다 여러 가지 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양극화가 좀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제일 낮은 사람과 제일 높은 사람 사이의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상위계층의 성장이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앞서 가는 사람이 빨리 가 버리니까 제걸음을 가는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지금 양극화의 현실입니다. 한국사회가 그만큼 속도 있게 나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이든 이건 해결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 자리를 가지면 격차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부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나빠진 때가 1998년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7%입니다. 그때 실업자가 150만까지 나왔고, 빈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 가계부채 위기가 왔을 때 신용불량자들이 384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경제의 위기는 일자리의 붕괴로 인

해 양극화의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정책 성과 보고회에서 2007. 6. 27)

• 일자리 창출은 성장과 경쟁력의 최종 목표

노사관계도 상호존중, 공존하는 자세를 발휘하는 등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도 항상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과거 도움을 받았던 방식 그대로 간다면 지원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동북아 경제의 중심, 2만 달러 시대 등과 관련해서 상호 관계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성장과 경쟁력의 최종 목표입니다. 정부도 기존 정책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재평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사회협약은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꼭 실천할 생각입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 성과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대책과 사회협약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방향으로 모두 매진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에서 2004. 2. 19)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번영 복지를 위한 총체적 전략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매우 소중한 결실로 한국이 번영하고 복지를 나누기 위한 총체적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충실히 이행하고 하나하나 이뤄나가면 번영·복지와 함께 한 단계 수준 높은 사회로 갈 것입니다.

이 협약이 국내외의 투자자들에게 좋은 신호가 되고 전 국민에게 희망의 소리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끊어지려고 할 때 정부가 적극 나서 중재할 것이고 결실을 거둘 때마다 정부도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사·정 사이의 합의사항은 작은 일이라도 정부가 반드시 존중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행에 어려움이 있고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현실을 그대로 구성원에게 말하고 반발이 있더라도 단호히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짐을 지워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조인식에서 2004. 2. 10)

• 공공·사회 서비스 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복지 향상과 직결

중소기업, 서비스업, 공공 서비스, 사회 서비스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것입니다. 일자리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보육, 간병, 식품안전, 치안, 재해예방, 환경관리 등 국민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공공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늘려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새해 예산안에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예산이 야당의 요구로 대폭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선제적 투자의 의미가 있으며,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멀리 내다보면 국가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보육·교육·치안·환경 등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며, 특히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공급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의 잠재적 수요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해 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참여정부가 새롭게 인식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참여정부 들어 획기적으로 확충된 보육 서비스는 제대로 된 교육의 출발점이며, 보육·교육의 성공 없이 국가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GDP 중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37%, 미국 36%에 비해 우리나라는 28%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정부의 공공사회 서비스 지출 비율을 20%에서 29%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일반교부금 중 사회복지 분야 비율도 31%에서 36%까지 확대하였는데, 앞으로 재원 배분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특화된 복지수요를 고려한 차등적 배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07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회에서 2007. 2. 22)

•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의 완결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IMF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실업대책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 서비스 인

프라 구축은 미흡합니다. 고속 성장을 마감하고 일자리, 산업구조 등 경제체질이 바뀌는 상황에서 국가적 인프라로서의 고용지원 서비스 구축은 필수적이며, 고령화 시대 등을 대비한 국가 역량 지표의 하나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6개월간의 고용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를 시스템화, 제도화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국가 인프라로 확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이 뒷받침되는 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한 명칭도 새로이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의 완결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고용안정센터와 지자체 등 복지전달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와 업무·정보공유가 필수적입니다. 중장기 과제로서 고용과 복지 시스템 연계 방안도 검토해 주길 당부합니다.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보고회에서 2005. 12. 20)

2.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법은 사람의 능력과 기술의 향상

• 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을 정부가 뒷받침할 것

고용지원 서비스나 전 국민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새롭게 제공하는 시스템은 빠른 속도로 갖춰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 훈련 서비스와 직업 알선 서비스를 확실히 갖춰 놓겠습니다. 직장을 쉽게 옮길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직장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직업능력 향상시키는 쪽으로 정부가 뒷받침할 것입니다.

개인 창업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 상권에 인구가 얼마나 되고 이웃에 동종 업체가 몇 개 있는지까지 조사해서 정부에서 통계를 바탕으로 자료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게 시장 정보만큼 빠를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사업을 오래 한 사람들과는 달리 처음 창업하려는 사람은 시장 정보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부 정보가 앞선다는 판단 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 가면 결국에는 전 국민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앞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이집트 동포 간담회에서 2006. 3. 6)

• 일자리 만들기의 근본 해법은 사람의 능력, 기술, 향상

양극화 양극화 하는데, 양극화 대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대책 가운데서도 일자리가 핵심이고, 일단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나머지 부차적인 정책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정책이자 과제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전체 경제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을 넓혀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회적 영역의 일자리가 많이 모자라니까 복지, 봉사, 공동 서비스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급의 일자리로는 금융, 컨설팅, 기업 지원의 지적 서비스 등의 일자리가 나오지만 한꺼번에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경제정책 활성화 방법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답은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경쟁력 있는 기술, 즉 기술 훈련이 핵심입니다. 기술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학생 및 학교 관계자 오찬 간담회에서 2006. 4. 14)

• 일류인력 양성, 기회균등 모두 성공해야 인재강국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강조하는 데는 한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일류 인력만이 국가경쟁력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그쪽은 할 만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인적자원 양성에 있어서 기회균등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들을 함께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총체적인 국가 인적자원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기회균등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실제로 우리가 인적자원 정책을 수행해 보면 어디에서 경계가 갈라지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연속되어 있는 것이고, 또 어느 나라도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두 가지 모두 성공할 때라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적자원의 강국, 그야말로 인재강국이 되는 것이죠.

인재라는 개념을 천재, 수재 말고 그냥 보통 사람들의 재능까지 다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두 가지를 통합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인적자원까지 함께 양성하는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사회통합이 궁극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사회가 20, 30년 지나가면 심각한 균열과 갈등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경쟁력이 무너지거나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두 개념을 통합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국가인적자원위 회의에서 2007. 7. 27)

• 학계, 산업계, 정부가 함께 수급 불일치 해법 모색해야

정부가 대학교육의 방향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금 답답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시하고 요구하는 것으로만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최종적으로 대학교육은 자율이지만, 대학교육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은 정부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하나 안하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주거나 받거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해 가면서 좋은 답을 찾아냅시다.

수급의 불일치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됩니다. 정부 아니라도 대학은 이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교육의 공급자가 갑의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점차 을의 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은 정부 아니라도 스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거기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방향 전환에 도움을 주고, 재정과 같은 사안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협력 관계로 풀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인적자원 면에서 풀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기회균등의 문제입니다.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교육 전략이고 기회균등의 전략입니다.

유아시기부터, 초등학교부터 예방적 투자 또는 선제적 투자라는 관점의 교육정책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매우 바람직한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제1회 국가인적자원위 회의에서 2007. 7. 27)

3.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산업

대학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질 높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전략적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학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 공공 서비스는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 문화·관광·레저와 같은 서비스 산업도 다양하게 육성하고 고급화해야

이를 위해 정부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남해안 개발사업, 부산 영상도시, 광주 문화중심도시, 농촌관광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골프와 같은 고급 서비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치와 소비라고 비난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소비무대가 세계화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소비 100만원 중에서 4만 5,000원을 해외에서 쓰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일부라도 국내에서 쓰게 하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도록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는 또 있습니다. 보육, 간병, 교통, 치안, 식품안전, 재해예방, 환경관리와 같은 말하자면 정부가 하는 일 들입니다. 이와 같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해 왔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늘려 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13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분야를 사회적 일자리를 일시적인 실업대책 수준에서 공공근로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 사회적 서비스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 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작은 정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생활의 수단이자 그 자체가 자아실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 - 취업계수 1990년 56명, 2005년 32명 - 과 일자리의 양극화가 문제입니다. 고학력 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릴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87%를 차지합니다. 1997년 이후 대기업 일자리는 122만 개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216만 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간 제조업 일자리는 매년 4만 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40만 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공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늘려야 합니다. 보육, 간병, 식품안전, 치안, 재해예방, 환경관리 등 국민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을 네 배 가까이 늘려왔습니다. 올해에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

• 청년실업, 금방 해결 어렵지만 착실히 정책 진행하면 해소될 것

청년실업 또한 우리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모두들 고통 받고 있고 고심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방 해결되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만 착실하게 진행해 가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곧 우리 한국의 청년 인력 부족 사태가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장 닥친 문제는 당장 닥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정부가 할 일은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기업과 학교 그리고 해당되는 당사자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공급이 안 맞은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 과잉입니다. 대학교 진학률이 83%에 갔지요? 조금 전에 일본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48%입니다. 미국의 대학 진학률은 67% 정도입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83%니까 공급 과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 중소기업 일자리 활성화시켜야, 약 20만 명 일손 부족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말하자면 300인 이하의 기업에서 모자라는 사람이 19만 5,000명이거든요. 약 20만 명 부족합니다. 지금 35만명 실업자가 있는데, 19만 명이 부족하니까 수요·공급의 불일치지요. 실제 있는 일자리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눈높이를 좀 조절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업에서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의 인력으로서의 만족도가 얼마나? 대기업은 80% 불만이라는 것이고요, 중소기업도 약 55% 불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심각한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바로 직장에 쓸 수 있는 교육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서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도 변화시켜 나가고, 또 학생들이 취업 경험을 통해서 눈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도 하고, 정부에서 실제 취업 알선이나 새로운 교육 훈련도 제공하고, 요즘은 이제 초·중등학교 때부터 직업관에 대한 교육을 하는 등의 중장기 계획을 여러 가지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건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수출의 효과가 내수로 확산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4년 7월부터 중소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구태의연한 지원방식을 과감하게 털어 버리고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정책의 내용을 완전히 바꿔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 가면 이번에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에 모범적인 협력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벤처기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 일자리 창출 위해 서비스업 일자리에 집중해야

서비스 산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고급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고급인력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금융, 물류, 법률, 회계, R&D, 컨설팅과 같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금융중심, 물류중심, 전문대학원 정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일자리 정책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 산업,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늘리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일자리를 위해서 금융, 물류, 기업 지원 서비스 그리고 문화, 산업, 환경, 건강, 교육의 산업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 건강과 교육의 산업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근본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전이 매우 더딤니다. 공공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대로 확충하되 산업적 영역에서 국가 간 경쟁을 할 곳은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산업적·시장적 원리의 도입을 강력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지금 국회에 막바지에 가 있는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통해서, 한국 금융시장이 저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물류부분도 상당히 성공하고 있고요. 이것이 고급 일자리 전략입니다. 그런 쪽으로 산업을 늘리면서도 한 쪽으로는 우리가 소위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는 그 분야의 일자리를 쪽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정책 성과 보고회에서 2007. 6. 27)

4.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고용안정 시스템, 제대로 만들어야

우리가 제일 힘쓰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제는 실업이 생깁니다. 실업이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실업을 감당해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게 도와줄 최종적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안정 시스템 하나만은 정말 제대로 만들어 보자, OECD 적어도 중간 수준 이상은 한번 해 보자, 최고 수준으로 한번 가 보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우리가 어려운 것이 비정규직입니다. 골프장,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그리고 레미콘 노동자들을 법원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의 공백 속에서 많은 분쟁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해 보자고 노·사·정 테이블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유공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2005. 6. 24)

• 국가 서비스는 더 확대해 나가야

직업 상담원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의 향상이나 교육 훈련 등의 많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든지, 그것이 여러 가지 체제상 문제가 있으면 공단을 만들든지 해서 확실하게 안정된 일자리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고용 사정이나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인력을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서비스를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인력을 늘려야 되는 부분은 늘리겠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한꺼번에 마구 충원하면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로 해 나갔으면 합니다.

정말 열정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서비스를 늘려 가도록 하십시오. 지금 예산이 쓰이는 것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채 안 쓰고 있습니다. 매우 빈약합니다. 예산 투입하는 것도 빈약하니까 충분히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고용안정센터에서 2006. 4. 14)

• 고용지원·사회적 서비스 강화도 민생문제 해결책

교육훈련은 직업알선제도와 함께 결합돼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업안내소 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 고용지원안내센터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투자가 지난 날보다 급절로 바로 바로 늘어나는

수준으로 투자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적 준비에서부터 교육훈련도 받아야 하고 홍보도 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모이는 이런 다양한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 고용지원 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참여정부에 와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 2. 27)

•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해야

자영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업종이 몇 개나 모여 있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 비용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거쳐서 창업을 하고 그전보다 수입이 높아졌다는 등의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걱정인 것이 그 사람 잘 되면 옆에 누군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규모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옆집 잘 되면 우리 집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탈출하느냐는 문제가 아주 고민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노동자로 보고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포섭해서 자영업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서비스업을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기업보다 일자리를 많이 내는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산 고용안정센터에서 2006. 4. 14)

• 체계적인 고용지원 서비스 ·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해야

그동안 체계적인 고용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상담원도 공무원 신분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업급여사무소 수준에 머물렀던 고용지원센터가 고용지원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가 45%, 이를 통해 취업한 사람이 78%나 증가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혁신하고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려 여기에 참여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난해 8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200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참여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예방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행된 자활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실질적 성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차상위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세 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토록 제도화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발목을 잡는 바람에 시행시기가 1년 늦춰졌지만, 이미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

• ‘고용안정’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갈 것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도 달라져야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의 삶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아주 낮은 수준으로 안정돼야 합니다.

좋은 사회는 국민소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없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가 가장 품질이 높은 사회입니다. 아울러서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기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이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희망 중에 가장 큰 것이 취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지만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국가가 이 부분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직업능력 향상,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당장의 당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데 매우 결정적 요소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기회를 갖는 비율이 10:1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이 확고합니다. 적어도 직업안정 서비스,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고용안정 서비스 정책에 관한 한 확실히 성공시킬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보고회에서 2005. 4. 6)

11

부동산과 주택

1.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주거 문제는 새삼 설명할 필요 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투자자금이 갈 곳이 없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에 쏠려 전체적으로 가격을 올려놓을 가능성을 낳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택은 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집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늦지 않게 세우도록 합시다.

(제6회 국정과제회의에서 2003. 5. 28)

집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한 분 한 분 걱정이 많을 줄 압니다. 경제 어렵고 일자리도 마땅찮고 일자리가 있어도 별이가 시원찮고, 그러나 여러분은 집 걱정은 털어서인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어려워도 행복해 보입니다. 사람의 생활이 안정되는 데 제일 기본조건이 나와 아이들이 몸을 눕히고 쉴 수 있는 곳, 밥 먹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 주택입니다. 주택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입니다.

여러 가지를 잘 하려고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주택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하려 합니

다. 돈 많은 사람 주택은 시장에서 해결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 하나만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주택문제는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짓겠다는 것은 조금 전 건설교통부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건설교통부 장관께서 이 정책을 착실하게 성의를 갖고 추진해 줘야 합니다.

(서민 주거안정 관련 현장방문에서 2003. 9. 3)

• 부동산 문제, 서민의 입장에서 꼭 풀어야 할 숙제

서민들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집값이고 또 하나는 사교육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서민들의 흰 허리가 찢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서민들 부담뿐 아니라 거품이 들어가면 경제 전체가 위협하게 되므로 경제 전반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의 입장에서는 주거의 문제입니다. 허리를 꼭 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 교육장 오찬에서 2006. 5. 3)

2. 부동산 투기는 단호하게 막아야

• 투기적 수요를 근절해야

금리소득 수준을 넘는 부동산 투기 초과소득은 전액 과세로써 환수한다는 수준의 정부 의지를 가져가야 합니다. 서민 주택문제를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확고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러한 대책으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면 공공부문에서 공급을 늘리는 등 공급측면에서 따로 대책을 세우는 한이 있어도 투기수요를 줄여야 합니다. 지역, 가격에 따라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도 적용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갑시다.

건설교통부는 공급확대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1가구 1주택

에 대해서도 투기적 요소가 있는 부분은 지역을 한정해서라도 이를 배제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가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인프라를 갖춰 실거래 가격으로 100% 투명하게 자료가 축적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간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금은 유인책만 쓰고 있으나 필요하다면 더욱 강력한 정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고 기업에도 큰 부담이 되는 등 부동산 가격은 경쟁력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기술혁신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제3차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2003. 10. 29)

부동산 문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8·31대책을 내놓았을 때, 일부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의 태도를 보면 입으로는 부동산정책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부동산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8·31대책의 후속 입법이 다행히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택의 공급도 확실하게 늘려 나가겠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올 들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값이 다시 들쭉거리고 있습니다.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미 예정했던 대로 추가적인 정책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2006. 1. 23)

• 부동산종합세는 투기를 막아 집값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안정시켜야 합니다.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 사업은 실

패합니다. 꼭 붙들어 뉘야 합니다. 엇그제 부동산종합세제 발표했는데 찬·반양론이 있지만 땅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특별히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해당되지만, 여러분은 큰 손실 없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 정도에게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부동산종합세 제안은 이 잘못된 구조를 고치려는 것입니다. 땅값을 반드시 잡겠습니다. 정당한 일로 이익을 얻는 것은 몰라도 땅 투기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일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5년 뒤에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22평에 살고 있으면 25평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을 것입니다. 꿈의 실현을 위해 그 정책을 지지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임금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집세, 집값이 높으면 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값을 낮춰야 임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서민주택은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국가경제로 봐서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국가경제로 봐서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관련 현장방문에서 2003. 9. 3)

• 부동산 가격 안정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킨다는 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목표와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인 정책들을 현실에 맞도록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구사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한두 개의 현실적 정책을 가지고 부동산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여론이 흘러감으로써 국민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부동산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부동산정책은 일관되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책수행에 있어서 이 점에 관해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정책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04. 8. 24)

부동산정책의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이러한 정책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입니다.

부동산정책의 방향은 첫째,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투기로 얻은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투기적 심리가 사라지도록 하고 셋째,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고 않고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05. 6. 20)

• 총론이 맞다면 지역적인 문제로 전체를 무력화시켜서는안 돼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일부지역에서 가격폭등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디에서도 더 이상의 투기이익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야 모두가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과거 부동산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총론에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다가도 각론의 내용에서는 다양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결국 정책의 핵심요소를 배제하거나 국회통과가 좌절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정당의 태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입니다. 지금 여론에서는 총론이나 각론이나 정면 반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론의 지역적인 사안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제기로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나 인식에 따라 지역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면 작은 차이를 가지고 너무 흔들지 말고, 일단 큰 골격은 통과시키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정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최선의 정책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과 여론주도층에게 작은 지엽적 문제에 대한 시비에 흔들리지 않도록 호소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협력을 당부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발언에서 2005. 9. 2)

3. 합리적인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예측가능하며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이 추진되어야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며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부동산정책회의를 설치하세요. 부동산정책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획단을 재정경제부에 두고 경제부총리가 각 부처에 걸쳐 있는 부동산관련 정책들을 총괄하고 이를 부동산정책회의에 보고해 조정해 주십시오.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등 보유세제의 개편은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동안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점과 시행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강구하고 그 과세대상 및 세부담 정도를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향후 부동산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관련 통계를 재정비하고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수립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효과를 사전에 검증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2004. 8. 11)

•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어

부동산안정대책 관련 부동산금이 부동산에 눈을 돌릴 수 없기 위해서는 부동산 실거래 가액을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물가수준 안에서 안정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은 거의 매일 부동산에 관한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보았던 통계는 우리나라의 공공 비축주택, 주택의 공공비축 비율이 OECD의 가장 낮은 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부터 또다른 것들까지 통계를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책임 있는 연구단체라는 데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과학에 근거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과학성이 부족합니다. 국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이나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누군가 와서는 국민들의 소득이 이만큼 높아졌는데 국민주택 규모를 아직까지도 25평 정도로 하고 있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그거 참 그럴 듯한 말인가 싶어서, 저도 부자니까요.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인데 국민주택 규모를 25평 정도로 해서 되겠느냐, 그거 30평 넘겨야지 했더니 30평형 하면 실제 실행수는 25평 정도밖에 안 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수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숫자가 아주 적더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 우리나라의 최저 주거기준과 비교해 보면 25평형은 아주 훌륭한 주택에 속하는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의 주거사정을 실제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과학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해 대책을 세우고 국민과 소통해 나가는 것이 절실합니다.

• 수요에 맞춘 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

우리가 지금까지 주택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먼저 주택의 수요를 전제로 목표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재원의 한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발상의 대전환을 아직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각별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택공사는 과감하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게 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역금리나 손실이 발생하는 수준만큼 그것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책임지시고요. 건설교통부 예산 갖

고 부족하면 우리 부총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재원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 가지 방도의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이때 확실하게 합시다.

최저 주거기준에 맞는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양적으로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계획을 세우고 예산 짤 때는 확실히 반영이 되도록 근본적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는 돈 빌려다 쓰십시오. 정부가 뒷감당하겠습니다. 딱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으면 다음에는 못 끌어 내립니다. 임기 중에 합시다. 그래서 재정능력에 맞춘 공급정책이 아니라 수요에 맞춘 공급정책으로 전환합시다.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2006. 4. 25)

• 신도시는 선(先) 계획 후(後) 해제 원칙을 꼭 지켜야

현실적인 필요를 고려해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선(先) 계획 후(後) 해제 원칙을 꼭 지켜 질적 수준은 한 단계 더 높이고 양적 팽창은 막아 수도권을 동북아 국제업무와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2004. 2. 12)

• 주택가격 안정정책을 최우선으로, 건설경기에 대한 안정적 관리도 중요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엄격하게 논의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거듭 다짐합니다. 건설경기 하락 문제에 관해 전년 대비 감소보다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과열 상태의 거품이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추세에서 건설경기 자체가 위축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부문이 건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 보면 주택부문의 부양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는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설경기에 대한 안정적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복지 확대와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수요를 각 부처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해 주십시오.

(국무회의에서 2004. 8. 23)

• 지자체와 협력해야

참여입주자격·기준을 지자체 없이 중앙정부만 해도 됩니까? 복지수요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건복지부에서 인프라 구축, 시스템 완비 등 관련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지자체가 선호할 수 있도록 만들 유인책이 있습니까? 문제는 중앙정부의 적절한 통제 수단과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는지가 불투명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분석해서 효과가 없으면 환수하고 넘길 것은 넘겨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중앙정부가 1차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개발한 뒤 그때 가서 지자체에 넘기십시오. 수요가 있는 곳에 건설을 제대로 못 하는 게 문제입니다.

(국정과제회의에서 2005. 4. 27)

4. 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 주택은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임대주택과 같은 서민들의 주거문제에 최우선의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는 경영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여했나에 역점을 둬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예고지표와 정책 수단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공공부문 주택원가 공개는 관련 부처가 전문가들과 면밀히 검토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2004. 2. 12)

주택공급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있고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으로 해결되는 중형 이상의 임대주택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서민형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나서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입주자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 등 민간임대 사업자만으로는 미답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를 해야 합니다. 민간이 하는 것은 선이고 공공부문에서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공부문도 경쟁도입과 혁신을 통해서 효율화가 가능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서는 과감히 나서서 수요를 충족해 나가야 합니다.

부동산 수요에는 소유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주거에 대한 수요도 있기에,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정책은 부동산 공급을 위해서도 좋은 정책입니다. 주무부처는 따로 있지만 재정경제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대불공단 미분양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력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균형발전이 중요합니다. 시장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갑시다.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2005. 3. 3)

•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완결된 정책을 마련해야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완결된 정책을 마련합시다. 문제는 감세를 전제로 한 정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택의 가격에 연동된다는 점이므로 부동산 가격 안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민간자본은 효율적이고 여유가 있으므로 민자를 동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영은 항상 땅값은 오른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땅값 변화에 따라 주택을 수시로 팔 수 있는 민간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택시장은 특수시장이고 임대주택은 그중에서도 특수시장입니다. 정부가 공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끌고 가야 합니다. 자금 동원도 싸게 할 수 있어야 효율적입니다.

정책은 완전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장기적으로는 주택소유 문화를 개선하는 데 정책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합니다. 창조적 소득은 인정하되 투기적인 소득은 정부가 일체 인정하지 맙시다. 시장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이 크므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처에서 공기업이 민간에 못지않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주택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정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정책에 대해 국가와 자자체가 확실한 큰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매입 개조해서 살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대신 청와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잘못이 있는지를 차질 없이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05. 6. 20)

• 임대주택은 주거복지정책

주택 관련한 정책은 한쪽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통해서 주택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투기 시장하고 아무 관계 없는 집이 없거나 아주 형편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복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추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거복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좀 대폭 확대하자 그런 것이지요.

실제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문민정부에 와서 상당히 중단돼 있었습니다. 중단돼 내려오던 것을 국민의 정부 말기에, 그것도 2003년 2월 달에 「임대주택법」을 통과시켜 준 것이지요. 그 법에 의해서 참여정부에 와서 매년 10만 채씩 장기 임대주택을 짓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대폭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목표가 2012년까지 전체 주택의 15% 정도를 정부 임대주택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2017년까지 한 20% 정도로 늘리자, 이렇게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입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그동안 시장금리가 너무 높아서 자금을 임대주택으로 투자할 수 없는 등 어려웠던 조건으로 인식이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며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금리 수준에서 자금을 관리하면 임대사업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민간 베이스에서도 가능하나 민간 베이스는 예측이 조금만 틀려도 문제가 발생하기에 공공부문이 백업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고유영역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소득수준에 있는 사람도 많으므로 이는 시장원리가 아닌 공공 서비스로 해결해 줘야 합니다. 공공부문도 시장영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좋은 안을 내면 모든 자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발언 중에서 2005. 3. 7)

그동안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9만 호씩 건립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착실히 공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 중이며 곧 발표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참여정부에 와서 임대주택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10년 이내에 주거복지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5.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 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

부동산은 바로잡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더 갈 수 없는 구조 위에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배짱이 좋은 사람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작전 세력이 오래가지 못한

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수요, 마음 급한 수요, 가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수요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것이 문제인데, 신뢰를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이 있으면 신뢰를 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파동으로 인한 금융 부문에 다소 불안한 기미 없지 않았습니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함께 다잡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이대로만 관리하면 큰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다시 확인하고 교차 확인하고 있지만, 그 점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서민 금융 부문에서 통계도 잡히지 않는 쪽에 걱정이 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년인사회에서 2007. 1. 3)

• 균형발전이 부동산값 상승을 불렀다는 것은 사실무근

균형발전정책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부동산값 올려놨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들어선 뒤에 토지 보상금은 약 61조 정도 풀렸는데, 이는 기존 여러 사업들에 따라 풀린 것이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풀린 돈은 행정도시 3조뿐입니다.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해 보면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2, 3% 정도 오른 수준 외에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2007. 1. 30)

• 차기 정부에서 건설경기 좋아질 것

조금만 멀리 보면 참여정부만큼 건설물량을 많이 준비한 정부도 없을 것입니다. 행정 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은 국가 균형발전 사업이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용산기지 이전,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 주택정책을 통해서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함으로써 주택 경기도 건강하게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균형발전 영역에서 기반시설에만 약 56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유발되는 투자까지 합하면 101조 원을 넘을 것입니다. 건설경기와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인건비나 자재 파동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물량뿐만이 아닙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들은 건축, 환경, 문화, 정보통신, 교통 등 여러 면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모아서 도시 건설의 모범을 보여 주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건설 기술을 확인하고, 한국 건설 기업의 우수성을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건설 60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2007. 6.20)

•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그리 많지 않은데도 과장해 걱정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1가구 1주택 자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과장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억 원 이상의 주택은 6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1991년에 1억 8,000만 원 주고 강남에 아파트를 샀던 사람이 금년 2월에 11억 받고 집을 팔았다고 하면 9억이 남게 됩니다. 9억의 양도 차익 중 양도소득세가 40%면 3억 6000만원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실제로 6,800만 원입니다. 퍼센티지로 7.5%입니다. 그것 때문에 집을 못 판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세금이라고 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이지요.

전문가들도 최고 세율만 생각하는 데, 정부가 그런 식으로 정책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집 한 채 팔면 다른 데로 이사 가서 두 채 살 수 있습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6.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가정책은 국민이 신뢰할 때 성과가 생겨

자유정책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을 내놓았을 때 전 국민이 그것은 안 된다고 치부해 버리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법도 국민의 10%만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하면 불가능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신뢰할 때 따르게 되면서 성과가 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국가정책이니까 우리가 협력해서 이뤄 보자는 마음을 가지면 어려울 듯한 제도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도 전 국민이 맞서 보자고 버티면 그것이 시행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법이나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 강행할 수 있다면 5공이 왜 권력을 놓았겠습니까? 1차적으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국가정책입니다.

일례가 지금의 부동산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오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강남 사람들에게 무슨 유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거품 파괴 현상을 이겨 내고 편안했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부동산에 거품 들어가 꺼질 때 그 경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심각한 몸살을 앓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정책을 내놓았는데,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 언론까지 거기에 합세하니 국민들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부세 한번 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저도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퇴임 후에 어떤 집에 살까를 들여다보면서 중부세 계산합니다.

일부 언론들하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금제도는 노무현 정권이 끝나도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데 이것을 뒤집는 법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반성장을 향한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에서 2006. 5. 19)

•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문제 해결할 것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집 없는 서민 여러분의 상실감은 말로 다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8·31대책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를 인하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변 집값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기간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확대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지역에 매년 30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공개 확대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주택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금융의 급격한 증가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금융 건전성을 약화시켜 국민경제의 체질을 부실하게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 반대와 흔들기가 더욱 강력한 정책 불러

단번에 잡지 못해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한번에 잡지 못한 이유는 반대와 흔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흔들기는 더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반대가 있으니 처음부터 강력한 정책을 통과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만한 정책이었는데 일부 부동산 언론은 효과 없을 것이라고 흔들고 야당은 장차 제도를 뒤집을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오르고 다시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흔들어서 더 강력한 정책이 만들어진 셈이니 부동산 신문으로서의 결과적으로는 자승자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투기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유세, 거래가격의 공시제도는 가장 오랫동안 주장되어 온 정석적인 정책, 강력한 수단입니다. 전체 주택소유자의 2.4%인 23만여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니 뒤집지는 못할 것입니다. 통계가 투명하니 억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부동산 대책은 차기정부에서도 계속될 것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 요구에 따른 법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형편에 맞게 집을 사되,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년기자회견에서 2007. 1. 25)

12

교육

1. 차별 받지 않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 학벌사회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입니다. 자유, 평등, 기회의 균등 등 민주사회를 보여 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기회의 균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과정을 거쳐 학업을 마쳤습니다. 누구보다 성공해 기회의 균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화의 사회입니다. 평생 학습하지 않으면 낙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으로 지식을 키워가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학벌사회를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대학에 순위를 매겨 한 줄로 세우니 중등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학벌사회는 그 자체가 정의롭지 못합니다. 거기서 많은 문제가 파생합니다. 해결이 어렵지만 학벌사회가 해소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성공하면 학벌사회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길입니다. 흔히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마해 온 과정을 보니까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처럼 끊임없이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방송대 졸업식에서 2004. 2. 28)

• 인적자원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 동력

무엇보다 초·중등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임용·연수·승진에 이르는 교원정책 전반을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를 일반화하겠습니다.

교육격차는 소득격차로 이어져 빈곤의 대물림을 가져오게 되므로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의 유휴시설을 보육실로 전환하여 학교가 양육과 보호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애학생에게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들이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 교육제도 점점 더 개혁, 대학도 점차 특성화

교육제도도 점점 더 개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들도 점차 점차 특성화하고 있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학이나 넣어도 우리 아이들 앞으로 자기들 먹고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일류의 인재가 되는 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공부는 또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조그만 차이에 급급하지 말고 세계를 크게 내다보고 그렇게 배포 있게 해 나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잘 되면 우리 아이들 다 함께 갑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2. 기회균등과 창의력, 경쟁력 개발은 함께 고려되어야

• 기회균등 원칙과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방향 모색이 필요

전 국민이 완전히 경쟁체제로 가서 전 국민을 서열화하는 교육체제, 경쟁체제로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부터 밤샘 과외를 해서 교육이 아주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공교육의 보편적 수준을 높여 나가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살려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의욕을 가진 사람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뺏어 나갈 수 있는 특수 코스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 국민 서열화로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되지만, 이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토론과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보고회에서 2006. 4. 3)

• 공부만 잘하는 학생 뽑는 게 반드시 교육적인가

대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만 계속해서 합격시키겠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 자꾸 뽑아다가 시키면 반드시 교육적으로 성공을 하는가, 그 점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공부를 잘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성적이 나쁘면 그 이유에 맞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환경과 학교 교육환경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교육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환경이 좋은 학생들만 뽑아서 대학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의 문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걸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 우리 교육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키워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신뢰가 부족한 사회라는 겁니다. 통합성도 부족합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요. 다양성도 아직 부족합니다. 다양성이야말로 자유와 창의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있어서의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가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얼마 전에 OECD 평가기구에서도 한국에 대한 몇 가지를 평가했는데, 일부 신문들은 대체로 한국의 성장력에 관한 평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조언, 이런 것만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핵심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통합 재정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율입니다. 그 비율이 유럽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미국과 일본의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가장 후진적인 지표가 바로 이 지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별로 받아쓰질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대단히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강자의 목소리가 너무 큼니다. 너무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고 우리 사회에서는 강자들입니다. 강자가 강자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 내고 강자를 위한 정책이 일방통행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는 결국 분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분열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자랑스러운 사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육도 배려가 있는 사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한국의 지성 사회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총장과의 토론회에서 2007. 6. 26)

3. 교육평준화 제도는 창의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

• 3불 정책 무너뜨려서는 안 돼

3불정책을 무너뜨려선 안 됩니다. 3불정책 중에서도 대학 본고사정책이 핵심입니다. 고교 등급화는 본고사 제도에 따라가는 것이니까 핵심은 대학 본고사 제도입니다. 교육의 자유는 가져도 좋지만 왜 선발하는 것까지 꼭 자유를 가져야 합니까?

대개 합리적으로 1% 정도 선발할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이를 또 천분의 1로 나눠서 거기서 또 우열을 다 가리게 하자는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세가 너무 심해서 정부가 방어해 나가는 것이 벅잡니다. 과학기술의 장래를 놓고 3불정책을 무너뜨릴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고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3불정책을 무너뜨리고 본고사 부활시키서 초·중등학생부터 입시 경쟁에 몰아넣으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퇴보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 과학기술정책에 더 많은 관심 가질 것입니다. 경쟁은 부득이하고 긴장은 필요하지만 연구 환경이 불안하지 않게, 말하자면 연구과제 확보위해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 느끼는 환경으로 내몰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2007. 3. 22)

• 고등학교에서 창의성 인성 교육 잘 안 되는 것은...과도한 입시경쟁 탓

과학기술계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큰 문제가 초·중등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초·중등 교육에서 창의성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민교육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인성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창의성 교육을 하려고 열린교육이라고 명명해 초·중등 교과과정을 바꾸어 왔습니다. 부단히 선생님들과 갈등도 일으켰고, 선생님 안에서도 하자는 분과 귀찮아하는 분 간에 갈등을 겪으면서 열린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초·중등학교까지는 다양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오면 잘 안 됩니다. 중학교까지는 입시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양성, 창의성 교육이 가능한데, 고등학교 오면 입시에 걸리니까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만들어 다양한 교육을 하려고 해도 입시학원처럼 내용이 바뀌어 갑니다. 교과와 대학입시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문민정부 때부터 입시를 획일적인 전형방법에 따라 한 줄로 세워 전 학생을 서열화하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2002년 교과과정 개편도 그 점에서 진보해 왔고, 2008년 개편에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중심 업무보고(과학기술부)에서 2007. 3. 22)

• 3불 정책 더 이상 흔들지 말고 뽑기 경쟁보다 가르치는 경쟁 해야

몇몇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대학입시 정책을 포함해 소위 3불정책을 마구 공격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이유에서건 학생을 획일적인 입시 경쟁으로 내몰고, 학생을 학원으로 내몰아 버리는 그런 정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도움을 청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학기술계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잘 배우는 학생들 해 드릴까요? 본고사 부활해서 답안지 잘 쓰는 학생들로 우리 과학기술계가 발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경쟁력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학별 고사를 하는 나라에 비해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교육의 기회 때문에 계급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 때문에 계급이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과학기술계는 여러분이 한국의 창의력 있는 학생을 위해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연구도 하시고, 제가 틀렸다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교육에 대해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중심 업무보고(과학기술부)에서 2007. 3. 22)

• 하향평준화 주장은 사실 왜곡, 중등학생 학력수준 세계 5위권

지금 제도가 학습능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왜곡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중등학생들 학력 평가는 OECD 국가들 중 제일 나쁜 과목이 세계 4-5

위입니다. OECD에서 하는 학력평가 대상은 저 시골에 있는 학생까지를 다 함께 대상으로 해서 평가한 것이지, 서울의 우수한 학생 일부만 뽑아서 평가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평균 5위 안에 들어 있고, 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해도 10위권 아래로는 어떤 과목도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 중등 교육은 그만큼 성공시켜 놓았는데, 고등학교 가면 차차 무너지 집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에 가까우니까요. 대학 입시가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가장 떨어뜨리는 요인인데도 하향평준화라는 말을 꺼내 들곤 합니다. 한국에 하향평준화된 교육은 없습니다.

고교 평준화 후에 상향평준화했다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학업 성적이 좋아졌다는 것은 이미 다 연구 결과로 검증된 것입니다.

오히려 변별력의 기준을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성적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 사람의 인간적 폭이나 가능성,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적 배려 정도 등이 다 포함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좀더 윤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좀더 공동체적인 그런 변별력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아야 합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 고교 등급제 되면 고교입시 부활, 초·중등학생까지 입시공부 해야

말하자면 본고사라는 자체가 시험 선수만 다 뽑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니 내신평가를 학력 중심으로만 하려 하고 게다가 고교 등급제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 또한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우리의 고교교육은 거의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등학교 교육이 학교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질 수 있고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면, 그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획일화된 학교를 다시 일률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그런 등급제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제는 결국 학력 중심의, 시험 중심의 사회를 만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창의력 교육을 붕괴시키고, 주입식, 암기식 교육과 시험에만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인성 교육과도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가 등급이 생기면 부득이 입시를 부활시켜 줘야 합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부

활시키면 중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입시공부 해야지요. 그러면 중학교가 입시공부를 하면 거기 또 등급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일류 중학교가 생기지요. 그러면 1등급 중학교, 2등급 중학교, 3등급 중학교.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 입시공부를 해야 하는 연쇄적인 교육의 망국이 도래하게 됩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 3불 정책 외에는 다 자율

첫번째가 대학입시에서 대학별 본고사를 치는 것을 하지 말아 달라, 금지하는 것이죠. 두번째로 학생을 평가하는 데 그 학생의 출신 학교를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았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기여 입학제라는 것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돈 주고 입학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되고 있어서 아직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본고사 안 된다, 고교 등급제 안 된다, 기여 입학제 안 된다. 다른 것은 다 자유이고 세 가지만 규제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편의상 누군가가 3불정책하다 보니 그렇게 불리게 되었나 봅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대학이 자율성도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 보면, 이 세 가지 빼고는 다 자율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율입니다. 지금 대학 교수들 정부 비판이 자유롭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교육하든 마음대로 합니다. 대학교 연구에 대해서 누가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대학 자율이 왜 필요합니까? 대학 자율이라는 것은 역사가 있습니다. 중세 때에는 종교를 이유로 자유로운 학문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육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연구도 못하게 하고 발표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율을 제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인권 의식이 발생하면서부터 교육의 자율이 나온 것이지요. 대학교 자율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대학교가 자기들 살림살이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등록금도 자율이고 입시도 자율이다, 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교수 사회에서 서로 경쟁도 평가

도 안 받는 것을 자율로 생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율이라는 것을 무한정 그렇게 확대하면 안 됩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 10개 대학의 선발의 자율 위해 공교육 무너뜨릴 것인가

우리도 모두 자율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나가면 좌측통행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타면 우측통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자율 시민이지만 자유라는 것은 다 질서 유지와 그 사회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율을 너무 확대하고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개 대학의 선발의 자율을 위해서 우리나라 공교육을 다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 창의성과 효율이 무너진 상태에서 학부모들이 새벽 1시, 2시까지 과일 깎아 가지고 아이들 방을 들락거려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 아이들을 몰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이익과의 충돌에서 더 큰 이익, 공공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4. 공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 완전한 교육은 공교육의 장에서 이뤄지는 것

모든 교육의 기본적인 장은 공교육입니다. 사교육은 강좌이지 교육으로서는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한 교육은 공교육의 장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사교육의 장에서는 이뤄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의 해답은 공교육을 되살려내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방과후학교 모범현장 방문 및 성과보고회에서 2007. 10. 12)

공교육의 강화와 교사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 복지의 수준과 재정 규모의 수준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이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교육 재정을 늘리고 지자체가 좀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라도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재정 운용도 준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필요한 돈은 교육부 안의 다른 예산을 옮겨서라도 쓰도록 1차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 예산이 많지 않으므로 정 줄일 데가 없으면 기획예산처 장관이 돈 내놓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국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서 꼭 한번 성공시켜 봅시다. 마지막까지 공교육 살리는 일에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교육장과 열린 대화에서 2006. 5. 4)

• 방과후학교는 학교와 가정의 만남

빈곤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총체적인 보호 관리와 종합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방과후학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고를 가진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방과후학교도 이 같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빈곤아동과 청소년 대책은 사랑과 윤리공동체이자 가장 기본적인 교육 단위인 가정에 대한 대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정과제회의에서 2004. 7. 1)

•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바꾸는 것이 방과후학교

학생들은 아직도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고 서민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 허리를 펴기 어렵습니다. 2004년만 해도 사교육비가 약 8조 원 가량 들었다고 합니다.

이 교육문제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경쟁구조 때문입니다.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대학입시에 집중해 놓고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점차 해결돼 갈 것입니다. 대학교육이 특성화돼 가고 있습니다. 입시 방법도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교육은 점차 정상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중등교육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있고, 정부도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해서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기회를 잃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적어도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해방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10년 내에 사교육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2006년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방과후학교가 문제점과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거라도 가져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공교육 살릴 더 좋은 대안 있으면 얼마든지 중앙 정부, 대통령으로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안 없이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라도 해서 살려 갑시다.

우리 학교를 살려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세계 경쟁에서 이기고 합리적인 사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한국의 미래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일등이 되자고 해도 교육이고 양극화 해소도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하고, 뭐든지 교육 빠지고 되는 것이 없는데 학교가 무너지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방과후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교육장과 열린 대화에서 2006. 5. 4)

• ‘우리들의 자식’ 들이 모두 어우러져 사는 사회로 가야

누구라도 내 자식 일류 대학교 보내고 싶고, 대학은 대학대로 좋은 아이들 뽑아서 일류로 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식’ 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돕고 의지하며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어 가도록 어른들이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가 끝내 힘 있고 잘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하면 힘 없고 약한 사람은 점점 더 낙오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낙오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다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가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이 사회의 갈등이 줄어들고 함께 구상하고 손 잡고 나아갈 때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가 될 수 있고 경쟁력 최고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 입시 환경 바꾸고 공교육 환경 바꿔줘야

두 가지입니다. 입시 환경을 바꿔 줘야 하고 공교육 환경을 바꿔 줘야 되는 것이지요. 학교 안에서 다 공급되면 학원에 가라고 해도 누가 가겠습니까? 좋은 시설에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보호해 준다면 학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입시제도가 공교육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평가하도록 만들어 줘야 공교육을 열심히 받지요. 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유리한 입시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학원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이지요. 학원을 부도덕하다거나 악이라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공교육 바깥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분명히 남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교육의 기회균등의 문제까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방과후학교 모범현장 방문 및 성과보고회에서 2007. 10. 12)

• 공공의 재산 많은 나라가 선진국, 가장 중요한 공공재는 교육

공공의 재산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 사회의 부를 전부 개인이 집안의 금고 안에 쓸어 담아 놓고 있는 사회는 부자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선진국은 안 됩니다. 개인의 집 담장 바깥에 있는 재산의 총량을 합하면 선진국의 순서대로 더 많은 것이죠. 공공의 재산이 더 많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공공재가 교육입니다.

저도 교육을 위해서 GDP 1% 세금을 더 올리자는 말을 못하고 제 임기를 마칩니다. 참여정부는 세금정부라고 하는 말에 기가 죽어서 말도 한번 꺼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20% 전후를 오고갑니다. 조세 투명성이 높아져서 세금 착실히 걷어 놓으니 그걸 가지고 참여정부 세금 많이 걷었다고 시비하고 있습니다.

세금 1% 더 내서 우리 사회의 교육 공공재를 제대로 확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뒷받침을 할 테니까 그거 한번 해 보자고 교육부총리한테 소리 드렸는데 교육부총리도 보니까 사정이 뻔하지 않습니까. 방침을 안 만들어 오고 말았습니다. 만들어 오셔도 뭐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교육이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각 기업이 할 수도 없고 국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람이라도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만 져 주면 그 사회를 그렇게 저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모범현장 방문 및 성과보고회에서 2007. 10. 12)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일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도 교육입니다. 세계일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도 교육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통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교육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1% 세금 내자는 운동이 왜 우리 시민사회에서 안 일어나나 이거죠.

(지역아동센터 방문 및 정책간담회에서 2007. 10. 12)

•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교육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교육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부처 공무원들과 공감하고 공유함으로써 임기를 마친 후에도 공무원들이 그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방과후학교도 인력과 예산, 설비를 모두 갖추고 출발하면 좋겠으나 시범사업과 검증기간을 거쳐서 시행하기에 일선 선생님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정책이 검증되면 점차 예산과 인력이 지원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힘을 내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의 성과는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하는가, 헌신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도 열심히 할 테니, 선생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참여정부는 아이들의 배우는 교육환경, 그리고 선생님의 가르치는 교육환

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 모범교원 초청 오찬에서 2007. 5. 15)

제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참여정부에서 정책 내놔도 정권 바뀌면 다 무산될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제가 국회 교육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의 정책이 문민정부 시절에 만들어 놓은 교육개혁안에 기초해서 그것을 현실에 뿌리내리려고 하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정책을 가져와 가지고 문민정부가 마련해 놨던 기초를 뒤집어 엮은 것은 제 생각에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적어도 기본방향에 있어서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세부적인 시행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생기면 조금씩 바꾸고 이런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지엽의 문제이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정책이 근간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총장과의 토론회에서 2007. 6. 26)

5. 대학은 자발적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 대학 구조조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기제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장기제에 맡기고, 반드시 국가가 재정을 통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고 유도하는 구조가 돼야 합니다.

대학 구조조정이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구조조정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 경쟁력 강화에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분석하고 필요하면 재

검토하기 바랍니다.

수도권 대학에 우수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나 대학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합니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대학이 빠지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방대학을 살려야 하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이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학부에 의대, 법대, 경영대 등이 있는 구조가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를 왜곡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분야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2005. 3. 25)

• 뽑기 경쟁이 아닌 가르치기 경쟁해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능이 9등급입니다. 네 가지 영역 중 모두 1등급 받은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0.15%입니다. 천분의 1.5입니다. 만분의 15입니다. 만 명 중에 15명이면 거기서 벌써 변별력이 나타나지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신기록이 보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습니다.

저는 뭐 십분의 일 정도이면 충분히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욕심 부려서 천분의 일, 만분의 일 뽑으려고 하지 말고 잘 가르치기 경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계 최고의 인재로 만드는 것이 대학교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자율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입시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 관여는 많은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하고 있고 프랑스도 하고 있고 영국도 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나 우리 헌법이나 민주주의의 정신에 비춰 봐서도 입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대학자율은 아닙니다.

대학자율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수 연구의 자유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뽑기 위한 자율이 아니라 맘껏 연구하고 실력을 키워 내는 자율을 찾아야 합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 지도적 역할 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 버려야

지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통합해 나가기 위한 배려가 항상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 함께 가려는 어떤 통찰력 있는 전략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규제를 받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아무렇게나 규제를 불쑥불쑥 내밀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독재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의 버릇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결코 받쳐 주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렇게나 규제하지 못합니다. 대학이 공무원들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고요,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의 자율을 강조하시는데 대학자율 존중해 드려야지요. 아무도 대학자율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대학의 자율도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더불어서 자율의 권리를 함께 공유해야지 어느 집단만 자유를 누리고 어느 집단의 자유를 위해서 나머지 집단의 자유가 제한을 받게 됐을 때는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이라든지, 다양성 교육이라든지, 민주주의 교육이라든지, 하는 미래의 가치를 훼손시키면서까지 대학의 자율을 주장하는 것은 자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총장과의 토론회에서 2007. 6. 26)

13

복지

1. 복지정책은 사회투자전략

• 복지지출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혹시 복지·문화영역의 지출이 경제성장 효과로서 국민소득으로 되 돌아온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적 검증은 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바꿔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꿔 주지 않으면 복지 예산은 항상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예산이 되고 복지를 말하는 정치인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인이 됩니다. 성장 안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밤낮 성장에 관심 없는 대통령 후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 부분에 대한 이론적 개발, 경제적 성장 효과로써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또는 긴 시간 이후 축적되는 어떤 파급 연관효과 같은 것들을 제대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수위원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 3차회의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서 2003. 1. 22)

•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성장·복지 통합하는 민주복지국가로 가야

민주주의 발전은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독재는 없어지고 특권과 권력의 횡포도 어

는 정도 해소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수준이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하는 신뢰와 통합, 그리고 갈등의 극복,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도 우리가 그동안에 그저 생산성 없는 분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생산과 분배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별도의 것이라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맞지 않다는 이론이 이미 세계적으로 확립돼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국가 전략이고, 그 다음에 사회 복지 투자를 훨씬 더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 잡힌 사회

아직 크게 뒤쳐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투자와 균형발전입니다.

복지 예산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복지 예산을 정부 예산의 20%에서 28%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투자는 북유럽의 1/3, 미국, 일본의 1/2 을 넘지 못하고,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복지투자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담은 비전 2030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균형이 잡힌 사회, 이것이 진보의 본뜻입니다.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2007. 4. 30)

•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

복지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원 배분을 개혁하고 정책의 방법과 수단을 정비하고 전달 체계를 확충하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하는 종합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원 배분에 대해선 가장 많은

투입을 했다, 가장 많은 성장률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여정부 들어 국가 재정에서 경제투자과 사회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교부금 가운데 복지·환경 쪽의 비중을 매우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차원에서 재원 배분의 큰 전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책에 있어선 돈을 지급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개발해서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에서부터 학생, 여성, 노인, 그리고 장애인 각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발굴 사업은 바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앞으로 군복무 제도를 재편하게 됐을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전달 체계에 관해서는 충분하진 않지만 사회복지사를 늘렸습니다. 동사무소를 생활지원센터로 만들고 일반 공무원들을 복지 교육을 시켜서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빼고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전환시켜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투자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지출은 단순한 소비적 지출이라고 해서 반대가 너무 많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론이 있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지 지출을 잘 하면, 방법을 바꾸면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사회투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 복지정책의 내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사회투자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회투자전략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내용을 보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그리고 예방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잘 교육시키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사회적 부담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자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계있는 유사한 것으로 사회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어떤 사상과 전략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비전 2030이거든요. 이 비전 2030을 참여정부의 경제 부처에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만들었거든요. 청와대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복지는 이제 경제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동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 수요자가 자기 정책 챙길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

그동안 요령이 좀 부족해서 더 많은 실적을 못낸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시간이 꽤 있습니다. 마무리 다 못하는 것은 정책적 준비를 해서 다음 기간에 수요자로서 자기 정책을 챙길 수 있도록 마무리를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요령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987년도에 6월 항쟁 하면서 민주주의의 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곡된 사회 문화와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꿔 나가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숙한 민주정부 수준의 정치 지도자와 국민의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만큼 바꾸면서 사회가 감당해 내는 몫을 추동해 가는 것은 수요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장애인)에서 2007. 4. 4)

2. 노인 복지

• 노인들의 건강과 노후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 기울일 것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경제가 어려워 호주머니 속에 용돈이 말라 있는 것이고, 심심하고 몸 아픈 것이 고민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야말로 참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 용돈을 한 푼 더 드리고 심심하지 않게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요즘 건강보험, 의료보험 지출이 너무 많아 국민 부담이 큼니다. 그중 20%가 노인요양에 쓰인다고 합니다. 쓸 돈은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노인들

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병원에 자주 가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출비용을 줄여 그 예산으로 또 다른 노인복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의 진행속도가 미흡하지만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빨리 안 된다고 매를 강하게 때리지 마시고 살금살금 때려 주십시오. 잘하라고 하는 채찍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잘 모시겠습니다.

(제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2003. 10. 2)

• 노인들의 복지는 국가가 책임

경제가 잘 되어야 하고, 경제가 잘 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 복지를 위해서입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복지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복지입니다. 이제 노후가 되면서 점차 불안해져 있는데 사회가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느라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노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야 미래를 믿고 기대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국민이 됩니다. 노인들의 복지는 확실히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노인분들은 지난 날 우리 한국의 경제기적을 일으킨 분들이십니다. 정치도 한 국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제일의 업적을 이룬 여러분이 대접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대접을 해 나가도록 제도와 인식을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노인대표 초청 신년 오찬에서 2005. 1. 26)

• 고령화 사회정책은 일자리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만들어

고령화 사회를 위한 정책을 공부하고 도와드리며 자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령화 시대가 이런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노인정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얼마씩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정책이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심심하지 않게 취미 생활이

나 운동 또는 경로당이 무료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세상 돌아가는 일에 귀가 어둡지 않도록 정보화에 돈을 들이기도 하지만, 제가 돌이켜 봐도 별로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 부실한 것 같아 아쉽고 조마조마합니다.

(노인계 대표 오찬에서 2006. 1. 13)

•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늘릴 것

올해 8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11만 개로 대폭 늘리고, 노인복지 예산을 금년보다 54% 증액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일자리 확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체계와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참여정부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4년 2만 5,000개 이던 노인 일자리는 올해 11만 개로 늘었고, 노인복지 예산도 출범 초기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강 · 여가 프로그램, 노인수발보장제도, 요양시설 확충, 기초노령연금 등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사업들도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확실한 토대를 닦아 놓겠습니다.

(2007년 전국 일하는 노인 전진대회 축하 메시지에서 2007. 2. 13)

• 노인들의 모습이 달라질 때 선진국이 될 것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되고 나서 여러 나라를 돌아보는데, 한국의 거리만큼 젊은이들이 활력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선진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의 모습과 우리 한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은 모습이 다릅니다. 제가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노인들의 모습이 달라져야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에서 2007. 3. 6)

해외에 나가면 숲이 푸른 나라가 선진국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젊은 사람들이 활력 있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노인들이 품위 있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또 비교적 활력 있는 모습으로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나라가 선진국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복지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사실 별로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 중에서 또는 우리 국민 전체의 총생산 중에서 복지 지출을 하는 비율이 일본이나 미국의 절반 정도, 또 유럽의 3분의 1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해외로 나가면 잘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5년 전까지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20% 정도였습니다만, 올해에는 28%로 약 8% 정도 비율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 비율은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희망은 2030년, 2020년까지 미국, 일본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2030년까지 대개 유럽 수준으로 따라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6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에서 2007. 10. 31)

3. 장애인 복지

• 장애인정책에 속도를 더 내야

축하드립니다. 정말 장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입상 때까지의 땀과 노력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저와 국민 모두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마음에 비해 초청이 늦어 유감스럽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헤드리지 못해 안쓰럽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정책이 아니라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지난날을 돌이켜 챙겨 보니 국민의 정부 기간 때 장애인정책이 많이 나오고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갈수록 발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큰 배와 큰 차는 처음 출발할 때는 속도가 빠르지 못하지만 예열을 하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빠르게 속도가 붙습니다. 한국이 경제력이 세계 12위의 수준이 됐습니다. 장애인들과 그 밖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회공감 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사회적 여건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찬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장애인기능올림픽 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2004. 2. 23)

• 장애인 고용을 위한 문화와 시스템 갖춰져야

장애인 고용에 대해 공공부문도 앞서 가고 노동부와 대기업이 나서서 장애인 고용촉진 협약을 체결하면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친화적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정책도 사업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정착돼야 성공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장애인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고 의무고용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정부도 풍부한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형태를 다양화해야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고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기도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는 마음이 있어도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경영 마인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인사문화와 함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작업현장을 둘러보면서 공정의 효율화 못지않게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경쟁요소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도 모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장애인 복지, 고용 등 취약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 '비클시스템' 방문 간담회에서 2005. 6. 29)

•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다행히 최근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04년 처음으로 정부부문에서 의무고용 비율 2%를 달성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 14년 만의 일입니다. 공기업과 민간부문에서도 의무비율을 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크게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고용효과가 큰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모델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현재 1.3% 수준인 고용비율을 빠른 시일 내에 2%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 장애인 고용실적을 더욱 비중 있게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일자리아말로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의 선물입니다.

(장애인고용 모범기업 격려서신에서 2006. 2. 6)

• 내 친구의 장애를 해결하려는 노력, 어떤 제도보다 큰 자산

장애인 정책에도 앞장서신 분들이 탁월한 성과를 거두신 것이고, 국회에서 오신 두 분께 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없이 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애로를 말했지만 여러분의 인식과 사회적 대응 능력이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정책과 제도의 성과 이상의 희망을 가집니다.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모두 힘을 합쳐서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나의 장애가

아니라 내 친구의 장애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자세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희망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보다 큰 자산입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장애인)에서 2007. 4. 4)

• 장애인정책 미흡했던 것 미안

2003년부터 장애인정책 5개년계획이 2차로 들어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꽤 버겁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이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해서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와중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가지고 간간이 강경한 투쟁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장애와 소외된 계층에게 마음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꿈은 늘 간직하고 있으니깐요.

(장애인 영화 "맨발의 기봉이" 관람 후에 2006. 4.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좀 늦었습니다. 속도가 좀 느렸다는 점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약속드린 것을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고 제도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대해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확실히 밀어 준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못 보냈습니다. 2003~2004년 지나는 동안 보건복지부가 과감하게 정책을 들고 와서 해 달라 하는 게 조금 부족했습니다. 2006년부터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대통령을 줄라대기 시작했던 사정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장애인)에서 2007. 4. 4)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

앞으로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여러

본이 배우고, 일하고, 이동하는 데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문화, 체육 등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데도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 법에는 차별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에게 많은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극복해야 할 역경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요구해야 합니다.

기업도 장애인 고용을 부담이 아니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인적자본 투자라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알리고, 후속조치를 철저히 추진해서 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이 실현되는 사회를 공약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확대, 의무고용 2% 달성, 지하철 엘리베이터 의무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중 장애수당 등 대부분의 과제가 완료되었고, 장애학생 특수교육 등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출이 2002년 1조 2,000억 원에서 올해 2조 6,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수당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올해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도 계속 늘려 나갈 것입니다. 의무고용은 정부부터 독려해서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2%를 초과달성했습니다. 민간부문도 좋은 모범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꾸준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채택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도 조속히 비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제2차 장애인종합대책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 축사에서 2007. 4. 4)

4. 여성 · 아동 · 육아 복지

• 육아정책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

육아에 대한 투자는 국가가 하는 투자 중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투자입니다. 제임기 동안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할 때 국선 변론 등을 통해 경험한 바로는 성장환경이 좋지 않았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아정책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좋은 육아환경을 만드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따라서 가정에 대한 육아지원도 중요합니다.

예산은 제 임기 동안 최우선 순위로 배정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지원이 아주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아이를 낳고 싶는데 육아부담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경제적 능력 등으로 소외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육아지원정책 국정과제회의에서 2004. 6. 11)

•아이 낳아도 두렵지 않은 사회 만들 것

올해에는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큰 것으로 아이를 낳아도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보육문제가 첫번째고, 두번째는 교육문제입니다. 사교육비도 줄여 줘야 하고 입시 지옥이라는 지나치게 왜곡된 경쟁의 고통도 줄여 주어야 합니다. 집이나 일자리, 노후, 그리고 일생을 책임지는 건강의 보장 등이 불안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2004년부터 중기 재정계획을 시행했습니다. 5년씩 미리 내다보고 예산을 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여성, 보육 예산도 크게 내다보고 5년씩 짜고 있습니

다. 기획예산처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 총액을 부처별로 나눠 주면 우선적으로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새로운 멀리 내다보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2030년을 내다보는 재정계획의 기초를 거의 잡아 놓았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올린 것을 연말에 읽어 보니 제가 지금까지 본 미래재정 중에서 가장 우수한, 간명하고도 알찬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긴 어렵고 예산을 계획한 기획예산처에서 적절한 기회에 밝힐 것입니다.

2030년을 내다보는 계획 중에 여성들 몫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칙으로 풀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한국도 좋아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5만 달러로 가는 나라가 되고 보육은 90% 정부의 책임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성부가 관장해야 하는 몫이 큼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일입니다.

(여성계 신년인사회에서 2006. 1. 10)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총 32조 원을 투자하여 이를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아동 기준 30%로 대폭 확충하고,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차별시정, 모성보호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 유아교육이든 보육이든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

학교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갈등적 요소, 저항적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학교를 개방할 수 있

으려면 학교 선생님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학교의 저항보다는 유아교육 집단의 저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유아교육이든 보육이든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집단 간의 갈등이나 저항은 수요자의 의식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합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

보육 예산이 다섯 배 증가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아동 수가 2002년 19만 명에서 올해 77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상승세로 반전된 것도 이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

14

한반도 통일과 안보정책

1. 대북정책의 핵심 원칙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입니다

-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반드시 풀어야 할 하나의 큰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극복하지 못한 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아직 평화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러시아가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후체제에서 벗어나 보통 국가가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미국은 세계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냉전체제는 해체되었으나 아직 평화와 공존의 질서가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다시 대결적 분위기가 조성될지 모릅니다.

참여정부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우리 역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 위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틀이 성공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동북아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길이라는 인식과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2007. 8. 15)

•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책 계승할 것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한반도에는 여전히 긴장과 불안이 계속되어 왔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한국경제가 회복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회복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이 동북 아시아가 좀더 개발되고 또한 동북 아시아가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통합되는 경제체제를 지향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경제의 가능성에 대한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아주 큰 희망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 희망을 말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핵문제만 잘 해결되고 나면 바로 동북 아시아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책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적극적으로 국제적 사업과 자본을 좀더 조직해서 동북아를 개발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자, 이렇게 비전을 조금 크게 한번 말하는 것이 다르다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 외에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아주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여야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2003. 2. 19)

• 안보 현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선택과 결단

제가 취임할 당시 북핵 위기는 무력제재의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최고조에 달해 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 재조정과 같은 어려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평화와 경제를 위한 안보, 우리 힘으로 지키는 안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 그리고 동북아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13합의는 북핵 폐기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 아시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육군3사관학교 제42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2007. 3. 16)

참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정립하며 국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6·25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동족상잔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여 민족의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남북분단의 장벽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평화번영정책 추진의 주역입니다. 대북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각계 각층의 활발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민적 통일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의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2003. 9. 24)

•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아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입니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안보입니다.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공존의 지혜입니다. 화해와 협력, 공존을 위한 지혜의 요체는 신뢰와 포용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적대하고 의심하고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 상대의 자존심과 불안을 자극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서는 신뢰를 쌓을 수도 없고 화해와 협력의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대범한 자세로 상대를 포용해야 합니다. 대결주의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속지 않기 위해 온갖 나쁜 상황을 가정하여 불신과 적대감을 자극하는 일보다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1. 23)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을 것이며 평화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관계를 관리해 나가면 우리는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폐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기를 위한 노력이 또 다른 어떤 충돌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폐기할 때까지 매우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마침내 남북관계, 동북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 발언에서 2006. 11. 2)

•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켜

이제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어디 가셔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북핵문제는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통해 평화적 해결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실질협력을 확대하면서 신뢰를 쌓아 가고 있습니

다. 지난해 남북교역이 1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개성공단을 방문해 보시면 남북교류 협력이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한·미관계는 일방적인 의존관계에서 상호존중의 협력관계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권 전환과 같은 해묵은 과제들도 잘 풀어 왔습니다. 균형외교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서 2007. 6.19)

• 참여정부 평화정책은 미래 동북아 질서 멀리 내다보며 가는 것

참여정부의 평화정책은 멀리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이라는 현재의 좁은 틀이 아니라, 미·일·중·러 간의 관계 변화를 포함한 미래의 동북아 질서를 내다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는 지금도 제국주의와 냉전에서 비롯된 역사적, 이념적 앙금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잠재적 대결에 대한 미·일·중·러 간의 불신과 불안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또 상호 간의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더욱더 가속화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북아의 대결구도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동북아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하더라도 평화의 공동체를 구축하지 못하면 문명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국만의 이익의 울타리를 벗어나 상호 존중과 협력에 의한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진해 온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구상의 핵심입니다.

(제주평화포럼에서 2007. 6. 22)

• 남북 함께하는 한반도 경제, 동북아 경제 성공하면 세계일류국가로 응비

지금 당면한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이 함께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상 속에서 북핵문제를 단순히 핵무기를 폐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평화 전반에 걸친 문제로 다루어 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9·19공동성명에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체제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 첫걸음은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나가야 합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협력을 확대해서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방경제 시대가 열리면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한국 경제의 크나큰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무대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뻗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역과 금융, 비즈니스 등 모든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도 우수한 자질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협력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동북아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개성공단은 남북경협 성공사례로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풀리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 금융·물류 비즈니스 허브 전략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2007. 7. 19)

2. 대북포용정책

• 공존의 지혜와 신뢰 회복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북지원 가지고 시비가 있습니다. 대북지원의 문제는 1차적으로 평화의 비용으로 생각하고요, 2차적으로는 통일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평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법은 신뢰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화를 얘기해도 상대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도록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도 주거나 받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대가 확실하게 믿도록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북지원이 하나 거기에 해당되고, NLL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공존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존의 방법을 찾아 나가자는 것이지 북한에게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이익을 주어서 우리를 위태롭게 하자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위기요인을 제거하는 것, 압력을 낮추는 것, 신뢰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군 주요 지휘관과의 대화에서 2006. 6. 16)

• 대북지원정책은 통일시대 대비한 투자

자꾸만 퍼 준다, 퍼 준다 비난을 많이 듣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여러가지 정책을 폈는데,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마셜플랜입니다. 전쟁 뒤 미국의 막대한 원조로 유럽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도 남북관계가 풀리고 시작된 개성공단이 북핵 때문에 중단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살려 가면 미국의 마셜플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동북 아시아가 아주 효율적인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북한이 마지막에 중유 내라고 요구했는데 국내에서는 한국이 몽땅 뒤집어 쓰고 올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고, 사전에 그럴 거라고 예단하는 비판적인 기사를 쓴 사

람들이 많았습니다. 다행이 균분한다고 합의했습니다. 협상하는 사람한테 그거 다 달라는 대로 주고 와라 하면, 험하게 하는 것이어서 안 되고 아무에게도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주더라도, 우리가 다 부담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도 결국은 남는 장사입니다. 될 것이다 라고 마음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제발 깨지만 말아 달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사람들이 잘해 줘서, 저는 입 밖으로 말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동포 간담회에서 2007. 2. 16)

• 북한은 개혁·개방 이외에 아무런 길 없어, 결국 속도의 문제

남북 간 교류협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 당국 간의 대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여 뜨거운 동포애를 나누었습니다. 금강산에 이어 평양 관광도 시작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를 비롯한 남북 간의 4대 경협합의서도 발효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인이 북한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과 북한의 노동자가 한솥밥을 먹으며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적, 물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면 남북 간의 신뢰는 한층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북정책의 추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만, 대화도 협상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2003. 9. 24)

북한은 개혁·개방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북한도 제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이외에 아무런 길이 없기 때문에, 개혁·개

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개방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개방할 것입니다.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그 판단에 있어서 우리 한국정부, 또는 미국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공존할 수 있느냐,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구조를 정착시켜서 협력하는 관계로 서로 교류하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핵무기 버리고 개혁·개방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쌍방적인 상호 관계입니다.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그 개방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우리는 계속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 2. 27)

•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변화의 상징

과거에는 학자나 언론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냉전과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참으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간 신뢰구축과 실질적인 관계 진전을 위해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린 것을 비롯해 국민의 정부 5년간 83회 열렸던 남북회담이 참여정부 4년간 119회로 늘어났습니다. 투자보장, 이종과세 방지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13개 합의서도 발효되었습니다.

남북 간 교역이 참여정부 들어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지난 한해 금강산 관광을 제외하고도 10만 명 이상이 남북을 오갔습니다. 금강산 관광객은 지난해까지 140만 명에 이릅니다.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도 올 상반기에 시범 운행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개성공단입니다. 지금 개성공단에서는 만 천 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우리 기업인과 함께 땀 흘리고 있고, 앞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7만 명 규모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군사요충지였던 이 지역이 한민족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기자연맹 특별총회 개막식 축사 중에서 2007. 3. 12)

• 베트남, 중동특수 이어 세번째 특수는 북쪽에 있어

베트남 파병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한국은 베트남 특수라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가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두번째는 국내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중동특수가 우리의 경제 고비를 넘기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두 개를 기억합니다.

또 그런 특수는 없을까? 대통령 후보 시절 다니면서 세번째 특수는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열리고, 우리 도로가 우리 기차가 중국, 러시아로 바로 연결되고 만주, 연해주 개방이 이뤄지고, 또 한국의 상품이 철의 실크로드를 따라서 유럽으로 기차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 한국 경제가 또 한 번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개발되는 시기가 되면 한국 경제가 또 한 번의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힘차게 진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 개성공단을 만들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포 간담회에서 2007. 3. 26)

• 상대를 포용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남북관계 전략

참여정부는 이 과정에서 관용과 신뢰의 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경계하고 적대해서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장을 포용하고 역지사지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상대가 불합리하게 나올 때도 역시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상호주의로는 이처럼 어려운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상호주의는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국민의 안전과 평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해치고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을 불러올 뿐입니다.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의 반복과 대결구도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세기 동안 녹슬었던 경의선 열차가 남북을 오고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우리 기업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고 지금 낭패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외

국 투자자들은 빠져 나가고, 잘 나가던 주가가 곤두박질쳤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북핵문제가 난마처럼 얽혀서 해결이 요원한 일로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대북 강경책을 쓰지 않았고, 비상을 걸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도 않았지만 한반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평화지수가 미국, 프랑스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상대를 포용하고 신뢰를 쌓아 나간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남북관계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세력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 가는 길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와 원칙은 계속 유지하고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2007. 7. 19)

3.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북한과 한국, 북한과 미국의 문제는 신뢰의 부재

저는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반규칙들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그런 합리적인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북한은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처해 있는 상황도 특수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도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면 북한을 소위 합리적인 대화의 상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자 또 어려운 문제인 것이지요.

북한과 한국, 북한과 미국, 이 사이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상호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 때문입니다. 저는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게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이 다 필요하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심각한 대결과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대결적 수단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2003. 2. 19)

• 핵 폐기만이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책

저는 취임 이후 미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해서 북핵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그 결과 베이징에서 6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의 틀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북한 스스로 핵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는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2003. 9. 24)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관련된 제반 법령들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는 별도로 정부는 미사일 발사 이후 시행된 대북지원 중단조치를 지속시키고 당국 차원의 경제협력을 보류하는 등 이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 비용을 적게 치르는 성공이 진짜 성공

두 가지의 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좀 강경한 대응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는 강경한 수단으로, 어느 쪽에서는 대화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만 선택될 수 있는 문제는 아

됩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요소라는 것은 두 가지가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보다 온건하고 안정된 대화의 방법을 추구할 때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단호하고 강경하게 조치해 나가야 할 때는 조치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이 두 개가 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적절히 배합돼야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력행사라는 불행한 사태 없이 해결돼야 합니다.

또 다른 잣대로는 같은 성공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비용을 적게 치르는 성공이 큰 성공입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는 성공은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평화적인 해결로 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국제사회와 상의하고 있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적절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초청 다과회에서 2006. 10. 11)

평화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상징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심 군사 요충지였던 개성공단이 한민족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속도와 범위는 조절하되, 큰 틀에서 대북 평화번영정책의 기본원칙은 지켜나가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의 진로는 순탄치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입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현명하고도 성숙된 행동과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하고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의 안녕과 경제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보장의 원칙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2·13합의의 의미

북핵 문제도 지난달 6자회담에서 이뤄진 2·13합의를 통해 해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협의 등은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북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동북 아시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열어갈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6자회담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합의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2007. 3. 2)

• 이제 평화적 해결의 길로 확실히 들어서고 있어

미사일과 북핵 사태의 와중에도 남북관계는 많은 진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남북 간 신뢰를 확대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간 철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핵심 군사 요충지였던 개성공단이 남북한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는 대화에 의한 해결 원칙을 일관되게 관철했습니다. 6자회담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적 해결의 길로 확실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9·19공동성명에 이은 2·13합의는 북핵 문제 해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시아의 다자 간 안보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평화구조가 정착되면 육로를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한국 경제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6·25전쟁 57주년 참전용사 위로연에서 2007. 6. 25)

4. 안보를 정략에 이용하는 것은 독재의 나쁜 버릇

• 반북·반미 시비는 소통과 발전 가로막는 편 가르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 왜 반미(反美) 안 하나?’ 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심정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너 왜 반북(反北) 안 하나?’ 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반북해서 미래가 열리겠습니까? 반미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전 세계 20%의 경제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2050년이면 그 비중이 10%로 줄어든답니다. 한국은 2050년이 되면 약 6만 불 이상의 소득 국가가 되고, 세계에서 몇 위 가는 강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미 하고 안 하고 할 것 없이 지금 당장, 적어도 자주독립국가로서 낮 뜨겁지 않을 수준의 자주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북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위해 자주·균형 외교와 점진적인 변화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너 어느 편이냐?’ 하는 식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어렵습니다. 가끔 제왕론에 근거한 조언들이 많아서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정책기획위 오찬 연설에서 2007. 1. 2)

•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

북한에 대해 말하자면 별로 퍼 준 것도 없는데 보기에 따라 퍼 줬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지원은 꼭 해야 합니다. 투자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퍼 준다고 하고, 너 북한하고 친한 정권이냐, 친북 정권이냐 하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 친북 정권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자면 친북해야 합니다.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 합니다. 북한을 우리하고 원수로 만들어 놓고, 그 우환을 언제까지 감당하려고 합니까?

친한 친구가 되고 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미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과거를 극복할 것은 해야 합니다. 마음에 용서하기

어려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국민들로서 잊기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옛날 일만 가슴에 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열어 가야 할 길을 열지 말자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손해입니다. 이번에 잘 될 거 같고 되면 한국이 또 한 번 그야말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포 간담회에서 2007. 3. 26)

• 경제 안정 위한 실속 있고 조용한 안보

되도록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독재 시대의 나쁜 버릇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장래의 안보에는 영향을 미칠지언정 당장의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도 걸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런저런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참모들의 걱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나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 때에는 다르게 대처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안보와 안전은 활력 있는 경제의 토대입니다. 평화가 위협을 받고 안보가 불안한 나라는 경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비 또한 투자입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안보정책과 믿음직한 치안과 위기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하지만 실속이 있는 안보가 필요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15

한 · 미관계

1. 한 · 미동맹 잘 가고 있습니다

• 한 · 미관계는 오랜 전통을 가진 우방

최근 여중생의 사망과 관련한 촛불시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전쟁 당시 미국과 다수의 EU국가들은 많은 젊은이들을 파견해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를 한시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촛불시위를 반미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촛불시위는 SOFA 개정이 주된 요구이고 이는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다 성숙한 한 · 미관계의 발전을 바라는 목소리일 뿐입니다. 한 · 미동맹관계는 과거에도 소중했고 지금도 소중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매우 소중합니다. 저는 미국이 앞으로도 우리의 좋은 우방으로 남아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 · 미관계는 오랜 전통을 가진 우방입니다. 지금도 상호 간에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고 또한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은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반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부 반미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한국의 여론을 주도하지는 못합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여론은 한·미관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토대 위에서 성숙한 관계를 맺어 갈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MCHAM, EUCCK 초찬간담회에서 2003. 1. 17)

• 갈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더 큰 장애

저는 요즘 한국신문을 볼 때도 좀 괴롭고, 미국신문을 볼 때도 좀 괴롭습니다. 한국에 많은 국민들이 촛불 들고 시위를 했는데, SOFA를 개정하자는 것이었어요. SOFA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미가 아니고 합리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우리 국민들은 한·미관계에 관해서 보다 더 발전된 합리적인 관계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와 시위를 반미 감정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6·25 당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 준 사실을,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린 사실을 잊지 않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반미를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국민 정서의 토대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면 큰 문제없이 잘 해결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연합사 방문 중 2003. 1. 15)

모든 관계에서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갈등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한·미 간에 혹시 갈등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갈등을 풀기 위한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필요하면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 나가야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것은 갈등 자체가 없어야 한다거나 조그만 갈등이 있을 때 갈등 자체를 문제 삼는 그런 생각이나 태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부딪혀 왔던 어려움이었고 앞으로 저도 아마 그런 어려움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아사히신문 회견에서 2007. 1. 23)

• 한·미관계 공고하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

지금 한·미동맹은 매우 공고하며,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과거 십수 년 동안 미뤄 왔던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문제도 원만하게 합의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세계적인 안보환경과 동북아 안보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여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적인 결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합의를 이뤄 냈습니다. 올해 안에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합의하고, 이를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면 미국과 더욱 성숙한 형태의 포괄적인 안보 협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미래안보환경에 부합되도록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역내 다자안보협력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제62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2006. 3. 3)

• 한·미관계, 방향만 같다면 속도는 함께 조절할 것

생각하면 2003년 했던 걱정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북핵문제는 북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적어도 결말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한 발짝씩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북핵문제를 다루는 방향이 한 단계씩 좋은 방향으로 와서 상당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판을 깨기야 하겠습니까?

처음 참여정부 들어섰을 때, 우리 국민들이 한·미동맹에 관해 많이 걱정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 노 대통령 성깔 있는 사람인데 사고 내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고 어떤 분은 제가 좀 미워서 저 사람 사고 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미관계는 지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가도 중요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해서, 5년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져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달라져 가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10년쯤 뒤에 대화 테이블에 만났을 때 우리 한국인들이 대우 잘 받고 있구나, 하는 점차 상호적인 협력관계로 변화해 가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오늘 당장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한·미 간에 상호 존중하면서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로 가야 합니다.

혹시 한·미관계에 관해 생각이 다르고 좀더 빠른 변화를 원하는 분들 있어도, 방향만 같다면 속도는 함께 조절해 가면서 국민 뜻을 모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다르다고 해서 남의 나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나 모욕을 느끼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할 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재미동포 간담회에서 2005. 9. 14)

2.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호혜평등의 관계로

• 한·미관계는 심각한 분열 없이 개선해 나갈 것

한·미관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작전지휘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전지휘권 방위조약, 주둔군 지위협정 등등 군사관련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자각을 가지고 고쳐가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한두 가지의 전제가 함께 충족되거나 먼저 충족돼야 됩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위기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실제로 평화에 대한 안정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줄었다고 할 때라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할 때도 별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위협이나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하면 불안심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긴장완화 평화구조 정착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종합해서 제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 5년 동안 이 문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할 만큼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서 국내에서 심각한 대립과 분열이 생긴다든지 또는 심각한 불안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하면서 변화를 이뤄 내겠습니다.

(KBS 특별 생방송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에서 2003. 1. 18)

•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외교

그동안 정부는 균형외교, 자주국방, 남북 간 신뢰구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외교안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 동맹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다 하면서도,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더 큰 신뢰를 쌓아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간에 쌓여 있던 여러 가지 현안들은 다 풀었습니다.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 원고에 있어서 올해 안에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만, 꼭 올해 안에 완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2006. 1. 13)

•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원칙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고 손해도 안 보고 자존심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남의 나라 군대를 최전방에 배치해 놓고 인계철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주국가의 자세도 아니고 우방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현실의 의존보다 심리적 의존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 없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니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만 나오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정쟁이 생기고, 주한미군사령관의 한 마디가 온 나라 언론을 장식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미 2사단의 후방 배치,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로 한 것은 이러한 의존상태를 조금씩 줄여 나가자는 뜻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상태를 바로잡은 일입니다. 또한 달라진 우리 군의 위상

에 걸맞은 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준비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일입니다.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역량을 신뢰합니다.

국방력은 총체적인 국력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제조업과 첨단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교육과 사회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 육성과 선진통상국가 전략을 적극 추진해서 선진국 문턱을 뛰어넘어야 하겠습니까.

(제61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2006. 8. 15)

지난주에는 우리 군의 오랜 염원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는 2012년 전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6·25전쟁의 외중에 넘겨 주었던 전시작전권이 62년 만에 한국 군의 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국군이 꾸준히 역량을 키워온 결과이자 우리 군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한·미동맹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공동방위체제로 발전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2007. 3. 2)

•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상호보완적 관계

한·미관계는 일방적인 의존관계에서 상호존중의 협력관계로 나날이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용산기지를 이전하면 그곳에는 역사공원, 세계평화공원이 들어설 것입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아주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며질 것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같은 해묵은 과제들도 잘 풀어 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국내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안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이 안보역량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이 잘 되어갈 것입니다. 균형외교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좋은 방향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자주국방 토대 놓겠다는 약속 실현단계 들어서**

오늘은 참여정부 임기 중에 맞는 마지막 국군의 날입니다. 나는 취임 초부터 우리 군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의 토대를 놓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거의 다 실현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먼저,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연평균 8.7% 수준으로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특히 국방연구개발비는 2002년 7,000억 원에서 올해는 1조 2,000억 원으로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최신예 전차와 초음속 훈련기, 첨단 구축함과 잠수함 등을 통해 전력의 첨단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을 신설해서 국방획득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제 2012년이 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맡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꾸준히 역량을 키워 온 결과이자 우리 군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등을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2007. 10. 1)

3. 경제와 안보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 외교

• **큰 틀의 원칙 지키되 융통성 발휘하는 외교로**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우리 경제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외국자본이 우리 경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우선 외국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전쟁이나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장래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시에 발생하는 안보상황의 안보적 영향은 대부분 장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에는 당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고려사항인 것입니다.

큰 틀의 원칙을 지키되 구체적인 외교행위는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외교는 현실입니다. 외교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쌍방적인 행위입니다.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상대를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합니다. 균형외교이든 자주국방이든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관계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한·미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옛날대로 가자고 하는 주장은 원칙에 맞지 않고 일거에 바꾸자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한·미관계와 이라크 파병

건진이 교환하는 방식이 외교는 아닙니다. 더욱이 한·미처럼 오랜 관계, 앞으로도 깊은 관계를 가져 갈 나라 간에 하나하나 교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는 국내·외 모두의 문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에 우선해 북핵 문제 해결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해결에 있어서 미국의 생각과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잘 풀리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한·미 간에 갈등이 있는 것보다는 아주 돈독한 협력관계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핵 해결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미국과 원만하기를 바랍니다. 국가 간에는 냉기류와 갈등이 있기도 하고 기복이 있지만 북핵 해결 국면만큼은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돈독하고 긴밀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북핵 공조엔 정말 손발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어렵지만 파병 이전에 진정으로 이라크에 도움이 되려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부대 편성과 역할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 국민과 아랍 국가들에게 이를 인식시키면 외교적 갈등이나 우리 군의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라크 입장에서도 터키 등은 인접국가여서 현지에서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도 일본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긴장하고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인접국가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2003. 10. 23)

파병문제와 관련하여 전후복구 참여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적 이익을 추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미관계는 중요합니다. 또 세계 석유질서의 전망도 고려사항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경제적 전망에도 또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파병이 결정된 후 미국은 APEC에서 북핵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었습니다. 파병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신임 국면에서 지지자의 절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파병을 발표했습니다. 적어도 파병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존중할 것이며 방침이 결정되면 단호하게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 통일통위 조찬 간담회에서 2003. 11. 6)

• 이라크 파병,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최선의 판단

여러분 힘드실 것입니다. 힘이 안 든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힘들 것입니다. 임무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같은 임무라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면 견딜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전쟁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은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 각각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여러분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한 것에 대해 기꺼이 따라 주기 바랍니다. 옳다 그르다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대통령도 인간으로서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군인으로 지내는 동안, 오직 상사의 명령, 그리고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은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국가의 결정을 따르는 일이고, 곧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뒷날 어떤 역사적 평가가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또 함께 정치를 한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질 일입니다. 설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역사적으로도 결코 비

난받거나 잘못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다이만 부대에서 2007. 3. 27)

• 균형적 실용외교, 유엔 사무총장 배출 쾌거, 6자회담서 적극적 역할

균형적 실용외교는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외교안보전략입니다.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전략적 위치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역사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의 평화질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 나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미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북핵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에서는 6자회담 당사국 간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2007. 8. 15)

4. 군사협력 넘어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한·미동맹

• 미래지향적 다자 간 안보체제의 비전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은 미래를 내다보고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이라는 현재의 좁은 틀이 아니라, 중·일 관계의 변화를 포함한 미래의 동북아 질서를 내다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이른바 균형외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다자 간 안보체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9·19성명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러한 노력은 장차 우리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자주국방의 기본 위에서 주한미군 발전적 역할 필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대해 저는 그럴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한국에 그만큼 이익도 있어서 주둔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주둔은 우리의 자주국방 위에 하나 더 높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지, 우리의 국방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자주국방으로 다할 수 있고, 그 밖에 미군의 역할이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북억지력이 지금까지의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동북 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로서 지역안정이 한국군과 미국군의 역할입니다. 한국군의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새로운 군사적 ·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주둔하는 것인데, 주한미군을 재배치한다거나 숫자를 조금 줄인다는 얘기만 나오면 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당장 큰 위협이라도 노출돼서 스스로의 안정조차도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력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면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그와 같은 주한미군 상황의 약간의 변화 때문에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국방태세는 우리가 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급 및 보직신고식에서 2003. 4. 18)

• 6자회담 합의는 남북 평화체제 넘어 동북아 평화체제의 틀 갖추는 의미 있어

오늘 베이징에서 6자회담 합의가 됐습니다. 2005년 9월 19일에 합의가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 때문에 다시 정체되어 있다가 오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것입니다. 합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쪽에서 모두 성의를 갖고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합의의 이행이 순조롭게 잘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번 9·19 때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있습니다. 9·19공동성명을 하고 난 뒤에 미국이 BDA를 의심스런 은행으로 지정한 것으로 모두 알고 있지만, 사실은 9·19성명이 있

기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사실은 BDA에 대한 조치가 재무부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그 수수께끼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이고, 또 다른 것은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협의를 해 나간다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다자 간 안보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한 협의도 계속해 간다는 것이 합의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범위가 큼니다. 핵문제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남북 간 으르렁 불신하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남북 간에 북핵뿐 아니라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서 협상하고 또 타결됐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한국이 신용등급 최고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제 외적 요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동북아의 다자안보 협력체라는 이런 틀이 갖춰지면 그때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물론 이제 새로운 가치를 향한 발돋움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서 2007. 2. 14)

• 한·미 FTA 는 미국화 아닌 국제화의 길

한·미 FTA에 대해 염려가 많습니다. 한국 전체가 미국화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세계의 자본이 어느 나라 구분 없이 넘나드는 시대입니다.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 시작이 한·미 FTA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미국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팔자면 그쪽의 요구를 들어야 하고 시장개방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국제화는 있지만 미국화는 없습니다.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란은 그 자체로 보기 나름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리고 한국 공무원들이 상당히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 칠레 회담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앞으로 FTA 경쟁의 시대에서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

습니다. 한국이 지금 약한 것이 기업 지원 서비스,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지 발명, 연구·개발 등입니다. 이어지는 법률, 회계 등도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주변에서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서비스, 지식 기반 서비스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미국 시장과의 경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력이 높은 우리 한국 사회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대로 열어 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동북 아시아에 있어서 적어도 서비스, 기업 지원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선두를 차지해 나가자 라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 2. 27)

16

2007 남북정상회담

1. 남한을 출발하며, 북한에 도착하며

- 평화정착 · 경제발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에 주력

저는 오늘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합니다.

취임 전후의 긴박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한반도 정세나 남북관계가 정상회담을 열 수 있을 만큼 변화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좀더 차분하고 실용적인 회담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새 길을 열었다면, 이번 회담은 그 길에 가로 놓여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지체되고 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회담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제들이 논의되겠지만, 무엇보다 평화 정착과 경제 발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는 남과 북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이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 협력은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남북 간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장애도 적지 않습니다. 이 장애를 극복하지 않고는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회담에 거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의제들, 정상회담추진위원회에서 검토된 의제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의제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최대한 의제에 반영하고 결과를 얻고 싶은 심정이나, 한 번의 만남으로 이 많은 과제를 소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이번 회담에서 논의하고 성사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서울 출발 대국민 인사에서 2007. 10. 2)

• 시기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중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몸을 사리거나 금기를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역사가 저의 책임으로 맡긴 몫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토대로 제게 맡겨진 책임만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할 것입니다. 많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상호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신뢰를 더할 수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성과일 것입니다. 저는 잘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보고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남과 북이 가는 길이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녘 땅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이틀 후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서울 출발 대국민 인사에서 2007. 10. 2)

• 이 금단의 선도 차차 지워질 것

국민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날이라서 가슴이 무척 설레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선 심경이 착잡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 있는 이 선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 놓고 있는 장벽입니다.

이 장벽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 민족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발전이 정지돼 왔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수고해서 이 선을 넘어가고 또 넘어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저의 이번 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고통을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잘 다녀오겠습니다.

(군사분계선 걸어서 통과하기 전 2007. 10. 2)

•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길은 더욱 넓고 탄탄해질 것

북녘 동포와 평양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마음속 깊이 뜨거운 감동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께 남녘 동포들이 보내는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남북은 지금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간절할수록, 우리의 의지가 확고할수록 그 길은 더욱 넓고 탄탄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지난날의 쓰라린 역사는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이 땅에 평화의 새 역사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갑시다.

진심과 성의로써 정상회담에 임하겠습니다. 7,000만 겨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뜻을 모아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평양도착 성명에서 2007. 10. 2)

2. 북핵문제

• 6자회담 긴밀 협력, 2·13합의 성실 이행 합의

사실 저는 가면서 약간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 북핵문제입니다. 북핵문제는 남북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이미 있습니다. 기본 원칙에서 이 합의가 있지만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6자회담에서 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막 잘 풀려 가고 있는데, 저더러 자꾸 북핵문제 해결하고 와라, 해결하고 와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문제 해결의 타작마당은 따로 있는데 저더러 따로 어디서 또 타작마당 벌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부담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듯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기존의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6자 회담의 장에서 남북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자, 쉽게 말하면 핵 폐기는 하는데 6자회담에서 우리가 같이 풀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북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관한 분명한 의지 밝힌 것

김정일 위원장께서 아무 이의 없이 북핵문제에 대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점,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중요한 선언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원칙으로서 재확인한다 하는 이런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최

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니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서 북측이 상당히 민감한 여러 가지 표현들에 있어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평가를 우리 외교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협력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핵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표현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핵 폐기 과정에 대해 저는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 이미 이행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시 서두에 그쪽에서 우리는 핵을 가질 의지가 없으면서 6자회담 대표(김계관)를 불러서 과정을 설명까지 해 주는 데, 핵 폐기를 확인하는 부분을 한 줄 더 넣자는 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긴 시간 논의하는 것이 회담 전략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9·19선언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2007. 10. 11)

•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 진전에 기여

이미 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진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담 도중에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회담장에 들어오도록 해서 10월 3일의 공동성명의 합의결과를 직접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소상한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는 6자회담의 진행이 아무런 장애없이 잘 풀려갈 것으로, 따라서 핵문제는 잘 풀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북핵 시비’는 대결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

오늘 여러분 중에서는 왜 북핵문제가 빠졌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없어서 매우 다행스

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핵문제가 빠져서 아쉽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북핵문제를 다루는 주된 바닥은 6자회담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 궤도에 들어서서 가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이 김계관 부상을 불러서 특별히 경과를 설명하는 마당이니 재삼, 재사 강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상선언에 인용된 9·19공동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합의, 한반도 평화체제·동북아 다자 간 안보협력 체제, 이런 문제까지 다 들어 있는 완전성이 아주 높은 문서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자꾸 시비를 걸기 위해서 북핵문제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모든 공동체에는 강경과 온건, 대결주의와 타협주의가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항상 이 두 세력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렇게 해 온 것이 그동안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대결주의가 점차 퇴조해 가고 있다, 대세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미래의 역사는 타협주의, 평화·공존의 세력이 승리할 것입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2007. 10. 19)

3. 한반도 평화체제

•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그 첫걸음은 대화

나는 그동안 남북 간에 신뢰를 쌓는 일이면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해치는 일은 최대한 절제해 왔습니다.

말 한 마디라도 상대를 존중해서 하고 역지사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의 원칙을 일관되게 말하고 이해를 구해 왔습니다.

6·15공동선언 이전까지 남과 북은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노력 없이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합의는 많았지만 그만큼 실천이 따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년간의 교류협력에서 우리는 신뢰를 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성공단,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처럼 서로 만나서 합의하고 합의한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찾아 함께 실천해 나간다면 더 큰 신뢰를 쌓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의 증진은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민족 공동번영의 미래를 여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이 그런 미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회담을 지켜보고 있는 7,000만 겨레에게 큰 희망을 선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대화하고 조금씩 양보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및 환영만찬에서 2007. 10. 2)

• 김 위원장 평화체제 전환에 기본적 동의

이제 북핵 문제가 풀리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체제로 가려면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이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함께 가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원칙에 있어서 남북이 주도해서 직접 관련 당사국과 평화체제에 관한 협의를 열어 나가도록,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당사자 간에 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자, 각국에 이렇게 제안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 과정의 일환으로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종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전에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간의 경제협력의 확대, 그리고 동북 아시아의 협력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북·미 간 그리고 북·일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무슨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진 합의할 사항도 아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중요성을 매우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께서 매우 경청했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서해평화지대가 남북정상 공동선언의 핵심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문제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서해 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군사적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 이 서해 문제를 우리가 풀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평화공원, 그리고 해주공단 개발과 이를 개성공단·인천항과 이렇게 연결하고,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구축해서 경제적 협력을 해 나가는, 이런 포괄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방안을 제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참모들과 상의한 다음에 우리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상선언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NLL은 '남북 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갈 것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입니다.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습니다. 이걸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오도하면 여간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는 것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2007. 10. 11)

• 종전선언의 문제는 평화체제로 가는 첫 단계

종전선언의 문제는 평화체제로 가는 첫 단계 문을 여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당사자로서 인정받으려는 부분을 국제적인 합의 속에서 끌고 가려고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관련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동의 마지막에 북의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다만 실제 선언을 언제 할 거냐는 노력을 해 가야 할 문제지만, 6자회담의 이행 속도에 따라서 가야 할 문제고, 이 선언이 6자회담, 북핵 폐기의 속도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2007. 10. 11)

한국이 당사자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3자 또는 4자라는 그 문장 표현은 북쪽에서 제안한 것인데, 나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부시 대통령과 나 사이에는 이미 합의가 돼있었고,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당시까지 나와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중국 당국이 명시적으로 종전선언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람, 연쇄적이지만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나와 부시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이 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중국이 명확하게 참여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4자회담, 4자선언으로 굳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2007. 10. 19)

• 남침 사과 없으면 평화체제로 가지 말라는 말인가

우리가 6·25를 한국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종식할 때 사과와 배상

등이 패전국에게 부과되는 것이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화해와 협력의 전제로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일까요? 어쨌든 불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의 요구사항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실성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드릴 수 있고, 법적으로 얘기하면 패전한 당사자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이유로 남북관계를 언제나 이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정전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과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또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정전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자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죄를 받지 못하면 평화체제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나, 그렇게 묻고 싶고, 당신은 사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와신기자 간담회에서 2007. 10. 19)

4. 남북 경제협력

• 말로만 했던 '남북이 하나', 개성공단이 실천

진작부터 꼭 한 번 와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참여정부 와서 첫 삼을 떼기 때문에 궁금하고, 또 1단계의 2차, 곧 이제 다음다음, 이렇게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꼭 보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함부로 국경을 넘어서 들락날락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못 왔습니다.

남북이 협력을 잘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게 6자회담의 장입니다. 6자회담을 하러 가면 실제로는 북측하고 공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다, 이런 것을 실천하고 있는 장이 6자회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 보니까 정말 여기가 우리가 말로만 하는 '남북이 하나다' 라는 것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실감이 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우려도 많았고 정말 괜찮은 건가, 정말 될 건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서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현장에서 2007. 10. 4)

• 개성공단 노동자가 평화에 대한 신뢰 만드는 주인공

나는 앞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북측 노동자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사장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성공하는 그런 좋은 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한반도 전체로 확산되면 이제 정말 우리가 전쟁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아무리 전쟁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마음 속에 조금씩 조금씩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기업들이 북측에 투자 안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불편도 있지만, 그런 위험 때문에 적극적으로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투자를 안 해 버리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다 해결될 텐데, 그 해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평화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개성공단 현장에서 2007.10. 4)

• 경협은 일방적 지원 아닌 공동 이익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저는 경제 협력에 관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실질 회담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개발 등 그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만스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 경협은 어느 일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경제협력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중에서 대북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

니다. 우리가 남북경제 협력 하면 얼른 일방적 지원을 항상 머리에 떠올리는데, 회답에서 그런 방향으로 대화가 됐을 때에는 북측으로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을 공동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남측도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은 매우 좀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비용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데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합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고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기업적 투자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철도 또한 기업적 투자의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책 자금의 지원이 좀 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합의한 것 중에서 순수하게 정책자금, 말하자면 차관이라든지 또는 지원 방식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곳은 결국 개성·평양 간 도로 개선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남북 간, 무역교류 내지 투자자의 물자교류에 꼭 필요한 도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농업 협력과 보건·의료 협력에서는 아마 정책적 지원 자금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 합의가 됐을 뿐이지 구체적 합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돈 얘기를 따질 단계가 아니죠.

(와신기자 간담회에서 2007. 10. 19)

• 특구 방식으로 법·제도·인프라 문제 일괄해결 제안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 지역에서는 성공을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남북 경협이 잘되지 않고 실패했거나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런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경협의 이 많은 장애 요인들을 건건이 하나하나 해결해 간다는 것은 너

무나 많은 시간과 절차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개발 방식을 통해서 법과 제도, 인프라 문제 등을 일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제안을 역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남북 경험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토대 위에서 남북이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공동 번영의 구상을 미리 준비한 바에 따라서 상세하게 밝히고, 경제협력을 좀더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남북 부총리급 공동위원회 운영 합의

이 밖에도 남북 간에 논의되어 오던 각종 경험 사업들이 정상 간 합의로서는 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매우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일일이 합의를 하려고 하면 너무 끝이 없고 해서, 총체적인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 간 부총리급의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경험이 평화 구축하고 평화가 경험을 뒷받침하는 선순환구조

저는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 그리고 나아가서 동북 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단지 평화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한국 경제, 특히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 끼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기틀을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끔 북방 경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하면서도 너무 까마득해서 혹시 허황된 주장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협력 관계를 좀 속도 있게 발전시켜 나가면 북방 경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한국 경제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협력이 평화를 구축하고 또 평화가 경제 협력을 뒷받침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남북 경제가 상생의 경제 실현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경험 비용은 필요에 부합하는 것

지원을 하든 투자를 하든 북측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은 남쪽의 이익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철도·도로는 지원 성격이 될 수도 있고 투자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성까지의 철도는 우리의 필요가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물류를 생각해서 조금만 멀리 보면 평양, 신의주까지의 철도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현재 합의된 것은 공동 이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방적 투자나 지원이라고 말한다면 깊이 따져 보지 않은 말입니다. 공동의 이익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2007. 10. 11)

5. 화해와 통일 문제

• 북 개혁·개방은 조심성 없는 말

남북 관계는 아주 급속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내가 북측에 가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개혁·개방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개성공단이 잘되면 북측의 개혁·개

방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측에 가서 대화를 해 보니 개성공단을 남측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점이 있어서 매우 못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이 개혁되고 개방될 것이다 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조심성 없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 돌아가면, 적어도 우리 정부라도 앞으로 그런 말 써서는 안 되겠다, 이곳은 남북이 하나된 자리이고 함께 성공하는 모범이 되는 자리이지 누구를 개혁시키고 누구를 변화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개혁·개방은 북측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불편한 것만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도록 정부는 노력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현장에서 2007. 10. 4)

• 이산가족 시급한 문제라는 데 공감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분야는 양측이 서로 제기할 사항이 많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분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먼저 화해의 첫 단계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산가족, 납북자, 그리고 국군 포로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도 공감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는 대로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시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납북자 문제 많은 대화나눠, 다음에 문제 풀어가는 데 밀거름 됐으면

납북자 문제 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로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합의를 이루어 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밀거름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해결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또 이런 대화의 기회를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통일문제, 실질적 접근 통해 풀어나가는 것 바람직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6·15공동선언에 잘 정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들이 진전을 이루고 남북 정상들이 자주 만나는 것이 결국 통일로 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면서, 우리 국민들은 동·서독과 같은 급작스러운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상호 공존·공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에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남북 간 회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주'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세공조, 민족공조의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마는, 저는 한국 정부가 비자주적인 정부가 아니라는 점도 설명드리고, 또 그동안 자주성의 수준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화해 없이 교류 협력하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모순

화해한 후에 협력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화해 문제는 영원히 안 풀리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본질적 화해는 기본적으로 지난날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의 특성상 영원히 극복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화해 없이 교류 협력하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모순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2007. 10. 11)

6. 후속조치와 합의이행

• 합의를 실천하는 일이 더욱 중요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남북 경협도 한반도 전체를 무대로 새롭게 발전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남북 관계 역사를 볼 때,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실천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합의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북쪽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11월 중에 예정된 총리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행과정은 준비과정과 마찬가지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합의사항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불리할 것도 유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합의가 좋은 것이면 찬성하면 불리해지는 것이 없는 것이고, 합의가 나쁜 것이면 반대하면 불리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합의에 대하는 태도라 할까 후보들의 전략 자체가 유리·불리를 가르는 것이지, 이 합의 자체가 누구에게 유리·불리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과업 수행

저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주변 정세의 변화에 맞추어서 어느 정부든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 이상 무엇을 더 나간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합의의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그와 같은 공동선언이 아니라, 다음 정부가 남북 관계를 더욱 잘 풀어가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합의이행 위해 국민적 동의, 남북 신뢰 높이는 것이 중요

이번 정상회담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불분명한 것은 총리회담이나 후속 회담을 통해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남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이나 부담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다음 정부에 부담될 일은 없습니다. 단지 하기 싫은 사람에겐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부담이겠지요.

조금 전에 이행과정을 분명하게 하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시다만, 그러나 국가 전체 또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행이 담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의 이행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의 수준을 최대한 높여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음 정부가 누구이든 간에 그 이후 이행을 해 가는 데 가장 큰 결정적인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높여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북쪽에게는 현실적 필요가 합의 이행의 가장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또는 성실한 자세를 통해서 신뢰를 계속 높여나가는 것, 그것이 북쪽의 이행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북측의 이행을 촉진하는 동력은 현실적 요구, 현실적 필요입니다.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2007. 10. 19)

• ‘피 주기’ 비판 이제 그만하자

저는 북한을 이제 위협의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놓고 퍼 주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 결코 밀지는 장사가 아니다, 그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설사 밀지는 장사이면 북한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웃에 아주 가난한 나라, 가난한 국민이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보의 위협요인입니다. 그래서 설사 수지가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기에 따라서는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통일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것입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좀더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북방경제라는 개념을 한번 제안해 보시다,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결국 제 제안은 아무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가슴에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빈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개성공단의 성공입니다.

(제6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에서 2007. 10. 31)

17

참여정부와 언론

1. 새로운 시대의 권력과 언론관계

• 정부와 언론의 긴장과 견제관계는 건강한 것

참여정부는 우리 언론에 대해 긴장과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건강한 관계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 본분이므로 정부와의 사이에 긴장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서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50회 신문의 날 축하 메시지에서 2006. 4. 6)

지난날 정치권력과 방송과의 관계가 적절치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치권력과 언론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에 따라 국가발전, 사회의 진보를 위해 서로 협력, 견제하는 관계로 잘 발전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호간의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력과 언론을 비교해 보면 정치권력은 통제장치가 잘 발달되어 있으나 언론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론 상호 간, 언론사 내부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토론하면서 적절한 균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이야말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권력은 또 다른 갈등과 문제를 야기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 정확한 사실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신성한 것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비판입니다. 비판은 잘 하라는 비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냉정하고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사람을 갈라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말을 가공하고 전달하는 분들은 좀더 깊이 생각해서 갈라치고 불신하게 하거나 증오하고 싸우게 하는 정보를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에 의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인 만큼, 그만큼 인정해 주고 대통령의 직무를 존중해 주면 상호관계가 원만하게 됩니다.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2003. 9. 3)

• 새로운 시대 언론의 책임

말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들 합니다.

2002년 한국언론재단에서 영향력이 있는 직업군 조사를 보면 언론인이 1위였고, 정치인은 5위였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방송은 말을 가공하고 배급하고 말을 지배합니다. 정보를 지배하는 것이 막강한 권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제40회 방송의 날 축하연에서 2003. 9. 2)

다양한 거버넌스 사회에서는 보다 더 많은 권력이 언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언론은 비판만하면 됐지만, 이제는 사회의 방향결정에 기여하는 만큼 언론도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언론도 견제 받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도 권력의 중요한 한 부분이므로 사회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서 책임을 생각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정책홍보관리실장 간담회에서 2005. 10. 25)

정부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배구조

는 투명해졌으며 참여적 거버넌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공론의 장에서 의제를 독점적으로 주도하는 일도 그와 같은 주체도 없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 네티즌, 신문과 방송이 함께 의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문은 공론의 장에서 가장 잘 짜여진 조직입니다. 제도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정부보다 취약하지만, 국가나 공동체의 의제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시민사회 이후 정치권력에 대한 언론의 견제 역할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강조되었지만, 언론 자체가 시장의 독점과 독점적 지배구조를 통해 권력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나 시장의 매커니즘은 크게 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 권력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언론인의 윤리적인 자세와 절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의사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부구조를 갖추고 있을 때 신문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주체로서 우리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하고 균형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정한 지배집단의 가치나 이해관계에 치우친 언론이 시장을 지배하면 사회적 약자의 이익은 설 땅을 잃게 됩니다.

(제58차 세계신문협회 총회에서 2005. 5. 30)

• 비판과 견제를 기본으로 창조적 경쟁과 협력 관계로

정권과 언론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비판과 견제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또는 분열적인 비판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가는 것을 위해서 비판과 견제라는 수단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권의 힘이 월등할 때에는 언론도 비판과 견제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정보가 통제되는 상황에서는 파헤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권력의 절대적 우위가 있지 않고 정보가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지키기는 해도, 그러나 그것만이 모두는 아닐 것입니다. 깨어서 지키기는 하되 뭔가 새로운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와 대안의

경쟁도 하고 방향에 대해 논쟁도 하고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창조적 경쟁과 협력의 관계가 설정되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그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앞으로 가 보자는 것입니다.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간담회에서 2005. 8. 18)

2. 시민권력으로부터 멀어진 언론권력, 민주주의 가로막아

• 공정한 사실 보도, 책임 있는 주장해야

참여정부는 나아가 정부가 언론을 견제하는 힘겨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우월한 힘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던 권위주의 시대나 초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이 국가권력을 견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양한 기관과 시민사회에 권력이 분산되고, 그중에서도 언론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커진 사회에서는 언론 스스로 횡포가 가능한 우월적 권력이 되지 않도록 견제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소비자나 시민사회, 그리고 사법기관이 함께 해야 할 일이지만, 각기 그 역할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사의 정확도와 분석·비판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정부와 언론의 관계도 단순한 갈등 관계를 넘어 선의의 경쟁과 창조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신문에게 공정한 사실, 책임 있는 주장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 공정한 사실을 주문하는 이유는, 우리 신문이 근거 없는 사실을 함부로 보도하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지만, 때때로 파편적인 사실은 맞으나 사실의 불공정한 취사선택으로 전체적인 사실은 부정확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주장을 주문하는 이유는, 깊이 그리고 다각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듯한 보도나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주장과 비판으로 사회일반의 인식과 여론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의제를 선정하고 이끄는 데 언론만큼 영향력 있는 주체도 없습니다. 신문이 우리 사회의 과제와 미래를 공정하고 책임 있게 제시하고 우리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할 때, 양극화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미래 과제들도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신문이 사회적 공기로써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50회 신문의 날 축하 메시지에서 2006. 4. 6)

• 비판과 문제제기도 민주사회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될 필요

모두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비판하는 것도 보장된 권리지만, 비판하고 문제제기하는 것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는 각자의 권한도 존중해서 민주주의 사회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제된 의사표시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비판도 받아야 하지만 존중도 받아야 합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 항상 합리적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에 의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인 만큼 그만큼 인정해 주고 대통령의 직무를 존중해 주면 상호관계가 원만하게 됩니다.

잘하라고 부탁 하나 드립니다. 잘하라고 꾸짖는 것은 달게 받는데, 일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게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비판은 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0회 방송의 날 축하연에서 2003. 9. 2)

• 언론 개혁은 언론 스스로, 시대의 기운으로 일어나야 할 문제

언론 개혁은 언론 스스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시대의 기운처럼 일어나야 할 문제지 정부가 정책을 내 놓고 깃발을 흔든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정책을 내야지 기자실 바꾸고 오보에 대응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일

을 해서 되겠느냐고 책망하는 분들이 있으나, 저는 큰 틀에서 그렇게 전선을 확대시킬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뿐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언론이 긴장관계가 돼 어렵더라도 작은 노력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이것이 문화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상을 다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만큼은 원칙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불편하더라도 돕는다는 기분으로 해 줬으면 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한국의 취재문화는 이렇구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간담회에서 2003. 4. 7)

3. 언론의 권력화 막는 데 최선 다할 것

• 감시받지 않는 언론권력이 불량상품 생산, 소비자 타협해선 안 돼

지금 소비자 주권이 행사되어야 할 과연 그런 산업 분야가 어느 분야일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실한 상품이 돌아다니는 영역이 어디지요? 내 생각에는 미디어 세계인 것 같아요. 정말 사실과 다른 엄청난 많은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로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빌렸는지 출처도 불명한 의견이 마구 나와서 흥기처럼 사람을 상해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무 대안도 없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는 상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물론 배상도 없습니다.

우리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장차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분야가 저는 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생산자, 감시받지 않는 권력자,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소비자 행동으로만 제어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인터넷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가 이 언론 집단에게 절대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권력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일반 국민들이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 권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만한 집단에서 소비자 노릇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량 상품은 가차 없이 고발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나쁜 것이 유착입니다. 유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경제점검회의에서 2007. 1. 4)

• 사실은 바로잡아야

강자끼리 타협하면 부정부패, 반칙, 특권의 카르텔이 형성되므로 공직사회가 강자의 카르텔에 참여해선 안 됩니다. 길거리 포장마차 하는 사람에겐 법이 시퍼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지만, 강자에게 약해선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합니다. 권력과 언론이 강자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도록 절제해 주는 것은 자신들의 의무입니다.

적절한 방어는 정부의 신뢰와 직결되므로, 정부의 신뢰를 손상하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넘어가면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의 일이 잘못됐으면 고치고 보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보도는? 마찬가지로 잘못됐으면 피곤하겠지만 반드시 고치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게 더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과정입니다.

왜 언론과 싸우느냐고 합니다.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고 자꾸 싸울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게도 많은 오류가 있을 것이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여러분끼리 대통령을 적당히 홍보는 건 괜찮지만 돌이키기 어려운 제 잘못이 있다면 제게 먼저 말해 주십시오. 언론에서 때때로 억울한 비판을 많이 하므로 밖으로 말하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시정해 봅시다.

(차관급 공직자 대상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워크숍에서 2003. 5. 3)

언론의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하고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론을 요구하고 사실의 왜곡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투적으로 반복되는 오보에 대해서는 사례를 분석해서 오보를 만들어 내는 구조를 바로잡는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정책홍보 기준은 왜곡을 일삼는 언론에 대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 일반적 서비스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취재를 거부하지 않는

다면 일반적인 의무는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 담당자 차원이 아니라 모든 정책 담당자가 책임감을 갖고 좋은 지적은 받아들이고, 오보와 왜곡은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공직사회의 문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자기 정책에 대해 대응체계를 갖추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정책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홍보관리실장 간담회에서 2005. 10. 25)

국정브리핑과 청와대브리핑을 운영하면서 사실 꼭 이것까지는 안 싸워도 좋다 싶은 것까지도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바로 잡는 일은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읽거나 말거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사실과 다른 것은 밝혀서 역사적 자료로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 2. 27)

• 참여정부는 언론권력 바로잡는 데 최선 다할 것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국민의 정부에서 이미 해소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곤하니 그만 두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군사독재가 무너진 이후에는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여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보도에 책임을 지는 언론이 될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 정치를 지배하려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민의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의 언론이 아니라 시민의 언론이 될 때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부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보고 들은 것과는 사뭇 다른 기사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생방송으로 보신 내용이라서 많이는 왜곡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내일 일부 신문을 보면, 오늘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않고 자료로 배포한 내용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을 것인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소비자 권력, 언론 소비자 단결해 시장 지배권력 횡포 맞서야

언론 문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트렌드 2010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경영에 관한 이론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깨어 있는 소비자가 기업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조직하기 어려운 것은 정보 네트워크로 더 보완하고 오늘의 인터넷이 그런 기능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원광대 특강에서 2007. 6. 8)

소비자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불량품 추방은 가능하지만 독점과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시장의 구조를 제어하는 데에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운동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깨어 있는 소비자, 더 나아가서 깨어 있는 시민으로 가야 합니다. 시민은 전통적으로 권력의 주체입니다. 분산되어 있을 뿐이지요. 정치의 소비자, 이 말은 그러나 분명한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로서 시장을 제어하고 또 정치를 제어해야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시민 하면 재산과 교양을 가진 제3계급을 의미했고, 그 사람들의 특성은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시민, 그리고 권력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투쟁, 깨어 있는 시민을 말했습니다.

현대의 시민은 선거권의 확대로써 모든 국민을 포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돼 버린 것이지요. 전 국민이 초기 민주주의 시대의 시민과 같은 시민 자세로 무장이 됐을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행동하는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의 내실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광대 특강에서 2007. 6. 8)

온라인 시민참여 저널리즘은 정치와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보의 흐름을 더욱 투명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가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다양한 의제를 부각시키고, 네티즌의 열띤 토론 속에 균형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론 발전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정부도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언론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국정브리핑과 청와대브리핑은 정책현안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정부가 더 가깝게 소통하는 핵심적인 국정 인프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언론이 달라져야 합니다. 언론의 수준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깨어 있는 시민의 참여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기사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고, 책임 있는 비판으로 언론의 정치권력화를 견제해 나갈 때 언론의 수준과 기사의 품질은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참여언론 간의 활발한 연대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임기를 마치면 시민주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세계시민기자포럼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2007. 6. 28)

• 언론 개혁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이렇게 모든 언론과 다음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반대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당장은 시끄럽지만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맞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 내내 참여정부가 해 온 다른 일들도 그 래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언론과 언론인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보 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처별 출입처 관행에 안주하며 생산하는 기사로는 더 이상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언론 스스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 되면 언론계 내부로부터 고민과 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에게 보내는 대통령 편지에서 2007. 6. 7)

• 언론은 권력, 권력은 절제해야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언론은 권력입니다. 권력은 절제해야 합니다. 6공 말기에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언론으로부터 노태우 정부가 버림을 받고 거세되고 몰락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각제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각제 합의의 공개가 마치 무슨 큰 부정인 것처럼 매도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언론의 힘이 강하구나 느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언론 관리의 달인이라고 했는데, 그 달인이 마지막에 새로운 대안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도록 거세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물론 그에게 오류가 있었습니다.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방어를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추락과 노무현 정부의 고난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간에 언론이 권력이라는 점만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각료 공직 후보자들이 언론의 올바른 문제제기에 의해서 낙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는 지적의 보도에 의해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언론에게 감히 옳소, 옳지 않소,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누가 언론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토니 블레어가 총리 자리를 그만두고 6월 12일 한 언론연구소에서 연설을 하면서 처음으로 언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공직이나 정치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절대 말하지 못하는 내용을 나는 오늘 말하겠다, 그렇게 하고 언론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언론의 권력이 아니라 언론의 선정성과 언론의 무책임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만약 같은 자리가 있다면 언론권력의 문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않는 권력은 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44회 방송의 날 축사에서 2007. 9. 3)

• 특권과 유착구조의 청산은 참여정부에 주어진 숙명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언론 개혁의 일정 단계가 우리 정권의 역사적 책임으로 지워

졌기 때문에 이 일을 버리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1987년 이후, 20년 이후에 그 연장선상에서 성립된 정부입니다. 공포정치와 철권통치는 이미 과거의 일이었지만 공작정치의 의혹은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권과 유착의 구조가 그동안에 끈질기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 그것은 참여정부에 주어진 숙명적 과제입니다. 부정부패, 유착, 권위주의, 그리고 장기집권으로 인한 기회주의, 정치 문화, 원칙의 붕괴,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결하거나 적어도 일부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과업이었습니다.

특권과 유착의 구조를 해소한다는 이 과제와 관련해서 정치권력과 소위 통치권력과 유착 관계는 저는 말끔히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권은 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언론 또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이 이 시기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44회 방송의 날 추사에서 2007. 9. 3)

언론개혁의 제1차적 과제는 언론 자유입니다. 언론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번째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감히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남은 문제는 시장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사주로부터의 자유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언론 스스로의 각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론개혁의 두번째 과제는 유착구조, 특권적 지위의 청산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난날의 유착 구조 속에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일부 우월적 지위가 있습니다.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끔히 청산되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두번째 과제를 가지고 참여정부와 언론이 숙명의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결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손잡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할 수 없다면 양심과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하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44회 방송의 날 추사에서 2007. 9. 3)

4. 기자실 개혁은 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 기자실 개혁 문제는 대통령 지시로 하는 일

요즘 언론이 기자실 개혁 문제와 관련해 보도하면서, 세계 각국의 객관적 실태를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회피하고 숨기는 비양심적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 언론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언론 제도는 국가발전에 아주 중요한 제도이므로 책임 있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이 언론의 잘못된 견해에 동조하거나 영합하여 국가기관의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선진국은 별도의 송고실도 두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바뀌면 너무 불편할까 봐 브리핑실 외에 송고실까지 제공하려는 것인데, 언론이 계속 터무니없는 특권을 주장한다면 정부도 원리원칙대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일부 부처에서 지난날의 불합리한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어서 기자실과 출입처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개방형 브리핑 제도가 전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좋은 제도는 정착시켜서 다음 정부에 넘겨 줘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결정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번 기자실 개혁조치가 마치 언론탄압인 양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 보도가 계속된다면 기자실 개혁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할 용의도 있습니다.

(제23회 국무회의에서 2007. 5. 29)

• 왜 언론만 부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가

기자실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폐해가 있어서 개혁한 것입니다. 1차 개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의 폐해가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2차 개혁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대로 넘겨 주면 다음 정부에서는 기자실이 다시 부활되고, 사무실 무단출입, 가판, 자전 거일보까지 다시 부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개혁하고

정리해서 넘겨 주기 위해 제2차 브리핑 제도 개선을 한 것입니다.

왜 유독 언론만이 부당한 권리를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까? 민주화 이후 모든 조직과 집단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누리던 부당한 이익을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언론만이 국민의 알권리를 방패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부당한 이익을 주장합니다. 언론의 이기주의가 너무 지나칩니다.

언론자유, 언론탄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론은 집단이기주의의 껍질을 버리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언론자유가 기자실에 있습니까? 유신시절, 5공시절은 기자실 전성시대였습니다. 그 기자실에 언론자유가 있었습니까? 통제와 유착과 부당한 이익만 있었을 뿐 아닙니까?

정말 기자실에 국민의 알권리가 있습니까? 알권리는 기자실의 관급정보 받아쓰기, 귀동냥에서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발로 뛰어서 기사를 써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 싶은 좋은 기사들 중에서 기자실에서 나온 기사는 없습니다.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입처 기자실은 경쟁의 필요성을 줄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출입처 제도는 편견과 유착의 근원이 되고 기사를 획일화하는 백해무익한 제도입니다. 좋은 기사, 나만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출입처 바깥으로 나가서 발로 뛰고 시야를 넓히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기사를 써야 합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 기자실 개혁, 잘못된 관행을 개혁해 정책 기사의 품질 높이기 위한 것

이번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즉 기자실 개혁의 핵심은 부처별 기자실, 부처 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개혁해 정책 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부처에 고립된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정부 정책 중에 한 부처에 국한된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국무조정실에서 조정되고, 관계 장관회의를 거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태스크포스(TF)의 검토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수준 높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부처 기자실의 울타리를 벗

어나 정책의 현장을 발로 뛰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잡한 정책의 핵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숨어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처별 출입처 제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부처 기자실에 상주하면서 부처의 브리핑 내용, 이른바 관계자의 비공식 견해, 기자실 내부에서 오가는 정보 등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식의 취재 관행은 언론사와 기자들 간의 경쟁을 가로막고 비슷비슷한 기사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됩니다. 하루 종일 기자실 공간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한 시각마저 부지불식간에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가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일이 아니라 언론 스스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로서는 환경을 바꾸는 일밖에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한 사회의 여론과 정보의 수준을 좌우하는 것은 언론입니다. 이제 사회는 언론이 가는 쪽으로 갑니다. 언론의 수준만큼 갑니다. 지금은 언론이 정치권력의 압력이 무서워 할 말을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언론자유 못지않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는 언론의 수준과 기사의 품질입니다.

참여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언론과의 관계에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온 것도, 이번에 기자실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인식 때문입니다. 과거의 낡은 관행을 깨고 정부와 언론이 건전한 긴장관계 위에서 신뢰경쟁, 품질경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일시적으로 힘들고 고생스럽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에게 보내는 대통령 편지에서 2007. 6. 7)

• 정부도 정책 품질과 정책 홍보의 수준을 더 높여야

새로운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와 공무원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더 수준 높은 정책을 만들고, 더 설득력 있게 정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식

브리핑의 수준을 높이고, 새로 도입할 온라인 브리핑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참여정부 들어 크게 나아졌지만 정보공개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별 출입처 관행이 유지될 때보다 더욱 정확하고 풍부하고 깊이 있고 책임 있는 정보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도 늘고 새로운 일도 생기겠지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또박또박 챙겨 나가면 국민과 언론도 이러한 변화를 이해해 줄 것입니다.

이번 기사실 개혁은 정부와 언론 모두 선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당장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난 4년 동안 가장 말이 많았던 것이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한 것은 그냥 언론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정보와 정책의 품질, 민주주의와 공론의 수준을 선진화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훗날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에게 보내는 대통령 편지에서 2007. 6. 7)

• 정보공개 확대는 노력하고 있는 중

정보공개 건수가 국민의 정부 5년간 26만 3,000건이었는데 참여정부 4년간에 45만 2,000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가 국회 제출과 동시에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공개정보는 앞으로 논의해 나가십시오.

전자 브리핑은 접촉 차단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관계 없이, 취재는 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는 합니다. 그 문제는 선진화 방안과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정보공개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담당 부처하고 기자협회 간부 나와서 T/F 만들자고 하면 협의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기사실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정보공개라든지 취재 편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요청하시는 대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 줄 생각 없습니다.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2007. 6.17)

• 반론과 공론기능 외면한 채 언론탄압 정부로 몰아

저의 주장도 공정히 보도해 줘야 합니다. 저도 주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국정브리핑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문 방송들은 전혀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언론이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라면 그 사회의 공론이 다 표출되게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죠.

언론의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론의 장에 모두를 다 올려놓고 공정하게 뛰게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진정한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나라가 과연 몇 개국이나 되며, 그 기자실에 대한 선진국 기자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야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고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내놓고, 같이 갑론을박하는 것을 통해 이 사회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하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 합니다. 그들의 사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라도 이 말을 해야겠는데 말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은 보도가 될까요?

(PD연합회 20주년 축사에서 2007. 8. 31)

• 괴롭고 힘들지만 그만둘 수 없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왜 이 힘든 일을 내가 시작했는가,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없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역사의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발전의 숙명적 과제 속에 저와 언론이 이 시점에서 만나도록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만났고, 이 조우를 저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44회 방송의 날 축사에서 2007. 9. 3)

18

참여정부 평가

1. 멀리 보면 보이는 것, 참여정부 제 길 가고 있어

•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신문,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정말 정부가 막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든 정부가 다해야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모두 정부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모두가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잘해야 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언론도, 국민도, 각기 할 일을 잘해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국민이 주인인 사회로 가자면 책임 있는 정부, 책임 있는 언론, 책임 있는 국민이 돼야 합니다. 시민 주권의 시대, 소비자 주권의 시대, 주권을 행사할 만한 의지와 역량 있는 시민이 돼야 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참여정부는 책임을 다한 정부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20년, 30년 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했습니

다. 행정수도는 30년 묵은 과제이고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국방개혁은 20년 묵은 과제이며, 방폐장 부지 선정, 장항공단은 18년 묵은 과제입니다. 사법개혁은 10년 이상 끌던 과제이고, 항만노무공급체계 개선은 100년이 넘는 과제인데 이것을 참여정부가 해결했습니다.

그냥 넘겨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갈등이 있고 저항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천성산터널, 사패산터널, 공공기관 이전, 화물연대,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문제, 부동산 보유세, 국세투명화, 성매매특별법, 언론개혁, 과거사 정리,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지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결코 미루지 않았습니다. 소신과 독심,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정면 돌파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묻어버리기 쉬운 일까지 찾아내서 처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철도공사 적자문제, 항공산업 재무구조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챙겨 가면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방통융합, 4대 보험 징수 통합, 자본시장 통합,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방통융합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언론의 힘이 너무 셉니다. 국민연금도 손해가 많습니다. 하루 800억씩 손해가 난다고 하고, 1년에 14조씩 적자가 누적된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일들을 적대적 언론 가운데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떻게 해냈는지 정말 우리 장관들과 실국장들이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 타이르고 달래고 매달리며 해 온 것입니다. 공무원들 칭찬을 자꾸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빚을 많이 졌으니까요.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 참여정부는 최선을 다한 정부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더 민주적인 정부입니다. 법과 원칙에 가장 충실한 정부입니다. 가장 투명한 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평화를 확실하게 지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정부,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는 정부, 균형외교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정부, 그래서 나라의 자

주권과 위신을 높이고 있는 정부입니다.

경제실패, 민생파탄, 총체적 위기라는 주장이야말로 악의적인 중상모략입니다. 그야말로 10년 전 우리 경제를 결판낸 사람들의 염치없는 모략입니다.

참여정부는 경제위기를 잘 관리하여 극복했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를 원칙대로 운영한 결과입니다. 주가가 세 배 이상 올랐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복지투자를 가장 많이 늘린 정부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복지정부, 진보의 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루어 왔던 해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루어 두었던 자주국가의 숙제, 집단이기주의의 저항에 밀려 미루어 두었던 갈등과제들을 다 풀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소신을 가지고 할 일은 하는 뜻심 있는 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는 국가 전략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저는 지역주의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선진한국을 만들기 위한 역사의 과제입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이 요구한 것이고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국민이 바라는 것을 공약했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 세계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과입니다. 더욱이 여소야대 국회와 적대적 언론이 끊임없이 흔들고, 심지어 여당조차 차별화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이룬 성과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제8회 노사모 총회 축하 메시지에서 2007. 6. 16)

• 멀리 보면 보이는 것, 참여정부 제 길 가고 있어

대한민국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과 그에 맞는 전략, 그리고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놓고 볼 때 우리 한국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선 보다 공정해지고 보다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 유착과 부패가 점점 더 설 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이런 얘기들도 그리고 서로 결탁해서 이익을 챙기는 일도 점차 어렵게 돼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정의가 꽃 피어가고 있습니다.

좀 늦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사회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를 단순한 소비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높이는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고 보육, 고용지원, 직업 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 투자를 서구의 복지국가에 비추어 보면 아직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조찬기도회에서 2007. 4. 26)

• 끊임없는 흔들기, 그러나 침몰도 좌초도 하지 않아

참여정부에 대한 제 총평을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험한 바다를 헤쳐 왔습니다. 거센 바람과 험한 파도 그리고 뜻밖의 암초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끊임없는 진로방해와 발목잡기, 흔들기, 돌발사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몰하지 않았고 좌초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년까지 레임덕이라는 것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당시에 노사모 사람들이 돈 없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입니다. 그 분들이 저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대선자금 수사도 할 수 있었고, 그 많은 의혹 제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올 수 있었습니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는 그 말씀 취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은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은 21세기형 국가전략의 모범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경제를 중심으로 항상 사고하기 때문에 저도 국가발전전략을 경제라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넓어야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을 그저 공간적 넓이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질적으로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면 똑같은 시장에서도 시장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기업생태계를 잘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투자와 금융, 상품, 노동, 이런 것을 잘 결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기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관치경제를 버리고 시장경제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당장의 기업환경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지요. 노사 간 신뢰의 문화가 있어야 되고 동반성장과 상생의 경영,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균형발전, 우리 사회가 세대·계층·지역·노사 간 균형 있는 성장 발전을 하게 됐을 때 갈등이 예방되고 국민의 역량이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의 수단으로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고, 균형발전 자체가 가치이자 중요한 성장의 전략입니다. 사회투자는 우리 국민을 경쟁력 있는 국민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 드렸죠. 인적자본 투자, 기회의 균등, 예방적 투자, 경제·사회 정책의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국가 전략입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시장친화적인 사회입니다. 민주주의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는 창의를 자극하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경쟁의 정치이고 공정한 경쟁을 이상으로 하는 정치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민주주의와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 그냥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비전 2030 같은 국가발전전략을 장기 재정계획으로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의 목표는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된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입니다. 혁신, 활력, 안전, 기회, 쾌적한 환경, 품격 있는 문화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2. 참여정부 평가 - 정부

• 참여정부는 질적 혁신을 하고 있어

정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경제도 안보도 성공하려면 공직사회가 일을 잘해야 합니다.

정부개혁은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업, 금융, 노사, 공공, 4대 부문의 개혁으로 정부개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개혁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질적 혁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회적인 조직의 개혁이나 제도의 개혁으로 끝나는 개혁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공직사회의 질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어서 조직과 제도의 개혁은 물론, 일하는 자세와 방식, 공직사회의 문화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위원회와 실무기구를 두고, 그동안 학계에서 제안되었던 모든 이론을 집대성하여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직접 행정 각부와 협력하여 실행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행정 각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혁신수석실을 두고 혁신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을 혁신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진단과 평가를 통해 혁신의 수준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고 많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문화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K-TV를 보니까 특허청이 지난 4년 동안 혁신을 통해 심사기간을 2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였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연간 1조 5,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세계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특허청이 된 것입니다. 변리사도

나와서 그렇다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거 제가 공약했던 것입니다.

특허청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모두가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이미 오래 전에 포상을 받아서 내부에서 기관장 승진이 되기도 하고 승진발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정부혁신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혁신성도가 각 부처의 혁신 브랜드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혁신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정부 산하 기관으로 확산되어 기관 단체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정부혁신이 좀더 지속되면, 우리 공직사회의 문화와 정부의 역량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정부는 그동안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시스템에 의한 행정이 구현되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관리 시스템,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정책품질관리제도가 정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기반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정부혁신의 성과와 경협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 책임 있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

언제부터인가 작은 정부론이 우리사회에서 진리처럼 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작은 정부론은 맞지 않습니다. 할 일 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합니다. 할 일을 하는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작은 정부론은 과거 서구의 여러 나라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한국에는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물론 작은 정부라는 말을 효율적인 정부라는 뜻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복지지출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

부라는 용어로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부의 복지 부담이 경제의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나라에서는 작은 정부가 타당할 수 있으나, 복지지출이 서구의 3분의 1수준인 한국이 작은 정부로 갈 경우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논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지지출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전반을 보더라도 국가와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인력을 포함한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24.1명에 불과합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1/3 수준, 일본의 32.9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작은 정부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말해야 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가 많은 일 할 수 있어

공무원들 내내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게 좋은 정부는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정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경제든 민주주의든 압축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공무원들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일이 많습니다. 정부 혁신 때문에 저도 공직자들에게도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는 일도 보통 이상의 속도를 내라, 혁신기술도 개발하고 혁신문화도 정착하라고 하니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숫자에 연연해하지 말고, 공무원 1인당 국민 숫자로 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이죠.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무조건 작은 정부라 해서 구조조정을 능사로 삼지 않는 문화를 정부 또는 우리 국민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여러분이 성과를 거두셔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계속 지원하자면 과학기술이 성과를 내야 합니다. 교육을 계속 지원하자면 교육의 성과가 나와야 하고, 공직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 하자면 공직자들 또한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꼭 내 주시고 국민에게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일 잘하는 정부, 과학기술에 과감히 투자하는 국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과학기술부)에서 2007. 3. 22)

3. 참여정부 평가 - 경제

• 민생문제 해결 못한 책임 통감하지만 만든 책임은 없어

민생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와 무리한 논리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생파탄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표현입니다. 소득, 소비, 실업률 등 어느 지표를 보아도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3년 가계부도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파탄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은 표현할 말이 없게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깎아 내려 우리 모두의 기를 죽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민생이 어렵다는 표현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의 어려움이 오로지 참여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심판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민생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물려받은 것입니다. 문민정부 시절에 생긴 것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국민이 책임을 묻는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민생파탄이라는 말까지 동원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데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경제만 좋아지면 민생문제는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극화까지도 경제만 좋아지면 해결된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참 단순하고 속편한 논리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이 발전할수록 재래시장이나 동네가게는 어려워집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민생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립니다. 그래도 버티지 못하면 해외로 나가거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영세 자영업도 늘어납니다. 세계화, 지식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이런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소득의 차이도 더 커집니다. 이른바 양극화 현

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체 경제가 성장할수록, 어느 한쪽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생활수준이나 소비수준은 높아지고 집값도 교육비도 통신비도 늘어납니다. 모든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에 비해 보통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으니 민생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치가 이러하니 오로지 경제가 민생문제의 원인이고, 경제만 풀리면 민생문제도 다 풀릴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생이 풀립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는다는 거시적인 원칙이 필요

참여정부는 경기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제이론이 허용하는 모든 경기부양책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다만 후유증이 우려되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에 맞지 않는 경기부양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우리 경제에서 여러 차례 그런 잘못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3저 호황과 신도시 건설로 인해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에 떠밀려 증시부양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땅값 폭등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며 1992년 대규모 경기 불황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듬해 출범한 문민정부는 이러한 불황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해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불을 붙였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경기진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고 가계대출을 방치했습니다. 덕분에 2002년 우리 경제는 7% 성장했지만, 다음 해에는 성장률이 3.1%로 크게 떨어졌고 신용불량자 문제와 카드채 사태로 가계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경기정책에 원칙을 지켰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과열 수준의 활력을 요구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

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원칙을 지켜 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새로운 가치와 전략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우리는 지금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올해 안에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게 되고, 수출, 경제규모, 제조업 경쟁력 모두 이미 선진국 수준입니다.

이제 새로운 가치와 전략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참여와 통합의 정치, 개방과 혁신의 경제, 복지와 기회의 사회, 평화와 협력의 외교 안보를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원칙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위에서 기술과 인재 중심의 혁신주도형 경제로 방향을 잡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가고 있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2007. 4. 30)

4. 참여정부 평가 - 사회

• 노사관계가 안정 되고 있어

노사관계도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2년 111일이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 77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사회적 합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지난해 노·사·정 합의로 노동관계법이 개정되고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노사관계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나는 노동조직의 사회적 교섭력이 약화되어 간다면,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체계적인 고용지원 서비스 ·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복지 예산을 늘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복지전달체계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가 과거의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복지상담실을 만들었고 행정인력을 대거 복지담당으로 전환배치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징수 일원화도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공공인력은 확충해 왔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1,800명 늘렸고, 소방인력도 17% 확대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투명한 사회가 이뤄지고 있어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거문화도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 지방선거만 잘 치르고 나면 깨끗한 선거문화는 이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당내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어떤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권력기관도 더 이상 정권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기관도 과거처럼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켜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무리한 경기부양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힘겹게 버티면서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오래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승기간은 더 오래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개혁도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도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가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교육을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과의 관계도 저는 원칙대로 해 왔습니다. 그동안 언론과의 갈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하라고 제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저는 우리 언론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유착관계는 없습

니다. 이제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역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창조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마치 대청소를 할 때처럼 나라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좀 혼란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아주 몰라보게 높아질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지난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낮아지고 권력기관이 민주화되면서 부패의 온상이었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돈 달라고 하지 않고 청탁도 없어서 기업인들 속이 편해졌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탈법과 특혜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기도 했지만, 측근, 가신, 친인척이란 말로 상징되는 권력형 부정부패도 사라졌습니다. 인사 문제도 추천에서 검증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른바 밀실인사, 비선인사도 없고, 지난날 잡음이 많았던 군이나 경찰 인사도 뒷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거가 깨끗해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조금 전 서명식을 보면서 올해 대통령 선거 때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기업의 84%가 윤리경영현장을 채택했고, 정부도 투명하고 신뢰 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오늘 투명사회 비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투명성과 신뢰도 등 모든 면에서 10년 안에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회에서 2007. 3. 9)

• 역사적 과제 마무리 부끄럽지 않아

저는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에 이 역사적인 과제의 마무리를 그런 대로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진보는 단지 정치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문화 발전의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근래에 와서 사회적 자본은 기업과 국가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이 사회적 자본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이 OECD 평균이 되면 성장률을 1퍼센트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본 일이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그대로 믿는다면, 참여정부는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입니다.

국민통합, 특히 지역주의의 청산은 아직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계승과 극복의 관계입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극복의 과제입니다. 상당한 진보도 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기록한 영남권 득표율 32%는 16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얻은 13%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요즘은 인사에서 지역 문제가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가 다 해먹는다는 말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안팎에서 타박만 당했습니다. 너무 시대를 앞선 성급한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대의 과제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5. 참여정부 평가 - 외교 · 안보

•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켜

참여정부는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에 관해서 대화에 의한 해결 원칙을 그야말로 독심 있게 관철해서 이제는 쌍방이 모두 확실하게 대화의 길로 들어가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신뢰가 많이 증진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양보하고 절제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시대의 구상, 균형 외교,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유연한 대응,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등은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 또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입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참여정부의 지난 4년은 중대한 안보현안에 대한 선택과 결단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 북핵 위기는 무력제재의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 재조정과 같은 어려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평화와 경제를 위한 안보, 우리 힘으로 지키는 안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 그리고 동북아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13합의는 북핵 폐기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 아시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한·미동맹 또한 일방적인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건강한 상호관계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공약만 하고 미뤘은 용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미래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공동방위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육군3사관학교 제42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2007. 3. 16)

• 북핵문제, 6자회담 통해 해결의 가닥 잡혀

지금 동북 아시아와 중동에서는 평화구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큰 걸림돌이었던 북핵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지난 2월 13일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경

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협의 등은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북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 아시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열어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6자회담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합의가 반드시 이행되어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우디 국왕자문회의에서 2007. 3. 26)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북핵문제는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통해 평화적 해결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확실히 들어선 것 같습니다. 4년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의견이 달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견이 같아졌습니다. 미국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같아진 것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미국정부가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남북관계도 실질협력을 확대하면서 신뢰를 쌓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 교역이 1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개성공단을 방문해 보시면 남북 교류협력이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는지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200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식에서 2007. 6. 19)

• 경제와 안보의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 외교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우리 경제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외국자본이 우리 경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우선 외국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전쟁이나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장래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신용 평가기관이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시에 발생하는 안보상황의 안보적 영향은 대부분 장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에는 당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고려사항인 것입니다.

큰 틀의 원칙을 지키되 구체적인 외교행위는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외교는 현실입

니다. 외교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쌍방적인 행위입니다.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상대를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합니다. 균형외교이든 자주국방이든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관계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한미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옛날대로 가자고 하는 주장은 원칙에 맞지 않고 일거에 바꾸자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되도록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독재 시대의 나쁜 버릇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6. 참여정부 평가 - 복지 · 교육

• 사회복지분야 예산 정부재정의 28%, 참여정부 들어 8% 증가

사회분야에 우리 정부예산의 20%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약 8% 정도 늘려서 28% 까지 왔습니다.

8% 하나까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 1% 갖고 치열하게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8%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뭐 하는 정부냐 얘기하면 저는 이것으로 얘기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정부다. 그러나 시장경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착실하게 다 했습니다. 원칙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정부의 책임, 사회적 정책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에서 2007. 3. 6)

• 보육 · 장애인 · 의료비 지원 등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

사회정책을 사회투자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고

사회통합도 이룰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2006년까지 복지 분야 예산이 연간 20%씩 증가했습니다. 정부예산 평균증가율 11%의 두 배에 달합니다.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 분야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2002년 2조 8,000억 원에서 2007년 7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절대 빈곤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최저 생계비를 인상하여 수혜범위를 대폭 늘리고 지원수준을 높인 결과입니다.

보육예산이 다섯 배 증가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아동 수가 2002년 19만 명에서 올해 77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상승세로 반전된 것도 이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예산은 2002년도 3,200억에서 2007년 6,700억으로 늘어 났습니다.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만들어 장애인 수당을 월 7만원에서 올해 13만원까지 늘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매월 20만원씩 확대 지급합니다. 또 장애인 2만 2,000명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치매, 중풍 노인을 돌보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초에는 수요에 비해 38%에 불과하던 노인 요양시설을 내년까지 100% 확보합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전체 노인의 60%에 해당하는 300만명에게 매월 8만 9,000원씩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건강한 국민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핵심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참여정부는 아동에서 노년까지 전 생애에 걸친 평생건강관리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작은 부담은 본인이 하더라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가정이 파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2004년 49%에서 2005년 66%까지 증가했고, 백혈병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1/3로 줄어들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비전 2030은 국가발전 전략의 종합판

2030 사회투자전략, 2030년 미래전략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돈 좀 더 거둬서 누구에게 좀 더 나눠 주는 이와 같은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고쳐야 될 제도를 빠르게 고쳐야 되고, 기왕에 할 투자라면 좀 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전략을 통해 해결해 가자는 것입니다.

50개 과제 중 24개가 제도 혁신 과제이고, 26개가 선제적 투자 과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부당한 조세 감면의 축소라든지, 철저한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조세 투명성 확보 통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일단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메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정부도 약간의 국가 채무를 더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특별히 국민 부담을 더 요구하지 않고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제로 삼아야 하고, 10년 이상 국민적으로 토론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년인사회에서 2007. 1. 3)

• 초중등교육은 공교육 정상화로, 대학은 입시개혁으로 풀어야

한국교육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면, 초·중등교육의 경우 아이들은 과중한 입시 부담, 성적 부담을 지고 학부모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집니다. 그로 인한 기회의 불균형, 계층이동의 기회상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은 교단붕괴, 공교육의 부실이라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대학교육의 문제는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못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경쟁력 없는 대학교육이 문제입니다.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기초는 교육개혁위 교육혁신안의 기초를 존중합니다. 지방교육의 육성을 위해 1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누리사업, 연구개발비를 지방배정 했습니다.

초중등교육은 공교육의 정상화로 풀어야 합니다. 대학입시가 문제인데, 대학은 뽑기 경쟁에서 가르치기 경쟁으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경쟁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서열화가 아니라 적절한 차별화, 학연사회의 해소, 내신과 교단의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경쟁과 평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양화 시대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개방도 필요합니다.

방과후학교는 대통령 프로젝트입니다. 일차적으로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좀더 크게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을 보호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8.7%의 학교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했고, 280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1인당 월평균 6만 2,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통신교육 등 다양한 교육매체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기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학교는 대학교육을 수요자 중심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경쟁과 평가를 수용하고, 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 유학 수요의 흡수가 필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교육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조령모개한다, 교육당국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 등 오해가 있는데, 한국교육 품질이 정말 엉망입니까?

더 타임즈가 매긴 경쟁력 평가를 보면 2004년까지 100위권 밖이었던 서울대가 2005년에는 93위, 작년에는 6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중등교육의 평가 결과를 보면, PISA(국제학업성취도 평가)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중등학생까지의 학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 학생들이 문제해결력, 읽기, 수학, 과학 등 전 분야에서 1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학과 과학 학력의 세계적 평가인 팀스(TIMSS)의 결과에서도 한국이 수학 2위, 과학 3위를 기록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한국 교육은 그동안 성공해 왔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어

국가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첫번째로 교육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이 성공하면 나라도 국민도 성공하고, 교육이 성공하지 못하면 나라도 국민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역사상 선진국이 된 나라들 보면 모두 다 교육에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처음에는 엘리트 교육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영향이 커지면서 보편교육이 실시되고 국가가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증명돼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에 대해 물으면 교육하시는 분들이나 학부모들도 모두 한국 교육이 위기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교육은 그동안에도 성공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한국의 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오늘 한국의 성공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해외에 나가 보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찬사가 대단합니다. 대통령 대접 잘 받고 다닙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이 성공했기 때문이거든요. 민주주의에 성공하고 경제에 성공하고 다 성공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가면 목에 힘쓰고 대접 받고 다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육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①

총론 / 대통령 발언록

발행처 국정홍보처
발행인 김창호
발행일 2008년 2월 20일
편집협력 김형운편집회사
인쇄제본 삼화인쇄(주)